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3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2007. 11

국회의원 안 명 옥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여서인지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성 감사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결산하는 장이었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이전 세 번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입문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도 많이 발굴해 이슈화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거대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효율성과 무사안일한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역만리 낯선 곳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의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신상정보까지 심심풀이로 들춰보는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해킹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수출용 식품과 동일한 것들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시정을 위한 대책수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기간 동안 본 자료집을 포함해 총 1,836페이지에 달하는 13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다방면에 걸쳐 44종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더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공휴일을 반납하며 흘린 땀방울과 몰려오는 피로의 고단함이 베어 있는 노력의 결실이기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본 자료집은 이번 국점감사에 즈음해 배포한 각종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종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현황을 취합해 정리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정리한 본 자료집이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7년 국정감사가 끝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제게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듯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다시 한 번 뜻을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국회의원 **안명옥**

I . 2007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1

1. 하루 35.5명씩 자살! 여성 · 농업종사자 비율 증가	3
2. 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10
3.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17
4. 화장률이 매장률 추월	24
5.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 위협!	29
6.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36
7.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장병 건강 · 군 전투력 저하 우려	45
8.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49
9.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해	63
10.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69
11.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76
12. 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86
13.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92
14.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102
15.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1.2%	111
16.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119
17. 급식소 · 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28%, 세균과 발암물질로 오염!	124
18. '건강'걱정하다'병'생긴다 AIDS 등 건강염려증 확산	129
19.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134
20.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141
21. '의료용 마약'도난 · 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	152
22.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159
23.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168
24.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171
25.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 미달!	176
26. 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179

27. 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184
28.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쳐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192
29.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198
30.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보안전산망 다 뚫렸다	205
31.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노후보장도 못하는 국민연금	210
32. 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	217
33.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223
34. 인맥쌓기 창구로 쓰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226
35.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자 45%, 향후 이용의사 없어	230
36.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5천명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233
37. 혈액비상! 적정재고량의 27%수준 현혈울 매년 감소, 현혈부적격울은 매년 증가	237
38.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243
39. 빛 투성이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누적적자 1조223억	247
40.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송환'노력 지지부진	253
41. 적십자 회비환불 6년새 80배 급증! '적십자 믿지 못한다.' 환불요청	258
42. 적십자, 기증받은 미술품 방치!	262
43. 장교·부서관 등 軍간부 건강상태 갈수록 악화	265
44. 제약회사 85% R&D투자가 판촉비보다 적어	270

II.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현황 275

III. 2007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현황 315

IV. 부 록 331

1.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333
2. 안명옥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현황	340
3. 안명옥 의원 발간 정책자료집 현황	344
4. 안명옥의원 보도자료 현황	349
5. 저출산·고령화 극복 관련 주요활동 현황	360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I

2007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1. 하루 35.5명씩 자살! 여성·농업종사자 비율 증가 (2007년 9월 9일)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

- '06년 자살자 12,968명, 하루 35.5명꼴 스스로 목숨 끊어
- 연령별, 지난 5년간 자살자중
61세 이상 노령층(30.3%) 자살자 비율 가장 커
- 성별, 여성 자살자 해마다 증가 추세
- 직업별, 농업종사자 자살 비율 증가 추세
- 자살 원인, 염세·비관(46%)이 가장 많아, 병고 23%
- '06년도 경기(20%), 서울(16.9%), 충남(10.1%) 순으로 많아
- 「자살예방법」 조속 통과시켜 악성 자살 바이러스 확산 차단해야.

- 경찰청이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에게 제출한 <2002~2006년 자살 현황¹⁾>에 의하면, 2006년 자살자는 12,968명으로 하루 약 35.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43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2004년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유의미한 자살 감소는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최근 5년간의 자살의 성별(性別)현황을 보면, 남성이 비율이 70% 전후로서 압도적으로 높으나 여성자살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2006년 자살 성별 현황2>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성	여 성(비율)
2002년	13,055	9,436(72.7)	3,619(27.3)
2003년	13,005	9,134(70.3)	3,871(29.7)
2004년	13,293	9,385(70.6)	3,908(29.4)
2005년	14,011	9,611(68.6)	4,400(31.4)
2006년	12,968	8,820(68.1)	4,148(31.9)

- 지난 5년간 자살자를 동기별로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이 44.9%(29,757명)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병고 23.5%(15,567명)”, “치정·실연·부정 9.0%(5,964명)”, “가정불화 6.5%(4,324명)”, “정신이상 6.2%(4,140명)”, “빈곤 4.8%(3,213명)”, “사업 실패 3.2%(2,091명)”, “낙망 1.9%(1,276명)” 순이다.

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2002~2006년 자살 동기별 현황3>

(단위 : 명)

구 분	5년간 합계 (2002~2006)			2002년			2003		
	계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6,332 (100.0)	46,386	19,946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정신이상	4,140 (6.2)	2,253	1,887	820	478	342	739	424	315
병 고	15,567 (23.5)	10,821	4,746	3,608	2,649	959	2,976	2,059	917
염세,비관	29,757 (44.9)	21,205	8,552	5,374	3,927	1,447	6,058	4,340	1,718
빈 곤	3,213 (4.8)	2,415	798	600	454	146	731	535	196
사업실패	2,091 (3.2)	1,887	204	368	329	39	426	385	41
낙 망	1,276 (1.9)	910	366	112	88	24	153	112	41
치정,실연,부정	5,964 (9.0)	4,227	1,737	1,331	995	336	945	664	281
가정불화	4,324 (6.5)	2,668	1,656	842	516	326	977	615	362

구 분	2004			2005			200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293	9,385	3,908	14,011	9,611	4,400	12,968	8,820	4,148
정신이상	810	420	390	923	467	456	848	464	384
병 고	3,114	2,169	945	2,808	1,894	914	3,061	2,050	1,011
염세,비관	5,968	4,328	1,640	6,390	4,468	1,922	5,967	4,142	1,825
빈 곤	722	519	203	659	518	141	501	389	112
사업실패	475	428	47	469	427	42	353	318	35
낙 망	214	153	61	466	327	139	331	230	101
치정,실연부정	1,010	740	270	1,414	989	425	1,264	839	425
가정불화	980	628	352	882	521	361	643	388	255

- 2006년도 자살자 직종현황을 보면 무직이 7,413명(57.1%)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1,725명(13.3%), 농업이 1,145명(8.8%)

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2002년 전체 자살자중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8.8%를 차지함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자살 직업별 · 성별 현황>4)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13,293	9,385	3,908
공무원	151	126	25	141	118	23	118	96	22
일반봉급	1,039	876	163	1,006	782	224	884	743	141
농업	811	657	154	884	695	189	845	687	158
상업	687	545	142	777	604	173	687	560	127
공업	170	148	22	178	153	25	129	114	15
직공	246	211	35	187	153	34	154	125	29
접객업	236	125	111	268	158	110	214	112	102
노동	957	854	103	875	771	104	937	860	77
기타	1,898	1,307	591	1,875	1,299	576	2,055	1,420	635
무직	6,860	4,587	2,273	6,814	4,401	2,413	7,270	4,668	2,602

구분	2005년			2006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4,011	9,611	4,400	12,968	8,820	4,148
공무원	120	98	22	118	97	21
일반봉급	989	758	231	898	680	218
농업	1,048	841	207	1,145	913	232
상업	598	467	131	570	433	137
공업	115	104	11	90	76	14
직공	137	117	20	159	131	28
접객업	229	116	113	187	88	99
노동	786	726	60	663	611	52
기타	1,866	1,265	601	1,725	1,182	543
무직	8,123	5,119	3,004	7,413	4,609	2,804

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 2002~2006년 자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령층 자살이 전체의 30.3%(20,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3.8%, 15,809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라는 노인 4고(四苦)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2~2006년 자살연령별 현황5>

(단위 : 명, %)

구 분	5년간 합계 (2002~2006)			2002			2003		
	계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6,332 (100.0)	46,386	19,946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20세이하	1,633 (2.5)	918	715	405	225	180	368	214	154
21~30세	6,480 (9.8)	3,984	2,496	1,412	916	496	1,331	856	475
31~40세	11,709 (17.7)	8,074	3,635	2,655	1,939	716	2,414	1,676	738
41~50세	15,809 (23.8)	12,002	3,807	3,373	2,640	733	3,219	2,375	844
51~60세	10,593 (16.0)	8,271	2,322	2,015	1,632	383	2,020	1,553	467
61세이상	20,108 (30.3)	13,137	6,971	3,195	2,084	1,111	3,653	2,460	1,193

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구 분	2004			2005			200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293	9,385	3,908	14,011	9,611	4,400	12,968	8,820	4,148
20세이하	272	166	106	314	175	139	274	138	136
21~30세	1,161	746	415	1,428	787	641	1,148	679	469
31~40세	2,279	1,584	695	2,259	1,491	768	2,102	1,384	718
41~50세	3,190	2,414	776	3,145	2,398	747	2,882	2,175	707
51~60세	2,171	1,705	466	2,159	1,656	503	2,228	1,725	503
61세이상	4,220	2,770	1450	4,706	3,104	1,602	4,334	2,719	1,615

- 2006년 자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62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6년 자살 시·도별 현황>⁶⁾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계	12,968	8,820	4,148
서울	2,191	1,500	691
부산	985	726	259
대구	717	481	236
인천	713	492	221
울산	314	229	85
경기	2,623	1,689	934
강원	548	420	128
충북	499	338	161
충남	1,318	836	482
전북	570	387	183
전남	718	514	204
경북	763	525	238
경남	905	610	295
제주	104	73	31

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2006년 자살 시·도별 연령별 현황>7)

(단위 : 명)

구분	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	61세이상
계	12,968	274	1,148	2,102	2,882	2,228	4,334
서울	2,191	58	273	333	414	353	760
부산	985	21	117	162	229	174	282
대구	717	13	69	117	201	129	188
인천	713	18	56	96	164	151	228
울산	314	5	23	69	68	54	95
경기	2,623	52	208	517	602	414	830
강원	548	2	31	77	134	103	201
충북	499	12	37	62	89	74	225
충남	1,318	32	112	186	278	240	470
전북	570	7	51	98	140	97	177
전남	718	25	55	134	174	133	197
경북	763	8	53	131	156	118	297
경남	905	19	54	98	206	175	353
제주	104	2	9	22	27	13	31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이 있긴 하지만 원론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연령과 계층, 성별, 원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안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본인이 발의한 자살예방기본법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2~2006년 자살현황”, 경찰청, 2007.4.

2. 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2007년 9월 11일)

-2003년 이후 산후조리원 사고사례 최초공개-

- (복지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19건 발생('03~'07.6)
 - 설사환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아(신생아 설사 8건, 산모 설사 1건)
 - 공식적 신생아 사망사건도 2건이나 발생(2003년 1건, 2006년 1건)
-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5년간 41건 발생('03~'07.8)
 - 부당계약 관련 피해가 17건, 시설안전피해 9건 순
- (식약청) 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 28개소 적발!('07)
 - 단속대상 454곳 중 28곳에서 적발, 2회 이상적발 업소도 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16건으로 가장 많아
- (복지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적발도 8건('07)
 - 간호사 인력 미비 7건, 의료기관 시설과 미 구분 1건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설사 사고를 비롯한 감염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현황」 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정부에 보고된 감염사고 19건, 신생아⁸⁾ 사망도 2건이나 돼..

- 산후조리원은 2007년 현재(8월) 전국 360개소(2005년 295개소, 2006년 33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었으나, 2006년 6월 새로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신고업종으로 전환되었다.
- 그동안 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는 19건이다.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8건, 2007년6월 현재 7건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신생아 설사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심지어 신생아 사망 사고도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현황>

연도	시·도	신고사례건수	피해 사례
계	-	19건	-
2003	부산	1건	신생아 사망
	대구	1건	산모, 신생아 설사
2004	대구	1건	신생아 설사
2005	부산	1건	신생아 눈병
2006	경기	5건	신생아 사망, 장염, 호흡기 감염, 설사, 감기,
	서울	3건	신생아 설사(2건), 눈병
2007.6	경기	2건	신생아 설사
	충청남도	1건	신생아 설사
	서울	3건	신생아 설사·장염, 산모설사
	경상남도	1건	신생아 감기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8)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함(모자보건법)

-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발생 건수는 지난 5년 동안(2003~2007.8) 4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부당계약 관련 피해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피해도 9건이나 되었다.

<피해유형별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8월	합 계
시설안전	-	3건	4건	-	2건	9건
약관	-	1건	-	-	-	1건
품질	6건	1건	-	1건	-	8건
계약해제.해지	3건	7건	3건	3건	1건	17건
부당행위	2건	1건	-	-	-	3건
거래관행	1건	-	-	-	-	1건
기타	-	2건	-	-	-	2건
합 계	12건	15건	7건	4건	3건	41건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9

- 이와 같이 감염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 인력과 시설을 편법 운용하는 일부 산후조리원의 관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어 감염 경로와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늦게나마 정부는 감염과 질병,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 이송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고예고(2007년 8월 9일)한 상태이다.

◎ 식약청 식품위생 단속결과, 28개 산후조리원에서 위생관리 엉망!

- 산후조리원은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 관리업소는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해 처음 병원 장례식장과 더불어 위생취약 업소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위생점검⁹⁾을 실시하였다.
- 식품위생 점검결과 28개 산후조리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동시에 행정조치(14개 업소 과태료, 14개 업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적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목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생모 미착용이 8건 순이었다.
- 한편, 서울시 소재의 'A' 산후조리원과, 대구시 소재의 'N' 산후조리원은 3번이나 식품위생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두 번 지적받은 산후조리원도 무려 5곳이나 된다.
- 하지만, 행정조치 결과는 모두 과태료 부과나 현지 시정으로만 그쳤고, 영업정지 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9) 단속대상 전국 454개 업소(중복포함)(2007.4 ~ 2007.8)

<산후조리원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 현황(2007년)>

번호	업소명	위반내용	조치사항			점검기관
			과태료	영업정지	기타	
1	A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위생모 미착용	-	-	행정지시	서울청
2	B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	-	진행중	서울청
3	C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	-	행정지도	서울청
4	D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	-	행정지도	서울청
5	A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미 실시	-	-	행정지도	서울청
6	E	위생모 미착용	-	-	행정지도	서울청
7	F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	-	행정지도	서울청
8	G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	-	부산청
9	H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	-	부산청
10	I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	-	부산청
11	J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	-	부산청
12	K	1.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2.후드,조리기구 세척불량	○	-	-	부산청
13	L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	-	부산청
14	M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	-	-	부산청
15	N	식품 및 작업 조리장 비위생적 취급	○	-	-	대구청
16	N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조리, 보관	○	-	-	대구청
17	A	위생모미착용	-	-	시정	서울시
18	C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	-	시정	서울시
19	E	조리실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	-	시정	서울시
20	D	계피분회 1개 제품 유통기한 경과	-	-	시정	서울시
21	G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	-	-	부산시
22	I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	-	-	부산시
23	O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	-	-	부산시
24	P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	-	시정	경기도
25	Q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	-	-	경기도
26	R	위생모 미착용/칼,도마 미구분 사용	-	-	시정	경기도
27	S	위생모 미착용/칼,도마 미구분 사용	-	-	시정	경기도
28	N	식품취급등의 위반	○	-	-	경북도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도 8건이나 보고돼!

- 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건수도 8건에 달한다. 그 중 간호사 기준 인력미비가 7건이었으며, 의료기관과 시설기준을 미구분한 채 운영된 건수도 1건 포함되었다.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현황(2007)>

위반 사례	처분결과	위반 근거
간호사 인력미비(7건)	시정명령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 시설의 미구분(1건)	시정명령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안명옥의원실 재정리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간호사구비 규정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타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산후조리원의 위생점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출산 이후 산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력이 많이 소모되어 크고 작은 질병과 감염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생아의 경우도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과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위생에 있어 각별한 배려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안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신생아와 그를 출산한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산후조리원은 가장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은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청, 소비자원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내 감염사례

<산후조리원 감염사례 2005년3월5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에서 발췌>

2005년 2월 1일 병원에서 애기를 낳아서 2월 3일부터 2월 16일 까지 2주 동안 애기와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조리원에 신생아실에 10여명의 애기가 있었고 각방마다 산모들이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경 애기 한명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 애기에게도 콧물이 심하게 발생하여 모유를 먹일 때 숨을 제대로 못쉬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리원측에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괜찮다며 콧물만 제거 했습니다. 이후 2월 15일 직접 애기를 데리고 근처의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현재 후두염으로 폐렴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듣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2월 16일 조리원을 나와서 2월 17일 애기가 설사기가 있어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감염성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2월 17일 부터 2월 25일 까지 9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678,820원이나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조리원에 병원비를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모도 산후조리도 못하고 병원에서 애기 본다고 9일 동안이나 잠도 제대로 못자고 무리하여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후조리원 감염사례 2003년6월25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에서 발췌>

저는 올 4월 'A' 산후조리원 00점을 이용했습니다. 입실 당시에는 2주일을 예약하였으나 입실 후 10일이 되던 날 조리원 원장이 저희 아기가 입실 첫날부터 이상하였다고 하며 우리아기에게만 로터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서 집에 가서 잘 돌보라며 조기퇴실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큰 병원에 가 보아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듣고 원장을 당일 아기의 변 상태가 좋았다며 별일은 아니니 집에 데려가 잘 보살피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데려와 보니 아기는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고 다음날 저희 아기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야했고, 12일간 격리 입원조치 되었습니다. 제가 조리원에 있을 당시 설사하는 아기들이 늘어가는 것도 분명히 목격하였고, 저희 아기는 출생 이후 계속 변 상태가 좋았던 것을 제가 매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의 두 번의 검사 결과 우리아기의 변에서는 원장이 말한 로터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장염 즉, 로터 바이러스는 아니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조기 퇴실 할 당시쯤 갑자기 조기 퇴실하는 산모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리원에 있을 당시 밤에는 보일러가 꺼져 한기를 느껴야 했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양치질을 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실하여 있었던 당시 거실에서 보일러관이 터져 만 하루 동안 보일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산모들은 찬물만 사용하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조리원측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최소한 아기의 입원 치료비용 및 조리원에 입실할 때 지불했던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는 경찰에 원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해 둔 상태이나 조리원측에서는 원장이 지방에 내려갔다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해 둔 사건도 본원에서 다루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2007년 9월 17일)

농협·수협 등 공영도매시장¹⁰⁾ 수입산 매년 증가

- 농림부·해양수산부 수입산 농·수산물 현황분석 -

- 수협공판장 수입산 취급 비율 해마다 증가
 - 수입수산물 취급 비율 증가, 25.7%('05)→ 31.4%('06)→ 33.8%('07.8)
 - 수입산 취급 50%넘는 품목 증가, 13개('06)→ 15개('07.8)
 - 90%넘는 품목도 소라(100%), 명태알(98.7%) 등 7개나 돼('07.8)
 - 차례상에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 94.6%, 명태 77.2%, 홍어 71.6%, 참조기 44.9% 등 수입산 점유비율 높아..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민영시장보다 수입산 취급비율 높아
 - 농산물 수입 5년째 증가..중국산과 미국산 압도적
 - 수입량증가, 24,765천톤('05)→ 25,142천톤('06)→ 15,587천톤('07.8)
 - 전체 수입 농산물 중 중국산과 미국산이 58.5% 차지('07.8)
 -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증가, 4.07%('04)→ 4.56%('05)→ 5.14%('06)
 - 민영도매시장(2006년 기준 1.05%)보다 취급비율 높아
 - 농협공판장 수입과일 취급비율 증가, 3.1%('05)→ 3.5%('06)→ 4.2%('07.8)
- 수입산 중 밀수·원산지표시위반 식품 매년 증가
 - 농산물 표시위반 증가, 3,231건('05)→ 3,634건('06)→ 3,029건('07.7)
 - 수산물 표시위반 증가, 1,055건('05)→ 1,121건('06)→ 626건('07.7)
 - 밀수식품 증가, 122건('04)→ 160건('05)→ 199건('06)

-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농협·수협포함)에서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주요 제수 용품들이 일부 값싸고 질 낮은 수입산으로 점령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의원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영도매시장(농협포함) 수입농산물 취급현황」,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취급물량 33% 웃돌아

- 수협공판장에서의 수입 수산물 취급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물량은 2005년 25.7%에서 2006년 31.4%, 2007년8월 33.8%로, 금액은 2005년 30.3%에서 2007년8월 36.1%로 각각 증가했다.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연도	물량		금액	
	ton	비율(%)	백만원	비율(%)
2005	26,887	25.7	76,794	30.3
2006	32,909	31.4	82,749	33.3
2007.8	21,438	33.8	53,431	36.1

※ 자료 : 해양수산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수입산 비중이 50%가 넘는(물량기준) 품목도 2005년과 2006년 13개에서 올해 15개로 늘어났으며, 심지어 90%가 넘는 품목도 소라(100%), 명태알(98.7%) 등 7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으로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있음(농림부).

- 한편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94.6%), 명태(77.2%), 명태포(98.5%), 홍어(71.6%), 참조기(44.9%) 등에서 수입산의 점유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품목별 취급현황>

품 목	총판매액		판매(수입)		비 율(%)	
	물량 (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액 (백만원)
명 태	5,229	8,265	4,035	6,715	77.2	81.2
갈 치	2,934	10,574	1,577	4,557	53.7	43.1
낙 지	1,364	6,805	1,154	4,414	84.6	64.9
새 우	655	3,824	627	3,743	95.7	97.9
참조기	2,312	5,495	1,039	2,765	44.9	50.3
포장 바지락	2,933	4,330	1,701	2,550	58.0	58.9
고등어	9,380	14,193	1,860	2,507	19.8	17.7
쭈꾸미	1,053	3,884	752	2,244	71.4	57.8
숫꽃게	781	3,109	394	1,315	50.4	42.3
명태포	469	1,253	462	1,233	98.5	98.4
임연수어	1,072	1,299	1,014	1,219	94.6	93.8
꿩 치	1,135	1,522	799	1,103	70.4	72.5
부 세	345	1,025	332	991	96.2	96.7
아 귀	1,405	2,696	436	936	31.0	34.7
기타조기	308	2,415	92	856	29.9	35.4
바지락	1,390	2,122	636	797	45.8	37.6
홍 어	282	1,128	202	788	71.6	69.9
명태알	77	729	76	726	98.7	99.6
간소라	222	698	222	698	100.0	100.0
기타새우	124	685	113	644	91.1	94.0
기 타	29,992	71,820	3,915	12,630	13.1	17.6
합 계	63,462	147,871	21,438	53,431	33.8	36.1

※ 자료 : 해양수산부, 2007.9

◎ 농산물 취급 공영시장, 민영시장보다 수입산 취급비율 높아..

- 농산물의 수입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은

전체 수입농산물 중 58.5%(중국31.2%+미국27.3%)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FTA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민 식탁안전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산물 수입 비율>

연 도	금액(USD)		물량(kg)	
	금액	성장률	물량	성장률
2003	6,212,665,215	-	24,301,025,126	-
2004	7,444,566,610	19.8	24,317,419,716	0.1
2005	7,397,370,241	-0.6	24,765,542,212	1.8
2006	8,117,194,872	9.7	25,142,081,122	1.5
2007.7	5,775,989,618	-	15,587,141,486	-

※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전체 수입농산물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금액/물량>

연 도	수입 농산물 중 금액비율		수입 농산물 중 물량비율	
	미 국	중 국	미 국	중 국
2003	22.4%	27.8%	16.4%	42.6%
2004	29.5%	15.1%	32.3%	15.7%
2005	21.0%	23.8%	21.5%	31.6%
2006	25.6%	19.1%	34.5%	18.6%
2007.7	24.6%	25.0%	27.3%	31.2%

※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산물 취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2004년 4.07%에서 2005년 4.56%, 2006년 5.14%로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이 매년 증가했으며, 1.05%(2006년)의 취급비율을 보이는 민영시장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도매시장과 민영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취급 비율>

구분	공영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2004	4.07%	1.03%
2005	4.56%	0.49%
2006	5.14%	1.05%

※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농협공판장에서의 수입과일 취급비율도 매년 증가해 2005년 3.1%에서 2006년 3.5%, 2007년 8월 현재 4.2%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취급하는 과일류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레몬 순으로 많았다.

◎ 원산지 표시위반·밀수식품 매년 증가!

- 최근 수입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밀수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증가로 식품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식탁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05년 3,231건에서 2006년 3,634건, 2007년7월 현재 3,0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표시위반 건수도 2005년 1,055건, 2006년 1,121건, 2007년7월 현재 626건으로 증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건수>

구분	2005	2006	2007.7	합
농산물	3,231건	3,634건	3,029건	9,894건
수산물	1,055건	1,121건	626건	2,802건

※ 자료 : 농림부·해양수산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밀수식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식료품 밀수 검거 건수는 총 741건 이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5백

90억원에 달했다. 밀수규모는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6 밀수식품 단속현황>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검거건수	741건	117건	143건	122건	160건	199건
금액(백만원)	59,025	6,695	7,009	12,965	19,014	13,342

※ 자료 : 관세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주요 밀수식품 현황을 보면, 김치류(161건, 2백1억원)와 어육류(39건, 78억원)가 가장 많은 가운데¹¹⁾, 시럽류(14건, 51억원), 과자류(33건, 36억원)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매년 밀수식품 적발이 증가(2004년 122건, 2005년 160건, 2006년 199건)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2004~2006 밀수식품의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식 료 품	꿀 류	28	1,088	7	46	5	700	16	342
	다시마류	8	780	1	346	3	35	4	399
	참기름류	116	231	20	4	23	9	73	218
	어 육 류	39	7,857	8	1,565	6	317	25	5,975
	시 럽 류	14	5,139	3	1,018	6	3,722	5	399
	초코렛류	14	644	4	103	3	328	7	213
	과 자 류	33	3,595	8	566	14	2,911	11	118
	김 치 류	161	20,188	61	8,449	56	8,023	44	3,716
	기 타	68	5,799	10	868	44	2,969	14	1,962
소 계	481	45,321	122	12,965	160	19,014	199	13,342	

※ 자료 : 관세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11) 밀수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영시장,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시장으로 거듭나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식품과 밀수식품은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들은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식탁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일부 민간 대형 할인점과 소규모 시장에서 값싸고 질 낮은 수입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농민과 어민을 보호해야 할 수협과 농협의 공영시장에서조차 수입산 취급비율을 늘리고 있어, 추석 차례상마저 수입산으로 점령당할지 우려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을 높여, 농민과 어민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국민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4. 화장률이 매장률 추월 (2007년 9월 20일)

‘05년 화장률 52.6%, ‘06년 56.5%

- 화장률 매년 증가, 2005년부터 매장률 추월!
 - 46.4%('03)→ 49.2%('04)→ 52.6%('05)→ 56.5%('06)
 - 화장률 높은 지역 : 부산 77.7%, 인천 72.4%, 서울 68.2%
 - 화장률 낮은 지역 : 전남 32.7%, 충남 34.4%, 충북 38.6%
- 수도권 화장시설로 화장 건수 집중
 - (1일 1기당)서울 4.08건, 부산 3.04건 등 평균 2.5건을 웃돌아
※1일 1기당 적정 화장처리 건수 2.5건
- 화장시설 확충 위한 주민의식 제고와 정부지원 절실
 - 예산부족, 지역주민 반발로 계획 중인 화장장 20개소 중 9개 (45%)는 사업차질 빚고 있어
 - 지자체 필요액 중 국가 지급액은 28.3% 불과(2007년)
: 16개 시·도 요청액 318억, 정부 지급액은 90억

-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화장률이 2005년을 기점으로 매장률을 추월했으며, 2006년 화장률은 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시별 화장 및 매장 현황('03~'0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전국 화장률 매년 증가! 2006년 56.5%!

- 전국 화장률은 2005년도에 52.6%로 처음으로 매장률을 추월했으며, 2006년에는 56.5%를 보이는 등 매년 화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전국 시·도시별로 구분해 보면, 2006년도에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7.7%며, 그 뒤를 인천(72.4%)과 서울(68.2%) 등 주로 광역시 주변에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전남(32.7%)과 충남(34.4%), 충북(38.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아직도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관습과,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화장률 현황('03~'06)> (단위 : %)

시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 균	46.4	49.2	52.6	56.5
서 울	61.5	61.6	64.9	68.2
부 산	68.1	71.9	74.8	77.7
대 구	46.2	49.4	51.5	56.3
인 천	62.8	65.7	69.0	72.4
광 주	34.6	37.8	41.5	45.9
대 전	45.3	47.5	49.9	54.5
울 산	61.4	59.4	61.7	66.9
경 기	52.7	56.8	60.3	64.0
강 원	41.3	43.8	46.8	51.6
충 북	27.4	28.6	29.7	36.8
충 남	27.5	28.7	31.6	34.4
전 북	31.7	34.9	39.5	42.3
전 남	21.0	25.3	27.2	32.7
경 북	34.6	37.4	43.3	44.0
경 남	49.0	52.8	55.6	61.6
제 주	26.1	31.6	35.0	38.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화장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과 재원마련 시급

- 정부는 2000년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묘지증가에 따라 국토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화장·납골제도의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47개소(211기 화장로)에 불과해 화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처리건수는 2.5건인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1개의 화장로에서 하루 3~4건을 처리하고 있어, 하루 적정처리 건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이 아닌 먼 곳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요 대도시별 화장실적 현황>

시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장건수	1기당 1일 평균 화장률 (1년을 365일로 기준)
계	3	53	66,478	3.44건
서울	1	23	34,228	4.08건
부산	1	15	16,633	3.04건
인천	1	15	15,617	2.85건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또한, 현재 20곳에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은 예산부족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에만 반영된 지역이 9개소(57로)에 이르고 있다.

<화장장 건립 예정 현황>

(단위: 개소, 화장로수)

'07년 완공	'08년 완공	'09년 이후	계 획
강원 인제(3로) 충북 청주(8로) 충남 홍성(8로)	충북 제천(4로) 경북 울릉(2로) 경남 창원(6로) 전북 익산(5로)	충남 천안(8로) 전북 정읍(3로) 전남 목포(7로) 경북 경주(3로)	<u>서울 원지동(11로)</u> <u>경기 부천(6로)</u> <u>경기 하남(16로)</u> 경기 용인(10로) 충북 단양(2로) 전북 전주(1로) 전남 순천(6로) 경남 사천(3로) 경남 진주(2로) 등
3개소(19로)	4개소(17로)	4개소(21로)	9개소(57로)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주1) 계획 :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한 지역 또는 계획단계에서 소송 등 주민갈등이 표출된 지역(밑줄 표시)

- 한편, 지자체에서는 2007년 화장시설사업과 관련 복지부에 318억4천1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중 28.3%인 90억2천3백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236억1천1백만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도별 화장시설관련 예산요청 현황 및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2007년도 사업		2008년도 사업	
	요청액	지급현황	요청액	지급현황
계	31,841	9,023	23,611	
서울	-	-	-	
부산	500	450	743	
대구	590	515	413	
인천	600	300	413	
광주	200	215	165	
대전	50	50	83	
울산	5,900	-	330	
경기	5,079	-	12,159	
강원	702	450	248	
충북	1,932	1,715	1316	
충남	4,401	1,307	1819	
전북	3,682	1,034	567	
전남	1,763	290	520	
경북	2,922	1,797	330	
경남	3,520	900	4,505	
제주	-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주민의식 제고와 정부의 지자체의 사업타당성 확보돼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화장시설은 매우 부족하고 기존의 화장시설도 대부분 열악하다.”며, “정부는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수급계획 하에 적정 규모시설 확보를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안의원은, “장사시설이 주민생활 공간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5.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 위협! (2007년 9월 23일)

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사망의심자도 발생

- 부작용 매년 증가 : '05년 302건→'06년 463건→'07년6월 268건
- '07년 피해사례 56건 분석 결과, 소화기장애(23건) 가장 많아
- 피해자 56명 중 15명은 병원진료, 4명은 약국방문
- 사망의심자 : 4세(女), 화분제품 7개월 복용 후 부종으로 사망

② 부적합 건기식품 64개 제품 유통...17.6%만 회수

- 부적합 현황 : '05년 31건→ '06년 15건→ '07년6월 18건
- 위반내용 : 기준규격위반(29), 위해물질검출(22), 미생물검출(12)
- 제품유형 : 로얄제리(14), 영양보충제(10), 키토올리고당(4)

③ 허위과대광고 심각! 1천건 넘는 해외판매 사이트 적발

- 허위·과장광고 해외사이트 1,004건 제재 요청 ('05~'07.6)
: 이용해지·차단 470건, 삭제 58건, 기각 62건, 심의 중 398건
- 광고 및 파급 효과 큰 TV홈쇼핑도 9건 적발 ('05~'07.6)
- 41개 업체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05~'07.6)

④ 부작용 분석평가체계 도입해, 건기식품안전망 구축해야

- 부작용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사례 수집해야
-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국민들께 바로 알려야... 홍보·교육지원 필요
-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하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대책 마련해야...

- 추석 효도선물로도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복용에 의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하고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심각! 부작용 매년 증가하고 사망의심자도 발생

- 식약청이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1,0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5년 302건, 2006년 463건, 2007년 상반기 2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건강피해 추정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신고건수	1,033	302	463	26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2007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강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설사·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탈모 등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고열이 7건, 두통·어지러움도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2007년 상반기)>

(단위 : 건)

건강피해유형	신고건수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23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11
발한, 고열	7
두통, 어지러움	6
부종, 황달	3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3
환불 등의 목적으로 건강피해 증상을 신고하지 않음	2
호흡이상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56명의 피해신고자 중 1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명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1건의 사망의심자도 발견되었는데, 화분제품을 7개월가량 복용한 4세 여아가 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신장질환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동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에 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사망사례>

1. 40개월된 여자어린이이다. 2005년 10월부터 A제품을 매일 1잔씩 마심. 같이 B제품과 C제품을 먹였다.
2. 2006년 3월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니 명현반응이라며 다른 제품도 먹이라고 권해서 D제품, E제품, F제품, G제품 등 같이 먹였다.
3. 호흡이 거칠어지고, 토하고 설사를 해도 명현반응이라고 하고, 붓기를 빼야 한다면서 권한 것이다. 판매자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믿었다.
4. 아이가 2006년 4월18일 아이가 위독해서 병원을 갔으나 사망한 상태로 도착했다고 한다.
5. 아이의 시신은 4월20일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으나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 아이 장례식에 제조사 측에서 와서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연락은 없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주) 2007. 2. 28에 식약청에 신고된 내용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병원진료, 약국치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병원진료	약국치료	치료받지 않음
신고건수	56	15	4	3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시중 유통... 회수율은 17.6%에 불과해

-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회수되었거나 파기된 제품들은 불과 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시중에 유통·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 및 회수율(2005~2007.6)>

(단위 : 건, %)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적발건수	64	31	15	18
회수율(%)	17.6 ¹⁾	6.9	22.8	31.5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1) 합계란에 17.6%는 2005년부터 2007년6월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기재한 것임.

- 부적합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로얄젤리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보충제 10건,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과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이 각각 4건, 스피루리나제품, 홍삼제품, 화분제품 그리고 효소함유제품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사유별 분류(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계	64	31	15	18
기준규격 위반	29	17	8	4
미생물 검출	12	6	4	2
위해물질 검출	22	7	3	12
중금속 검출	1	1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상위 5개 제품 유형별 현황(2005~2007.6)>

(단위 : 건)

순서	제품유형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1	로얄젤리제품	13	1	-	12
2	영양보충용제품	10	8	2	-
3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4	4	-	-
3	글루코사민함유제품	4	2	2	-
5	스피루리나제품	3	-	3	-
5	홍삼제품	3	1	1	1
5	화분제품	3	1	1	1
5	효소함유제품	3	1	1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 허위·과대광고 심각! 1천개 넘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 요청... 광고 및 파급효과 큰 TV홈쇼핑도 9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중 해외 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요청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재 요청된 사이트 수가 무려 1,004건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요청 실적(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제재요청	1,004	372	465	16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건강기능식품 해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제재요청 심의 결과, 사이트의 이용을 해지 하였거나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4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6.8%), 해당정보를 삭제한 경우도 5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62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8건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요청 심의결과(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이용해지 / 차단요청	해당정보 삭제	각하	심의 중	기 타
건 수	1,004	470	58	62	398	1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 기타는 해당사항 없음(12), 증거불충분(2), 1개월정지(1), 해외서버(1) 등임.

- 소비자에 대한 광고 및 과급효과가 큰 TV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드러났다. TV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방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 한편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41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5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되었고, 16개 업체는 영업정지, 5개 업체는 고발·기소됐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결과(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영업정지 및 고발	영업정지	고발/기소	진행 중
건 수	41	15	16	5	5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 확산시켜...부작용 분석·평가체계 도입해, 건강기능식품 안전망 구축해야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안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안명옥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6.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2007년 9월 28일)

- ① **[하나원]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결과 분석 ('04~'07.6)**
 - 새터민 20%가 결핵, B형간염 등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06년 입국자 감염률 14%에서 '07년 31.7%로 급증!
 - 탈북과정에 심리적 외상 많고, 여성새터민 급증하는데, '하나의원' 내 정신과·산부인과 의사는 한 명도 없어
 -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새터민 건강지원 및 전염병관리체계 재정비해야

- ② **[질병관리본부]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분석 (2006)**
 - 기생충감염률 28.9%, 남한(3.5%)보다 8.25배 감염률 높아
 - 미충족의료수요율 36.1%, 남한(13.7%)보다 2.6배 높아
 - 전반적 면역력 낮고, B형간염·결핵감염 심각...만성질환 유병률은 남한보다 오히려 낮아

- ③ **북한방문자 75명 간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04~'07.6)**
 - 말라리아 46명, A형간염 12명, 세균성이질 17명 감염
 - 말라리아 감염인 방북이유 : 직업39명, 여행5명, 미확인2명
 - 말라리아 감염지역 : 개성 29명, 금강산 15명, 미확인 2명

- ④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결의안」 조속 통과 촉구**
 - 북한 전염병 유입차단, 국내 질병관리 비용 절감, 남북한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위해 꼭 필요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분야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북한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004년 이후 입국한 새터민 18.8%가 결핵, B형간염, 성병, 부인과 질환 등 질병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건강상태 심각한 수준

-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통일부 산하 새터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6월까지 총 6,087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04년 1,659명, '05년 1,316명, '06년 1,856명, '07년 6월 현재 1,25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터민들은 국내 입국시에 통일부 하나원 산하 '하나의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검진대상자 수	6,087	1,659	1,316	1,856	1,256
남 성	1,681	513	406	479	283
여 성	4,406	1,146	910	1,377	973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의 20%인 1,220명이 결핵, B형간염, 성병, 부인과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률은 '04년 21%, '05년 16.3%, '06년 14%로 매년 감소하다가, '07년6월 현재 31.7%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질환 유형별로는 B형간염 669명, 부인과질환 283명, 성병 137명, 결핵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4~2007.6 연도별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검진대상자 수	6,087	1,659	1,316	1,856	1,256
이상소견자 수	1,220	348	214	260	398
이상소견자 비율	20.0%	21.0%	16.3%	14.0%	31.7%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계	1,220	348	214	260	398
결 핵	131	43	28	25	35
B형간염	669	203	86	150	230
성 병	137	35	28	29	45
부인과 검사	283	67	72	56	88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30대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20.8%, 40대 19.1%, 50대 13.3%, 10대 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40대에 질병감염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1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새터민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었다.

<2004~2007.6 연령별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 이상
하나원입소자 수1)	6,497	229	807	1,696	2,254	906	256	349
이상소견자 수	1,220	7	76	353	553	173	34	24
이상소견자 비율	18.8%	3%	9.4%	20.8%	24.5%	19.1%	13.3%	6.9%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1) 연령대별 검진대상자에 대한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하나원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하나원입소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유병률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세부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30대에서는 B형간염과 부인과질환이, 20대에서는 결핵과 성병이 매우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대에서 30대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4.5%인데, 30대 B형간염 및 부인과질환 보유자는 각각 48%(669명 중 321명)와 47%(283명 중 133명)로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단위 : 명)

구 분	계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이상
이상소견자 수	1,220	7	76	353	553	173	34	24
결 핵	131	5	9	40	48	22	3	4
B형간염	669	2	54	191	321	76	19	6
성 병	137	·	3	52	51	27	1	3
부인과검사	283	·	10	70	133	48	11	11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이처럼 새터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하나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나의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내과2, 한방2, 치과1)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부인과질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새터민들은 흔히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장애를 겪거나, 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한 연구에서는 새터민 중 29.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¹²⁾를, 16%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¹³⁾. 이러한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과 전문의 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 또한 여성 새터민 입국이 급증('07.5기준 입국자 중 78%)하고 있어 하나의원 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추가로 파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환자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12)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13)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155~208p, 2003

○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 분석결과, 새터민 기생충감염률 남한의 8.25배, 미충족 의료수요율 남한의 2.6배에 달해...

- 질병관리본부가 새터민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생충감염률, 면역도, 미충족 의료수요율 등에서 남북간의 건강수준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 중 일부만을 제출받아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05.11.8~'06.10.31, 총 45차수 ◦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 1,900명 ◦ 면역도 조사 : 전염병별로 20세 미만 200명 ◦ 심층면접조사 : 보건의료인, 교사, 군인 11명 ◦ 조사자 특성 : '05~'06년에 북한을 이탈한 자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99년 이전 이탈자도 31.3%를 차지
--

- 기생충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검사대상자 1,501명 중 434명(28.9%)의 장내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남한의 기생충감염률이 3.5%¹⁴⁾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8.25배가 넘는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4.8%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50대가 18.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36%, 여성 26.2%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배가량 검출률이 높았다.

14) 2005년 한국통계학회

<성별, 연령별 기생충 감염률>

(단위 :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10대 미만	6/43(14.0)	8/31(25.8)	14/74(18.9)
10대	45/90(50.0)	32/82(39.0)	77/172(44.8)
20대	35/92(38.0)	70/269(26.0)	105/361(29.1)
30대	43/98(43.9)	101/442(22.9)	144/540(26.7)
40대	17/61(27.9)	40/152(26.3)	57/213(26.8)
50대	1/15(6.7)	8/33(24.2)	9/48(18.8)
60대	4/21(19.0)	24/72(33.3)	28/93(30.1)
전체	151/420(36.0)	283/1,081(26.2)	434/1,501(28.9)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주) 남한주민의 감염률은 3.5%임. (출처 : 2005년 한국통계학회)

-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에서도 남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수치화한 '미충족 의료수요율'은 남한이 13.7%수준인 반면, 북한은 36.1%로 남한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 미충족 의료수요율 비교>

(단위 : 명, %)

구 분	남 한	북 한
미충족 의료수요율	13.7%	36.1%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주) 남한의 미충족 의료수요율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것임.

- 전염성병원균에 대한 면역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면역도가 남한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파상풍과 홍역은 면역도가 북한이 남한의 1/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높았으나, 북한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획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풍진의 경우 선천성 기형 등 합병증 발생도 우려된다.

<남북한 면역도 수치 비교>

(단위 : %)

구 분	면역도 검사				
	디프테리아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새터민	72.4	31.6	39.8	67.4	82.3
남 한	87	66	88	63	7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대상 : 기생충과 B형간염은 전 연령대, 그 외는 20세 미만 대상임.
 범례 : (○) 북한내 예방접종 실시, (×) 북한내 예방접종 실시 않음.

- 이 밖에도 10대의 평균 체중과 신장이 같은 연령대 남한 아이들과 격차가 가장 컸으며, 10대 미만에선 최근에 탈북한 아이들일수록 신장과 체중이 더 작았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음주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이후 방북자 75명, A형간염·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 북한을 방문한 내국인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아온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 46명, A형간염 12명, 세균성이질 17명 등 총 75명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2007.6 방북으로 인한 법정전염병 감염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말라리아	A형간염	세균성이질
감염인 수	75	46	12	1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이 중 말라리아 감염인 46명의 방문목적은 확인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 등 직업상의 이유로 방북한 경우가 39명, 여행객이 5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감염추정지역은 개성공단 29

명, 금강산 15명, 미확인 2명으로 확인됐다.

<2004~2007.6 말라리아 감염인 방북사유>

(단위 : 명)

구 분	계	직 업	여 행	미확인
방문목적	46	39	5	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2004~2007.6 방북자 말라리아 감염지역>

(단위 : 명)

구 분	계	개성(공단)	금강산	미확인
감염지역	46	29	15	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새터민 건강지원 및 전염병관리체계 구축해야...

-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새터민의 건강상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건강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가 보건소를 통해 국가전염병관리체계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법정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새터민 전염병 환자가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가전염병관리체계상에 등록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새터민 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에 대한 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새터민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새터민 7,543명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만으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부분적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기관이나 지정병원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으로 온 새터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정착단계 새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하나원에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 보건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질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질병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안의원은 “새터민들은 힘든 탈북과 오랜 도주생활로 전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조기치료 및 건강관리체계가 절실하다. 하나의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는 물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시점까지 치료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의 보건의료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한편 안명옥의원은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지난 '05년7월과 '07년9월17일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7.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 불량, 장병 건강·군 전투력 저하 우려

(2007년 9월 30일)

-육·해군/식약청 급식관련 MOU체결 이후 실태조사 최초공개-

□ 군납업체 250개소 점검결과 51개소(20.4%) 식품위생법 위반

- 육군 식품군납업체, 152곳 중 43곳(28.3%) 위반
- 해군 제1사령부 납품업체, 7곳 중 2곳(28.6%) 위반
- 예비군 도시락업체, 91곳 중 6곳(6.6%) 위반

□ 군인공제회, 상이군경회 소속 식품업체 등도 문제

- 군인공제회 소속 'J'식품사업소,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위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H'공장, 품질검사 없이 백김치 납품

□ (국방기술품질원)군납 식품류 만족도 50.2% 불과!

- 군납식품류 장병만족도 감소, 51.7%(2005년)→ 50.2%(2006년)
- 주요식품 장병 만족도 : 꼬리곰탕 가장 높고, 즉석카레 제일 낮아
- ※주요 납품식품 : 햄, 꼬리곰탕, 쌀국수, 딸기잼, 즉석카레, 소시지

□ 식품분야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 21% 불과!

- 인증 대상 71개 업체 중 15개만 인증 받아, 인증률 21.1%
- ※인증대상 : 유통기한이 1달 이상 되는 식품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질 낮은 재료 제품 군납 가능성 상존

- 군납 식품업체 5곳 중 1곳이 위생관리가 부실해 부적합 식자재와 식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군 전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위원)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납업체 식품위생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육군과 해군은 2007년 4월과 5월에 군인에게 제공되는 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급식안전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군납업체 250곳 중 51곳(20.4%), 위생불량!

- MOU체결에 따라 2007년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방부와 식약청이 군납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군에 납품하는 군납업체 152곳 중 43곳(28.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예비군 도시락업체 91곳 중 6곳(6.6%)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판정을 받았다.

<군납업체 식품업소 점검결과>

() : 부적합업소

구분	계	부산	서울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계	243(49)	35(6)	82(7)	26(2)	23(11)	49(18)	28(5)
군납품업체	152(43)	30(6)	18(6)	22(2)	18(10)	43(16)	21(3)
예비군도시락업체	91(6)	5(0)	64(1)	4(0)	5(1)	6(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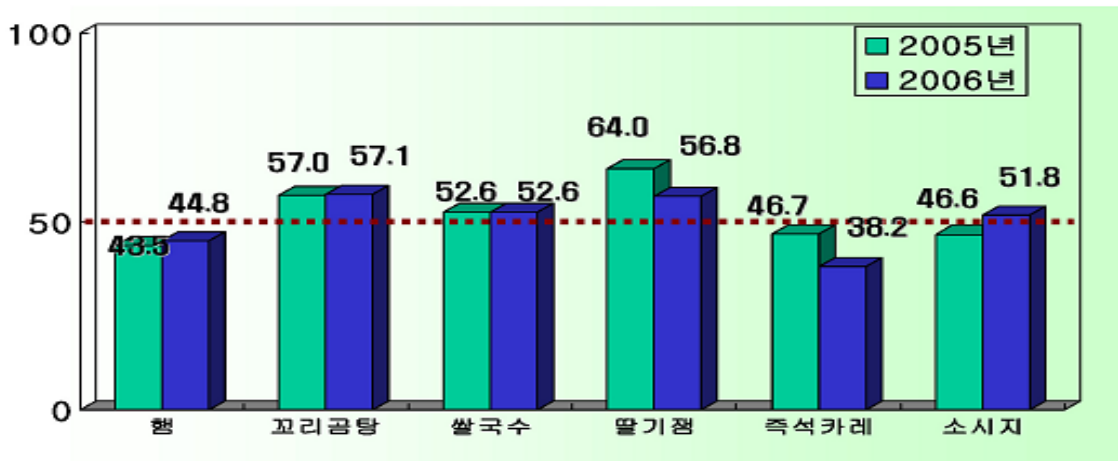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

- 또한, 해군 제1사령부에 보급하는 납품업소 7개소 중 2곳(28.6%)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적합으로 문제가 된 업체들에는 군인공제회와 (사)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식품사업소도 포함되어 있다.

◎ 장병 군납식품 만족도 50%수준에 불과!

-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군납 식품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장병들의 군납 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50.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51.7%보다 1.5%p 하락한 수준이다.
- 장병들이 선호하는 군수품목으로는 햄, 꼬리곰탕, 즉석카레, 소시지, 즉석 쌀국수, 딸기잼 등을 꼽았으며, 이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식품은 꼬리곰탕이었다.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즉석카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주요 식품별 장병 만족도 지수>



※ 자료 : 국방기술원, 2007.9

◎ 낮은 국방품질시스템 인증, 저가 입찰방식도 문제!

- 이와 같이 군납식품의 위생수준이 낮고 장병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된다.
- 국방품질관리원은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되는 식품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선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 71곳 중 15개 업체만 인증(인증률 21%)을 받았다. 이처럼 인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권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식품 군납이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되던 것이 금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 질 낮은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 군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병들이 먹는 음식은 군인들의 건강과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납 식품의 질과 안전성은 부대의 전투력과 국방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군납 식품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체계 확립과 더불어, 가격 기준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식품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해 만족도와 질 높은 식품들이 국가의 방패인 장병들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8.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2007년 10월 8일)

-노인·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 **노인·청소년 성매매 급증, 성매매사범 솜방망이 처벌 심각**
 - 성매매업소 수 '04년 1,696개→'07년 5월 992개로 70.1% 감소
 - '07년 성매매종업원 수: 대구 8명, 충남 8명 전북 4명 증가해
 - 성매매 단속실적 '04년 16,951명→'06년 34,795명→'07년 상반기 13,380명
 - '06년도 노인성매매 사범 전년대비 69.4% 증가, 19세이하 미성년자 10.7% 증가
 - 성매매사범구속율 '03년 9.6%→'07년 상반기 1.5%로 낮아져
- **성매매집결지 '풍속영업소' 로 둔갑하여 유포**
 - 변종풍속영업소 '05년 5,841개→'06년 8,714개→'07년 상반기 9,451개로 증가
 -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유흥업소 종사자 현황결과,
 - 특수업태부 '05년 1,820명→'06년 1,914명→'07년 상반기 1,709명으로 증가
 - '06년 유흥접객원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
 - 풍속영업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단속 사각지대 심각
- **온라인 상 '불건전 만남' 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심각**
 - '07년 상반기 '불건전만남유도신고' 7,533건으로 전년보다 28배 증가
 -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 6,126건, 시정요구 2,702건, 청유결정(청소년유해정보) 35건으로 급증
 -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음란정보(심의 6,992건 중 시정요구 416건, 청유정결정 4575건), 불건전만남(심의 265건 중 시정요구 231건)
 - 건전한 성문화 의식,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 위한 생명교육 절실

- '성매매특별법'을 비롯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경찰청이 안명옥 의원에게(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제출한 성매매 관련 자료로부터 드러났다.
-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집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어들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 2007년 2,5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역별 업소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2006년 44개소에서 2007년 41개소로 3개 업소가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150명에서 158명으로 8명 증가하였고, 충남, 전북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8개소, 81개소로 동일하지만 종업원 수는 충남 8명, 전북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04.9.23		05.9.15		06. 5.10		07. 5.18.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계	1,696	5,717	1,061	2,653	1,097	2,663	992	2,523
서울	513	1,547	292	714	274	662	268	661
부산	133	634	101	289	112	258	86	183
대구	62	350	44	123	44	150	41	158
인천	98	232	63	115	61	89	25	67
경기	421	1,390	293	738	291	717	270	692
강원	115	291	64	138	75	142	66	127
충남	95	574	43	211	58	297	58	305
전북	91	214	72	127	81	78	81	82
전남	44	75	18	52	20	49	18	39
경북	74	170	46	86	56	139	55	129
경남	50	240	25	60	25	82	24	80

※ 자료 : 경찰청, 2007. 7

- 한편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검거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12,739명에서 2005년 18,508명, 2006년 34,795명, 2007년 6월 현재 13,38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상반기 성매매 사범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성매매 사범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3년	12,739	-	-	-
2004년	16,951	2,824	10,180	3,947
2005년	18,508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3,653	27,488	3,654
2007년6월	13,380	1,957	9,415	2,008

※ 자료 : 경찰청, 2007. 7

- <연령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전년대비 6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시대에 노인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단속현황>

(단위: 명)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12,739	16,951	18,508	34,795	
소 년	소 계	541	587	547	599
	14세미만	2	1	1	1
	14세	8	14	12	18
	15세	31	21	31	47
	16세	44	45	60	60
	17세	95	82	80	108
	18세	130	174	139	134

	19세	231	250	224	231
성	소 계	12,156	15,897	17,666	33,989
	20세	260	293	208	317
인	21세	357	373	238	358
	22세	424	467	372	511
	23세	528	530	448	693
	24세	476	616	533	893
	25세	482	580	612	1,139
	26-30세	2,394	3,250	3,529	7,696
	31-35세	2,092	3,070	3,785	7,884
	36-40세	1,549	2,127	2,864	6,194
	41-50세	2,296	3,015	3,529	6,137
	51-60세	891	1,084	1,113	1,652
	61-70세	335	374	347	393
	71세이상	72	118	88	122
	미 상	42	467	295	207

※ 자료 : 경찰청, 2007. 7

- 성매매사범의 '구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18명으로 9.6%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6월 현재 197명으로 1.5%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성매매 사범 중 '업주 및 관련자'가 2006년도 3,653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한 것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약속이행 실적이 미흡함을 말해주고 있다.
-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성매매 사범		
		구 속	불구속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3년	12,739	1,218	11,521	-	-	-
2004년	16,951	1,607	15,344	2,824	10,180	3,947
2005년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2007년6월	13,380	197	13,183	1,957	9,415	2,008

※ 자료 : 경찰청, 2007. 7

-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139,273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안마시술소는 1,011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2006년도 8,714개소로 집계되었던 변종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9,451개소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	변종 풍속영업소
2003년	111,663	23,152	16,161	26,158	19,113	27,079	관련자료없음	
2004년	110,926	22,877	15,346	25,874	18,392	28,437	관련자료없음	
2005년	132,553	26,991	16,205	27,848	21,151	33,562	955	5,841
2006년	139,306	27,555	16,669	28,736	21,734	34,905	993	8,714
2007년6월	139,273	27,197	16,417	28,829	21,684	34,684	1,011	9,451

※ 자료 : 경찰청, 2007. 7

- 한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에 의하면, 성병검진 대상자 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05,447명에서 2006년 117,242명, 2007년 6월 현재 100,78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성병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등록 및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업태부'의 경우 2005년 1,820명에서 2006년 1,914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유흥접객원'은 2005년 83,666명에서 2006년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는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변종 풍속업소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풍속업소는 자유업으로 등록되고 있어 영업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특수업태부	2,632	1,820	1,914	1,709
유흥접객원	101,046	83,666	98,874	85,204
다방여종업원	23,919	18,581	15,364	12,979
안마시술소종업원	1,712	1,380	1,090	897
합 계	129,309	105,447	117,242	100,789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 한편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 2007년 6월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7,533건으로 이는 전년도 2,680건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단위: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인터넷 불건전만남유도	1,511	2,680	7,533	11,724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7

-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현재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을 보면 총 6,126건의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는 2,702건, 청유정(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3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실적>

(단위: 건)

구 분	인터넷			전화			계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2004년	495	187	44	2,061	662	-	2,556	849	44
2005년	1,087	118	63	255	44	-	1,342	162	63
2006년	2,887	271	23	281	105	-	3,168	376	23
2007년6월	5,890	2,573	35	236	129	-	6,126	2,702	35
총 계	10,359	3,149	165	2,833	940	0	13,192	4,089	165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 또한 <음란 및 불건전 만남 유도 모바일 심의실적>을 보면 ‘음란정보 관련된 심의실적’은 2004년도 3,211건에서 2006년도 27,972건, 2007년 6월 6,99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은 2004년 1,148건에서 2006년 579건, 2007년 6월 23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 및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단위: 건)

구 분	음란정보(전체)			불건전만남 유도(채팅 및 미팅)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2004년	3,211	550	2,087	1,148	516	-
2005년	9,047	2,772	5,308	710	686	-
2006년	27,972	1,380	17,711 ¹⁾	905	579	-
2007년6월	6,992	416	4,575	265	231	-
총 계	47,222	5,118	29,681	3,028	2,012	0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 1) 청소년유해정보확인 17,578건 포함

2) '06년말 이통사들 성인콘텐츠 서비스 중단으로 '07년부터 모바일 심의실적 감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성매매관련 사이트¹⁵⁾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이트는 동일사이트를 다수의 도메인을 갖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성매매의 또 다른 창구인 역할대행사 사이트는 자신을 주목시키기 위해 '시급'과 '일당'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성적 성향, 사진 등도 올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여대생들은 이곳을 통해서 쉽고 편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예 방정책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 구속율은 매우 저조하고, 더욱이 2006년도부터는 성매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주무부 처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성매매 방지 및 단속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첨부자료 참조),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2007. 8

<불건전만남유도 사이트 목록16>

o 국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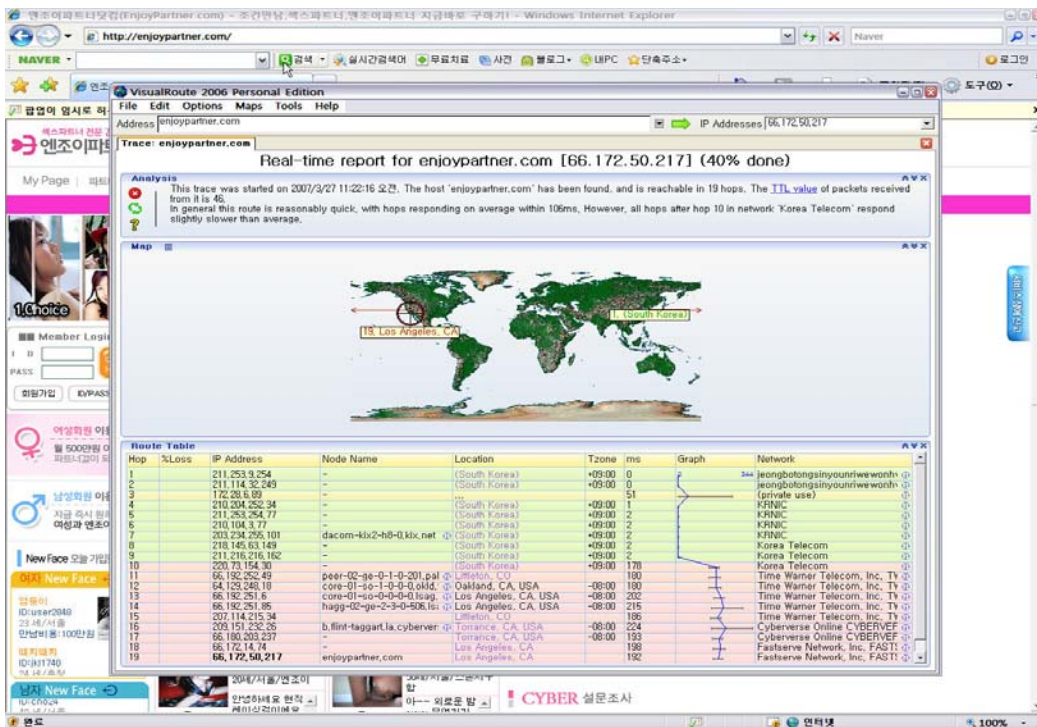
연번	URL	유형
1	http://www.clubmerit.com/bbsmerit/merit_main.htm	유흥업소 홍보
2	http://bam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3	http://www.howalba.com	“
4	http://www.madamq.co.kr	“
5	http://www.joynjob.com	“
6	http://www.1haja.com	“
7	http://www.jobsh.co.kr	“
8	http://www.yaalba.com	“
9	http://sunhijjang.com	“
10	http://www.bamgialba.com	“
11	http://www.shesalba.com	“
12	http://www.nagayo.com	구인구직, 커뮤니티
13	http://home.dreammail.co.kr/cho1	유흥업소 홍보
14	http://semi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15	http://semialba.co.kr	“
16	http://www.nagayoalba.com	“
17	http://bamgi.co.kr	유흥업소 커뮤니티
18	http://www.vip24.com	“
19	http://www.wolfife.com/	남성포털(밤문화)
20	www.190club.co.kr	화상채팅
21	www.camplay.co.kr	“
22	www.ucanjoy.com	“
23	www.soracam.com	“
24	www.tingstory.com	“
25	www.hanating.co.kr	“
26	www.7979club.com	“
27	www.norazocam.com	“
28	www.sysy.co.kr	“
29	www.nowopen.co.kr	“
30	www.xxgo.co.kr	화상채팅 홍보

1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o 해외서버 한글제공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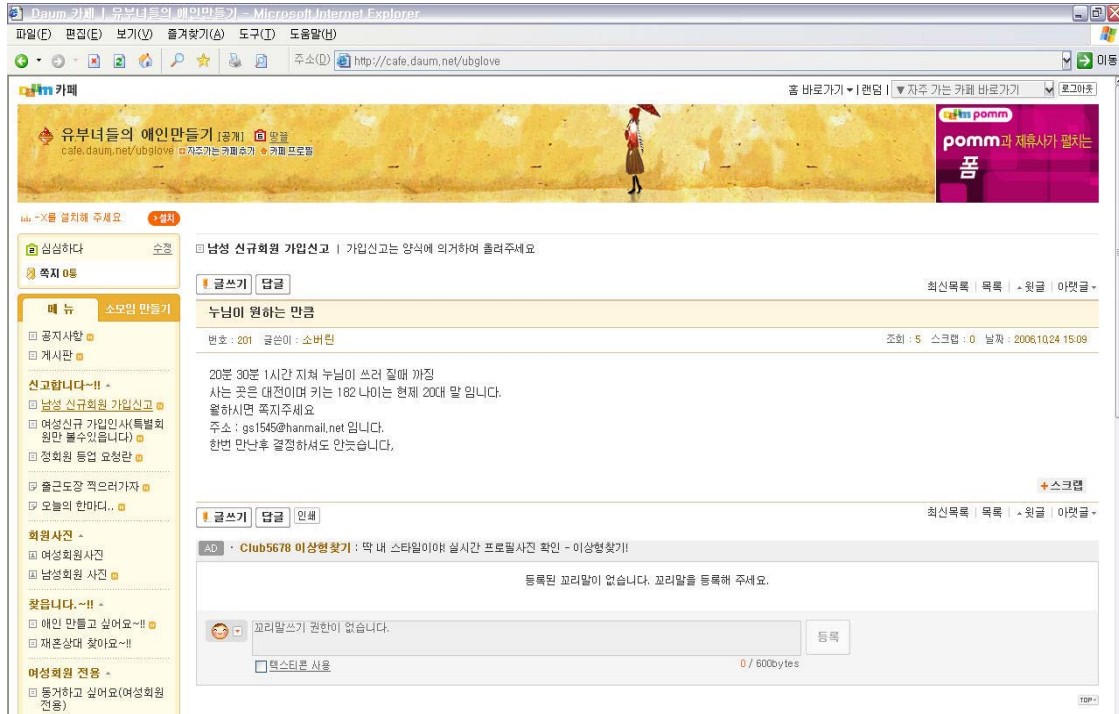
연번	사이트	url, ip주소	서버위치
1	핫짬	www.hot-zim.com	미국
		www.hotzim.com	미국
		www.hotzzim.com	미국
		www.jogun.net	미국
		www.hot-zzim.com	미국
		www.gdaum.net	미국
		www.dangirl.net	미국
		www.camzzim.com	미국
		www.sexokok.com	미국
2	엔조이 파트너	www.jogungirl.com	미국
		www.enjoypartnerok.com	미국
		www.enjoypartner.com	미국
		www.sexpartnerok.com	미국
		www.enjoypartner.net	미국
		www.enjoypartner2.com	미국
		www.enjoypartner.org	미국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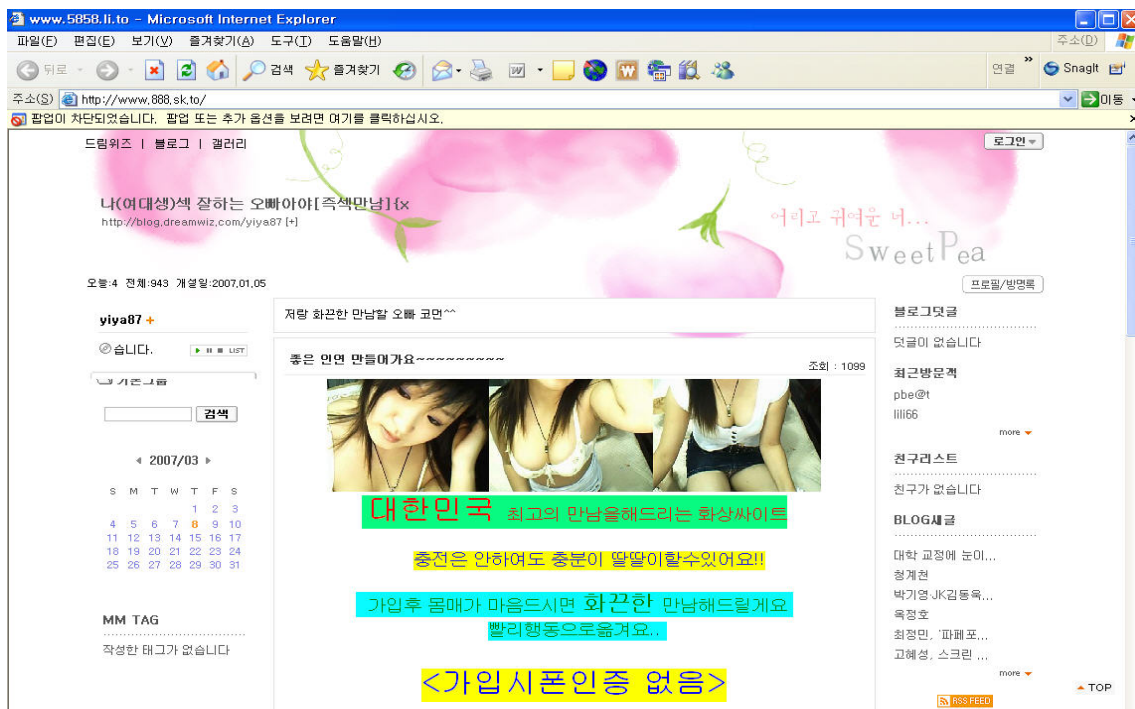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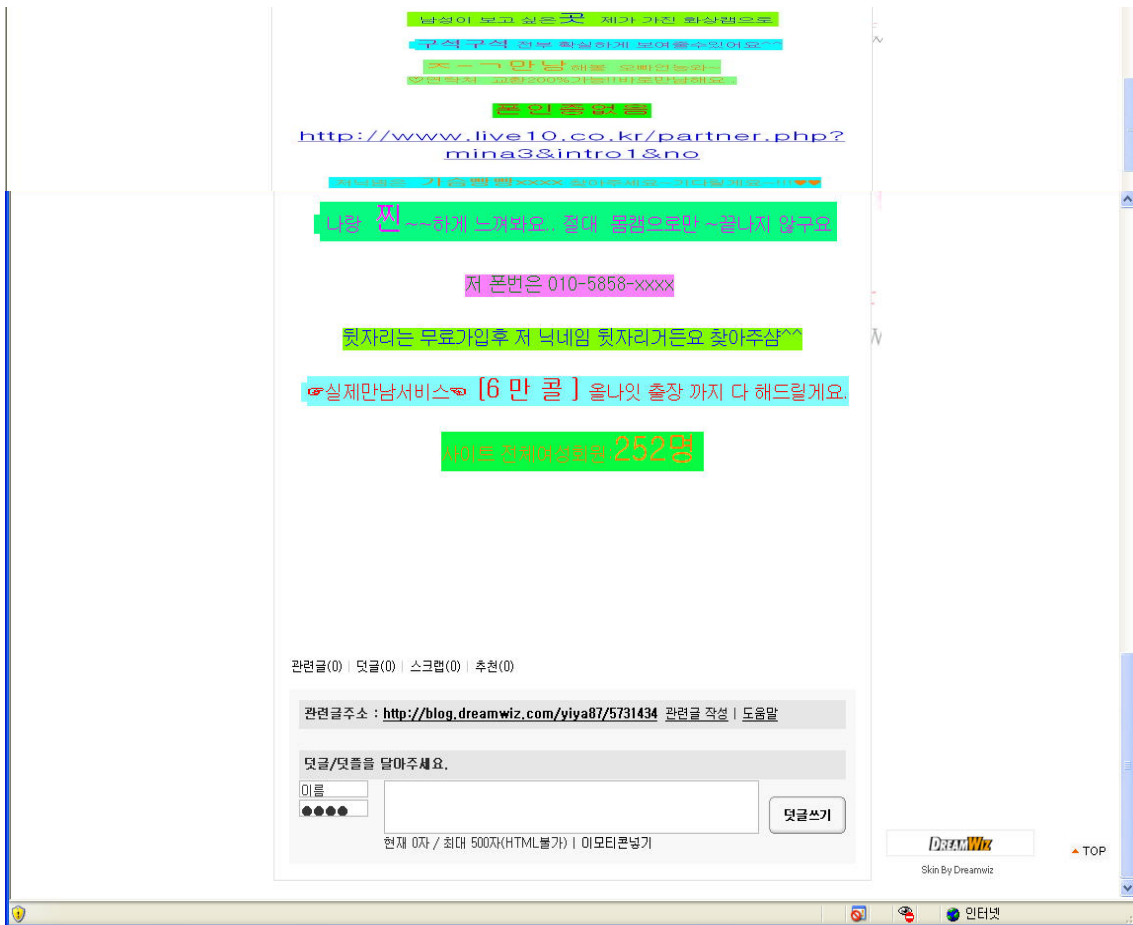
17) 안명욱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o 카페



o 화상채팅 사이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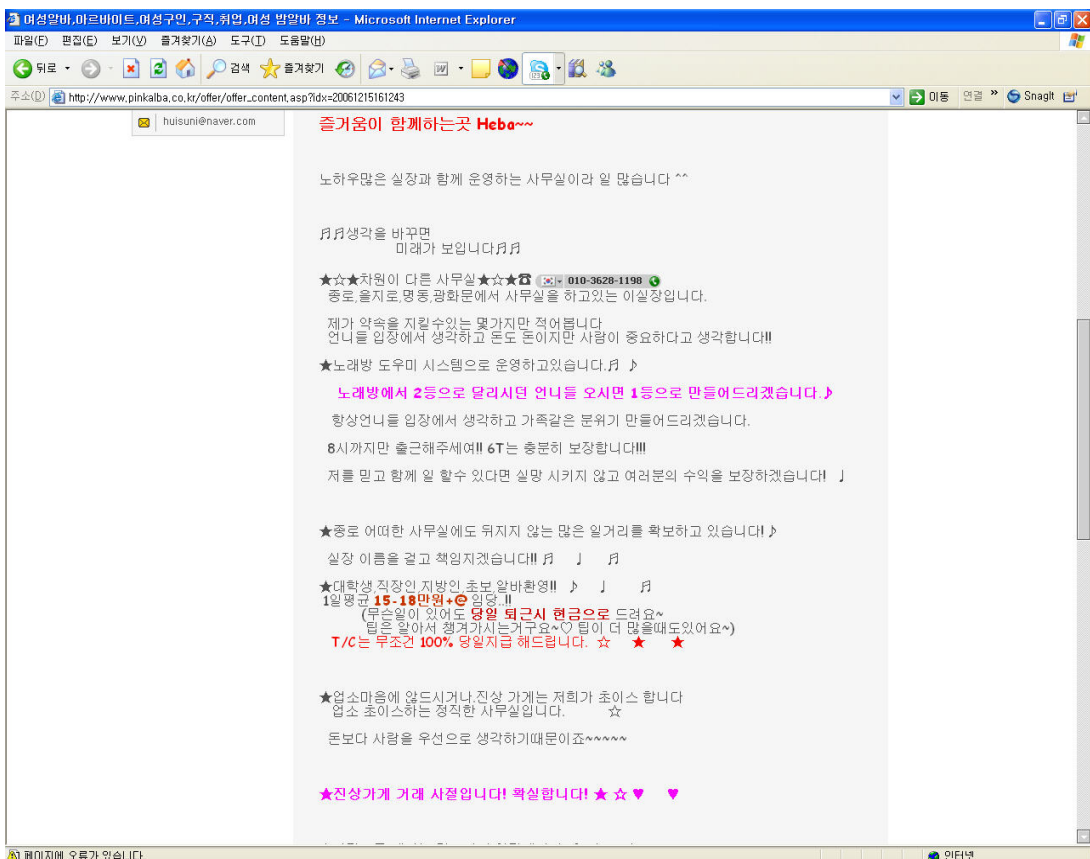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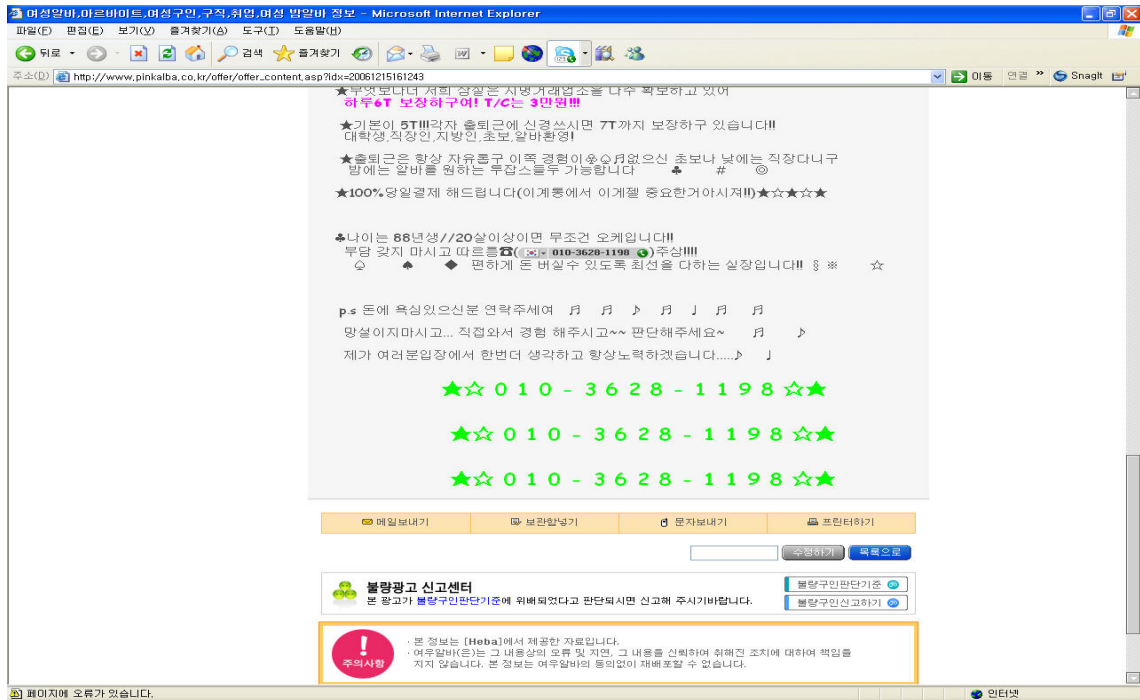


o 애인대행 사이트



o 구인구직 사이트





o 모바일(채팅/미팅 메뉴)



9.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해 (2007년 10월 9일)

‘선택과 집중’ 원칙 하, 정부 및 지자체의 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해야

-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 전국 16개 시·도에 34개 산재
 - 정부 중앙부처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산자부 29곳, 복지부 3곳, 재경부 1곳, 과기부 1곳(계획 3곳 포함)
 - 총 사업 규모 1조 2,812억원, 이 중 5,977억원이 국고지원
- 제 각각 사업추진에 따른 연계부족·중복투자 우려!
 - 충청북도·강원도·전라남도에 4개의 클러스터단지 조성

(충청북도) 사업비 5,373억원 (전체 사업비의 41.9%),
국 고 1,570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26.3%)
 - 같은 시·군에 2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도 4곳(화순, 춘천, 나주, 전주)이나 돼!

(전남 화순) 사업비 822억원 (전체 사업비의 6.4%),
국 고 303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5.1%)
 - 클러스터 간 조율을 위해 990억원(정부 520, 민자 470)을 들여 별도의 ‘바이오 허브센터’도 구축
- 정부 마스터플랜 없어, 부처간 실적위주의 양적확대 조장!
 - (의료산업선진화) R&D 등 국내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 미흡
 - 국제경쟁력 미흡·집적경제효과¹⁸⁾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해야

-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지자체별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는 총 34개이며 이 중 3곳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관련 클러스터 전국 34개 조성, 연계부족과 중복투자 우려!

-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처간의 연계부족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34개 클러스터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31개 바이오클러스터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2,812억원으로서, 이중 국고지원 부분은 총 5,97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품·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 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춘천, 전주, 나주, 화순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한 지역에 2개의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18)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ve Economies) : 다양한 경제활동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론임.

< 의료(바이오)관련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주최	사업명	주관기관(팀)	사업기간	사업비		
				전체	국비	
산자부	○생물의약 TIC ¹⁹⁾ (대전BVC ²⁰⁾)	생명공학연구원	99~03	16,737	5,030	
	○생물농업,기능성소재 TIC(상주BVC)	상주대학교	01~05	11,454	4,207	
	○생물의약,식품 TIC(영동BVC)	영동대학교	01~05	10,678	4,680	
	○기능성첨가제, 해양 TIC(제주BVC)	제주대학교	01~05	7,608	4,770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춘천BVC)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8~02	21,310	5,800	
	○전북생물벤처센터(전주BVC)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00~03	14,188	5,062	
	○산학연합공동연구센터(나주BVC)	동신대학교	00~03	8,444	5,000	
	○생물화학소재지원센터(진주BVC)	(재)바이오21센터	00~03	21,320	5,000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부산BVC)	신라대학교	02~06	15,361	4,546	
	○바이오개량신약제제화 공동연구기반구축	(재)경기바이오센터	06~10	12,250	5,000	
	○바이오벤처타운조성(대전)	(재)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02~07	38,091	26,066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오창)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04~07	14,390	10,390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제천)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03~07	13,940	9,840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논산)	(재)충남동물자원센터	03~07	8,354	4,790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나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2~07	44,100	30,400	
	○생물농업산학연구개발지원센터(화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2~07	25,130	17,430	
	○바이오사이언스파크조성(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02~07	29,909	21,100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안동)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02~07	22,960	13,790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울진)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04~07	23,150	8,150	
	○바이오타운조성(춘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2~07	38,540	17,240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강릉)	(재)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	02~07	25,620	13,520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대구)	(재)대구TP	04~08	20,308	10,500	
	○한방산업지원센터(대구)	(재)대구TP	04~08	8,039	3,450	
	○바이오벤처프라자(경남진주)	(재)바이오21센터	04~08	24,250	7,350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부산)	(재)부산TP	04~08	24,390	11,590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전주)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05~07	12,214	7,758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화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5~07	57,050	12,899	
	○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장성/곡성)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06~08	35,830	12,980	
○의료기기 시범단지(원주)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05~07	15,253	15,253		
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팀	97~10	498,300	132,100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보건산업기술팀	06~09	162,000	162,000	
	○헬스케어시티(제주)	※계획중	-	-	-	
재정부	○바이오메디컬허브(인천)	※계획중	-	-	-	
과기부	○대덕 바이오 연구개발특구(대전)	※계획중	-	-	-	
총 계				-	1,281,168	597,691

※ 자료 : 의료선진화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산업자원부,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19)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20)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BVC : Bio-Venture Center)

< 충북지역 클러스터간 사업내용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물의약, 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사업비 (국고)	10,678 (4,680)	14,390 (10,390)	498,300 (132,100)	13,940 (9,840)
사업내용	장비활용 공동연구 창업지원 교육훈련 정보유통	기업지원사업 공동개발사업 시험생산사업 네트워킹사업 장비이용사업 교육훈련사업	산학연구 연구협력 물리·설비시설 지원 전문적인 사업화지원 기술이전거래지원 교육프로그램 자생력 유지 지원	한방관련 연구개발 한약제 품질검사

※ 자료 : 바이오 허브센터, 200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5,373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이는 31개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41.9% 해당하는 규모이다. 2개의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중인 화순군의 경우도 전체 6.4%에 해당되는 8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클러스터가 집중된 일부지역의 예산 규모 비교 >

구 분(지역)	총 사업비	정부
전체사업(31개)	12,811억	5,977억
충청북도(%)	5,373억(41.9%)	1,570억(26.3%)
화순군(%)	822억(6.4%)	303억(5.1%)

※ 자료 :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산자부 내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사업과 서로 제각각인 사업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서울대 주관으로 990억원(정부 520, 민자 470)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허브구축사업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 하지만 처음부터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하였다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 또한 사업초기에 오히려 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연자의 역할을 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사업에만 국한해 관심을 가지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한편, 국가 의료산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국내 의료클러스터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국내 의료클러스터의 한계 및 시사점>

-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간 연관관계뿐 아니라, R&D, 생산, 판매 등 부가가치 사슬 상의 시너지 효과도 미흡
- 소수의 병원과 연구기관 중심의 클러스터는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고, 주요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업체의 분산으로 집적경제효과 미흡
- 첨단기술, 첨단제품에 대한 전임상과 임상단계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임상 및 허가 체계도 효율성이 낮음
- 부가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촉진 환경이 미흡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저가제품과 저기술 서비스 중심의 의료시장 형성

※ 자료 :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자료, 200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선택과 집중’ 원칙 하, 투자 효율성 제고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와 첨단기술, 그리고 막대한 자본

이 결합된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양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의 부담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바이오 분야야말로 국가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바이오클러스터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원활한 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0.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2007년 10월10일)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심해

-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급여 수가 세부내역 공개 -

-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발급 수수료, 66.7배 차이!
 -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강동구), 최대 20만원~최저 3천원
 - 사망진단서(도봉구), 최대 15만원~최저 1만원
 - 3주이상 상해진단서(송파구), 최대 20만원~최저 10만원
-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 최대 280만원 차이!
 - 임플란트 : 최대 400만원(강남구) ~ 최저 120만원(강남구)
 - 스케일링 : 최대 18만원(강남구) ~ 최저 1만원(종로구)
 - 라식(lasik) : 최대 250만원(서초구) ~ 최저 150만원(서초구)
-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 마련해야
 - 각종 진단서 관련,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

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발급 수수료 차이가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급여 수가에 대한 거품논란도 예상된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교】

◎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66.7배 차이!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해당 보건소에 비급여 수가를 신고²¹⁾해야 하는데, 안명옥 의원실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했다.
- 신고액 비교 결과,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R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에서는 3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별 수수료 최대차이 현황>

단위 : 원

진단서별(자치구)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상해진단서(송파구)	200,000(3주이상) 100,000(3주미만)	B의원 외1	100,000(3주이상) 50,000(3주미만)	M의원 외1
사망진단서(도봉구)	150,000	Y병원	10,000	G의원
장애인연금청구용(강동구)	200,000	R병원	3,000	D병원

※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21)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역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개설되는 병·의원의 모든 수가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음.

-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1만원을 신고해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의료 행위별 비급여 수가 비교】

◎ 임플란트 등 의료 행위별 수가, 같은 지역도 280만원이나 차이!

-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기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의 D의원은 100만원의 진료비로 받는다 고 신고한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강남구의 강남S의원은 400만원인 반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라식(lasik)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 한편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

은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현황>

단위 : 원

자치구별 수가차이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쌍꺼풀 수술 (강동구)	1,000,000	D의원	400,000	D병원
라식(lasik) (서초구)	2,500,000	강남S의원	1,500,000	강남B의원
스케일링 (종로구)	50,000	H의원	10,000	B의원
임플란트 (강남구)	4,000,000	강남S의원	1,200,000	U의원

※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스케일링도 강남구 C의원은 18만원인 반면,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는 등 1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별 비급여 수가현황>

단위 : 원

서울시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쌍꺼풀 수술	3,000,000	D의원 (서초구)	400,000	D병원 (강동구)
라식(lasik)	2,500,000	강남S의원 (서초구)	1,500,000	강남B의원 (서초구)
스케일링	180,000	C의원 (강남구)	10,000	B의원 (종로구)
임플란트	4,000,000	강남S의원 (강남구)	1,200,000	U의원 (강남구)

※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가격저품 없는지, 신고한 대로 받는지, 당국의 실태조사 없어

-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수

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6년에 설립한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는 등 무분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 재료의 질, 활용된 의료기기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책정되어야 하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수가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진단서만이라도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산출근거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현황 > 단위 : 만원

지역	상해진단서(3주이상)		사망진단서		장애연금청구용진단서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20	20	2	2	2	2
중 구	20	20	10	1	1.5	1.5
용산구	20	20	3	3	-	-
성동구	30	30	-	-	10	1.5
광진구	10	10	2	2	-	-
동대문구	-	-	5	5	2	2
중랑구	20	10	5	5	20	10
성북구	20	20	5	1.795	2.2425	2.2425
강북구	10	10	-	-	-	-
도봉구	20	20	15	1	-	-
노원구	20	10	5	3	1.5	1.5
은평구	20	10	8	2	-	-
서대문구	-	-	-	-	-	-
마포구	20	-	10	10	1.5	1.5
양천구	20	10	10	1.5	2	1.5
강서구	20	10	-	-	20	5
구로구	10	10	1	1	10	5
금천구	20	20	10	5	-	-
영등포구	20	10	5	1	20	20
동작구	-	-	-	-	-	-
관악구	20	10	5	3	1.5	1.5
서초구	20	10	5	3	1.5	1.5
강남구	20	20	1	1	10	1.5
송파구	20	10	5	5	20	20
강동구	20	20	10	1	20	0.3

※ 자료: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서울시 자치구별 비급여행위 수가>

단위 :만원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쌍꺼풀수술	-	-	마포구	쌍꺼풀수술	70	7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5	1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250	180
중구	쌍꺼풀수술	200	80	양천구	쌍꺼풀수술	-	-
	라식(lasik)	180	150		라식(lasik)	-	-
	스케일링	12	3		스케일링	7	5
	임플란트	400	150		임플란트	250	200
용산구	쌍꺼풀수술	-	-	강서구	쌍꺼풀수술	80	40
	라식(lasik)	-	-		라식(lasik)	160	160
	스케일링	7	5		스케일링	6	6
	임플란트	250	200		임플란트	300	150
성동구	쌍꺼풀수술	80	80	구로구	쌍꺼풀수술	80	8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7	7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140		임플란트	300	120
광진구	쌍꺼풀수술	-	-	금천구	쌍꺼풀수술	-	-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6		스케일링	6	5
	임플란트	300	100		임플란트	300	120
동대문구	쌍꺼풀수술	150	50	영등포구	쌍꺼풀수술	100	9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6		스케일링	7	3
	임플란트	200	200		임플란트	250	150
중랑구	쌍꺼풀수술	47	47	동작구	쌍꺼풀수술	100	60
	라식(lasik)	-	-		라식(lasik)	250	200
	스케일링	5	1		스케일링	60	50
	임플란트	300	150		임플란트	250	150
성북구	쌍꺼풀수술	80	80	관악구	쌍꺼풀수술	200	6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5		스케일링	7	5
	임플란트	200	200		임플란트	300	220
강북구	쌍꺼풀수술	80	60	서초구	쌍꺼풀수술	300	50
	라식(lasik)	-	-		라식(lasik)	250	150
	스케일링	6	4		스케일링	8	8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350	170
도봉구	쌍꺼풀수술	60	60	강남구	쌍꺼풀수술	250	50
	라식(lasik)	-	-		라식(lasik)	220	150
	스케일링	6	4		스케일링	18	4
	임플란트	300	200		임플란트	400	120
노원구	쌍꺼풀수술	80	50	송파구	쌍꺼풀수술	150	60
	라식(lasik)	150	150		라식(lasik)	150	150
	스케일링	10	6		스케일링	7	3
	임플란트	300	180		임플란트	300	150
은평구	쌍꺼풀수술	100	650	강동구	쌍꺼풀수술	100	40
	라식(lasik)	-	-		라식(lasik)	-	-
	스케일링	6	5		스케일링	10	5
	임플란트	250	200		임플란트	350	200
서대문구	쌍꺼풀수술	100	100				
	라식(lasik)	200	200				
	스케일링	8	5				
	임플란트	250	200				

※ 자료: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11.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2007년 10월 14일)

저연령화, 집단화, 사이버폭력으로도 이어져..

- 경찰청 집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 '03년 1,165명(하루 3.2명꼴)
→ '06년 1,811명(하루 5명꼴)으로 폭증
 - 성인 대비 미성년가해자 '03년 10.9% → '06년 13.1%²²⁾
-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44명('03년) → 105명('07년6월) 급증
 - '03년 44명, '04년 111명, '05년 54명, '06년 115명, '07년6월 105명
 - 저학년 성범죄 갈수록 증가
... 초등생 성범죄 '05년 대비 2.3배, 중학생은 1.1배 증가
 - 지역별 학생 징계수 : 경남 76명, 서울57, 경기54 순('03-'07년6월)
- 학생 성범죄 98건 현황 분석결과('06~'07.6월),
 - 집단성폭행 45건(50%), 음주 후 성폭행 16건(16.3%),
동영상·사진 촬영 5건(5.1%)
-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불이행 38.5%
 -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교육 필요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체계 구축해야

22) 연령별 성폭력 가해자 중 20세 이상 가해자 숫자 대비 미성년 가해자 비율.

-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경찰청,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1,811명으로 하루 5명꼴 발생

-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6년 하루 5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10.9%에서 2006년 1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06년 2.3%로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2006년 45.4%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 가해자 증가와 함께 경찰로까지 넘겨진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3
소년	14세 미만 (초등학생)	14(1.2%)	13(0.9%)	20(1.5%)	42(2.3%)	11(2.3%)
	14~16세 (중학생)	461(39.6%)	458(30.7%)	559(42.1%)	823(45.4%)	234(48.3%)
	17~19세 (고등학생)	690(59.2%)	1,019(68.4%)	750(56.4%)	946(52.2%)	239(49.4%)
소계		1,165	1,490	1,329	1,811	484
성인대비 소년 성폭력 가해자비율		10.9%	11.6%	11.1%	13.1%	15.2%
성인(20세 이상)		10,723	12,865	12,020	13,797	3,180
미상		80	663	346	243	61
총계		11,968	15,018	13,695	15,851	3,725

※ 자료 : 경찰청, 2007. 7.

◎ 학교내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2003년 44명에서 2007년6월 105명으로 급증!
초등학교 성범죄 갈수록 증가... 성범죄 저연령화 문제 심각

-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 2004년 111명, 2005년 54명, 2006년 115명, 2007년6월 105명으로 성범죄가 급증했고, 5년간 총 427명의 학생 중 퇴학조치 된 학생수만 90명에 이르렀다.
- 2005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22건으로 54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6년에는 51건이 발생하여 11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19	44	1	14	12	4	13
2004년	26	111	4	16	7	58	26
2005년	22	54	1	11	9	10	23
2006년	51	115	13	16	30	13	43
2007년6월	41	105	26	9	34	5	3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은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6년 10명은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학교 1.1배, 고등학교 1.0배 증가폭보다 훨씬 높았다.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초		중		고		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2003	0	0	13	35	6	9	19	44
2004	1	4	9	16	16	91	26	111
2005	1	3	7	14	14	37	22	54
2006	1	10	15	30	35	75	51	115
2007	0	0	16	50	25	55	41	10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2003년부터 2007년6월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7명, 경기 54명, 전북 39명, 경북 35명, 전남 25명, 충북 24명, 광주 24명, 부산 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6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지역	징계발생 건수(건)	징계발생 건수 비율(%)	학생수(명)	학생수 비율(%)
서울	18	11.3%	57	13.3%
부산	11	6.9%	22	5.1%
인천	11	6.9%	18	4.2%
대구	3	1.9%	8	1.9%
울산	2	1.3%	2	0.5%
광주	12	7.5%	24	5.6%
경기	16	10.1%	54	12.6%
울산	3	1.9%	10	2.3%
강원	1	0.6%	3	0.7%
충북	10	6.3%	24	5.6%
충남	9	5.7%	19	4.4%
전북	24	15.1%	39	9.1%
전남	9	5.7%	25	5.8%
경북	13	8.2%	35	8.2%
경남	14	8.8%	76	17.7%
제주	3	1.9%	13	3.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학생 성범죄 98건 현황 분석결과('06~'07.6),

성범죄 집단화되고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 한편, 안명옥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06~'07.6)'을 보면, 총 98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45건(50%)을 차지해 교내 성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음주 후 성폭행 한 사건은 16건(16.3%)이나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 학생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하는 등 성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2006년 6건, 2007년6월까지 3건으로,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직원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별첨)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8p)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6월 현재 전국 1만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가 11,083명인데, 이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4,267명 (38.5%)이다.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함에도 연수대상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2007.6기준)>

급별	학교수 (개)	성교육담당 교사수(명)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명)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없음
초	5,752	5,797	2,629	1,023	2,145
중	3,046	3,054	1,195	615	1,244
고	2,185	2,232	960	394	878
계	10,983	11,083	4,784	2,032	4,267

*주1: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없음'은 30시간 미만.

*주2: 성교육 담당교사 전공과목은 보건, 체육/교련, 가정, 초등, 기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 치료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치료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2006~2007.6)>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구분	발생일	사건개요	조치결과
교사 對 학생	00초	강00	성추행	06.3.13.	강교사는 학생 2명을 학교에서 성추행함	정직 1월
학생 對 학생	○○중	이○○	성추행	06.3.26	마을 빈집으로 데리고 가 초등학교 3학년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함	특별교육 이수
학생 對 학생	00고	서00외 3명	성폭행	06.12.06	친구집에서 음주 후 성폭행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엄00외 5명	성폭행	06.12.08	자취방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행	전학 5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폭행	07.03.1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정○○외2명	성폭행	07.3.12	피해자의 제의로 만나 합의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함	자퇴
학생 對 일반	○○고	이○○	성폭행	07.4.21	현금 절도 및 성인 2명 성폭행	위탁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외 4명	성폭행	07.06.05	모텔에 모여 음주 후 성폭행	특별교육 이수
교사 對 학생	○○고	류○○	성추행	06.6.13	교사가 다수의 여학생에게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해임
학생 對 학생	○○중 외 4교	남○○외 11명	성폭행	06.4.8	가해학생이 집단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초	김○○외 9명	성희롱	06.6.27	6학년 학생 수련활동 중 김○○ 외 9명의 남학생이 피해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희롱을 함.	학급교체1명 출석정지2명 사회봉사3명 학교봉사4명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6.30	집에서 성폭행	강제전학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7.19	김○○ 학생이 같은 몽골출신 학생을 성폭행	가해자는 몽골출신으로 강제출국 조치
학생 對 학생	○○중	지○○	성폭행	07.7.2	다세대 주택에서 성폭행함(6.22)	소년원 위탁 교육 실시
학생 對 학생	○○고	박○○	성폭행	06.4.28	하교길에 중 2학년생을 성폭행	자퇴 처리
학생 對 학생	○○고	신○○	성폭행	06.05.09	남학생이 고2 남학생을 수학여행지에서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구○○외 2명	성폭행	06.5.22	오금공원 근처에서 여고 1학년생을 성폭행	퇴학 처분
학생 對 학생	○○고	이○○	성희롱	07.5.10	수학여행시 같은 학교 남학생을 샤워장면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별점20에 교내봉사3일
학생 對 학생	○○고	권○○	성폭행	07.5.7	남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성폭행	등교정지 후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양○○	성폭행	07.6.22	1학년 학생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	상당 후 전학 조치 예정
학생 對 학생	○○고	김○○외2	성폭행	06.6.14	음주상대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중	정○○	성추행	06.8.29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의 성기를 만짐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고	신○○	성폭행	06.9.29	평소 알고 지내던 ○○○을 성폭행 함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고	김○○	성폭행	07.3.29	음주상대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고	지○○	성추행	07.5.6	가슴을 만지 등 성추행 함	사회봉사

교사 對 학생	00고	황00	성희룡	06.5.3	황00교사가 수업중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황00교사 06.9.1 타교로 진출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외4명	성폭행	06.5.11	00고 이00외 5명이 00고 김00학생을 집단 성폭행	이00외 4명 구속
교사 對 학생	00초	양00	성추행	07.5.14	00초 양00교사가 상습적으로 학급 담임 학생들을 성추행	양00교사 직위해제
학생 對 학생	-	강00외 2명	성폭력	06.3.25	오락실에서 만나 놀다가 여관에서 성폭행	퇴학 3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강00외 1명	성폭력	06.8.3	남학생 2명이 피서 온 여중생을 성폭행	퇴학 1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박00외 1명	성폭력	06.11.18	남학생 2명이 여중생과 어울려 놀다 성폭행	특별교육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00고	하00외 3명	성폭력	07.4.6	평소 친분이 있는 30세 가량의 성인과 어울려 놀다 성인의 자취방에서 성폭행 함	재관9/5 종결 선도위원회 개최 중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정00외 1명	성폭력	07.5.5	중학교 동창들과 놀다가 성폭행 함	퇴학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양00외 1명	성폭력	07.5.15	친구사이로 자취방에서 놀다 성폭행	퇴학1명 특별교육 1명
교사 對 학생	00여 고	금00	성추행	06.7.25.	야간자율학습 후 23:30경 교사 금00가 여학생 000을 자기집에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함	해당법인에서 중징계(파면)
교사 對 교생	00중	조00	성추행	07.5.3.	일과 중 교사 조00가 여자 교육실습생 000 등을 체육실에서 손을 잡고,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추행함	해임
학생 對 학생	00중	정00외 4명	성폭행	06.3.21.	18시경 정00의 집에서 여중생000을 칼로 위협하여 손발을 묶고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00고	박00외 1명	성폭행	06.6.18.	05:30경 술에 취한 여고생 000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00고	곽00 외 2명	성폭행	06.9.17.	02시경 곽00과 자퇴생 2명이 모텔에서 소주에 만취하여 잠이든 자퇴생 000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대 학생	00중	가해자 확인 불가	성폭행	07.1.3.	11:00경 00초 000이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함	구속
학생 對 학생	00공 고	이00	성폭행	07.1.9.	23시경 이00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중생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00중	양00	성추행	07.3.9.	15:00경 양00이 무단조퇴하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 00초 여학생 3명을 목격하고 그 중 한명을 따라가 성추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외 4명	성폭행	07.6.15.	01시경 가해자(고2명,자퇴생3명)가 교회 부근 공터에서 학교를 가지않고 배회하던 이00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아동	0 0 고	장 0 0	성추행	06.4.28	효성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2년 여학생 강제 성추행 함.	전학
학생 對 학생	0 0 중	이 0 0 외 3명	성폭행	06.8.6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음주 후 가해학생 4명이 피해학생 1명을 성폭행함	소년원 특별교육 이수 후 진출
학생 對 유아	0 0 고	이 0 0	성추행	07.5.20	연립주택 옆집 5세 여아를 대상으로 밤 9시 이후 부모가 없는 시간을 이용, 같이 놀아준다는 핑계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 0 고	변 0 0	성추행	07.5.22	수학여행 중 같은 반(남학생) 학생들이 잠든	특별교육 5일

		외 2명			친구의 팬티와 성기부근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5,6명이 돌려본 후 삭제한 사건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3명	성폭력	06.5~7	2006년 5월에서 7월경 가해자의 집 및 아파트 옥상에서 수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폭력	06.6.25	모여중생과 음주후 성폭행하여 경찰서에 송치된 후 합의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고	진00외3명	성폭력	06.08.01	월포해수욕장 민박집에서 서로 어울려 놀다가 성폭행함	자퇴
교사대학생	00초	김00	성추행	06.3~10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여학생을 상대로 15회 가량 성추행을 함	해임
학생 對 학생	00고	탁00 외 1명	성추행	07.3.31	여고생 1명과 여관에 투숙하여 폭행 및 성추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고	엄00 외 3명	성폭력	07.5.19	5월19일 아침 8시경 엄모 외 3명이 집단 성폭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중	박00 외 1명	성희롱	07.6.24	초등학생 1명을 빈집에서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희롱함	관찰소 6개월 미만단기보호
교사 對 학생	00여 전자고	차00	성희롱	07.6~7	체육시간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여학생에게 맞사지를 시키는 등 성희롱함	전보 조치
교사 對 학생	00초	김00	성희롱	06.4-07.1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 변태 행위를 함	과면
학생 對 미취학	00중	최00	성추행	06.3.6	5세 여아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	교도소수감(학업유예)
학생 對 학생	00고	황00	성폭행 미수	06.4.15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별교육이수 조치(2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조00	성추행	06.4.21	엘리베이터안에서 성추행함	사회봉사80시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 對 학생	00고외 1	김00	성추행	06.5.4	집요하게 성관계 요구	가정교육10일
학생 對 학생	00중	이00	성추행	06.6.3	옷을 벗기고 성추행함	사회봉사9일 심리치료6회
학생 對 학생	00중	최00	성추행	06.6.6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 시도	사회봉사80시간 대안교육위탁 기관(1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추행	06.6.28	자위행위를 강요하는등 남학생을 성추행함	교내봉사7일
학생 對 학생	00고	송00	성추행	06.7.4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불이행으로 퇴학
학생 對 미취학	00중	김00	성추행	06.7.6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	피해자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신00	성추행	06.8.28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7일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임001인	성추행	06.9.09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양00외1인	성추행	06.9.18	동영상 촬영 후 유포(회동)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관계	07.3.23	가출 후 우연한 만남과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중	채00	성폭행	07.3.03	음주 후 우발적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김00외2인	성폭행	07.4.23	선후배 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전학및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육00외3인	성폭행	07.4.24	평소 친분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시도 미수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	성폭행	07.4.24	빈집으로 유인 강제 성행위 시도 미수	전문기관상담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추행	07.5.15	가해자가 지진아로 성추행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2인	성희롱	07.5.21	휴대폰 동영상 촬영 후 유포(희롱)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추행	07.6.04	동성 후배 남학생 신체 만지는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황00외5인	성희롱	07.6.12	동료간 강제 옷벗기는 행위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	성추행	06.10.23	쉬는시간 남자 화장실로 유인 성추행	전출
학생 對 학생	00고	강00외 1	성추행	06.11.21	폭력 및 퇴폐행위	전출,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외 6	이00외 13	성폭행	06.8-07.2	중학교 선후배로 방학중 성폭행	전출,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오00외 2	성폭행	06.8-07.3	타학교 여학생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고00외 2	성폭행	07.2.23	중학교 동창으로 1회 성폭행	졸업직후라 조치못함
학생 對 학생	00고	박00	성폭행	07.4.2	여자친구를 남자친구와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민00	성폭행	06.5.16	저녁 9시 30분 00도서관 인근 야산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경찰서 강력1팀에 체포?	불구속(교칙에 의거 특별교육 후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폭행	06.5.18	다모임채팅을 통해 교제 중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뒤에도 강압적으로 2차 성관계를 갖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음	특별교육후 퇴학(1명)
학생 對 학생	00고	최00외 4명	성폭행	06.5.23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 “술다이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 함	전원 구속 (5명)
학생 對 학생	00고	강00외 1명	성폭행	06.10.09	단체 미팅으로 알게 된 중 3년 여학생을 담배불로 팔과 허벅지 위협 강제로 성폭행	구속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추행	06.3.5	엘리베이터에서 도움청하는 척 접근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0,00고	김00외9명	성폭력	06.3.25	같은 학교 학생 1명을 공원에서 성폭력	전원 자퇴
학생 對 학생	00중	안00	성추행	06.4.21	무단결석(가출)중 초등생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추행	06.5.28	노래방에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0,00고	정00외4명	성폭력	06.6.3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00고	장00	성폭력	06.5	학원에서 알게된 후배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0고	박00외2명	성폭력	06.6.9	동급생 2명 성폭행	보호관찰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5명	성폭력	07.1.14	학교내 야외체험학습장에서 성폭력 발생	1명전학,1명특별교육, 4명기타(보호감호)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5명	성폭력	07.2.11	아파트 옥상 및 야산에서 성폭력	2명전학, 4명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00고	서00외6명	성폭력	07.2.23	아파트에서 가출여중생 집단 성폭력	7명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이00외5명	성폭력	07.2.27	야산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발생(사망)	6명기타(소년부유치)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9.

12. 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2007년 10월 15일)

(04년 698건→ 06년 1,653건으로 급증)

- 경찰청·법무부 「위장결혼 검거·수감현황」 분석 -

◎(경찰청) 위장결혼 5,501건 적발, 14,179명 검거('04~'07.7)

- 위장결혼 적발건수 매년 급증 ('04년→'06년 2.4배 증가)
 - 적발 : 698건('04)→ 1,468건('05)→1,653건('06)→1,682건('07.7)
 - 검거 : 2,048명('04)→3,650명('05)→4,040명('06)→4,441명('07.7)
- 검거자 중 알선브로커 1,177명 포함... 90%가 한국인
 - 검거 : 155명('04)→ 307명('05)→ 397명('06)→ 318명('07.7)
- 위장결혼자 99%가 한국인&중국인(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한국인 : 1,275명('04)→2,204명('05)→2,380명('06)→2,769명('07.7)
 - 중국인 : 613명('04)→1,107명('05)→1,229명('06)→1,301명('07.7)
- 40대 위장결혼자가 전체의 46% 차지
 - 40대(5,998명)→50대(3,826명)→30대(2,168명)→60대(627명) 순

◎(법무부)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925명('05~'07.7)

- 입국·체류연장 목적으로 결혼해 수감된 외국인 여성 수
 - 674명('05)→ 229명('06)→ 22명('07.7)
- 40대(47.6%)가장 많고, 30대(28%), 50대(17.8%)순으로 나타나

◎위장결혼은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출입국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방문취업제 활성화 등 합법적 입국장려책 마련해야

-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이면에, 입국·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7 위장결혼사범 단속·검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위장결혼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5,501건으로, 이를 통해 총 14,17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71건 꼴로 위장결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698건에서 2005년 1,468건, 2006년 1,653건으로 2년 동안 무려 2.4배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1,682건이 적발되어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위장결혼사범 단속·검거 실적(2004~2007.7)>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건 수	5,501	698	1,468	1,653	1,682
인 원 ¹⁾	14,179	2,048	3,650	4,040	4,441

※ 자료 : 경찰청, 2007. 8

주1) 인원 : 위장결혼자와 알선브로커를 합한 인원임.

- 검거된 위장결혼사범 중에는 알선브로커가 1,177명 포함되어 있어, 위장결혼 행위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004년 155명이던 알선브로커는 2005년 307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고, 2006년 397명, 2007년7월 3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알선브로커의 90.4%가 한국인, 9.6%가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알선브로커	1,177	155	307	397	318

※ 자료 : 경찰청, 2007. 8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국적별 현황(2006)>

(단위 : 명, %)

구 분	계	한 국 인	중 국 인
인원(비율)	397명(100%)	359명 (90.4%)	38명 (9.6%)

※ 자료 : 경찰청, 2007. 8

- 위장결혼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3,002명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남성이 7,452명, 여성이 5,5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8,630명(66.37%), 중국인은 4,250명(3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자 성별·국적별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성 별	소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남 성	7,452	1,093	1,912	2,070	2,377
	여 성	5,550	800	1,431	1,573	1,746
국적별	소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한 국	8,630	1,275	2,204	2,382	2,769
	중 국	4,250	613	1,107	1,229	1,301
	베트남	16	0	1	0	15
	필리핀	3	0	1	0	2
	미 국	0	0	0	0	0
	기 타	103	5	30	32	36

※ 자료 : 경찰청, 2007. 8

- 2006년 한 해 동안의 위장결혼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남성인 반면, 중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장결혼이 주로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장결혼자 검거 현황(2006)>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성	여 성
한 국	2,382	1,807	575
중 국	1,229	243	986

※ 자료 : 경찰청, 2007. 10

- 위장결혼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5,998명(46.1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826명(29.43%), 30대 2,168명(16.6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위장결혼자 수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인 20대는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장결혼자 연령별 검거 현황(2004~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계	13,002	1,893	3,343	3,643	4,123
10대	4	1	0	0	3
20대	379	47	93	99	140
30대	2,168	304	575	594	695
40대	5,998	909	1,655	1,629	1,805
50대	3,826	532	883	1,141	1,270
60대 이상	627	100	137	180	210

※ 자료 : 경찰청, 2007. 8

- 한편, 안명옥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7 입국·체류목적 등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925명의 외국인 여성이 위장결

혼으로 인해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죄목으로 수감된 상태다²³⁾. 연령별로는 40대가 47.6%(44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8.0%(259명), 50대 17.8%(165명)순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현황(2005~2007.7)>

(단위 : 명)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입국·체류목적 결혼		925	674	229	22
죄목 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300	267	29	4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625	407	200	18

※ 자료 : 법무부, 2007. 8

<입국·체류목적 결혼 수용자 연령별 현황('05~'07.7)>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 원	-	50	259	440	165	10	1

※ 자료 : 법무부,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수록 정상적으로 결혼해 정착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출입국 심사절차로는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단속인력 확충과

23)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것(형법 228조)을 말함.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형법 227조의 2)을 말함.

차별기준 강화를 통해 위장결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이어 안의원은 “위장결혼이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입국 장려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장결혼자들이 품는 허황된 코리아드림과 지나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2007년 10월 17일)

① 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 1,785건, 업무정지 294건

- 위반 적발 건수 급증하다, 2005년 10월 위헌판결 이후 급감
: 369건('03)→500건('04)→707건('05)→147건('06)→62건('07.6)
- 지역별 위반현황은 서울(690건), 경기(220건), 부산(184건)순
- 행정처분 결과 업무정지 294건, 경고·시정 959건

②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내실있는 심사 어려워

- 3개월간 무려 2,757건 심의...불승인은 2~7%에 불과
- 의협·한의협 수정승인 70%상회, 치협은 0%...편차 심해
- 3개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편성...공정한 심의 어려워
- 정부 단속 줄어든 상황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역할 수행해야... 표준화된 심의기준 마련필요

③ 인터넷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되는 사각지대 상존

-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
- 의료기관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은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돼

※ 붙임 : 무분별한 인터넷 과장광고 실태 (유형별 예시)

- 올해 4월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자율규제 흐름이 거센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를 위해 설

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적은 위원회가 구성된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 1,785건, 업무정지 294건
 의료광고위반 급증하다, 2005년 10월 위헌판결 이후 급감

-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의료광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의료광고 위반현황(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위반건수	1,785	369	500	707	147	6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높은 위반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이 6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89건, 부산이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적발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지역별 의료광고 위반현황(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서울	690	134	246	249	41	20
부산	184	60	77	32	6	9
대구	105	20	15	67	1	2
인천	75	5	11	31	24	4
광주	129	19	25	62	14	9
대전	36	1	1	29	2	3
울산	46	4	10	31	1	-
경기	220	89	48	57	16	10
강원	29	2	3	24	-	-
충북	21	8	2	11	-	-
충남	15	2	4	7	1	1
전북	15	-	1	13	-	1
전남	30	2	19	5	4	-
경북	104	7	28	45	22	2
경남	86	16	10	44	15	1
제주	0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급감했다. 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업무정지	294	69	102	76	32	15
경고·시정	959	107	224	541	59	28
기 타	481	179	156	79	54	13
계	1,734	355	482	696	145	56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실운영 의혹... 3개 위원회 위원중복 선임 의협·한의협 수정승인 70%상회, 치협은 0%... 위원회별 편차심해

- 2005년 10월 의료법 위헌판결 이후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06.12.7)되었고, 금년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범위와 방식이 변경됐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허위·과장광고를 보건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이다.
- 그런데 안명옥 의원이 「2007년4월~6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한의사협회는 1,551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65건, 대한한 의사협회는 841건의 광고물을 심의했다. 각 회의시마다 대한의사협회 155.1건, 대한치과의사협회 40.6건, 대한한 의사협회 76.5건꼴로 광고물을 심의했다는 뜻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2007.4~2007.6)>

구 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실적 건수	1,551건	365건	841건
회의개최 횟수	10회	9회	11회
회의당 심의건수	155.1건	40.6건	76.5건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9

-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무려 85.5%(365건 중 312건 승인)에 달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2007.4~2007.6)>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승 인	수정승인	불승인	보 류 (심의중)	학회의뢰	기 타
대한의사협회	1,551	382	1,107	39	9	14	-
대한치과의사협회	365	312	-	23	6	-	24
대한한의사협회	841	176	606	38	-	7	1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승인비율(2007.4~2007.6)>

구 분	승인비율	불승인비율	수정승인비율	기 타
대한의사협회	24.6%	2.5%	71.4	1.5%
대한치과의사협회	85.5%	6.3%	0%	8.2%
대한한의사협회	20.9%	4.5%	72.1%	2.5%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주) 기타는 보류, 심의 중, 학회의뢰 등을 모두 포함한 비율임.

- 각 심의위원회별로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이다.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되어 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물의 표준화 등 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별 심의

결과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서로서로 봐주기식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복선임>

구 분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대한의사협회	○	○	○	○	-
대한치과의사협회	○	○	-	-	○
대한한의사협회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주 : (○)는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임.

○ 병원홈피, 포털배너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되는 사각지대 상존

-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는 '인터넷신문'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터넷신문의 정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되지 않는 매체는 상당수이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 의료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매체들이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장광고 및 오류정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주요 매체>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하도, 철도, 지하철(역사포함), 공항, 항만, 고속국도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 옥내(건물외벽 제외) 광고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 등)
-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다만,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한다.
-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 (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 LED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음성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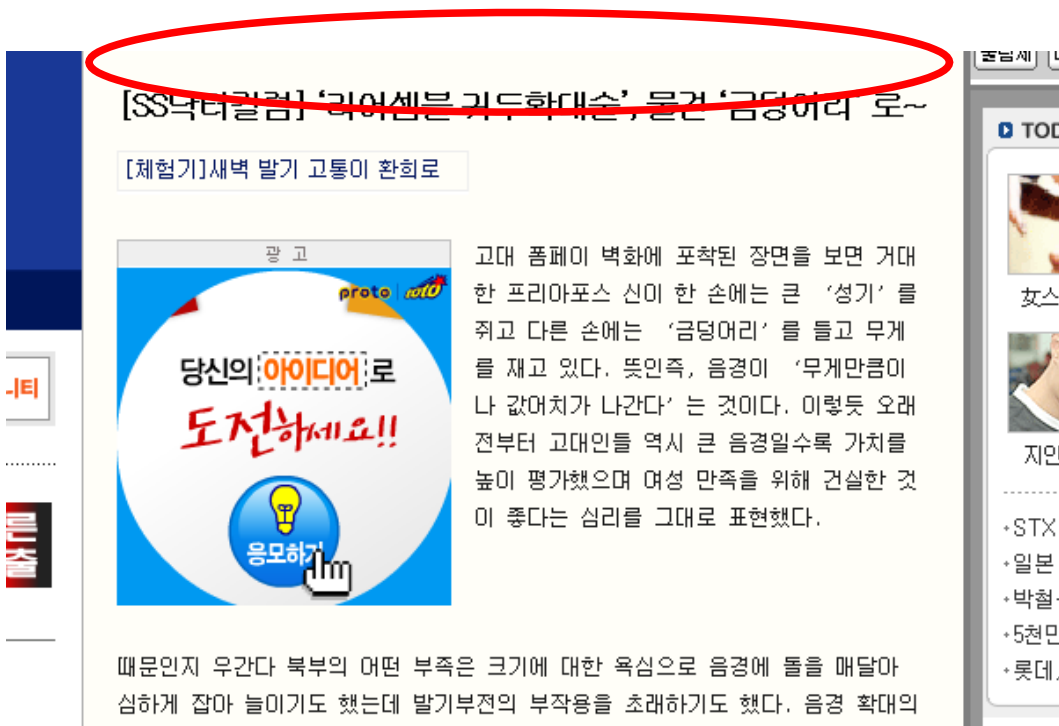
- 이러한 실태에 대해 안명옥의원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나 왜곡된 의료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의료과소비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가 보건의료단체의 양심과 자율적인 통제기전에 맡겨진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허위·과장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세분화된 표준 심의기준의 제공, 불공정 심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선정적 의료광고】



※ 흰 블록부분은 안명옥의원실에서 편집(삭제)한 것임.

【붙임 #2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과장된 의료광고】



【붙임 #3 : 인터넷 스포츠신문 등에 자극적인 표현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링크】

최신기사 | 야구 | MLB | 축구 | 농구 | 격투기 | 종합 | 연예 | IT | 라이프 [앨제이] 매일밤 아내를 녹초로

Home > 뉴스 > 라이프 > SS닥터칼럼

[SS닥터칼럼] 작고 왜소한 음경, 미세절개법으로 확대
[세립기]세벌 반기 고통의 관화보

한번의 시술로 1석4조의 효과

박왕진 원장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지만 남자들에게는 작은 고추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존심이다.

남자들은 자신의 음경은 왜소하는데 다른 사람의 우람하고 당당한 음경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상당수가 자신의 음경이 작다고 생각하는 데 특히 음경왜소 콤플렉스가 심한 남성들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의식과 자괴감을

기사이메일 | 인쇄 | 기사스크랩 scrap list

공림제 | 비탈제 | + | - | 설정저장 | 초기설정

TODAY'S BEST


 뉴스타&매니저


 평발 총격


 지인진은 복서


 거성 LG 방출

•STX 공개선언 "현대야구단 인수"
 •일본 라쿠텐, 김동주 영입 공식화
 •박철-육소리 결혼 11년만에 파경
 •5천만원 이하 수입차 따져보니...
 •롯데, 강병철 감독과 재계약 포기

TM서...
 •'신의 직장' 産銀 직원 6명중 1...
 •'홍로드' 홍수아 멋진시구로 ...


 에인대행
 걸S 19
 키스팅


 초코팅
 결혼정보
 클럽남아


 키스천사
 정력제
 공파현드론

왕/비/자/립



 •섹스..20분 비법?
 •정리서문 Sex한때..


스폰서블로그

서울탐비노기과 성병치료센터 - 임질, 매독, 헤르페스, 에이 등 성병치료 예방..

여자를 만족시키는 방법 >>> MORE

죽어도 좋아?... 좋아...
 남성클리닉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젊어진 남자, 불안한 남자, 당신은?


에로파크
 성인만의공간
 환상의 세계


아노의 빛
 계속 좋아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레드무비]그녀는 내송쟁이, 몰래보는 연인들의 정사, 강남 선수 이

◀ 이전페이지 ▶ 기사목록

14.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2007년 10월 17일)

-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실태 분석 -

① **보건복지부 : 167명 증원, 산하기관에서 63명 파견 근무**

- '03년 이후 167명 증원, 2005년도에만 110명 신규 충원
- 8개 기관에서 63명 파견, 복귀자는 1명뿐...대체요원 또 파견
: 0명('03)→ 1명('04)→ 14명('05)→ 27명('06)→ 21명('07)
- 타 부처에 비해 파견인력 과다...인력보강 위해 파견 의심

② **식약청 : 568명 증원, 향후 5년간 817명 증원 예정**

- 29명('03)→ 102명('04)→ 303명('05)→ 128명('06) 증원
- 향후 5년간 총 817명 추가로 증원 예정 (중기인력운영계획)
: 2007~2011, 매년 (46명, 260명, 205명, 160명, 146명)씩 증원

③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승격 요구, 비정규직 문제 심각**

-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승격 요청...'08년 313명 충원 요구
-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 기형적 운영

④ **건보공단, 국민연금,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확대에 안간힘**

-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 위해 진흥원에 용역 발주
- [국민연금] 939명 증원, 비정규직 근로자 21.7% 달해
- [심평원] 537명 증원...지사 추가배치 두고 내부 고심 중
-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동 개설, 올해 187명 증원

- 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복지부, '03년 이후 167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355명 증원 예정
산하기관에서 63명 파견 받아 근무, 파견자 매년 늘고 복귀는 안해

- 그동안 중앙부처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년 2명, '04년 7명, '05년 110명, '06년 21명, '07년 27명을 증원했다. 무려 110명을 늘린 '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총원했다.

<보건복지부-본부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167	2	7	110	21	2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8

- 보건복지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도별로는 '07년 125명, '08년 153명, '09년 57명, '10년 20명 등이다.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원계획	355	125	153	57	20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2

-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03년 0명, '04년 1명에서, '05년 14명, '06년 27명, '07년 2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 파견근무자 63명은 2007년 7월 현재까지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6~7월에 파견근무자 3명의 복귀일이 도래했지만, 2명은 파견기간이 연장조치 되었고, 1명은 복귀와 동시에 다른 인원이 대체파견 되었다. 즉, 파견자는 매년 크게 늘리는 반면, 복귀는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파견자수	63	0	1	14	27	2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기관별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파견 받은 인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명,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9명,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6명 등이다. 이 밖에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도 각각 1명씩 파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파견근무자 원소속기관별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산업 진흥원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한국건강 관리협회	지방의료 원연합회
파견자수	19	9	25	6	1	1	1	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이러한 산하기관 직원 파견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등에 의한 합법적인 파견조치라는 것이다. 동 법령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복지부의 경우와 같이 산하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는,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본다.
-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책홍보팀에서 파견된 직원은 복지부에 파견된 후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타 중앙부처의 파견근무자와 비교해도 파견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노동부 15명, 통일부 10명, 정보통신부 5명, 농림부 2명, 여성가족부가 0명)

○ 식약청도 '03년 이후 568명 증원, 향후 5년간 817명 추가 증원

- 식약청도 '몸집 불리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도별 증원 현

황을 살펴보면, '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무려 303명이 증원된 '05년도에는 부산지방청과 경인지방청에 각각 100명씩을 배치했다.

<식약청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568	29	102	303	128	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이처럼 식약청은 매년 직원 수를 늘려왔지만, 향후 5년 동안 81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원은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원계획	817	46	260	205	160	14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

<식약청 분야별 중기인력 배치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식 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연구	일반행정
배치계획	817	317	287	146	59	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

- 식약청은 최근 몇 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인력을 대폭 늘려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식중독·약화 사고 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청의 대규모 인력 보강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자, 증원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으로 승격 요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초과, 비정규직 연구원 중심의 기형적인 인력 운영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5월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총 313명(질병관리본부 96명, 보건연구원 217명)을 증원 신청한 상태이다. 이는 2007년 6월 현재 보건연구원을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정원인 219명의 14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장기적으로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갑작스럽게 '청'단위로의 확대·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정권 말기 혼란스런 틈을 노린 '몸집 불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무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03년 227명, '04년 304명, '05년 379명, '06년 412명, '07년6월 현재 465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무자의 수가 2배 이상 늘어

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근무자의 수는 219명에 불과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1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정원(TO)	175	193	202	213	219
총원(현재원,명)	396	493	565	625	684
정규직(명)	169	189	186	213	219
비정규직(명)	227	304	379	412	465
비정규직 비율(%)	134	160	203	193	21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인력을 값싼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465명의 비정규직 모두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60명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연구원이고, 105명은 학사 이상의 일반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반연구원 105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인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청'단위 승격 등의 외연확대보다, 비정규직 연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안정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 건보공단, 국민연금, 심평원, 암센터 등도 조직 확대 위해 안간힘

- 그 밖에 산하기관들도 '몸집 불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건보공단이 5백 병상 규모의 병원을 추가 건립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에 대비한 공단인력의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03년 293명, '04년 228명, '05년 272명, '06년 140명, '07년 상반기 6명을 증원하는 등 '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39명의 직원을 늘려왔다. 매년 209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공단은 '07년 6월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1,336명으로 총 인원(6,147명)의 21.7%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939	293	228	272	140	6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7. 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매년 인원을 늘려왔다. '03년 138명, '04년 115명, '05년 135명, '06년 90명, '07년 59명 등 '03년부터 '07년 6월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원 추가 설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국에 7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537	138	115	135	90	5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그 밖에 국립암센터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다가, 올해 국가암검진동이 문을 열면서 18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보건의료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사 28명, 간호사 107명, 보건직 40명 등이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씹씹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증원, 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5.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1.2%

(2007년 10월 17일)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알아

□ 질환 없는 일반부랑인은 8.8%에 불과

- 부랑인 시설 입소자 7,872명 중 정신질환자 3,562명(45.2%), 장애인 2,462명(31.3%), 신체질환자 774명(9.8%), 노인성질환자 381명(4.8%), 질환 없는 부랑인 693명(8.8%),
- 세부질환별 현황을 살펴보면,
 - 정신질환자: 정신과(73.9%), 알코올중독(19.8%), 간질 (6%)
 - 장애인: 정신지체(66%), 지체장애(7.8%), 시각장애(3.3%), 언어장애(5.8%)
 - 신체질환자: 근골격계(15.4%), 결핵(5.2%). 내과질환(79.5%)
 - 노인질환자: 치매(33.6%), 중풍(47%), 외상(19.4%) 순
- 전염병 감염자 461명 중 B형감염 267명, 성병 105명, 결핵 87명
- 암, 심장질환, 간질환 등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6,113건

□ 2007년 상반기 노숙인 4,080명, 매년 급증

-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인 698명으로 17.1%
- 건강상태별: 알코올중독(40.7%), 고혈압(21%), 당뇨(15.6%)순
- 전염병 감염자 86명 중 간염 30명, 결핵 29명, 성병 20명 순

□ 부랑인 복지시설 자활프로그램 사회복귀율 1.02%

- 부랑인·노숙인들도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려야
- 입소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해야..

-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는 총 7,872명으로 2005년도와 비교할 때 1,181명 줄어들었으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은 7,179명(91.2%)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6
계	9,053	8,193	7,872
일반 부랑인	926	808	693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	8,127	7,385	7,179
비율(%)	89.8	90.1	9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7년 6월 현재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7,872명 중 질환이 없는 일반 부랑인은 693명, 장애인은 2,462명, 정신질환자는 3,562명, 신체질환자는 774명, 노인성질환자는 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562명으로써,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건강상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인 원	7,872	693	2,462	3,562	774	381
비율(%)	100	8.8	31.3	45.2	9.8	4.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정신질환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정신과 질환이 2,632명(73.9%), 간질이 223명(6%), 알코올 중독이 707명(19.8%)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신과	간 질	알코올 중독
인 원	3,562	2,632	223	707
비율(%)	100	73.9	6.	19.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 입소자 중 장애인은 2,462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1.3%를 차지하며, 세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614명(7.8%), 정신지체가 1,624명(66%), 시각장애가 82명(3.3%), 언어장애가 142명(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언어장애
인 원	2,462	614	1,624	82	142
비율(%)	100	7.8	66	3.3	5.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는 774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9.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119명(15.4%), 결핵 40명(5.2%), 내과질환 615명(79.5%)으로 밝혀졌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근골격계	결 핵	내과질환
인 원	774	119	40	615
비율(%)	100	15.4	5.2	79.5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자는 381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4.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치매 128명(33.6%), 중풍 179명(47%), 와상 74명(19.4%)으로 밝혀졌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치 매	중 풍	와 상
인 원	381	128	179	74
비율(%)	100	33.6	47	19.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세부질환별 증가현황을 보면, 정신지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시각장애는 2.5%, 근골격계 질환은 105.2%, 중풍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정신지체	1,692	1,800	1,638	1,565	1,624
시각장애	98	91	92	80	82
근골격계	49	63	104	58	119
중 풍	125	187	149	157	179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보건복지부의 <2005~2007년 부랑인 전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자는 2005년 711명, 2006년 735명, 2007년 상반기 46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상반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결핵이 87명, 성병 105명, B형 감염이 267명, 기타 2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전염병 감염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6
계	711	735	461
결핵	138	136	87
성병	207	187	105
B형 감염	356	409	267
기타	10	3	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2007년 상반기동안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을 보면 총 6,113건 중 암 84건, 심장질환 1,566건, 간질환 753건, 부인과질환 40건, 교통사고 3건, 기타 3,012건으로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소계	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질환	부인과 질환	교통 사고	기타
총계	6,113	84	655	1,566	753	40	3	3,0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우리나라 노숙인의 수가 2004년 4,283명, 2005년 4,480명, 2006년 4,820명, 2007년 상반기 4,0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노숙인	4,283	4,480	4,820	4,08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숙인은 2003년 385명에서 2007년 상반기 698명으로 81.3% 증가하였고, 세부 질환별로 보면 2003년도에 비해 알코올 중독은 63.2%, 고혈압 54.7%, 당뇨 67.7% 호흡기 질환 334.8%, 소화기질환이 10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계	385	626	655	945	698
알코올중독	174	306	332	442	284
고혈압	95	102	118	163	147
당뇨	65	165	126	166	109
호흡기질환	23	29	34	90	100
소화기질환	28	26	45	84	5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노숙인 전염병 현황>을 보면, 전염병 감염자는 2003년 70명에서 2006년 139명, 2007년 상반기 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세부 질병별로 보면 결핵 29명, 성병 29명, 간염 30명, 기타 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전염병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계	70	139	107	139	86
결 핵	22	31	29	53	29
성 병	16	38	26	20	20
간 염	16	54	33	48	30
기 타	16	16	19	18	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정부는 부랑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부랑인 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입소자 7,872명 중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는 2,260명, 사회복귀 예정자 81명으로 자활율이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명)

구 분	프로그램(참여자 수)						사회복귀 예정자
	계	임가공	농축임수산	서비스	제과제빵	기타	
2007.6	2,260	1,575	320	58	20	275	8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라도 하루 빨리 건강성을 회복해야 자활 자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에,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2007년 10월 17일)

- **여성결혼이민자²⁴⁾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 '07년7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92,371명, 불법체류자 7,130명(7.7%)
 -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수 급증
: 3,118('03)→ 3,249('04)→ 4,359('05)→ 5,937('06)→ 7,130('07.7)
- **국제결혼 부부 이혼 급증...불법체류자 대거 양산하는 원인**
 - 이혼건수 : 2,801('03)→3,345('04)→4,218('05)→6,197('06)→4,510('07.7)
 - 매년 4,682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혼 ('03~'07.7)
- **결혼이민자 강제출국 매년 991명, 자진출국 1,296명꼴**
 - 강제출국자 '03년 303명에서 '06년 1,481명...4.9배 증가('03~'07.7)
 - 자진출국자 '03년 874명에서 '06년 1,555명...1.8배 증가('03~'07.7)
- **혼인귀화 허가율 56.6%... '06년 이후 허가율 급감**
 - 허가율 : 90.2('03)→ 83.6('04)→ 89.5('05)→ 28.6('06)→ 16.2('07.7)
 -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 변경으로 인한 심사지연
(2006년 2월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업무이관)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무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실질적 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 갖춰 나가야...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00만명, 국제결혼 10만쌍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중 강제로 출국 당하거나, 자진해서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혼이민자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05년도 75,011명, '06년 93,786명, '07년7월 104,7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07년7월말 현재 여성 92,371명, 남성 12,378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 ('05~'07.7)>

연도별	계	성 별	
		남 성	여 성
2005. 12. 31. 현재	75,011명	남 성	8,352명
		여 성	66,659명
2006. 12. 31. 현재	93,786명	남 성	10,958명
		여 성	82,828명
2007. 7. 31. 현재	104,749명	남 성	12,378명
		여 성	92,371명

※ 자료 : 법무부, 2007. 8

-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03년 3,118명, '04년 3,249명, '05년 4,359명, '06년 5,937명, '07년7월 현재 7,1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07년7월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이 92,371명임을 감안할 때, 100명 중 8명의(7.7%)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4) 현재 한국인 배우자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7월말
합 계		3,214	3,361	4,675	6,534	7,879
F-2-1국민 배우자	남	96	112	316	597	749
	여	3,118	3,249	4,359	5,937	7,130

※ 자료 : 법무부, 2007. 10

-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03년 2,801건, '04년 3,345건, '05년 4,218건, '06년 6,197건, '07년7월 현재 4,51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4,682명 꼴로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03~'07.7)>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총 이혼	171,853	140,339	128,940	125,937	72,614
외국인과의 총 이혼	2,801	3,345	4,218	6,197	4,510
총 이혼대비 구성비	1.6%	2.3%	3.2%	4.9%	6.2%
증감률	-	△19.4%	△26.0%	△46.9%	△33.1%
한국남편 +외국아내	1,024	1,568	2,367	3,927	2,944
한국아내 +외국남편	1,777	1,777	1,851	2,270	1,566

※ 자료 : 법무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03~'07.7)」, 2007.10

※ 혼인 당시에는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이었으나 혼인 중 당사자 일방이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경우는 내국인 사이의 이혼으로 파악됨.

- 이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니,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03년~'07년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4,461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5,831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제출국자가 991명, 자진출국자가 1,29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제출국자의 경우 '03년 303명에서 '06년 1,481명으로 3년 동안 무려 4.9배가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중 출국자 현황('03~'07.7)>

(단위 : 명)

연 도 별	계	강제 출국자	자진 출국자
2003년	1,177	303	874
2004년	1,736	576	1,160
2005년	2,884	1,598	1,286
2006년	3,036	1,481	1,555
2007년7월	1,459	503	956
계	10,292	4,461	5,831

※ 자료 : 법무부, 2007. 8

- 국제결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허가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03년에는 혼인귀화 신청 6,066건에 허가가 5,472건으로 90.2%의 허가율을 보였으나, '06년에는 신청 11,808건에 허가가 3,375건으로 허가율이 28.6%에 불과하다. 이처럼 허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6년 2월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바뀌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돼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 신청 및 허가 건수('03~'07.7)>

(단위 : 건, %)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신청건수	40,713	6,066	6,861	8,039	11,808	7,939
허가건수	23,060	5,472	5,733	7,192	3,375	1,288
허가율(%)	56.6	90.2	83.6	89.5	28.6	16.2

※ 자료 : 법무부, 2007. 10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먼 타향으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국적심사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귀화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이다.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외국인여성들이 느낄 정신적인 불안감을 감안해 신속히 업무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혼한 외국인여성들이 귀화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통역 및 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급식소·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28%, 세균과 발암물질로 오염! (2007년 10월 17일)

「식약청, 집단급식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최초공개」

- 식자재공급업소 44.8%·집단급식소 20.3% 지하수 오염!
 - 93개 급식소·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중 26개소(27.9%) 부적합 판정
 - 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부적합률 44.8%(29곳 중 13곳 적발)
 - 집단급식소 지하수 부적합률 20.3%(64곳 중 13곳 적발)
: 학교 9건, 병원 2건, 수련원 1건, 기업 1건
-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 36건 검출!(중복포함)
 - 세균(기준초과)검출 31건!
 - 대장균(군)류 양성 19건, 일반세균 기준초과 12건(기준보다 최고 37배까지 검출)
 - (2007.7월 현재)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104건(전체 33.3%에 달함)
 - 발암물질인 질산성질소²⁵⁾ 기준초과 검출 3건!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2건!
- (환경부)음용 생활지하수 330개소 부적합 판정!(‘07.6)
 - 음용 생활지하수 부적합 증가세, 624개소(‘06) → 330개소(‘07.6)
 -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168건, 일반세균 기준초과 152건으로 많아.
- 지하수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가능성 커!
 - 식중독 발생 건수 매년 급증, 109건(‘05) → 259건(‘06) → 312건(‘07.7)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급증, 7건(‘05) → 51건(‘06) → 79건(‘07.7)
 - 지하수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가능성 상존!

25) ‘질산성질소’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차단, 심장병과 뇌질환은 물

-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10곳 중 2~3곳은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오염수로 밝혀져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와 「음용가능 생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급식소 · 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부적합률 28%!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93개 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2007년 처음('07.5 ~ '07.9)으로 실시했다.
- 검사결과 26개 학교기관 및 식자재공급업소에서 각종 세균 및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식자재공급업소는 29곳 중 총 13곳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학교 · 병원 등 집단급식소 64곳 중 13곳(학교 9건, 병원 2건, 수련원과 기업이 각각 1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적발되었다.
- 자세한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총 36건의 세균과 발암물질이 검출(중복포함)되었는데, 이중 대장균(군)류가 19건, 일반세균의 초과검출이 12건이 검출되었다. 충남 연기군의 식자재공급업소의 경우 기준치보다 무려 37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위험한 발암물질인 '질산성질소' (기준초과)검출건수도 3건이나 되었다.

론 위암과 소화기암 등 치명적인 병이 유발될 수 있음. '질산성질소'는 특히 6세 이하 유아나 산모에게 더욱 치명적인 유해 물질임(충북의대 김용대 교수).

- 충북의대 김용대 교수는, “질산성질소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병과 뇌질환은 물론 위암과 소화기암 등 치명적인 병이 유발될 수 있다.”며, “질산성질소는 특히 6세 이하 유아나 산모에게 더욱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적합 지하수 부적합 내역>

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부적합 내용
			시도	시군구	
1	식자재공급	A	경기	양평군	질산성질소 11.1mg/l 총대장균군 양성
2	식자재공급	B	경기	용인시	일반세균수 390/ml 총대장균군 양성
3	식자재공급	C	경기	용인시	과망간산칼륨소비량26.8mg/l
4	식자재공급	D	경기	화성시	일반세균수 330ml
5	식자재공급	E	경기	화성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6mg/l
6	식자재공급	F	경기	안성시	총대장균군 양성/100ml
7	식자재공급	G	경기	강화군	대장균군 양성/100ml
8	식자재공급	H	경기	김포시	총대장균군 양성
9	식자재공급	I	경기	화성시	총대장균군 양성
10	학교급식소	J	전북	장수군	총대장균군 검출/100ml
11	학교급식소	K	전북	장수군	일반세균 460CFU/ml
12	청소년수련원	L	경기	가평군	일반세균 1200 CFU/ml 총 대장균군 검출
13	학교급식소	M	경남	양산시	일반세균 220CFU/ml 총대장균군 검출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14	기업급식소	N	경기	광주시	질산성질소 15.6
15	학교급식소	O	전북	순창군	총대장균군 검출/100ml
16	학교급식소	P	전북	남원시	일반세균 280CFU/ml
17	학교급식소	Q	전남	나주시	총대장균군 검출/100ml
18	학교급식소)	R	전북	장수군	일반세균 1300CFU/ml
19	식자재공급	S	전북	고창군	질산성질소 14.9mg/l
20	병원급식소	T	전북	완주군	일반세균 380CFU/ml
21	학교급식소	U	전북	완주군	일반세균 290CFU/ml 총대장균군 검출/100ml
22	병원급식소	V	전남	무안군	일반세균 1200CFU/ml 총대장균군 검출/100ml
23	식자재공급	W	충남	태안군	일반세균 1,200CFU/ml 총대장균군 검출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24	식자재공급	X	충남	연기군	일반세균 3,700CFU/ml
25	식자재공급	Y	충남	예산군	총대장균군 검출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26	학교급식소	Z	충남	공주시	대장균검출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질산성질소(10mg/l 이하), 총대장균군(불검출), 일반세균수(100cfu/m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mg/l 이하), 대장균군(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

◎ 일반 음용 생활지하수도 330개나 부적합 판정받아!

-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까지 음용가능한 생활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무려 33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62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음용 지하수 부적합 건수>

	생활수	농어업수	공업수
2006년	624개소	2개소	0
2007년 6월	330개소	0	0

※ 자료 : 환경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검출내역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660건의 위해물질이 (기준초과)검출 되었다. 원인별로는 발암물질인 '질산성질소'의 기준초과가 168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세균 기준초과가 152건(23.0%), 총대장균군이 97건(14.7%), 기타 24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음용 지하수 주요 부적합 내역>

	총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
2006년	1101	253건(23.0%)	282건(25.6%)	224건(20.3%)
2007년 6월	660	168건(25.5%)	152건(23.0%)	97건(14.7%)

※ 자료 : 환경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식중독 매년 급증, 노르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도 급증

- 한편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2005년 109건, 2006년 259건, 2007년 7월 현재 3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학교급식 식중독 파동의 주범이었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도 2005년 7건에서 2006년

51건, 올해 7월 현재 79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아직도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전체 식중독 발생건	109건	259건	312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건	7건(6.4%)	51건(19.7%)	79건(25.3%)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서울대 김상중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분노가 지하수나 하천,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²⁶⁾ 있다.
- 식약청도 지하수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여, 늦게나마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제조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출 규제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2007년 6월) 있다.

◎ 물과 식재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학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과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사용하는 물과 급식재료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하수의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인 수도물보다 병원성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식품 및 위생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6) 한겨레신문 2006년 6월 26일, ‘납품업체 지하수가 원인?’기사 中

18. '건강' 걱정하다 '병' 생긴다

AIDS 등 건강염려증 확산

(2007년 10월 18일)

- **매년 12,241명꼴 '건강염려증 장애' 병원 찾아...**
 - 12,611('03)→12,599('04)→11,950('05)→11,951('06)→5,973('07.6)
 - 0~40대까지는 '남성'이, 50~70대는 '여성'이 더 많아...
 - 30대부터 환자수 급증해서 40대 가장 많고, 40·50·60대는 비슷한 수준
- **'에이즈 감염' 염려로 인한 중복 상담·검사 심각**
 - '묻고 또 묻고' 전체 상담자 중 15%가 10회 이상 상담
 - 2회 이상 중복 검사자 전체 검사자의 1/4 상회
 - 1~2가지 질환정보만 본인증상과 일치해도 스스로 감염 확신하는 '과잉일반화' 현상 나타나기도...
- **정확한 질병정보 제공하고, 정보이해능력 배양해야**
 - 인터넷상 잘못된 건강정보 등이 건강염려증 확산시켜...
 -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확한 질병정보 제공하고, 균형 잡힌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이해능력 키워나가야...

- 인터넷상의 질병·건강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잘못된 건강상식 등으로 인한 '건강염려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03~2007 건강염려증환자 진료실적」과 「AIDS 중복 상담·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건강염려증 환자 진료실적 매년 12,241건...실제는 더 심각할 것

- 안명옥의원이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건강염려증 환자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03년 12,611건, '04년 12,599건, '05년 11,950건, '06년 11,951건, '07년 상반기 5,97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평균 12,241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건강염려증 환자 진료실적(2003~2007.6)>

(단위 : 건, 일, 원)

구 분	진료건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급여비
2003년	12,611	20,644	445,708,740	300,600,540
2004년	12,599	19,150	415,317,740	278,063,400
2005년	11,950	18,079	432,000,550	293,373,040
2006년	11,951	18,309	483,238,830	329,541,780
2007년 상반기	5,973	9,197	249,323,270	170,657,37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2006년도 진료실적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0~29세까지의 합이 10%미만이다가 30대에는 12%로 급증하고 있다. 40대 이후에는 각 연령대별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40대가 23.1%로 가장 높고, 50대 21.4%, 60대 19.9%, 70대이상 14.5%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973명, 여성 5,978명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염려증 환자 성별·연령별 진료건수(2006)>

(단위 : 건, %)

구 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남 성	5,973	49	200	398	802	1,508	1,235	1,047	734
여 성	5,978	26	100	314	633	1,250	1,320	1,332	1,003
계	11,951	75	300	712	1,435	2,758	2,555	2,379	1,737
비 율	100%	0.6%	2.5%	6.0%	12.0%	23.1%	21.4%	19.9%	14.5%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 성별·연령별로 매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매년 40대의 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추이를 보면, 40대까지는 ‘남성’이, 50대 이후에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염려증 환자 연령별 진료건수(2003~2006)>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0~9세	35	27	62	54	49	103	30	32	62	49	26	75
10~19세	141	106	247	129	123	252	162	102	264	200	100	300
20~29세	406	292	698	314	356	670	354	322	676	398	314	712
30~39세	1,204	706	1,910	1,057	648	1,705	881	658	1,539	802	633	1,435
40~49세	1,439	1,253	2,692	1,469	1,296	2,765	1,485	1,204	2,689	1,508	1,250	2,758
50~59세	1,141	1,360	2,501	1,193	1,360	2,553	1,161	1,348	2,509	1,235	1,320	2,555
60~69세	1,243	1,517	2,760	1,136	1,538	2,674	1,152	1,384	2,536	1,047	1,332	2,379
70세 이상	689	1,052	1,741	704	1,173	1,877	649	1,026	1,675	734	1,003	1,737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한편 건강염려증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실제 환자 수는 질병통계상에 드러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상의 유사한 질병코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대표적 ‘건강염려증’인 에이즈 중복 상담·검사 심각한 수준...
상담자 15%가 10회 이상 상담, 2회 이상 중복 검사자 25% 상회

- 대표적인 ‘건강염려증’인 에이즈의 경우, 중복상담·검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실시한 상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2,278건의 상담사례 중 10회 이상 장기상담자가 무려 3,454건으로 15%에 달했다. 또한 재상담자로 분류된 2~4회 상담자가 6,840건으로 31%, 계속상담자로 분류된 5~9회 상담자가 1,417건으로 6%를 차지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전화상담 실적(2005~2007.6)>

(단위 :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6.30 현재		총 계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계	8,439	100%	9,406	100%	4,433	100%	22,278	100%
신 규	2,683	32%	4,263	45%	2,039	46%	8,985	40%
재상담(2~4회)	2,625	31%	2,841	30%	1,374	31%	6,840	31%
계속상담(5~9회)	534	6%	588	6%	295	7%	1,417	6%
장기상담(10회이상)	1,317	16%	1,484	16%	653	15%	3,454	15%
미확인	498	6%	49	1%	27	0%	574	3%
무응답	782	9%	181	2%	45	1%	1,008	5%

※ 자료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7. 8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는 AIDS 검진상담소의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55건의 HIV/AIDS 검사 중 검진기왕력이 있는 검사자는 1,238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상담 센터의 재검비율은 13.5%로, 일반인 상담센터(33%)나 동성애자 상담 센터(2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AIDS 검진상담소 중복검사자 건수(2006~2007.6)>

(단위 : 건, %)

구 분	2006년도			2007년 6월			계		
	건수	검진기왕력 ¹⁾	비율 (%)	건수	검진기왕력	비율 (%)	건수	검진기왕력	비율 (%)
계	2,901	812	27.9	1,654	426	25.7	4,555	1,238	27.2
동성애자 상담센터	992	203	20.4	567	168	29.6	1,559	371	23.8
외국인 상담센터	329	44	13.3	299	41	13.7	628	85	13.5
일반인 상담센터	1,580	565	35.7	788	217	27.5	2,368	782	33.0

※ 자료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7. 8

주1) 검진기왕력 : 내담자가 에이즈 검사를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질환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의 접촉과 확산으로 인한 폐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올바른 질환 및 건강정보를 선별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안의원은 “건강정보는 질환의심자들이 관련 정보를 통해 조기에 검진 받음으로써 질병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질병이 의심될 때에는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능력을 제고시키고, 성숙한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염려증이란?>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계속 걱정하고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중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증상이나 혹은, 두통 같은 한가지 증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며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자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의사의 소견을 믿지 않고, 절망감이나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병을 너무 걱정해서 인간관계, 직업,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20-30세 사이에 가장 흔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요인이 되어 생기기도 한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중병을 앓았거나 중병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도 이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건강자료실, 의학백과사전)

19.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2007년 10월 18일)

① 60세 이상 노인 매년 5,302명꼴 실종(02년~07년6월)

- (경찰청) 신고된 실종노인 2002년 이후 29,160명에 달해...성별·연령·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도 DB구축 안돼
-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에 등록된 실종노인 460명 불과...예산부족에 센터담당직원은 고작1명, 복지부 사실상 수수방관!

② 치매환자 매년 3,382명꼴 실종 (05년~07년6월)

- 치매환자 2005년 이후 8,467명 실종, 매년 증가
: 2,886명('05)→ 3,534명('06)→ 2,047명('07.6)
- 치매유병률 8%상회, 치매환자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추계)

③ 정신질환자 매년 6,245명꼴 실종 (04년~07년6월)

- 정신질환자 2004년 이후 21,857명 실종, 매년 증가
: 5,196명('04)→ 6,182명('05)→ 6,872명('06)→ 3,607명('07.6)
- 미발견자도 증가 : 46명('04)→48명('05)→72명('06)→73명('07.6)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보호·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만5천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 실종통계 분류상 장애인 실종자는 치매와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60세 이상 노인 매년 5,302명꼴로 실종!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 등록자는 매년 100명 미만...실질적 도움 안돼

-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9,160명으로 매년 5,302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실종자는 2002년 이후 3년간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노인 실종(가출) 현황(2002~2007.6)>

(단위 : 명)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총계	29,160	5,183	6,047	7,384	6,162	2,890	1,494
남성	14,880	2,494	3,031	3,789	3,143	1,581	842
여성	14,280	2,689	3,016	3,595	3,019	1,309	652

※ 자료 : 경찰청, 2007. 7

주) 노인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발견/미발견자는 통계상 구분이 불가함.

- 이처럼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일한 지원책으로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

-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노인찾기종합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 수는 46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1.6%에 불과하다. 이 중 가정복귀자는 107명으로 전체의 23.3%수준이다. '노인찾기종합센터'에는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다.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10 억원 수준인 것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노인찾기종합센터 실종노인 등록 현황(2002~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실종자수	460	67	75	75	72	100	71
가정복귀	107	0	0	14	9	53	31
미복귀자	353	67	75	61	63	47	40

※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8

주) 실종자 중 보호자에 의한 내용삭제의 경우 가정복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연도별 노인찾기종합센터 예산지원 현황(2003~2007.6)>

(단위 : 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실종자수	5,628	-	2,400	882	900	1,500

※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8

- 경찰청도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세부적인 구분이 안 되는 등 통계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낸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실종노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 통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종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치매환자 매년 3,382명꼴 실종, 치매실종자 매년 증가! 치매유병률 8%상회,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추계)

- 경찰청은 2005년부터 치매환자의 실종통계를 노인실종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6월 현재 2,0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3,382명꼴이다. 이러한 숫자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나, 치매환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실종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현재 경찰청 통계는 연령구분이 불가함)

<연도별 치매환자 실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실종자수	8,467	2,886	3,534	2,047
미발전자	68	23	31	14

※ 자료 : 경찰청, 2007. 7

주) 경찰청은 '05년부터 연령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실종자 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도 2003년 33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 38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환자의 발견이 일반인보다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종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매노인 현황 및 추계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치매노인수	330	347	364	382
치매유병률	8.3	8.3	8.3	8.3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6

주)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발표된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활용하여 재추계한 결과임

○ 정신질환자 매년 6,245명꼴로 실종! 실종자·미발견자 매년 증가해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청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1,8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는데, 이는 매년 6,245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실종자수도 2004년 5,196명에서 2005년 6,182명, 2006년 6,872명, 2007년6월 현재 3,6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정신지체장애인 실종 현황(2004~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실종자수	21,857	5,196	6,182	6,872	3,607
미발견자	239	46	48	72	73

※ 자료 : 경찰청, 2007. 7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 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종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보건시설 등의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 노인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뒤늦게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²⁷⁾
- 법률은 개정됐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이 주로 입소하는 정신보건시설 등은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미인가시설이 많고, 노인들의 지문이 흐릿하여 신분증명이 어렵다는 점 등도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7)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8.3]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종노인들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계법령 등을 정비해 나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이 주로 입소하는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찰청과 노인찾기종합센터 간 자료연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2007년 10월 18일)

-소보원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01~' 07.6)」 분석-

□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 257건 ('01~'07.6)

- 피해구제 접수건수 증가, 28건('01) → 44건('06)
- 병·의원 101건(39.3%), 대학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순
- 성형 30건(11.7%), 디스크 27건(10.5%), 장기 27건(10.5%), 골절22건(8.6%) 순
- 감염경로 : 수술상처 180건(70%), 주사 16건(6.2%), 침습적 시술 13건(5.1%), 구강 13건(5.1%), 침·부항 치료 6건(2.3%), 유치카테터 6건(2.3%) 순

□ 병원감염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 심각!

- '배상및 환급' 154건(59.9%),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 병원감염 의료기간 책임 인정을 95.3%
- '효과미흡 및 악화' 101건(39.3%), '(재)수술' 82건(31.9%),
'장애' 41건(16%), '사망' 33건(12.8%)
- 치료기간 연장 '3개월 미만' 156건(60.7%), '6개월 미만' 38건(14.8%),
'1년 미만' 30건(11.7%), '2년 미만' 15건(5.8%), '2년 이상' 6건(2.3%)
- 배상금액 '100만원 미만' 23건(8.9%), '500만원 미만' 56건(21.8%), '1,000만원 미만'
27건(10.5%), '5,000만원 미만' 46건(17.9%), '5,000만원 이상' 2건(0.8%)

□ 복지부 '21개 의료기관 병원감염 현지점검' 결과('06.11.8~22)

- 감염관리 인력 미배치 3기관(14.3%), 예방지침 미비치 7기관(33.3%),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10기관(47.6%), 감염감시 미실시 9기관(42.9%)

-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은 물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01~'07.6)」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병원감염 피해구제 매년 40건 발생!

병·의원(병원종별), 성형(수술내용), 수술상처(감염경로) 감염 제일 많아...

- 병원감염 관련 피해건수는 2001년부터 2007.6월까지 총 257건이며, 연도별로는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44건, 2007년 6월까지 1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까지	합계
건 수	28건	30건	33건	52건	51건	44건	19건	257건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0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치과 병·의원 10건(3.9%), 한방 병·의원 7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종별 현황>

병원종류	병·의원	대학부속 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합계
건수	101	93	46	10	7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68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40건(15.6%), 성형외과 31건(12%), 일반외과 22건(8.6%), 치과 19건(7.4%), 산부인과 18건(7%)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이 많은 것은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외과도 미용성형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과목별 현황>

과목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일반 외과	치과	산부 인과	흉부 외과	내과	비뇨 기과	한방	기타	합계
건수	68	40	31	22	19	18	13	11	8	7	20	257

주) 기타는 안과 6건, 소아과 5건, 피부과 3건, 이비인후과 건강검진 각각 2건,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각각 1건 임.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치료내용별로는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 23건, 치과치료 18건, 주사 14건, 한방치료 7건, 분만 3건 이었다.
- 수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수술 190건 중 성형수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수술 27건, 장기수술 27건, 골절수술이 22건, 인공관절수술 19건, 척추수술 16건, 심장수술 9건, 뇌수술이 6건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 현황>

치료 내용	수술	치료 시술	치과 치료	주사	한방 치료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90	23	18	14	7	3	2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수술내용별 현황>

치료 내용	성형	추간판 탈출증	장기	골절	인공관절	척추	심장	뇌	기타	합계
건수	30	27	27	22	19	16	9	6	34	190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감염경로는 수술상처가 180건, 주사부위 16건, 침습적 수술부위 13건, 구강 13건, 유치카테터 6건, 침·부항 치료부위 6건, 수혈 1건, 분만 1건으로 나타났다.
- 감염균별로 보면, 난치성 감염인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²⁸⁾이 73건,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²⁹⁾ 4건, MRCNS³⁰⁾ 2건으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전체의 59.4%를 차지해 병원내 난치성감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8)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메치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농양이나 창상감염 등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폐렴, 패혈증 등 중증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감염균.

29) VRE(Vancomycine-resistant Enterococcus) :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장구균. 장구균은 정상인의 위장관과 비노생식계에 상재하는 균이나 면역저하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등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내 주요 감염균.

30) MRCNS(Methicillin-resistant coagulation negative Staphylococcus) : 포도상구균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외한 모든 균 중 메티실린 내성을 가진 균.

<감염경로별 현황>

감염 경로	수술 상처	주사 부위	침습적 시술 부위	구강	유치 카테터	침·부항 치료부위 (한방)	수혈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80	16	13	13	6	6	1	1	21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감염균별 현황>

균주	MRSA	포도상 구균	녹농균	VRE	칸디다	MR CNS	연쇄상 구균	균 (음성)	합계
건수	73	19	8	4	1	2	2	24	133

주1)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67건과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57건은 제외함.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급증!

- 병원감염 피해구제 25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정보제공 12건(4.7%)이다. 전체 257건 중 무과실로 판단된 12건을 제외한 245건(95.3%)은 의료기관에게 병원감염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처리결과	배상 또는 환급	취하 또는 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무과실)	합계
건수	154	54	37	12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배상 및 환급 처리된 154건의 배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 23건, 500만원 미만이 56건, 1,000만원 미만이 27건, 5,000만원 미만이 46건이며, 5,000만원 이상도 2건이나 되어 병원감염으로 인한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 배상금액 현황>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합계
건수	23	56	27	46	2	154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보면, '효과 미흡 또는 악화'가 101건 (39.3%), '(재)수술'이 82건(31.9%), '장애를 입은 경우' 41건(16%), '사망한 경우'도 33건 (12.8%)이나 되어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 피해내용>

피해내용	효과미흡 또는 악화	(재)수술	장애	사망	합계
건수	101	82	41	33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대표적 피해사례로 김○○씨(여, 63세)는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 내염이 확인되어 수회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여 검사 결과 병원감염으로 확인되어 병원측이 책임을 졌다.

☞(별첨) 진료과목별 대표적 피해사례

- 병원감염으로 인해 치료기간도 연장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1개월 미만’이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이상 3개월미만’ 65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38건, ‘6개월이상 1년미만’ 30건, ‘1년이상 2년미만’ 15건, ‘2년이상’도 12건이나 되어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정도³¹⁾>

기간 치료 내용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이상	기타 (확인 불가능)	합계
건수	91	65	38	30	15	6	12	25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복지부 병원감염 실태조사 결과('06.11.8~22),
인력, 지침, 기준 등 미충족 의료기관 대다수...

- 한편 보건복지부가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감염 의료기관 현지점검³²⁾”에 따르면,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21곳 중 3곳(14.3%), 병원감염관리 예방지침이 없는 기관 7곳(33.3%),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보수교육이 받지 않은 곳이 10곳(47.6%),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이 10곳(47.6%), 감염 감시 미실시 기관 9곳(42.9%), 감염감시 보고서 작성하지 않는 기관도 14곳(66.7%)인 것으

31) ‘치료기간 연장정도’의 산출방법 : 수술 및 각종 치료 후에 감염증이 나타나 이와 관련된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는 다른 질환과 병합상태로 감염에 따른 치료기간만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임.

32) 전국 7대 대도시 소재 21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2006년 11월 8일~22일 동안 실시함.

로 나타나, 병원감염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장비 등 병원감염 실태조사>

(단위 : 기관)

질문	유	무
인력 배치 여부	18	3(14.3%)
예방지침 비치 여부	14	7(33.3%)
보수교육 실적	11	10(47.6%)
감염관리 추진계획 수립여부	10	11(52.4%)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11	10(47.6%)
감염감시 실시여부	12	9(42.9%)
감염감시 보고서 작성여부	7	14(66.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전문인력 확보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감염분야는 가시적인 병원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감염관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의원은 “병원감염의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이며,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병원이 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은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진료과목별 대표적 피해사례

□ 정형외과

〈사례1〉 좌측 슬관절 수술 후 MRSA균 감염 발생

- 신○○씨(여, 66세)는 좌측 슬관절(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은 후 부종 및 통증이 발생되어 농양배액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함.
- 이후 관절에서 고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배액되어 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균이 확인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됨.

▶ 퇴원 6일후 시행한 관절내 검체에서 MRSA균이 확인된 점, 감염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시켜 감염이 악화된 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성형외과

〈사례2〉 뇌낭종 수술 후 MRSA균 감염 발생

- 정○○씨(여, 39세)는 소뇌낭종성 종양이 진단되어 완전적출술을 받았으나 수두증이 악화되어 뇌실외배액술을 받음.
- 이후 수술한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되어 낭종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단락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되었고,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1급 상태가 됨.

▶ 낭종 뇌실복강단락술 부위에서 MRSA균이 검출되었고, 단락술 감염 및 반복된 수두증의 악화로 인해 뇌실 및 두개강내 감염이 되어 신경학적 악화 상태가 발생된 점에 대해 병원측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일반외과

〈사례3〉 위암 수술 후 MRSA 감염 발생

- 차○○씨(여, 80세)는 위암 수술(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았으나 약 10일 후 고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받은 결과, MRSA균이 검출됨.
- 감염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함.

▶ 수술 후 MRSA 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감염의 근원지가 중심정맥도관으로 조사되어 카테터 관리 소홀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추정됨. 환자가 고령이고 암환자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함.

□ 내과

〈사례4〉 정맥주사 후 주사부위 농양 발생

- 남○○씨(남, 67세)는 신증후군으로 입원하여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중 좌측 발등에 정맥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에 발적과 부종이 나타났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퇴원함.
- 퇴원 후 주사를 맞은 부위가 까맣게 변했으나 이를 다 나은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갑자기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의식을 잃게 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좌측 발등의 농양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치료 중 사망함.

▶ 신증후군으로 입원할 당시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었으며, 의식을 잃고 재입원한 후 시행된 세균배양 검사상 좌측 발등 주사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당시 정맥주사 부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치과

〈사례5〉 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 발생

- 유○○씨(여, 46세)는 하악 앞니의 만성치주염과 동요도가 있어 발치후 임플란트 2개를 식립 받음. 시술 후 통증, 종창, 누공 등 감염이 확인되어 배농관을 삽입하였으나 염증이 악화되어 임플란트 제거술 후 8개월 이상 염증치료를 받음.

▶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시술이나 시술 기술 및 수술 후

구강 위생관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성공률의 차이가 있음. 본 건의 경우, 초기에 부종, 통증 등의 염증 증상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지연된 점, 수술 23일 째 염증이 진행되어 누공까지 관찰된 점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안과

〈사례6〉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 김○○씨(여, 63세)는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실명됨.

▶ 안내염은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그 원인은 외상이나 수술상처, 각막의 궤양, 천공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본 건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퇴원시 눈이 따금거린다고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하였고, 수술 20일 이내에 안내염이 확인된 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21.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2007년 10월 18일)

-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류³³⁾’ 사고 1,172건 발생! (‘05~‘07.6)
 - 사고 지속적 증가 443건(‘05) → 492건(‘06) → 237건(‘07.6)
 - 파손(훼손) 1,012건, 도난(절취)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
 - 국내 유명병원 4곳에서만 705건 발생! 전체 사고의 60.2%차지..
 - A병원(250건), B병원(185건), C병원(145건), D병원(125건)
- 도난(절취)·분실 사건 137건 발생! (‘05~‘07.6), 범죄 등 악용소지 다분해..
 - 도난·분실 증가, 41건(‘05) → 78건(‘06) → 18건(‘07.6)
 - 동일장소 재범율 5.8%에 달해..(총 137건 중 8건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
 - 약국·병원 등 7개 기관은 2번 이상 도난·분실 사건 발생!
 - 대구시 소재의 ‘E병원’ 3번이나 도난당해..(‘06년 2번, ‘07년 1번)
 - 택배로 마약류 운반 중 도난·분실된 건수도 9건이나 돼..
 - 편법 마약운반, 도난·분실에 속수무책.. 제도적 사각지대 상존..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사업 실효성 확보 절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102명 육박, 인력난 가중!
 - 공주치료감호소, 감호환자 713명에 정신과의사는 7명 (‘07.7현재)
 - 마약류 환자는 76명(10.7%), 중독성과 재범성 고려한 치료체계 확보돼야..
- (치료보호소) 환자 평균 입소일 35일, 치료효과 없어 재입원을 증가!
 - 재정부담이 가장 큰 원인, 선진국(미국 등) 최소 6개월 ~ 2년간 치료
 - 재입원을 증가, 17.3%(2005년) → 31.4%(2006년)
- (‘송천재활기관’)한해 160명 입소, 투약환자 4,229명 중 3.8%(‘06년)
 - 취업지원체계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떨어져, 사후관리체계 전혀 없어..
 - ※ 마약 재범율 증가, 30.2%(‘04) → 42.8%(‘05) → 44.9%(‘06)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90.6% 국내유일 재활전문기관인 송천쉼터 잘 몰라

-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커지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비율 증가에 따른 치료재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마약류사범 · 재범현황>

구 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재범 비율
'04	7,747명	2,338명	30.2%
'05	7,154명	3,059명	42.8%
'06	7,709명	3,468명	44.9%

※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7.6,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의원이 식약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7.6)」과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환자를 위한 국가의 치료·재활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사고 매년 증가! 도난·분실된 마약, 악용 소지 다분해..

- 의료용 마약사고는 지난 3년간('05~'07.6) 총 1,17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012건, 도난(절취)이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으로 나타났다. 마약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6월 2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3) 의약품 중 의료목적으로 취급되는 마약류를 말함.

<의료용 마약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파손	도난	분실	변질	소실	계
'05	393	27	14	5	4	443
'06	406	66	12	6	2	492
'07.6	213	15	3	4	2	237
합	1,012	108	29	15	8	1,17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되어 발생했다.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의료기관별 마약사고 현황>

구분	마약사고 건수	비율	비고
A병원	250건	21.3%	4개 기관 60.2%
B병원	185건	15.8%	
C병원	145건	12.4%	
D병원	125건	10.7%	
기타(의료기관, 약국)	467건	39.8%	-
합	1,172건	100%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 593개³⁴⁾ 제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4) 국내 제조 의료용 마약류 493개 제품, 해외 수입용 의료용 마약류는 90개 제품임.

-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사고는 지난 3년간('05~'07.6) 총 137건 발생했으며, 특히 2006년(78건) 도난·분실사고는 2005년(41건) 보다 무려 90.2%나 급증했다.
-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8건(전체 137건 중 5.8%)이나 되었다. 그 중 대구광역시 소재의 'E병원'은 총 3번(2006년에 2번, 2007년에 1번)이나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광역시 소재 'E병원의 마약 도난·분실 현황>

병원소재	년월일	도난 마약 종류와 수량	도난 내역
대구광역시 'E병원'	2006-01-17	제일제약/폐치딘 /25mg/100A	2006.1.17 05:50 불상의 피의자 2명이 약국 내 마약금고에 보관중인 폐치딘 25mg*100앰플을 절취 후 도주함
	2006-06-10	하나제약/구연산펜타닐 /100mg/67A 제일제약/데메롤 /50mg/25A 제일제약/데메롤 /25mg/10A	2006.6.10 21:30~6.11 08:00경 마취과 간호사실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간호사실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내 피해품을 절취하여감
	2007-06-13	데메롤 50mg/10앰플	6.13(20:00경) 4층 마취과 간호실 내에서 전 반근무자로부터 15:00경 마약재고량을 확인하고 교대한 후 저녁8시경 마약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데메롤 10개가 모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취급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한편, 도난·분실 마약사고 중 9건은 택배를 이용한 마약운반 사고로 나타났다. 범죄 악용 등의 소지가 큰 물질을 택배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운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지침에는 의료용 마약의 '수발 절차'와 '인수인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마약의 운반 및 운송

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조속히 보완 되어야 한다.

◎ '마약류 환자' 치료 및 재활 부실관리 심각!

- 국내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며, 2007년 7월 현재 감호소 수용환자는 713명(정신질환자 600명, 마약류 환자 76명, 기타 37명)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정신과 의사는 고작 7명이어서, 최소 1인당 102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부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또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처분은 '감호목적'과 '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치료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특정한 수용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치료와 감호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 역시 올바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국내 치료보호소³⁵⁾의 경우 마약류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평균 35일(2007년6월 기준)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은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치료보호기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환자의 경우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³⁶⁾"고 말해 마약류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가 수박 겉핥기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현재 24개의 치료감호소가 있음. 이중 8개 병원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36) 식약청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007.4)"

<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

년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평균일수	39일	42일	39일	35일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6

- 특히,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17.27%(2005년)→31.36%(2006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치료보호 '재입원' 현황>

구 분	치료보호 입소자	재입원자	재입원 비율
'04	194명	72명	37.11%
'05	359명	62명	17.27%
'06	389명	122명	31.36%

- 국내 유일의 재활기관인 '송천쉼터³⁷⁾'의 경우, 작년(2006년) 한해 약 160여명이 입소하였다.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 4,229명(2006년) 중 약 3.8%만이 재활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 입소율이 낮은 원인은 재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데 있다. 취업과 연계된 교육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환자들의 재사회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소한 마약류 환자들의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1회성 교육과 훈련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 또한, 국내 유일의 재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점도 낮은 입소율의 한 원인으로 꼽는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90.6%는 '송천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

3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환자를 위한 재활기관임.

답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사범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컴퓨터의 존재를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송천컴터’ 인지도>

단위: 명(%)

구 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치료/민간기관 종사자	계
전혀 알지 못한다	5(9.4)	0(0.0)	5(5.0)
조금 알지 못한다	9(17.0)	3(6.3)	12(11.9)
보통이다	11(20.8)	1(2.1)	12(11.9)
조금 알고 있다	23(43.4)	14(29.2)	37(36.6)
매우 잘 알고 있다	5(9.4)	30(62.5)	35(34.7)
계	53(100)	48(100)	101(100)

※ 자료: (식약청)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07.4

주1) 형사사법기관종사자 : 검찰·경찰·법원·교도소 교육관, 보호관찰소 약물수강담당자 등

2) 민간기관종사자 : 학계, 약물상담가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실효성 높이는 국가 마약(예방)정책으로 거듭나야..

- 이에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하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료용 마약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취급기관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실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치료·재활기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독자들은 물론 형사사법직원들에게 치료·재활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그 효과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기관 간 공조 강화를 통해 치료·재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2007년 10월 18일)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 발간

- ① **연평균 139명 해외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03~07.6)
(※법정전염병 중 별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에이즈·결핵·한센병은 제외함)
- 말라리아(30.6%), 뎅기열(21%), 세균성이질(17.1%) 순
- 유입국은 인도(20.2%), 필리핀(15.2%), 인도네시아(13.1%) 순
- 감염입국자 대부분 한국인, 외국인은 7.9% 차지...
- 에이즈·결핵·한센병 외 법정전염병은 내외국인 구분만 가능, 국적 확인도 안돼... 전염병 관리체계 개선해야
- ② **검역이상자 연평균 24,105명, 양성 5,340건꼴**(03~06)
- 검역이상징후자 매년 24,105명씩 발생, 8월 가장 많아
- 세균검사 '양성'건수 매년 5,340건씩 발생, 해마다 증가
- 증상은 기침(45%), 설사(39.5%), 복통(5.2%) 순 (06년 기준)
- 이상징후자는 태국(39.5%), 필리핀(31.7%) 순 (06년 기준)
- ③ **외국인, 매년 에이즈 79명, 결핵 339명씩 발생**(03~07.6)
(※조사 시점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에이즈, 결핵 감염인 수입)
- 에이즈감염인 출국비율 크게 감소: 89.8%(03)→46.8%(06)
- 결핵감염인 매년 크게 증가 : 258(04)→ 388(05)→ 481(06)
-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후 감염인 급증

-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등으로 인해 전염병관리 및 검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해외에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연평균 139명에 달하는 등 해외유입전염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밝혀졌다. 안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해외유입전염병과 국내 검역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연간 139명 해외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돼...말라리아 가장 많고,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유입돼**

- 안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03~07.6)」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6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입국한 사람은 총 624명으로 연평균 139명꼴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은 총 49명으로 전체 감염인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감염 입국자는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질병종류별로는 말라리아가 191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Dengue열 131건(21%), 세균성이질 107건(17.1%), 장티푸스 81건(13%), 파라티푸스 5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Dengue열은 2005년에 전년도의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계속 높은 보고 수를 기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붙임 #1 :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03~'07.6)」 참조**

- 유입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가 126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95건(15.2%), 인도네시아 82건(13.1%), 태국 47건(7.5%), 중국 40건(6.4%)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516건, 아프리카 91건,

오세아니아 10건, 남미와 북미가 각각 2건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붙임 #2 :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 유입국가별 현황('03~'07.6)」 참조**

- 이러한 수치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전염병 중 법정전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의한 전염병에 한정될 뿐 아니라, 별도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즈·결핵·한센병을 제외한 것이다. 즉, 실제 해외유입전염병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외국인' 분류도 보고서식상에 기재된 환자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와 비교란의 별도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수동 분류한 것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특이성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점만 확인 가능한 것이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전국 13개 검역소 검역이상징후자 연간 24,105명 발생, 8월 가장 많아... 세균검사 '양성'건수 연간 5,340건 발생, 해마다 증가 추세

- 2003년 이후 국립검역소의 인원검역 결과 이상징후를 보인 인원은 96,418명으로, 연간 24,105명꼴로 나타났다. 검역이상징후자는 2006년도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월별로는 매년 8월에 검역이상징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출입국 인원이 많은 시기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발견 실적 (2003년~2006년)>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6,418	8,548	8,215	5,700	6,976	7,614	6,552	8,925	13,672	5,875	7,423	8,245	8,673
2003년	11,951	1,086	913	685	1,458	592	473	840	1,576	830	1,182	1,097	1,219
2004년	22,562	1,839	1,882	1,077	1,300	1,950	1,451	1,965	3,079	1,381	2,039	2,332	2,267
2005년	32,524	2,230	2,271	1,868	2,205	2,747	2,777	3,743	5,358	1,962	2,474	2,304	2,585
2006년	29,381	3,393	3,149	2,070	2,013	2,325	1,851	2,377	3,659	1,702	1,728	2,512	2,60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 2006년 국가별 이상징후자 현황을 보면, 태국에서의 입국자가 11,6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9,313명), 베트남(2,310명), 중국(2,107명), 인도(1,4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31개국의 입국자로부터 이상징후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95명의 북한 입국자도 포함되어 있다.
- 증상별로는 기침이 13,23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설사(11,612명), 복통(1,540명), 구토(1,358명), 발열(1,319명), 호흡곤란(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 #3 :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국가별·증상별 현황 (2006년)」 참조

- 한편 국립검역소는 입국자에 대해 매년 15만건 이상의 세균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립검역소 검사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2006년도만 전년도에 비해 검사건수가 약 3만2천건 감소하였다.

<국립검역소 세균검사 실적 (2003년~2006년)>

(단위 : 건)

구 분	검사 건수	음성	양성	콜레라	비독소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취겔라균	살모넬라균	O-157	기타
계	621,135	600,536	21,360	382	922	17,558	833	11	150	2	1,062
2003	128,789	127,025	1,764	29	10	1,632	56	0	5	0	32
2004	152,843	149,505	3,338	97	51	2,803	171	1	36	0	38
2005	185,726	178,239	7,487	171	355	5,601	311	9	43	2	880
2006	153,777	145,767	8,771	85	506	7,522	295	1	66	0	11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 그러나 양성판정 건수와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총 검사건수가 감소한 2006년도의 경우에도 양성판정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된 균은 장염비브리오균이 대부분을 차지(최근 4년간 8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검역소 세균검사 결과 양성판정 비율>

(단위 : 건,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검사건수	128,789	152,843	185,726	153,777
양 성	1,764	3,338	7,487	8,771
비 율	1.37%	2.18%	4.03%	5.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6

○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감염인 에이즈 79명, 결핵 339명씩 발생...결핵 감염인 매년 크게 증가하고, 에이즈감염인 출국비율 매년 줄어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전염병 감염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전염병 중 별도의 감시체계를 갖고 있는 에이즈·결핵 감염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에이즈감염인은 매년 79명, 결핵감염인은 매년 339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에이즈·결핵·한센병 감염 현황 (2003년~2007년6월)>

(2007.6월말 현재, 단위 : 명)

발견년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HIV/AIDS	357	59	153	54	47	44
결 핵	1,526	188	258	388	481	211
한센병	6	1	1	2	1	1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주) HIV/AIDS : 2003.9월~2003.11월 4년미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진증가로 2004년 에이즈 감염인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 외국인 에이즈감염인의 출국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총 357명의 감염인이 발생하였고 이 중 272명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출국율 76.2%). 연도별 출국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인데, 2003년 89.8%에서 2006년 46.8%로 절반 가까운 수치로 줄어들었다.

<국내 HIV/AIDS 감염 외국인 발생대비 출국현황 (2003년~2007년6월)>

(단위:명)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감염인수	357	59	153	54	47	44
출 국	272	53	138	34	22	25
비 율	76.2%	89.8%	90.2%	63.0%	46.8%	56.8%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전염병 관리체계 개선 시급...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전염병 통제능력 강화시켜 나가야...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해외여행객, 외국인 이주자 등 매년 출입국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법정전염병도 증가하고 있다. 최신식 검역장비 도입,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촘촘한 검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는 외교적인 분쟁을 우려해 ‘국가별 전염병 유입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해외유입 전염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 개개인이 질병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각심, 통제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의원은 “다민족사회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문제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결국 해외유입전염병 예방과 전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 (2003년 ~ 2007년6월)>

(단위 : 명)

전염병명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6.30 현재)	
	보고 수	(외국 인수)	보고 수	(외국 인수)	보고 수	(외국 인수)	보고 수	(외국 인수)	보고 수	(외국 인수)	보고 수	(외국 인수)
콜레라	35		1		10		16		5		3	
④ 장티푸스	81	(6)	10		12 (1)		19 (2)		25 (2)		15 (1)	
⑤ 파라티푸스	59	(1)	11		16 (1)		10		17		5	
③ 세균성이질	107	(5)	6		23 (4)		44 (1)		20		14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0		0		0		0		1	
홍역	10	(4)	2 (2)		0		1		5		2 (2)	
수두	1		-		-		0		0		1	
① 말라리아	191	(28)	64 (7)		38 (8)		45 (7)		30 (3)		14 (3)	
성홍열	0		0		0		0		0		0	
레지오넬라증	1		0		0		1		0		0	
비브리오패혈증	1		0		1		0		0		0	
발진열	1	(1)	0		0		0		1 (1)		0	
렙토스피라증	2		0		1		0		1		0	
브루셀라증	1		0		0		0		0		1	
신증후군출혈열	1		0		0		0		1		0	
② 뎅기열	131	(4)	14 (3)		16 (1)		34		35		32	
리슈마니아증	1		0		1		0		0		0	
계	624	(49)	108 (12)		118 (15)		170 (10)		140 (6)		88 (6)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주) 1. 국가 전염병감시체계에 보고된 전염병환자발생보고 집계로, 보고 수에는 전염병별 신고·보고 범위에 따른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함.

2. 자료는 '신고일'(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환자발생을 신고한 날짜)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 자료는 검사결과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3. 해외유입환자 중 외국인 수를 괄호에 표시함.

* 수두는 2005년 법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전염병으로 2005년 통계는 7월 13일 이후 신고·보고된 자료임.

【붙임#2】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 유입국가별 현황 (2003년 ~ 2007년6월)>

(단위 : 명)

대륙명	국가명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6.30)
아시아	네 팔	3	-	1	2	-	-
	동티모르	7	6	1	-	-	-
	말레이시아	9	3	1	3	-	2
	미얀마	11	-	-	10	1	-
	방글라데시	14	3	3	3	5	-
	베트남	25	3	5	2	6	9
	스리랑카	1	-	-	-	1	-
	싱가폴	7	1	1	3	1	1
	아프가니스탄	2	1	-	-	1	-
	① 인도	126	17	32	27	35	15
	③ 인도네시아	82	20	12	20	14	16
	일본	3	-	-	-	1	2
	⑤ 중국	40	3	9	19	7	2
	카타르	1	-	1	-	-	-
	캄보디아	34	4	3	14	9	4
	④ 태국	47	5	12	12	6	12
	터키	1	-	1	-	-	-
	파키스탄	7	1	1	1	3	1
	② 필리핀	95	12	14	27	29	13
	미상	1	1	-	-	-	-
아프리카	가나	6	1	-	3	2	-
	가봉	1	-	1	-	-	-
	기니아비사우	1	-	1	-	-	-
	나이지리아	23	6	9	4	3	1
	에티오피아	4	-	2	1	1	-
	남아프리카공화국	2	2	-	-	-	-
	모잠비크	3	1	-	-	1	1
	앙골라	2	-	-	-	1	1
	잠비아	4	2	-	-	2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	-	-	-	1	-
	우간다	4	-	1	1	1	1
	카메룬	5	2	1	1	1	-
	케냐	11	4	-	5	-	2
	콩고	1	-	-	1	-	-
	탄자니아	6	2	-	2	2	-
	토고	1	-	-	1	-	-
	적도기니	2	-	-	1	-	1
미상	14	2	4	5	2	1	
남미	브라질	2	-	-	1	-	1
오세아니아	북마리아나군도	1	1	-	-	-	-
	오스트레일리아	1	-	1	-	-	-
	파푸아뉴기니	6	5	-	-	1	-
	바누아투	1	-	-	1	-	-
솔로몬제국	1	-	-	-	-	1	
북미	미국	2	-	-	-	2	-
미상	3	-	1	-	1	1	
계		624	108	118	170	140	88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안명옥의원 재구성

【붙임#3】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국가별·증상별 현황 (2006년)>

(단위 : 명)

구 분	계	설사	구토	복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잡은호흡
총 계	29,381	11,612	1,358	1,540	1,319	13,230	322
① 태 국	11,615	4,455	623	625	393	5,249	130
인도네시아	1,267	515	53	63	48	577	11
③ 베트남	2,310	1,047	87	105	81	948	42
⑤ 인 도	1,442	874	22	49	25	461	11
미얀마	30	15	1	1	3	10	0
캄보디아	354	166	26	21	7	126	8
이집트	201	74	7	6	7	104	3
이 란	11	4	1	0	1	5	0
말레이시아	570	153	24	20	39	331	3
일 본	56	10	1	14	30	1	0
② 필리핀	9,313	3,563	392	518	434	4,339	67
북 한	95	88	0	1	5	1	0
피 지	62	6	1	3	6	46	0
대 만	16	9	0	0	6	1	0
러시아	18	13	0	0	3	2	0
싱가폴	4	0	0	0	4	0	0
홍 콩	2	0	0	1	1	0	0
④ 중 국	2,107	608	105	113	206	1,028	47
몽 골	2	2	0	0	0	0	0
우즈베키스탄	1	0	0	0	1	0	0
아랍에미리에이트	3	3	0	0	0	0	0
터 키	17	2	15	0	0	0	0
독 일	1	0	0	0	1	0	0
프랑스	1	1	0	0	0	0	0
네덜란드	1	1	0	0	0	0	0
영 국	1	1	0	0	0	0	0
이탈리아	1	0	0	0	1	0	0
체 코	2	0	0	0	2	0	0
미 국	16	2	0	0	14	0	0
캐나다	1	0	0	0	0	1	0
호 주	1	0	0	0	1	0	0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23.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2007년 10월 19일)

□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2,331개! ('04~'07.6)

- 2회~5회 적발업소 2,185개, 6회~10회 적발 135개, 11회 이상은 11개
- 경기도 소재 'U제과', 'H제과'는 각각 19회, 18회나 적발되기도..
-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 제과를 제조하는 영업소로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

□ 식품위반업소 16,036건 발생, 영업자 4만1천757명 처벌! ('04~'06)

- 위반업소 증가하는데, 식품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 있어..
- (식약청)식품위반업소 : 5,703건(2004) → 4,999건(2005) → 5,334건(2006)
- (경찰청)영업자 단속 : 20,603명(2004) → 12,513명(2005) → 8,641명(2006)
-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양산해..정부의 가중처벌제 실효성 없어.. '3진 아웃제' 확대 시행돼야..

- 최근 잇따르는 식품사고로 인해 정부의 단속은 빈번해 졌으나, 적발된 불량식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발된 업체의 재범율도 높아지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 업소도 지난 3년간 무려 2,3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위반 재범업소가 2,331개나 돼..

- 지난 3년간(2004년~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천36건이며, 영업자 처벌은 4만1천757명에 달한다. 이 중 구속된 영업자만도 121명이나 된다.

< (2004~2006) 식약청 식품사고 및 영업자 처벌 현황 >

구 분	식품사고(위반업소, 식약청)	영업자 처벌(경찰청)	비 고
2004년	5,703건	20,603명	구속 80명
2005년	4,999건	12,513명	구속 29명
2006년	5,334건	8,641명	구속 12명
3년 합계	16,036건	41,757명	121명
평 균	5345.3건	13,919명	40.3명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식품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2005년 4,999건 → 2006년 5,334건)하고 있지만 영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2005년 12,513명 → 2006년 8,641명)있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한 업소가 2,185개(93.7%)이고, 6회에서 10회 위반한 업소가 135개(5.8%), 11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개(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2007.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 >

총 재범업소	2회 ~ 5회	6회 ~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7회	18회	19회
2,331개	2,185개	135개	4개	1개	1개	2개	1개	1개	1개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U제과'와 'H제과'는 각각 식품위생법을 19회, 18회나 위반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된 식품위생업체들의 배짱영업 행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품위생법 규정³⁸⁾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식품위해사범 단속 사후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이다.”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8)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을 준용함.

24.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2007년 10월 19일)

「오진, 질병조기발견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 특수의료장비³⁹⁾ 4,038대 중 468대(11.6%) 부적합 판정!(‘06년)

- 부적합 증가, 253대(6.7%, ‘05) → 468대(11.6%, ‘06)
- 기기별 부적합 현황,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
- 기관별 부적합 현황, 의원 237대(50.6%)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부적합률도 3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률 31% / 3차 재검사 부적합률 34%

□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4년간 70.8% 증가, 3,079억원(‘03) → 5,260억원(‘06)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4년간 26.6% 증가, 81억원(‘03) → 103억원(‘06)
- MRI급여비용 45.6% 증가, 5,434억원(‘05) → 6,735억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535대(전체 38%)
 - CT 695대(43.8%), 유방촬영장치 730대(40.5%), MRI 110대(1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 통해 자율적 정도관리체계 확립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39) 의료법 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의해 특수의료장비란 CT, MRI, 유방촬영장치

-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2005년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에서 2006년 4,038대 중 468대(11.6%)로 전년대비 4.9%p나 증가하였다.
- 장비별로는 CT는 1,586대 중 276대(17.4%), 유방촬영장치는 1,804대 중 192대(10.6%)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각각 7.1%p, 4.9%p 늘어난 수치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단위 : 건)

장비	2005년		2006년	
	계	부적합	계	부적합
CT	1,547	160(10.3%)	1,586	276(17.4%)
MRI	596	0	648	0
유방촬영장치	1,630	93(5.7%)	1,804	192(10.6%)
계	3,773	253(6.7%)	4,038	468(11.6%)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Mammo) 3개의 의료기기를 말함.

-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적합건수 468건 중 의원이 23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5건(39.5%), 종합병원 46건(9.8%) 순이다.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

(단위 : 건)

종별 결과 검사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2005	969	33 (3)	1,003	109 (11)	1,474
2006	986	46 (5)	961	185 (19)	1,590	237 (15)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468건의 재검사 현황을 보면, 2차 검사시 144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도 49대나 되었다.
-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재검사 현황>

(단위 : 대)

연도	총 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이상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2005년	253	190 (75%)	38 (15%)	25 (10%)	21 (55%)	11 (29%)	6 (16%)	8 (73%)	-	2 (17%)
2006년	468	280 (60%)	144 (31%)	44 (9%)	75 (52%)	49 (34%)	20 (14%)	36 (73%)	-	13 (1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또한 제조연도별로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가 1,535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하여 오래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2006년)>

(단위 : 건)

구분	MRI	CT	Mammo	계
1997~2006	538 (83.0)	891 (56.2)	1,074 (59.5)	2,503 (62.0)
1985~1996 (연도미상 포함)	110 (17.0)	695 (43.8)	730 (40.5)	1,535 (38.0)
계	648	1,586	1,804	4,03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CT촬영으로 인한 급여는 2003년 3,079억원에서 2006년 5,260억원으로 70.8%의 증가율을 보였고, 유방촬영장치는 같은 기간 81억원에서 103억으로 26.6% 증가하였으며 MRI는 급여가 시작된 2005년 1,013억원에서 2006년 1,474억원으로 45.6% 증가하였다.

<CT, 유방촬영장치, MRI 급여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2006 증가율
CT	307,937	358,562	442,139	526,012	70.8%
유방촬영장치	8,151	8,696	9,290	10,322	26.6%
MRI ⁴⁰⁾	-	-	101,304	147,496	45.6%
총계	316,088	367,258	552,733	683,830	116.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OECD Health Data(2005)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 당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6.8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CT는 31.9대로 일본(92.6대)에 이어 두 번째, 유방암촬영장치(24.8대)와 MRI(9대)는 각각 4번째와 9번째로 많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 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등을 통해 의료장비에 대한 자율적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40) MRI는 2005년부터 급여적용.

25.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 미달! (2007년 10월 21일)

- 식품위생검사기관 16곳 중 7곳(43.8%) 부적합 판정!(‘07.10)
 - 시험기록 미비, 이산화황 시험 불철저,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관찰 미흡 등 7개 기관 총 21건 지적
 - (사)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연구소 3곳 포함!

-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 15곳 중 10곳(66.7%) 검사실적 없어!(‘07.7)
 - 실적 없는 위생검사기관 비율 매년 증가,
- 16.7%(‘03) → 20%(‘04) → 52.9%(‘05) → 62.5%(‘06) → 66.7%(‘07.7)
 - 위생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검사체계 마련해야.

-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증가세,
중국·미국식품이 전체 부적합 식품 중 55.7%차지!(‘07.6)
 -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948건(‘05) → 922건(‘06) → 677건(‘07.6)
 - 국가별 부적합 비율, 중국 43.3%, 미국 12.4%, 일본 6.2%순

-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소홀 등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7개 기관에서 21건 지적받아!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내역」 과,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수입식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16곳 중 7곳이 부적합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지적 받은 7개 기관의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시험기록 미비에서부터 이산화황 불철저 시험,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미흡 등 총 21건을 지적받았다. 이들 기관 중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연구소도 3곳이나 포함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내역>

연번	기관명	부적합 내역	처분결과
1	A	1. 시험기록 미비 2. 시약, 표준품 관리 미흡	행정처분 진행 중
2	B	1. 과산화물가 공시험 미흡 2. 시험기록 일부 미비 3. 잔류농약 검사시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사항	
3	C	1. 일부 시험기록의 미비로 시험성적의 소급성 결여 2. 미생물시험 배양온도 관리 기록 미흡	
4	D	1. 실험자의 기기분석 미숙 2. 커피 수분시험법 달리하여 검사 3. 시험 성적서 기록관리 미흡 4.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관찰 미흡 5. 시험기록의 미비로 시험성적의 소급성 결여	
5	E	1. 시험성적서 검사결과 기록 미흡 2. 시험검사 의뢰서와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미확인 3. 원시험자료 및 시험기록 미비 4. 이산화황시험 불철저 시험 5. 시약대장관리 미흡	
6	F	1. 일부 시험기록 미비 2. 식중독균 검사시 사용한 검체량 미기록	
7	G	1. 일부 시험기록 미비 2.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 15곳 중 10곳 검사실적 없어!

- 또한 수입식품검사를 전문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15개 기관 중 10개 (66.7%) 기관은 2007년 7월 현재 단 1건의 수입식품도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지정하는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검사 실적이 전무한 기관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수입식품검사기관	6	10	17	16	15
실적이 전무한 기관	1	2	9	10	10
비 율	16.7%	20%	52.9%	62.5%	66.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수입식품검사기관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해마다 수입식품이 증가하면서, 부적합 식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별 검사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한편, 부적합 수입식품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검사와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부적합 건수는 948건이었다가 2006년 922건, 2007년6월 현재 677건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부적합 식품비율은 중국산 식품이 43.8%로 가장 높았고, 미국 12.4%, 일본 6.2%, 캐나다 4.3%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이에 안명옥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검사하는 식품위해성 검사가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안인 만큼, 검사능력이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6. 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2007년 10월 22일)

식약청, 언론대응 위한 연구용역 발주,
보고서 내용, '유해정보전달 표준매뉴얼'과 흡사

- 용역 보고서 주요내용 -

- “본 보고서는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식품 위
해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1)
-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사는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이 가장 많
이 보도, 기획기사와 전문가 기고보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
아...” 42)
- “언론이 위해의 단순 전달자로서 존재함에 따라 독자들은 근거가
부족한 정보를 근거로 공포에 떨어야 했고, 관련 산업도 또한 타
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43)
- “언론이 과학적 근거 없이 파동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선정적으
로 이끌어 간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
.” 44)
-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위해는 따로 있다. 언론의 기업적 특성을
이해하라. 정보원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채널을 만들라...” 45)

41)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151p

42)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185p

-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식약청에서 언론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하고, 그 내용이 식약청 언론대응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정보 전달 표준 매뉴얼'에 그대로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언론보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 으로 연구용역 발주(151p)

- 이 연구용역은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 매뉴얼 작성을 목적으로 식약청이 2006년 3월에 한국식품영양재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으로서, 2006년 5월~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297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가 작성됐다.
-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는 '언론보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의 기사형식과 내용을 분석해 언론이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식품사고,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이 가장 많이 보도해(185~186p)

-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발생한 16개 주요 식품 파동과 관련한 기사 건

43)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03p

44)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06p

45)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 방안연구', 216p

수는 총 1,228개⁴⁶⁾를 분석했다. 신문별 기사건수는 국민일보가 165건, 경향신문 164건, 세계일보 149건 순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반면 내일신문은 41건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 기사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10개 일간지 대상 식품안전 사고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는 국민일보(67건), 경향신문(57건), 세계일보(51건)의 순으로 많았으며, 문화일보와 동아일보는 기획기사 형식에서 각각 26건, 22건으로 가장 높은 회수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 및 일반 독자들의 기고 형식의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한 신문은 국민일보(11건), 문화일보(8건), 동아일보(8건)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일간지별 기사형식에 따른 보도 형식>

구 분		주요 일간지										Total (평균%)	
		조선	문화	동아	경향	한국	한겨레	국민	서울	세계	내일		
기사 형식	스트레이 트 기사	빈도	38	29	28	57	47	48	67	49	51	16	430
		%	34.9	23.4	25.9	34.8	37.3	40.0	40.6	40.2	34.2	39.0	35.0
	후속기사	빈도	39	34	35	63	46	42	57	35	47	14	412
		%	35.8	27.4	32.4	38.4	36.5	35.0	34.5	28.7	31.5	34.1	33.6
	기획기사	빈도	12	26	22	16	7	13	16	10	16	7	145
		%	11.0	21.0	20.4	9.8	5.6	10.8	9.7	8.2	10.7	17.1	11.8
	사설	빈도	8	17	10	15	15	8	11	10	22	3	119
		%	7.3	13.7	9.3	9.1	11.9	6.7	6.7	8.2	14.8	7.3	9.7
	전문가 기고	빈도	3	2	4	3	4	1	3	4	1	1	26
		%	2.8	1.6	3.7	1.8	3.2	0.8	1.8	3.3	0.7	2.4	2.1
	일반독자 기고	빈도	3	6	4	3	2	4	8	2	5	-	37
		%	2.8	4.8	3.7	1.8	1.6	3.3	4.8	1.6	3.4	-	3.0
	기타	빈도	6	10	5	7	5	4	3	12	7	-	59
		%	5.5	8.1	4.6	4.3	4.0	3.3	4.8	9.8	4.7	-	4.8
	Total	빈도	109	124	108	164	126	120	165	122	149	41	1,22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

46) 말라카이트 그린, 납 꽃게, 수단색소, 아질산염, 아크릴아마이드, 내분비장애물질, 생식바 이러스, 전지분유, 벤젠음료, 유전자변형두부, 미니킵 젤리질식, 비아그라유사물질, 만두 파동, 전쌀이산화황, 학교급식, 김치파동(이상 16식품사고는 2000년 이후 발생, 언론에 보도한 것으로 기준으로 함)

○ “근거가 부족한 위해정보 등 국민만 공포에 떨어...” (201~205p)

-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위해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자료로 인용되면서도 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론의 정보 수집 한계와 마감 시간의 압력, 특히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 “언론보도를 통해 식품사건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식품에 대한 공포나 식품기업에 대한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만 끝났다. 식품위해 사고가 개선되기 위한 원인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한 것이다....”
- “사건별 시기변화와 식품사고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뉴스 프레임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사고 초기에는 사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정부의 책임, 사고의 대책 방안이 핵심 내용 프레임이었으나, 점차 경제적 결과를 강조하는 프레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즉, 파동이 진행되면서 식품의 위해성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식품사고의 경제적 손실과 반응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 이러한 맥락 하에 보고서는 “언론은 식품사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관련 산업도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 **‘뉴스에 보도되는 위해가 따로 있어’ ,
‘언론의 기업적 특성을 이해해야’ (216p)**

- 식약청은 연구용역을 요약해, ‘위해정보전달 표준매뉴얼’이라는 언론대응 내부지침을 2007년 6월에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뉴스에 보도되는 위해는 따로 있으며, 언론의 기업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정보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즉 정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기사를 전달한다는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본 연구보고서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 **국민건강 위해 식약청 내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돼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식품사고 발생시 올바른 국민적 대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식품사건과 관련한 언론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모자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든 것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식품안전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안의원은, “최근 현 정권의 언론대응지침에 따라 식약청도 기자실을 폐쇄하는 등 국민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식품 및 의약품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사실들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의 취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 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2007년 10월 22일)

- (식약청, 농림부)북한산식품 수입 증가, 부적합 판정 증가!
 - 수입건수, 1,486('04) → 1,691('05) → 1,761('06) → 943('07.7)
 - 채소류와 한약재, 들깨 등 농·임산물의 수입이 많아
 - 부적합 증가, 2건('04) → 12건('05) → 19건('06) → 11건('07.7)
 - 부적합 식품별, 가공식품 27건, 농·임산물 20건, 건강기능식품 2건 순
 - 부적합 원인별, 이산화황 초과검출이 17건, 미생물 초과검출 8건 순
 - 올해 들어 식염절임과 수산물가공품에서 이산화황과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보다 6배와 8배 이상 초과검출 돼!
- (해양수산부)북한산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검출!
 - 수입건수, 4,237('04) → 5,311('05) → 5,756('06) → 3,670('07.7)
 -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수입이 많아
 - 부적합증가, 15건('04) → 12건('05) → 20건('06) → 22건('07.7)
 - 부적합 비율, 0.35%('04) → 0.23%('05) → 0.35%('06) → 0.71%('07.7)
 - 올해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돼
 - 홍합, 납 기준치 6배(기준2.0mg/kg)인 12.7mg/kg 검출
 - 냉동문어에서 구리검출로 인해 358kg 폐기조치

중국산 '불량식품'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

- (관세청)북한산 위장반입 30건 적발! 시가 526억원 상당('01~'07.7)
 - 북한산 위장반입, 7년 사이 30건(중국 28건, 러시아 1건, 미확인 1건)
 - 위장적발 품목 범칙시가, 526억3천7백만원 상당
 - 수입산 관세를 피해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기도 해
 - 최근 들어 주로 중국산 북어나 표고버섯, 고사리 등이 많아
 - 2004년 이후 15건 중, 중국산 북어(채) 원산지 위장적발이 6건으로 많아
 -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다양한 농·임산물 위장 반입

- 북한산 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도 늘고 있고, 북한산으로 위장한 불량식품 수입도 늘고 있어 철저한 검증과 검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관세청·식약청·농림부·해양수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 적발현황」 과, 「북한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식약청, 농림부)북한산 수입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 북한산 수입식품 규모를 보면, 2004년 1,486건, 2005년 1,691건, 2006년 1,7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역시 2004년 4,575만 7천 달러에서 2006년 5,479만7천 달러로 3년 사이에 20%가 증가했다.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수입현황	2004 (점유율)	2005 (점유율)	2006 (점유율)	2007.7 (점유율)
수입(건)수	1,486 (0.75)	1,691 (0.78)	1,761 (0.74)	943 (0.61)
수입량(ton)	18,041.6 (0.16)	13,697.7 (0.12)	18,195.4 (0.16)	10,127.5 (0.15)
수입금액(천\$)	45,727 (0.70)	43,835 (0.58)	54,797 (0.70)	38,295 (0.7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주1) 점유율 : 국내 수입식품 전체와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비교

2)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류 임. 수산물과 축산물은 제외함.

- 중국식품과 미국식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북한산 수입식품규모는 0.7%~0.8%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채소류와 한약재, 들깨, 표고버섯 등으로 농·임산물이 대부분이다.
- 2004년~2007년7월까지 북한산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04년 0.47%, 2005년 0.71%, 2006년 1.08%, 2007년7월 1.17%로 해

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적합 건수 역시 2004년 7건, 2005년 12건, 2006년 19건, 2007년7월 11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부적합 건수	7건	12건	19건	11건
부적합 비율	0.47%	0.71%	1.08%	1.1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부적합 세부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7년 7월까지 총 4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가공식품이 27건(2004년 5건, 2005년 3건, 2006년 10건, 2007년7월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임산물 20건(2005년 9건, 2006년 9건, 2007년7월 2건), 건강기능식품 2건(2004년 2건)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2004~2007.7)>

구 분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	27건				20건				2건			
(총 49건)	'04	'05	'06	'07.7	'04	'05	'06	'07.7	'04	'05	'06	'07.7
	5	3	10	9	-	9	9	2	2	-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세부 품목별로는, 2006년의 경우 도라지가 3건, 무가 2건으로 최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식염절임 3건, 수산물 가공품이 2건 식초 절임 2건으로 많았다.
- 사유별로 비교하면, 전체 49건의 부적합 중 이산화황 초과검출에 따른 부적합이 17건(3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세균, 대장균 등) 초과검출 8건(16.33%), 부패변질 7건(14.29%), 합성보존료 사용 7건(14.29%), 색소기준 위반 4건(8.16%)순으로 많았다.

<식약청 신고 수입식품 위반내역 현황(2004~2007.7)>

구 분	1위	2위	3위	3위	5위	기타
내역	이산화황 초과검출	미생물 초과검출	부패변질	합성보존료	색소기준 위반	
건수 (총 49건)	17건	8건	7건	7건	4건	6건
비율 (100%)	34.69%	16.33%	14.29%	14.29%	8.16%	12.24%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밥상에 흔히 오르는 도라지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0.31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고,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무에서도 이산화황이 0.09g/kg(불검출 기준)이 검출되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절임용 가공식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8배가 넘는 0.25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으며, 수산물 가공품에서는 세균 기준치의 6배가 되는 600,000마리/g(기준 100,000마리/g)가 검출되었다.

<북한산 수입식품, 연도별 부적합 주요 식품>

연도	주요 품목	검출내역
2004	인삼성분함유제품	대장균군 음성, 내용량 부족(기준:126g, 결과:114.6g)
	액상추출차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 검출(결과:0.5g/kg, 규격:불검출)
2005	표고버섯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11g/kg, 기준 :0.003g/kg)
	더덕	부패변질
2006	도라지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31g/kg, 기준 :0.003g/kg)
	무(뿌리)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09g/kg, 기준 :불검출)
2007.7	식염절임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25g/kg, 기준 :0.003g/kg)
	수산물 가공품	세균수(기준 :100,000마리/g) 초과검출(결과 : 600,000마리/g)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해양수산부)북한산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과다 검출..

-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북한산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로는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등이 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식품 현황>

수입현황	2004 (점유율)	2005 (점유율)	2006 (점유율)	2007.7 (점유율)
수입(건)수	4,237 (4.43)	5,311 (5.52)	5,756 (5.67)	3,670 (6.25)
수입량(ton)	40,812 (4.04)	49,151 (5.27)	51,400 (4.85)	31,753 (5.51)
수입금액(천\$)	48,671 (2.52)	61,137 (3.15)	78,972 (3.26)	56,126 (3.7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주1) 점유율 : 국내 수입수산물 전체와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비교

-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04년 15건(부적합 비율, 0.35%), 2005년 12건(부적합 비율, 0.23%), 2006년 20건(부적합 비율, 0.34%), 2007년 7월 현재 22건(부적합 비율, 0.6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 현황 및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톤, 천\$)

연 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대 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4	4,237	40,812	48,671	15	112	209	0.35%	0.27%	0.43%
2005	5,311	49,151	61,137	12	48	64	0.23%	0.10%	0.10%
2006	5,756	51,400	78,972	20	84	218	0.34%	0.16%	0.28%
2007.7	3,468	30,033	49,167	22	167	697	0.63%	0.56%	1.42%

※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품목별로는, 활홍합(15건), 냉동문어(9건), 냉동홍합(6건)순으로 많았고, 위반내역은 중금속 과다검출로 인한 기준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수입된 홍합의 경우, 납 기준치(2.0mg/kg)의 6배가 넘는 12.7mg/kg이

검출되어 폐기되었으며, 냉동문어 상자에서는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리가 발견되어 냉동문어 358kg이 폐기조치 된 바 있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2004~2007.7)>

구 분	활홍합				냉동문어				냉동 홍합				기 타
부적합 건수 (총69건)	15건				9건				6건				39건 (가리비, 다시다 등)
	'04	'05	'06	'07.7	'04	'05	'06	'07.7	'04	'06	'05	'07.7	
	3	5	4	3	-	-	2	7	1	-	4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북한산으로 위장한 국적세탁 식품, 범칙시가로 526억원 상당(관세청)

- 북한산으로 속여 위장반입을 시도한 식품이 지난 7년(2001년~2007년)간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시가로만으로도 526억3천7백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적발된 30건 중 28건은 중국산 불량식품으로 밝혀졌으며, 러시아 제품과 원산지를 확인되지 못한 상황버섯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중국산 식품 북한산 식품으로 둔갑 사례>

- (2006.1) 서울 둔촌동 소재 (주)○○월드는 '03.12~' 05.12월 까지 53회에 걸쳐 중국산 북어, 호도 등 688톤(범칙시가 8,663백만원) 수입 시, 허위 계약서 등을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아 북한산으로 위장 또는 물품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통관하거나 예비함으로써 관세 891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 검찰에 고발함.
- (2007.3)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농수산물 수입업체 (주)00는 중국산 북어채 12톤(범칙시가 170백만원 상당)가량 통관 시, 무역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북한산으로 통관함으로써 관세 19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관세청이 적발하여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등의 사건 있었음.

※ 자료 : 관세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북한산 위장적발 현황(2001~2007.7)>

연 번	연 도	품 명	범칙시가 (백만원)
1	2001	중국산 호도, 목이버섯	403
2	2001	중국산 목단피(한약재)	111
3	2001	중국산 호도	313
4	2001	중국산 참깨가루	200
5	2002	중국산 녹두	5,740
6	2002	중국산 북어채	278
7	2002	중국산건고사리	488
8	2003	중국산 의류	3,552
9	2003	러시아산 건명태	8,089
10	2003	중국산 백출	24
11	2003	중국산 벗짚	252
12	2003	중국산 건고추	2,805
13	2003	중국산 더덕	19
14	2003	중국산건고추, 참깨	2,146
15	2003	중국산건표고버섯	185
16	2004	중국산 북어채	4,980
17	2004	중국산 북어채	201
18	2004	중국산 북어채	4,292
19	2004	중국산 백출	173
20	2004	상황버섯	66
21	2004	중국산 백출	129
22	2004	중국산 명태포	159
23	2004	중국산 대두	8,214
24	2005	중국산 북어채	363
25	2005	중국산 건고사리	170
26	2005	중국산 표고버섯	99
27	2005	중국산 건표고버섯, 건고사리	119
28	2005	중국산 호두	234
29	2006	중국산 북어, 호두	8,663
30	2007.7	중국산 북어채	170
30건, 526억3천7백 만원			

※ 자료 : 관세청, 2007.8

- 2004년 이후에는 중국산 북어(채)의 위장적발이 6건(2004년 이후 15건 중 6건)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각종 농·임산물도 적발됐다.
- 중국산 식품을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데에는,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최근 잇따른 중국산 식품사고로 인해 '북한산

식품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이용해 국적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⁴⁷⁾은 판단하고 있다.

◎ 검역강화와 원산지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해..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북한산 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및 검역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이나,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위협적 물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확인서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로 제출 받아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7) 관세청, 통관기획과조사과

28.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 · 국세청 대립각 부쳐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2007년 10월 22일)

- 식약청, “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 국세청, “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두 기관 주장 서로 달라..

주류행정	식 약 청	국 세 청
단속 관련	“주류도 식품의 일종, 단속가능!”	“식약청 주류단속은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행정처분 관련	“수입주류에 한해 자체 행정처분 가능48)”	“식약청 행정처분 권한 없다!”

□ 단속과 행정처분 이원화로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식약청) “국내산 부적합 주류업체 23건 국세청 통보!”(2004~2007.6)



(국세청) “식약청에서 통보받은 건 18건 뿐!”(2004~2007.6)

- 식약청 위반업소 통보에 국세청 무혐의 결정도 3건 포함.

□ (단속, 부적합율)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식약청)2004년 2.0%→2005년 2.0%→2006년 1.2%→2007년6월 5.0%

○(국세청)2004년 16.2%→2005년 14.1%→2006년 6.9%→2007년6월 6.7%

□ 주류행정 체계 명확히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관리 이원화로 사업자간 불편초래, 주류 안전에 대한 책임소홀 발생!

○업무협의 위한 두 기관 간 의견조율 한번도 없어...행정력 낭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오히려 국가가 방조한 꼴!

○세원관리를 위한 행정권한은 국세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의 단속권한 보장 받아야..

- 성인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국세청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식약청 유통주류 수거검사 실적(2004년-2007년6월)」과 「주류행정관련 업무분장」 자료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주류행정에 있어 주류의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두기관의 입장차이와 혼선으로 인해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국세청은 1966년도 개청 이래 “주류(酒類)에 대한 세원관리와 주질(酒質)관리⁴⁹⁾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고, 식품 안전의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인 식품안전본부가 설치된 1994년 이래 “주류도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 차이와 안전성 관리 이원화로 주류의 질 및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국민건강 위협받고 있어..

- 두 기관의 엇갈린 행정은 결국, 국민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04~2007.6) 식약청 주류 수거단속결과 적발된 국내 업소 23곳을 국세청에 통보⁵⁰⁾한 바 있으나, 같은 기간 국세청에 보고된 식약청 통보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18건 중 3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48) “수입주류 통관시 국세청 단속 규정 없어(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49) 주질(酒質)관리는 주류의 품질관리를 말하며 주로 인체유해물질(보존료, 살균제 등)의 첨가물 관리와 세균검사, 알콜을 검사 등 식품의 유해성 검사와 같은 개념임.

50) 식약청 : 국내 주류업소 적발업체 국세청에 통보, 수입주류업소는 자체 행정처분.

<식약청 주도 주류검사결과 국세청 통보건수 현황>

구 분	국세청 통보건수		국세청 조치결과
	국세청 통계	식약청 통계	
2004년	7건	4건	무혐의 처분 3건, 면허정지 3건, 통고처분 1건
2005년	1건	10건	시정권고
2006년	4건	7건	통고처분
2007년6월	6건	2건	시정명령 2건, 수입제제조치 4건

※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1) 국세청 조치결과는 식약청 통보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조치한 결과임.

-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행정 이원화의 심화는 안전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통보건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 단속, 부적합을 두 기관 명암 엇갈려..

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 주류 단속에 따른 부적합 비율을 비교해보아도 국세청과 식약청의 실적이 차이가 나고 있다. 국세청 수거검사 실적은 올해 들어 급감(2006년 1,046건 → 2007년 6월 178건)하고 있지만, 식약청 수거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세(2004년 308건 → 2005년 510건 → 2006년 680건)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04~'07.6) 부적합율을 보면, 국세청은 2004년 16.2%(66건)에서 2005년 14.1%(143건), 2006년 6.9%(72건), 2007년 6월 6.7%(12건)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이 검사한 것 중 부적합비율은 2004년 2%(6건), 2005년 2%(10건), 2006년 1.2%(8건), 2007년 6월 5%(18건)로서 금년도의 부적합비율이 특히 높아졌다.

<국세청·식약청 수거검사 결과>

구 분	국 세 청		식 약 청	
	수거검사	부적합(%)	수거검사	부적합(%)
2004년	399건	66건(16.2%)	308건	6건(2.0%)
2005년	1,017건	143건(14.1%)	510건	10건(2.0%)
2006년	1,046건	72건(6.9%)	680건	8건(1.2%)
2007년6월	178건	12건(6.7%)	361건	18건(5.0%)

※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욱의원 재정리

- 국세청은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주질 관리를 통해 부적합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⁵¹⁾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이 완전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국세청·식약청 주류행정 업무현황>

주류 행정	국세청 주장(주세법 제52조 등)		식약청 주장(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등)	
	국세청 업무	식약청 업무	국세청 업무	식약청 업무
기준·규격 안 마련	-	○	-	○
기준·규격 표시 적용	○	-	○	-
제조(수입) 면허·신고	○	-	○	-
주질관련 단속·검사	○	-	○	○
행정처분 권한	○	-	○	○(수입주류 만)

※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욱의원 재정리

51) 국세청 소비세과

○ 식약청, '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 국세청, '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정책팀은 “주류도 식품의 일부이며, 지자체 식품 위생관련 공무원과 함께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소비세과는 “식약청의 주류관리는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이고, 식약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식약청은 모든 주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주류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 등)를 근거로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주세법에는 수입주류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세법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를 근거로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수입주류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 명확한 주류행정 체계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행정(관리와 단속 등)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 그동안 두 기관은 주류행정과 관련해 업무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식약청이 국세청으로 단속 결과를 통보하지만, 국세청은 식약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주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양 기관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성인들이 즐겨 마시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식약청의 협조관계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 의원은 “식품 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사실상 모든 주류(국내제조업체·수입주류취급업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는데도 수입주류업체와 관련해서만 행정처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반쪽짜리 행정의 전형이다.”며, “식약청은 주류의 질 및 안전성과 관련해 수거검사 및 단속 권한을 당연히 가져야 하며, 제조(수입)업체 면허권자인 국세청은 식약청의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식약청으로 통보받은 단속결과에 대해 누락 없이 반드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식약청에 통보하여 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2007년 10월 22일)

-식약청,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사례(대외비 문건) 공개-

□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유명과자에서 발암물질 검출!

- A회사 “OO강정”, 일본 통관시 아플라톡신⁵²⁾ 기준치 이상 검출
- 14ppb 검출(일본 기준치 10ppb), (국내기준 없음)
- B회사 “OOO 맛 쿠키”등에서 세균 기준치의 34배~52배 초과
- 각각 26,000/g와 39,000/g 검출(중국 기준 750/g), (국내기준 없음)

□ 정부지정 ‘전통식품지정’업체 식품도 중금속 다량 검출!

- 전통식품지정 C식품 “멸치액젓”에서 비소⁵³⁾ 기준치 이상 검출
- 0.813mg/kg(중국 기준치 0.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 한국D커피사의 커피에서도 구리 초과 검출
- 14.15mg/kg(중국 기준치 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 올해 들어 부적합 수출식품 사례 급증!

대부분 국내 기준 없어.. 버젓이 국내 생산·유통 돼..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2005년 3건 → 2006년 2건 → 2007년7월 6건
- (2005~2007.7) 적발된 11건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없어..
-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체계 마련돼야..
- 철저한 검증 통해 국내 기준 조속히 설정해야..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 수출식품에서도 수입국 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폐기·회수 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내역」 대외비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과 관련해 지난 3년간(2005년~2007년 7월)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국내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 사례 현황 >

일자	제조업체	품목명	수출국가	위반	
				내역	수입국 기준
2004 이전	관련 자료 미보유				
2005.7	A	라면	EU	방사선 조사 처리 미표시	방사선조사처리 표시의무
2005.10	B	김치, 고추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2005.10	C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2006.6	D	조미김	중국	650,000cfu ⁵⁴⁾ /g 4.3mg/kg	세균총수<30,000(cfu/g) 비소<1.5mg/kg
2006.11	E	조미김	중국	91,000cfu/g	세균총수<30,000(cfu/g)
2007.3	F	수출전용 설탕 조제품	중국	083mg/kg 3.28% 1.72%	비소함량≤0.5mg/kg 회분함량≤0.15% 건조(수분)≤0.3%
2007.3	G	과자류	중국	26,000cfu/g~ 39,000cfu/g	세균총수≤750cfu/g
2007.5	H	과자류	일본	14ppb	아플라톡신<10ppb
2007.7	I	커피	중국	14.1mg/kg	구리 5mg/kg
2007.7	J	멸치액젓	중국	0.813mg/kg	비소 0.5mg/kg
2007.7	K	단무지	중국	0.88g/kg	소르빈산 0.5g/kg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52) 곰팡이균 대사산물의 일종, 강력한 발암물질임(식약청, 위해기준팀).
 53) 비소(AS) : 중금속의 일종으로 피부암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식약청, 위해기준팀).
 54) cfu(colony forming unit, 세균의 집락 형성 단위)

○국내 유명과자에 강력한 발암물질 검출!

정부지정 전통식품 회사에도 중금속 다량 검출!

- 이 중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A회사의 '땅콩강정'의 경우 일본통관시 아플라톡신 기준치 10ppb 보다 높은 14ppb가 검출되어 제품 전량이 폐기조치 되었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B회사의 '초콜릿 맛 쿠키'와 'A00'의 경우 세균 기준치(중국 세균총수 기준 750cfu/g)보다 각각 34배, 52배를 초과한 26,000cfu/g~39,000cfu/g가 검출되었다.
-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은⁵⁵⁾ 곰팡이균으로 인해 생겨나는 대사산물⁵⁶⁾로서 주로 토양, 곡류, 배합사료 등에서 만들어지며,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정부가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C식품'회사의 경우, 멸치액젓에서 비소가 0.813mg/kg 검출되어 기준치(중국 기준 0.5mg/kg)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D커피사의 커피에서도 구리가 14.1mg/kg가 검출되기도 했다.
- 그러나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수출용 식품들과 동일한 원(재)료 및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내제품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부적합 판정 수출식품들이야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조속한 실태점검과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55) 아플라톡신은 1960년에 영국에서 처음 밝혀졌으며,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사료를 먹은 칠면조 100,000마리 이상이 죽어 "Turkey 'X' Disease"로 알려져 있음. 인체에는 주로 간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식약청, 위해기준팀)

56) 물질대사 가운데 생겨나는 물질로 미생물이 죽으면서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임.

○ 해외 수출위반 식품, 대부분 국내 기준조차 없어..

- 최근 3년간 문제가 되었던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마다 기준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예 기준조차 설정돼 있지 않아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 근거 및 국내기준 >

연번	제조업체	품목명	수출국가	위 반		국내기준
				내역	수입국 기준	
1	A	라면	EU	방사선 조사 처리 미표시	방사선조사처리 표시의무	기준없음 현재 개정 중
2	B	김치, 고추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불검출
3	C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	중국	기생충알 검출	불검출	불검출
4	D	조미김	중국	650,000cfu/g 4.3mg/kg	세균총수<30,000(cfu/g) 비소<1.5mg/kg	세균수 기준없음 비소 기준없음
5	E	조미김	중국	91,000cfu/g	세균총수<30,000(cfu/g)	기준없음
6	F	수출전용 설탕 조제품	중국	083mg/kg 3.28% 1.72%	비소함량≤0.5mg/kg 회분함량≤0.15% 건조(수분)≤0.3%	비소 기준없음 회분함량≤0.04% 건조(수분)≤0.1%
7	G	과자류	중국	26,000cfu/g~ 39,000cfu/g	세균총수≤750cfu/g	기준없음
8	H	과자류	일본	14ppb	아플라톡신<10ppb	기준없음
9	I	커피	중국	14.1mg/kg	구리 5mg/kg	기준없음
10	J	멸치액젓	중국	0.813mg/kg	비소 0.5mg/kg	기준없음
11	K	단무지	중국	0.88g/kg	소르빈산 0.5g/kg	1.0g/kg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또한, 11번 사례(단무지 소르빈산 검출)와 같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소르빈산 국내기준 1.0g/kg > 0.88g/kg)하지만, 수입국 기준을 벗어나는 (0.88g/kg > 소르빈산 중국 기준 0.5g/kg) 사례도 있다. 당국은 국가별 유해성 판단기준을 시시각각 조사하여 제조업체에 알리고, 국내기준을 보다 엄격히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 부적합 수출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전혀 없어..


-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 그동안 부적합 수출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수거검사나 문제가 된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을 위한 조치실적은 없었다.
- 단지, 문제가 된 식품과 관련해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료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여 온 것이다.
- 또한 한국산 수출 부적합 식품과 관련된 공문서들은 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식약청 관계자가 파견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된 식품 사례와 관련해 공문이 제대로 입수되어 식약청 등으로 전달되어왔던 반면, 여타 나라의 경우 부처간 협력체계의 미비로 관련 공문이나 정보가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국민건강 보호와 국가간 신뢰 유지를 위해선 부처간 협력체계 확립과 시의적절한 정보 접수에 따른 식품당국의 긴밀한 대처체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 해외부적합 한국산 식품, 국내 유해성 재검증체계 확립돼야..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해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한 식품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소비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최소한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에서 유해성 여부를 엄격히 재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인체 위험성이 드러난 중국산 제품들이 중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만큼,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부응해 한국산 수출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당국은 국가별 식품 유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파악해, 유해성 정보를 국

민들과 관련 업체에 신속히 전파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붙임 : 공문 사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주 일본국 대사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급]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발생보고

1.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5.17 수입검사한 한국산 과자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 당관에 통보하여 올.

○ 금번 위반사례

- 대상식품 및 수입수량 : 과자(●●강경), 10상자 22.50kg
- 위반 수량 : 10상자 22.50kg(1개 93.7g, 1상자 2.25kg)
- 도착 및 검사일자 : 2007. 5. 17
- 산지 또는 제조자 : ●●●● CO.,LTD
- 수입자 : 유한회사 자비스(ジャビス)
- 검사결과
 - i) 해당제품은 밀가루, 당분, 설탕,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제조되어 폴리에틸렌 봉투에 포장된 한국제 과자이며, 24개씩 종이박스에 들어있음.
 - ii) 고베검역소 수입식품 검역검사센터에 의한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플라톡신이 양성(14ppb)이였음.
 - iii) 외관, 관능검사에서는 특이 이상이 없었음.

2. 상기 관련, 수출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동 제품의 국내 유통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리
번호 301

● ● ●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식약청
(경유)

제목 중국 수출 한국산 과자 부적합 통보

중국질검총국은 5.27(수) 공한을 통하여 한국에서 수출한 과자류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사례를 알려 온 바, 식품안전관리에 참고토록 아래 보고합니다.

1. 한국산 과자 부적합 현황

수입일자	2007.3.28	
제품명	●●●●●● 쿠키(●●● 巧克力薄饼)	●●●●●● 과자(●●●●● 咸味饼干)
생산일자	2007.3.9	2007.3.5
중량	169.2 kg	319.44 kg
수출업체	●●●●●● 제과(●●●●● Confectionary Co. Ltd)	
수입업체	한국●●●●●● 무역유한회사	
부적합원인	균락(세균)총수: 26000개/g	균락(세균)총수: 39000개/g
중국 기준	GB7100-2003의 기준: 균락총수 ≤ 750cfu/g(약을 넣지 않은 과자)	

- 상기제품은 중국의 규정에 의거 기 조원료(바순 또는 밀기)

관리 번호 365

중 중 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식약청
(경유)

제목 대중국 수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처리 관련 정보(추보)

관련: 주중국대사-S10175(2007.7.4).

대중국 수출 한국산 식품(커피, 열치액젓, 단무지)이 부적합 처리된 것과 관련, 동 제품을 수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질경중국에 추가로 요청한 바, 추가 접수된 관련기업 정보를 아래 보고합니다.

1. 제조회사 및 제품 추가정보

- 커피제품
 - (주) ~~XXXXXX~~ 커피(~~XXXXXX~~ Cafe), 전화: ~~0086-2092-3525~~, 홈페이지: www.~~XXXXXX~~coffee.com
- 열치액젓
 - ~~XXXXXX~~식품(정부지정 전농식품지정업체), 제품명: ~~XXXXXX~~ 열치액젓, 허가번호: 부안 제21호.
- 단무지
 - ~~XXXXXX~~ Co., Ltd., 주소: ~~XXXXXXXXXXXXXXXXXXXX~~ 6-76번지 동원 빌딩 4.

- 상기제품은 중국의 규정에 의거 기 조치됨(반송 또는 폐기).

식약청브랜드 KIFDA(기브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중국 수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알림

1. 귀 협회의 우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중대사관이 한국산 대중국 수출식품(커피류, 열치액젓, 단무지)의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사 업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식품	부적합 원인	중국기준
커피류	동(구리) 초과검출	GB7101-2003 동≤5mg/kg
열치액젓	총비소 초과검출	GB10134-88 총비소≤0.5mg/kg
단무지	소르빈산 초과검출	GB2714-2003 소르빈산≤0.5g/kg

30.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보안전산망 다 뚫렸다 (2007년 10월 24일)

-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분석 -

- **【국민연금】 홈페이지 통해 개인정보 35만건 유출**
 - 국민연금 홈페이지 통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35만건 유출
 - 메일서버, 관리자 페이지도 접속해 마음대로 열람하기도
- **【건보공단】 내부망으로 건보 가입자정보 모두 유출 가능**
 - 내부망으로 해킹시에는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 유출될 수 있어
(※내부망은 본원 정보관리실 컴퓨터 100대에서 접속 가능)
 -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버 내부 침투 성공... 홈페이지 마비시킬 수도 있어
-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유출, 내부망도 취약**
 - 홈페이지회원 개인정보 유출, 직원메일도 열람 가능
 - 청구심사서버 접속시, 진료정보, 개인정보 등 모두 유출가능
 - 인사, 회계 등 심평원 내부자료 2억6천만건 유출
 - 본원 네트워크 침투해 전산기능 마비시킬 수 있어
- **후속조치 완료됐지만, 해킹기술 발달로 정보유출 위험성 상존기
관별 보안전담부서 신설하고, 방어장치 실시간 보완해야...**

-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내·외부 전산망이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이들 3개 기관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의거 2년 마다 정보보안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정보보안컨설팅 결과보고서는 모두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 결과 중 일부만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정보보안컨설팅(모의해킹 포함) 개요>

구 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 시	'06.10.11~12.19(70일간)	'06.10.11~'07.1.10(90일간)	'06.8.8~'06.11.7(90일간)
수행주체	정보시스템실장 외 11명, 컨설팅업체 4명	정보관리실장 외 13명, 컨설팅업체 4명	정보관리부장 외 5명 컨설팅업체 8명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10

○ 국민연금, 국민연금홈페이지 통해 회원 개인정보 35만건 유출 메일서버, 관리자 페이지도 접수해 마음대로 열람하기도...

- 모의해킹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다. 홈페이지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소스코드 등 정보를 활용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35만명의 개인정보를 성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35만명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연금공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서버에도 침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직원들의 이메일내용을 무단열람하거나, 메일로 송수신한 중요한 업무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에도 침입했는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무단삭제하거나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모의해킹 결과>

구 분	모의해킹 결과	파장효과
외부망	◦ 공단 홈페이지 웹서버 침투	◦ 홈페이지 회원 35만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유출
	◦ 메일서버 침투 ◦ 관리자페이지 침투	◦ 공단직원 이메일 열람 가능 ◦ 홈페이지 게시글 등 임의작성 가능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10

○ 건보공단, 내부망으로 건보 가입자정보 모두 유출 가능...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버 내부 침투...홈페이지 마비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도 내·외부 전산망 모두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 내부망으로 접속하여 해킹을 시도한 결과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내부망은 현재 공단 본원 정보관리실 컴퓨터 100대에 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는 특별한 취약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 내부로 침투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해커가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해킹 결과>

구 분	모의해킹 결과	과장효과
외부망	◦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버내부로 침투	◦ 홈페이지 마비시키는 등 악성조작 가능
내부망 ¹⁾	◦ 내부 전산망 침투	◦ 진료정보, 재산정보, 인적사항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 유출 가능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10

주 : 내부망은 본원 정보관리실 컴퓨터 100대에서 접속이 가능함.

**○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유출...직원메일도 열람 가능
내부망으로 접속시 진료정보, 인적사항 등 모든 정보 유출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모든 심평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고, 업무용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해킹하여 내용을 무단 열람할 수 있었다.
- 내부망에 해킹을 시도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는 물론 요양기관의 청구심사 정보까지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인사, 회계데이터 등 심평원 내부자료 2억6천만건을 유출했으며, 본원 네트워크에 침투해 전산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의해킹 결과>

구 분	모의해킹 결과	과장효과
외부망	◦ 홈페이지회원 개인정보침투 ◦ 직원메일 침투	◦ 가입자 주민번호, 주소 등 유출 ◦ 주요 업무정보 유출
내부망 ¹⁾	◦ 지원 청구심사서버 침투 ◦ 본원 네트워크 침투 ◦ 내부 업무용서버 침투	◦ 환자 진료정보, 개인정보 모두 유출 ◦ 심평원 전산기능 마비 ◦ 인사, 회계 등 심평원 내부자료 2억6천만건 유출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10

○ 후속조치 완료됐지만, 해킹기술 발달로 정보유출 위험성 상존
기관별 보안전담부서 신설하고, 방어장치 실시간 보완해야

- 물론 3개 기관의 전산망이 모두 뚫렸다고 해서 당장 해커들이 해킹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의해킹 과정에서는 해커가 각 기관별 전산환경의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킹을 시도한 것인 만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성해커들보다 성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전산망이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컨설팅회사의 해커들보다 더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해커들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해당기관들은 모의해킹 결과에 따라 즉각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정보보안컨설팅에서 매년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정보방어력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 해킹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의원은 “해당기관에는 전 국민의 건강, 재산, 인적정보 등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정보들이 집적되어 있는 만큼, 2년 마다 실시하는 보안컨설팅 외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안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보안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부의 전문인력에 버금가는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노후보장도 못하는 국민연금 (2007년 10월 24일)

□ 고객만족도, 연기금운용기관 15개 중 꼴찌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 80개 정부산하기관(최고 92.7점, 평균 79.4점) 대비 13.1점 낮아
- 15개 연기금운용기관(최고 86.9점, 평균 79.6점) 대비 13.3점 낮아

□ '국민연금 신뢰한다' 는 국민 12.8% 불과

(※ 2007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

- 신뢰도 추락...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
(2006년6월 21.7%→ 2006년12월 20.9%→ 2007년8월 12.8%)
- 20대(2.8%), 30대(5.1%) 젊은층 신뢰붕괴...제도존속 위기
- 중졸이하(27.1%), 고졸(14.1%), 대졸(6.8%) 고학력자 만족도 낮아
- 신뢰 못하는 이유는 ①기금운용 잘못되고 있어서(31.8%) ②노후생활에 별 도움 안돼(24.4%), ③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 '노후준비 충분하다' 는 국민 10.4% 불과

(※ 2007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

- '자신의 연령에 비해 하고 있는 노후준비 충분한가?' 질문에
①매우충분(1.6%), ②충분(8.8%), ③보통(37.8%), ④충분하지 못하다(38.0%), ⑤매우 충분하지 못하다(13.8%)
- '충분하다'는 답변 40대(11.3%), 50대(9.3%), 60대이상(8.3%) 등 고연령대일수록 낮아져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연기금운용기관 중 꼴찌를 차지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신뢰도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와 「2007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6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 조사대상 : 2005년10월 ~ 2006년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이용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
- 유효표본 : 총 780명
- 조사기간 : 2006년 10월 16일 ~ 11월 17일

<2007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수급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 유효표본 : 총 1,23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79%p)
- 조사기간 : 2007년 8월 3일 ~ 9일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중 15위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만족도는 66.3점으로 80개 정부산하기관의 전체 평균 79.4점 대비 13.1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운용 기관유형 총 15개 기관 중에는 1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연기금운용기관 전체 평균인 79.6점 보다 13.3점이 낮고, 최상위 연기금운용기관과 비교해서는 무

려 20.6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80개 정부산하기관		국민연금	15개 연기금운용기관	
최고점	평 균	66.3점	최고점	평 균
92.7점	79.4점		86.9점	79.6점

※ 자료 : 2006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07. 1

○ 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2006년6월 21.7% → 2007년8월 12.8%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2006년6월 21.7%, 2006년12월 20.9%에서 2007년8월 12.8%로 추락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신뢰도가 언제 한 자리수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7월 3일 국회를 통과⁵⁷⁾하면서, 연금수급액이 줄어들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신뢰도 변화 추이>

구 분	2006년 6월	2006년 12월	2007년 8월
신뢰도	21.7%	20.9%	12.8%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10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N=1,200)>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모르겠다
2.7%	10.1%	33.0%	31.1%	21.7%	1.4%
12.8%		33.0%	52.8%		1.4%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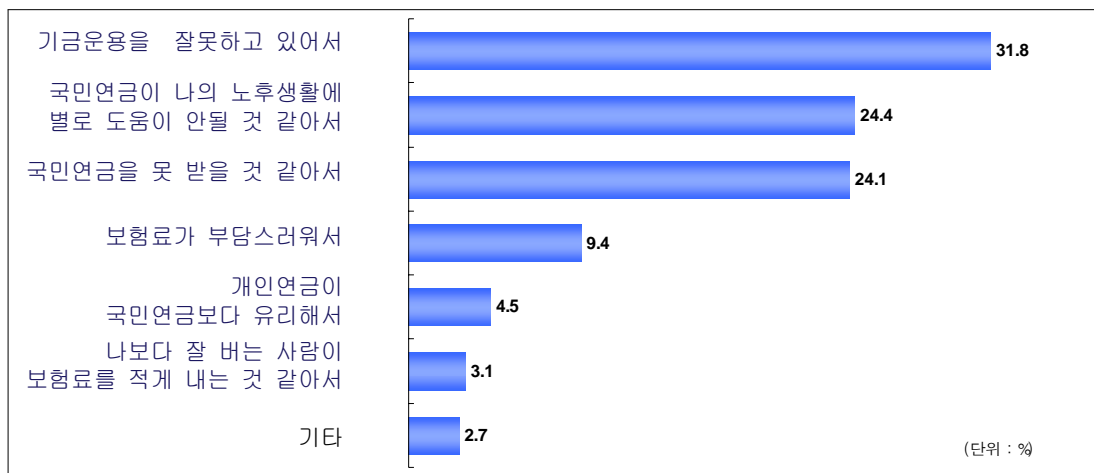
57) 보험요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그 후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 40%까지 낮추도록 함.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2.3%)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19.0%), 40대(10.6%), 30대(5.1%), 20대(2.8%)가 뒤를 이었다. 연령과 신뢰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신뢰도는 5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20~40대의 신뢰도는 10%이하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27.1%, 고졸이 14.1%, 대졸이 6.8%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 이상은 17.9%의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 **세부현황은 7p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총괄표> 참조**

- 한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N=634)>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 '노후준비 충분하다' 10.4% 불과...고연령대일수록 노후준비 부족

- 조사내용 중에는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자신의 연령에 비해서 하고 있는 노후준비(노후대책)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불과 10.4%만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N=1,200)>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못하다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1.6%	8.8%	37.8%	38.0%	13.8%
10.4%		37.8%	51.8%	

※ 자료 : 2007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11.3%, 50대 9.3%, 60대이상 8.3%이었다. 고연령대일수록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현황은 8p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 참조**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5%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의원은 “올해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총괄표>

(단위 : %)

	사례수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모르겠다	종합평가				평균	
								신뢰	보통	불신뢰	모르겠다		
전 체	1,200	2.7	10.1	33.0	31.1	21.7	1.4	12.8	33.0	52.8	1.4	2.40	
연 령	20대	222		2.8	39.3	30.8	27.0		2.8	39.3	57.8		2.18
	30대	330	1.3	3.8	24.2	37.9	32.5	0.3	5.1	24.2	70.4	0.3	2.03
	40대	326	1.5	9.1	35.4	32.5	21.3	0.3	10.5	35.4	53.8	0.3	2.37
	50대	217	3.2	15.8	37.4	29.5	10.5	3.7	18.9	37.4	40.0	3.7	2.71
	60대 이상	105	16.0	36.3	30.7	9.7	1.1	6.1	52.4	30.7	10.8	6.1	3.60
국민연금 종별	사업장 가입자	538	1.2	5.9	33.8	32.2	26.2	0.8	7.0	33.8	58.4	0.8	2.23
	지역 가입자	546	1.5	8.5	32.6	34.7	21.6	1.0	10.0	32.6	56.4	1.0	2.33
	수급자	116	15.5	37.0	31.0	9.0	1.5	6.0	52.5	31.0	10.5	6.0	3.60
가입/ 수급상태	가입자	1,084	1.4	7.2	33.2	33.5	23.9	0.9	8.5	33.2	57.4	0.9	2.28
	수급자	116	15.5	37.0	31.0	9.0	1.5	6.0	52.5	31.0	10.5	6.0	3.60
소득등급	11~20등급	162	1.3	5.8	32.5	29.9	28.6	1.9	7.1	32.5	58.5	1.9	2.20
	21~30등급	331	1.6	6.3	34.3	34.6	22.9	0.3	7.9	34.3	57.5	0.3	2.29
	31~40등급	160	1.3	6.6	37.5	31.6	23.0		7.9	37.5	54.6		2.32
	41등급 이상	138	0.8	7.6	25.2	35.1	31.3		8.4	25.2	66.4		2.11
	납부예외자	293	1.4	9.0	33.8	34.5	19.4	1.8	10.4	33.8	54.0	1.8	2.37
가입상태	소득신고자	791	1.3	6.5	33.0	33.1	25.5	0.5	7.8	33.0	58.6	0.5	2.25
	납부예외자	293	1.4	9.0	33.8	34.5	19.4	1.8	10.4	33.8	54.0	1.8	2.37
급여수준	10만원 미만	11	15.8	36.8	21.1	10.5		15.8	52.6	21.1	10.5	15.8	3.69
	10~20만원	66	15.0	39.8	31.0	6.2	2.7	5.3	54.9	31.0	8.8	5.3	3.62
	21~30만원	20	11.8	26.5	38.2	14.7		8.8	38.2	38.2	14.7	8.8	3.39
	30만원 이상	20	20.6	38.2	29.4	11.8			58.8	29.4	11.8		3.68
성 별	남 성	762	2.8	11.0	30.2	29.8	25.2	0.9	13.8	30.2	55.0	0.9	2.36
	여 성	438	2.6	8.5	37.8	33.4	15.6	2.2	11.0	37.8	49.0	2.2	2.48
학 력	중졸이하	188	7.0	20.1	36.7	19.6	9.6	7.0	27.1	36.7	29.2	7.0	2.95
	고졸	399	2.5	11.6	31.6	34.2	19.5	0.5	14.1	31.6	53.8	0.5	2.43
	대졸	556	1.2	5.6	33.2	32.5	27.4	0.2	6.7	33.2	59.9	0.2	2.21
	대학원 이상	49	6.7	11.2	23.8	36.7	21.6		18.0	23.8	58.3		2.45
	무응답	9			56.2	19.2	24.7				56.2	43.8	

※ 자료 : 2007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통계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노후준비(대책)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변>

(단위 : %)

	사례수	매우 충분 하다	충분 하다	보통 이다	충분 하지 못하 다	매우 충분 하지 못하 다	종합평가			평 균	
							충분	보통	불충 분		
전 체	1,200	1.6	8.8	37.8	38.0	13.8	10.4	37.8	51.8	2.46	
연 령	20대	222	3.3	9.5	45.0	32.2	10.0	12.8	45.0	42.2	2.64
	30대	330	1.0	8.3	37.6	42.4	10.8	9.2	37.6	53.2	2.46
	40대	326	1.0	10.3	39.4	33.9	15.4	11.3	39.4	49.3	2.48
	50대	217	2.4	6.9	32.8	39.6	18.4	9.3	32.8	58.0	2.35
	60대 이상	105		8.3	29.1	46.2	16.5	8.3	29.1	62.6	2.29
국민연금 종별	사업장 가입자	538	2.3	10.2	43.4	34.4	9.8	12.5	43.4	44.1	2.61
	지역 가입자	546	1.2	7.5	34.0	40.3	17.0	8.7	34.0	57.3	2.36
	수급자	116		8.5	30.5	44.0	17.0	8.5	30.5	61.0	2.30
가입/수급상태	가입자	1,084	1.7	8.8	38.6	37.4	13.4	10.6	38.6	50.8	2.48
	수급자	116		8.5	30.5	44.0	17.0	8.5	30.5	61.0	2.30
소득등급	11~20등급	162	1.3	10.4	40.9	34.4	13.0	11.7	40.9	47.4	2.53
	21~30등급	331	1.6	10.5	39.4	38.7	9.8	12.1	39.4	48.6	2.55
	31~40등급	160	2.0	10.5	42.1	33.5	11.8	12.5	42.1	45.4	2.57
	41등급 이상	138	4.6	12.2	51.9	25.2	6.1	16.8	51.9	31.3	2.84
	납부예외자	293	0.7	3.6	28.4	45.3	21.9	4.3	28.4	67.3	2.16
가입상태	소득신고자	791	2.1	10.8	42.4	34.4	10.2	12.9	42.4	44.7	2.60
	납부예외자	293	0.7	3.6	28.4	45.3	21.9	4.3	28.4	67.3	2.16
급여수준	10만원 미만	11			36.8	47.4	15.8		36.8	63.2	2.21
	10~20만원	66		8.0	27.4	45.1	19.5	8.0	27.4	64.6	2.24
	21~30만원	20		11.8	29.4	38.2	20.6	11.8	29.4	58.8	2.32
	30만원 이상	20		11.8	38.2	44.1	5.9	11.8	38.2	50.0	2.56
성 별	남 성	762	1.4	9.2	37.2	37.3	14.9	10.6	37.2	52.2	2.45
	여 성	438	1.9	8.1	39.0	39.2	11.7	10.1	39.0	51.0	2.49
학 령	중졸이하	188	0.6	6.3	23.3	44.9	24.8	6.9	23.3	69.8	2.13
	고졸	399	0.5	8.0	42.3	35.8	13.4	8.5	42.3	49.2	2.46
	대졸	556	2.7	10.1	38.9	37.8	10.5	12.7	38.9	48.4	2.57
	대학원 이상	49	2.2	9.8	42.4	32.6	13.0	12.0	42.4	45.6	2.56
	무응답	9		12.3	56.2	31.5		12.3	56.2	31.5	2.81

※ 자료 : 2007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통계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8

32. 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 (2007년 10월 25일)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03~07.6) -

-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 매년 증가**
 -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 연평균 13만건, 347억 규모 ('03~'07.6)
 - 매년 증가 : 236억('03)→ 261억('04)→ 382억('05)→ 423억('06)
 - 고의 및 범죄행위, 구상금합의 후 수급, 민사상 부당이득 순
-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나타나**
 - 민사상부당이득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매년 40억
 -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매년 급증... 근절 안 돼
 - : 1,707건('03)→ 1,697건('04)→ 2,302건('05)→ 3,886('06)→ 4,368('07.6)
-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원**
 -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해마다 증가
 - '고위 및 부당행위' 환수 연평균 46,881건, 180억원 ('03~'07.6)
 - 고의 및 범죄행위에는 교통사고, 폭행, 자살시도, 자해 등 포함

- 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폭행·자살시도·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03~'07.6)」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연평균 131,688건에 이르며, 환수금액은 347억원에 달하고 있다.

○ 건보 부당이득금 환수금액 매년 증가 (연평균 13만건, 347억원)

-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규모는 '03년 236억원, '04년 261억원, '05년 382억원, '06년 423억원, '07년6월 256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불과 3~4년 기간동안 2배가 증가한 것이다.

<부당이득금 환수 사례별 현황(2007.7~9)>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진료 건수	결정 금액	진료 건수	결정 금액	진료 건수	결정 금액	진료 건수	결정 금액	진료 건수	결정 금액
계	76,196	23,610	78,270	26,194	159,857	38,208	175,868	42,323	102,409	25,641
고의및범죄행위	45,061	16,912	44,020	17,954	46,791	18,063	50,183	17,827	24,913	10,352
구상합의후수급	17,474	3,049	15,896	2,917	17,996	2,910	18,126	2,943	8,723	1,524
건강보험증대여수급	1,707	64	1,697	95	2,302	100	3,886	155	4,368	158
민사상 부당이득	11,884	3,560	12,700	3,855	20,899	4,219	20,263	4,085	10,565	2,321
근로복지공단 청구	70	25	3,957	1,373	71,869	12,916	83,410	17,313	53,840	11,28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주) 1. 진료건수 : 요양기관의 청구 건수 기준

2. 2007.9.5 발췌기준(건강보험증 대여수급은 연도말 누적 기준)

- 공단은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임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가입자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이중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하여 환수조치하고 있다.

【참조】 붙임 : 부당이득금 환수 유형별 사례

○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나타나

-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써, 환수규모는 매년 40억 정도이다.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도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대여 수급자 수는 '03년에 1,707건, '04년 1,697건, '05년 2,302건, '06년 3,886건, '07년6월 현재 4,368건으로 확인됐다.

○ 고의 및 범죄행위에 의한 환수 연평균 180억원

-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공단 부담금을 가입자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 규모가 연평균 46,881건에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4분기 동안

발생한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을 분석한 결과⁵⁸⁾, 교통사고가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 고의성 자해, 자살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환수조치에는 얼마 전 사회적 문제가 됐던,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 지급분을 아끼기 위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설득했던 부당청구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관리상 정확한 사례 수는 조사할 수 없음)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2007.7~9)>

(단위 : 건, 천원)

코드명칭	계		2007. 7		2007. 8		2007. 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705	7,609,673	5,663	2,291,837	6,932	2,628,422	8,110	2,689,414
교통사고	16,619	6,519,040	4,443	1,978,394	5,575	2,258,264	6,601	2,282,382
쌍방폭행(일반)	3,042	818,150	902	239,874	1,030	279,585	1,110	298,691
쌍방폭행(학교폭력)	181	32,215	34	3,420	64	7,294	83	21,501
자살시도자	138	51,598	56	23,126	35	10,487	47	17,985
자해(고의)	650	171,471	208	44,159	195	62,681	247	64,630
요양기관환수	75	17,199	20	2,863	33	10,111	22	4,22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10

주) 2007. 10. 24 발체 기준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혜택을 주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부당이득금을 노리고 고의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방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부당이득금 사례별로 사전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파출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해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8) 건강보험공단은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을 2007년 7월부터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붙임】 부당이득금 환수 유형별 사례

1. 구상합의후수급

-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한 이중의 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입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
- 유형 : 제3자 가해로 인한 교통사고, 폭행사건, 화재사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 법 제53조 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 한다.

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수급

- 건강보험증 대여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용자 및 대여자를 연대하여 공단부담금을 환수
-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사용(도용)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
- 유형 :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사용자, 증도용 사용자
 - ※ 증도용 가능자
 - 외국인(조선족 등), 노숙자,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특히 장기체납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 ※ 법 제52조 제1항 :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3. 고의 및 범죄행위 수급

-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가입자에게 환수
- 유형 :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해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 법 제48조 제1항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4. 근로복지공단 청구

-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환수
- 유형 : 산재 승인된 업무상 재해 진료건

5. 민사상 부당이득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보상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환수
- 유형 : 산재 미가입 및 미적용 사업장 등의 근로자 업무상 재해 진료건
 - ※ 법 제48조 제1항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33.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2007년 10월 25일)

전·현직 대통령 4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호기 심에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밝혀져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1**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A씨, 42세
 - 조회시점 :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
 - 조회대상 :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 바둑기사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
 - 열람내용 :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 확인
 - 열람사유 : 단순 호기심, 바둑에 관심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2**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B씨, 43세
 - 조회시점 : 2005년 이후로 추정
 - 조회대상 : 배용준 등 연예인 5~6차례 조회, 야구선수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
 - 열람내용 : 보험료 부과료, 가족사항 등
 - 열람사유 : 고소득 연예인 관련 뉴스를 보고, 프로야구에 관심

- **“공단직원인 제가 보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
숨방망이 처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반복...처벌기준 필요**

-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 현직 대통령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건보공단은 2007.8.31 안명옥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현재 공단 내·외부 직원의 유명 정치인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했다.(2007.9.27~10.6, 5일간)
-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가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 또한 A씨는 유명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연예인은 없고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을 조회했다고 답변했다.
- B씨는 2005년 이후에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개인적으

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 조회방법과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론 권력자나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타 개인정보 침해자와 균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 인맥쌓기 창구로 쓰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2007년 10월 25일)

-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경쟁적으로 고위자과정 개설**
 - '02년 국립암센터, '07년 건보공단, 심평원 잇따라 개설
 - 매년 건보공단 44명, 심평원 68명, 암센터 55명 수강('07.9)
- **수강생 대부분 해당기관 이해관계자** ('07년 수강생 167명 분석)
 - ① 공무원(복지부, 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 68명 (40.7%)
 - ② 병원, 제약회사, 의료업체 49명 (29.3%)
 - ③ 보건의료단체 27명(16.2%), 언론계 10명(6%)
- **힘있는 기관(이해관계기관) 수강자에게만 수강료 면제
수강료 받으면서도, 국고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일산병원) 국회,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기자 100% 감면
⇒ 의학교육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5천만원 지원
 - (암센터) 국회, 복지부, 기자 100% 감면
⇒ 7개 고위자과정 운영에 연간 1억5천만원 지원
- **고위자과정 개설 목적과 관련없는 교과내용 운영(암센터)**
 - 암 정책 발전(개설 목적)
vs 국민연금, 민영보험, 의료시장개방, 보건산업(교과 내용)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고위자과정 운영은 본질 벗어나,
인맥쌓기용 창구로 변질되고 있어**

-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질향상과 능력고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의료 관련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고위자과정'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맥 쌓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고위자과정을 운영중인 암센터,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자과정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고위자과정은 암센터가 2002년부터 운영중인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2007년 개설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의 '건강과 의료고위자 과정', 역시 2007년 개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등이다.

<고위자과정 일반 현황>

구분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기수	2002년 개설 10기 진행중	2007년 개설 1기 진행중	2007년 개설 2기 진행중
회비	120만원	100만원	50만원
자치회/ 동무회	자치회 운영	운영계획임	자치회 운영
평점인정	의사협회 인정	x	치과의사 4점 한의사협회 인정
모집인원	55명(10기)	44명(1기)	33명(1기), 35명(2기)
지원자격	보건복지 관련법 입안자, 의료기관 및 관련분야의 고위관리자, 보건의료단체 고위직	공단 부장급이상, 일산병원 임원, 임상과장, 팀장급이상 관리자, 의료기관 원장 및 관리부 책임자, 의료 및 보건관련 종사자	국회, 정부, 의약계 단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CEO 및 임원, 의료인, 경영인

※ 자료 : 암센터, 심평원, 일산병원, 2007. 9.

- 2007년 9월 현재 고위자과정 수강생 총 167명의 소속을 분석해 보면, 복지부, 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68명(40.7%)이고, 병원 및 제약회사, 의료업체 종사자가 49명(29.3%), 보건의료단체 관계자가 27명(16.2%), 언론계 종사자가 10명(6%)으로 수강생 대부분이 개설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자과정 수강생 167명 현황('07.9)>

(단위 : 명)

국가기관						병원, 제약회사, 의료업체	보건 의료 협회, 학회	언론계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국회	복지부	보건사회 연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암센터	감사원	국방부						
7	1	1	55	3	1						
68						49	27	10	4	4	5

※ 자료 : 암센터, 심평원, 일산병원, 2007. 9.

- 국회와 감사원, 복지부는 과정 개설기관인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병원과 제약사들은 역으로 개설기관들의 관리감독 대상들이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위자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과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인맥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해당기관들은 '수강료 100% 면제'라는 제도를 두면서 이해관계 기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 국립암센터는 국회 1명, 공무원 2명, 언론사 4명과 암센터 직원 29명을 포함해 39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국회사무처 2명, 복지부 1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사 3명에게 수강료 전액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정의 운영예산을 보면, 수강료 수입을 제외하고 국립암센터는 7개 고위자 과정 운영을 위해 약 1억5천만원, 일산병원은 의학교육비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고위자과정 수강료 감면 현황('0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
수강생	총 수강생 : 44명	총 수강생 : 55명
지원 현황	100% 지원 : 7명 50% 지원 : 30명 미지원 : 7명	100% 지원 : 39명 50% 지원 : 8명 20% 지원 : 2명 미지원 : 5명
지원 대상	100% : 국회사무처,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전문지 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의료단체, 강남베드로병원	100% : 암센터직원, 복지부, 국회, 기자 50% : 대학및부설연구소 직원, 공무원, 공공의료기관 직원, 복지부 산하단체 직원

※ 자료 : 암센터, 일산병원, 2007. 9.

- 교과내용 또한 표면적 개설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립암센터는 고위자 과정 개설목적은 “고위 의사결정자들에게 암에 관한 기본지식 및 새로운 방향을 소개해 암 정책 수립과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부 커리큘럼을 보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방향, 보건산업 발전전략,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슈화 방향 등 보건의료 일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보건의료 관련 고위자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성 제고라는 근본취지를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인맥쌓기로 전략한다면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지 교과내용과 과정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35.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 자 45%, 향후 이용의사 없어 (2007년 10월 25일)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 단기보호, 현금급여, 주간보호에 대한 불만 커...

- 단기보호 60.7%, 특별현금급여 59.3%, 주간보호 58.7%, 복지용구대여 46.3% 향후 서비스 이용의사 없어...
- 등급 높을수록 이용욕구 떨어져...
1등급 51%, 2등급 46%, 3등급 43%

□ 이용의사 왜 없나?... (서비스 양과 질이 부족해서 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방문요양서비스(31%), 방문목욕서비스(36%), 방문간호서비스(52%), 주간보호서비스(37%), 단기보호서비스(30%), 복지용구대여서비스(89%), 특별현금급여(6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이용욕구가 낮아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차 시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8개 시군구⁵⁹⁾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비스 이용욕구 실태조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현황을 보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선 60.7%가, 특별현금서비스에 대해선 59.3%가,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선 58.7%가, 복지용구대여서비스에 대해선 46.3%가, 방문목욕서비스는 38.9%가, 방문간호서비스는 29.5%가, 방문요양서비스는 참여노인의 25.7%가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참여 노인 평균 45%가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욕구>

(단위 : 명, %)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677(74.3)	234(25.7)	911(100)
방문목욕서비스	557(61.1)	354(38.9)	911(100)
방문간호서비스	640(70.5)	268(29.5)	908(100)
주간보호서비스	376(41.3)	534(58.7)	910(100)
단기보호서비스	358(39.3)	552(60.7)	910(100)
복지용구대여서비스	489(53.7)	422(46.3)	911(100)
특별현금서비스	368(40.7)	536(59.3)	904(10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장기요양 등급별로 보면, 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으로 혼자서 생활이 힘든 경우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특별 현금급여 등 7개의 서비스 항목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사유’를 물은 결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불만

59)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부산북구, 완도.

족도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불만족도 크게 없으며, 다른 서비스 교체희망이나 자녀의 반대가 큰 것도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유형별 향후 이용의사 없는 사유>

(단위 : 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특별현금
이용비용이 부담	45(18.6)	51(14.1)	55(20.0)	72(13.2)	1(0.2)	21(5.0)	2(0.4)
질에 만족 못해	7(2.9)	23(6.4)	30(10.9)	20(3.7)	24(4.3)	2(0.5)	-
양에 만족 못해	7(2.9)	2(0.6)	2(0.7)	8(1.5)	4(0.7)	7(1.7)	-
기관에 대한 불만족	6(2.5)	4(1.1)	2(0.7)	28(5.1)	32(5.8)	-	-
다른 서비스 교체희망	13(5.4)	13(3.6)	10(3.6)	12(2.2)	8(1.4)	-	57(10.7)
가족 등 비공식 수발자 생겨서	72(30.0)	95(26.3)	21(7.6)	88(16.2)	85(15.4)	6(1.4)	27(5.0)
필요성 느끼지 못해	74(31.0)	129(35.7)	144(52.4)	200(36.8)	167(30.2)	373(89.0)	339(63.4)
지역정서 등 부정적 시각	6(2.5)	18(5.0)	6(2.2)	61(11.2)	91(16.5)	7(1.7)	12(2.2)
자녀의 반대	3(1.2)	4(1.1)	3(1.1)	24(4.4)	34(6.1)	1(0.2)	2(0.4)
기타	1(0.4)	14(3.9)	2(0.7)	24(4.4)	25(4.5)	2(0.5)	96(18.0)
무응답	8(3.3)	8(2.2)	-	-	-	-	-
합계	242(100)	361(100)	275(100)	537(100)	553(100)	419(100)	535(10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국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36.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5천명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2007년 10월 26일)

- 경찰청,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 현황」 분석 -

- 매년 가정폭력 13,111건, 피해자 14,458명꼴 발생('03~'07.6)
- 유형별 : 아내학대(83%), 남편학대(22%), 노인학대(1.8%), 아동학대(0.5%)
- 원인별 : 가정불화(44.9%), 음주(21.7%), 성격차이(14.6%), 빈곤(9.8%), 외도(9.1%) 순
- 연령별 : 40대(43.7%), 30대(30.5%), 50대(15.8%), 20대(6.6%), 60대 이상(3.0%), 10대(0.4%) 순
-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시스템 구축하고, 성폭력·성매매 교육과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연간 1만5천명에 달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59,001건이며, 피해자는 65,059명에 달한다. 매년 13,111건의 가정

폭력과 14,4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3년 17,770명, 2004년 15,208명, 2005년 12,775명, 2006년 12,837명, 2007년6월 6,469명꼴로 나타났는데,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건수 및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신고건수	59,001	16,408	13,770	11,595	11,471	5,757
피해자수	65,059	17,770	15,208	12,775	12,837	6,469

※ 자료 : 경찰청, 2007. 8

-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내학대가 48,984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학대 1,318건(2.2%), 노인학대 1,034건(1.8%), 아동학대 280건(0.5%), 기타 7,385(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2005~2006년도 전체적인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남편학대와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남편학대 신고건수가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보다 많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가정폭력 3대 유형(아내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건수 유형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신고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 타
계	59,001	48,984	1,318	280	1,034	7,385
2003년	16,408	14,306	297	86	258	1,461
2004년	13,770	11,487	290	63	235	1,695
2005년	11,595	9,549	276	50	178	1,542
2006년	11,471	9,127	299	50	223	1,772
2007년6월	5,757	4,515	156	31	140	915

※ 자료 : 경찰청, 2007. 8

- 가정폭력 피해자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불화가 29,180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14,089명(21.7%), 성격차이 9,488명(14.6%), 경제적 빈곤 6,380명(9.8%), 외도 5,922명(9.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06년 동안 음주와 외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각각 10%, 17%씩 증가했다.

<2003~2007.6 가정폭력 피해자 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음 주	경제적빈곤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 도
계	65,059	14,089	6,380	9,488	29,180	5,922
2003년	17,770	3,771	1,576	2,830	8,056	1,537
2004년	15,208	3,288	1,570	2,148	6,815	1,387
2005년	12,775	2,696	1,330	1,835	5,818	1,096
2006년	12,837	2,965	1,238	1,681	5,671	1,282
2007년6월	6,469	1,369	666	994	2,820	620

※ 자료 : 경찰청, 2007. 8

- 가정폭력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대가 28,460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817명(30.5%), 50대 10,285명(15.8%), 20대 4,267명(6.6%), 60대이상 1,993명(3.0%), 10대 237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2003~2007.6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65,059	237	4,267	19,817	28,460	10,285	1,993
2003년	17,770	72	1,207	5,756	7,863	2,431	441
2004년	15,208	59	921	4,751	6,682	2,317	478
2005년	12,775	59	803	3,818	5,546	2,179	370
2006년	12,837	24	850	3,655	5,634	2,204	470
2007년6월	6,469	23	486	1,837	2,735	1,154	234

※ 자료 : 경찰청, 2007. 8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한경쟁 시대에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회 제반문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가정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군대·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유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치료·보호 시스템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37. 혈액비상! 적정재고량의 27%수준 헌혈을 매년 감소, 헌혈부적격율은 매년 증가 (2007년 10월 28일)

- **피가 모자라...4단계 혈액위기상황 중 3단계인 ‘경계’**
 - 적혈구 : 적정재고량 7일분, 현 보유량은 1.9일분에 불과
 - 혈소판 : 적정재고량 3일분, 현 보유량은 1.9일분에 불과

- **국민헌혈율은 4.7%최저, 헌혈부적격 비율은 23.8%최고**
 - 헌혈율 감소 : 5.3%(’02)→ 4.8%(’04)→ 4.7%(’06)
 - 부적격 증가 : 15.7%(’02)→ 20.1%(’04)→ 22.1%(’06)→ 23.8%(’07.6)

- **단체헌혈 매년 급격히 감소...헌혈을 감소 원인으로 작용**
 - 단체헌혈 감소 : 59.6%(’02)→57%(’04)→47.2%(’06)→ 44.1%(’07.6)
 - 헌혈약정 단체 31개 기관 중 공공기관은 8개 불과

- **직업별 헌혈율, 대학생 - 고교생 - 회사원 - 군인 순**
 - 대학생·고교생·군인 집단이 전체 헌혈의 65.1% 차지(’07.6)
 - 학생헌혈 증가, 군인은 크게 감소(’02년 29.6→’07년6월 18.1%)

- 우리나라 혈액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의 1/3에도 못 미치는 바닥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혈액위기관리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 주

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특히 국민헌혈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헌혈부적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혈액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혈액 재고 현황 및 헌혈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피가 모자라... 4단계 위기관리단계 중 3단계인 '경계'

- 대한적십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25일 현재, 적혈구 농축액 재고량은 대한적십자사가 비축해야 할 적정보유량의 27%수준으로 4단계 위기관리단계 중 3단계인 '경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적혈구농축액 4,697unit × 7일분(32,879unit), 혈소판 농축액 3,764unit × 3일분(11,292unit)을 적정보유량으로 하고, 보유량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한 4단계로 위기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위기수준별 혈액 보유 예상량>

위기수준	내 용
관 심	적혈구농축액 4,697unit × 5일 혈소판농축액 3,764unit × 2일
주 의	적혈구농축액 4,697unit × 3일 혈소판농축액 3,764unit × 1.5일
경 계	적혈구농축액 4,697unit × 2일 혈소판농축액 3,764unit × 1일
심 각	적혈구농축액 4,697unit × 1일 혈소판농축액 3,764unit × 0.5일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주) 적혈구농축액 4,697unit×7일(32,879unit), 혈소판농축액 3,764unit×3일(11,292unit)을 적정보유량으로 하고 보유량 수준에 따라 위기수준을 구분함.

- 적혈구농축액의 경우 적정재고량은 7일분인 32,879unit인데, 현 보유량은 이보다 24,110unit이 부족한 8,769unit에 불과하다. 혈소판의 경우도 적정재고량이 3일분인 11,292unit인데, 현재는 4,223unit부족한 7,069unit을 보유하고 있다.

<수혈용혈액제제 혈액형별 일일보유 현황>

(2007.10.25 16:00 기준, 단위: unit)

구 분		계	O형	A형	B형	AB형
적혈구 농축액	1일평균 예상소요량	4,697	1,300	1,617	1,250	530
	현보유량	8,769	1,602	1,789	4,731	647
	과부족	-24,110	-7,498	-9,530	-4,019	-3,063
	재고수준	1.9일분	1.2일분	1.1일분	3.8일분	1.2일분
혈소판 농축액	1일평균 예상소요량	3,764	991	1,316	1,025	432
	현보유량	7,069	2,185	2,693	1,528	663
	과부족	-4,223	-788	-1,255	-1,547	-633
	재고수준	1.9일분	2.2일분	2.0일분	1.5일분	1.5일분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 국민헌혈율 4.7%최저, 헌혈부적격 비율 23.8% 최고

- 혈액부족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헌혈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 헌혈부적격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사용할 혈액도 부족한 판에 건강한 혈액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헌혈율은 '02년 5.3%에서 '04년 4.8%, '06년 4.7%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반면 헌혈부적격율은 '02년 15.7%, '04년 20.1%, '06년 22.1%, '07년6월 23.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헌혈율과 헌혈부적격비율>

(단위: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국민헌혈률	5.3	5.3	4.8	4.7	4.7	-
헌혈부적격비율	15.7	16.2	20.1	21.0	22.1	23.8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 단체헌혈 매년 급격히 감소... 헌혈율 감소 원인으로 작용

- 단체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혈액부족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체헌혈은 '02년 59.6%에서 '03년 59%, '04년 57%, '05년 54.4%, '06년 47.2%, '07년6월 44.2%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군부대는 '02년 28.3%에서 '07년6월 현재 16.9%로 급격히 감소했다.

<단체헌혈이 전체헌혈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합 계	59.6	59.0	57.0	54.4	47.2	44.2
학 교	17.6	18.1	16.9	17.8	19.2	16.4
군부대	28.3	28.9	28.0	25.1	19.1	16.9
종 교	1.8	1.5	1.3	1.2	0.8	0.7
일반단체	11.9	10.5	10.8	10.3	8.1	10.2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기업 및 공공기관과 헌혈 약정을 체결해 왔다. 임직원 1만명 이상 기업 및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헌혈약정을 맺고, 집중적인 헌혈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연도별 헌혈약정단체는 2004년 3개 단체에서 2007년 6월 현재는 31개 단체로 늘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이중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경찰청 등 8개 기관에 불과하다.

<헌혈약정단체 현황>

구 분	계	2004	2005	2006년	2007년6월
계	31	3	9	12	7
기타기관	23	3	5	9	6
공공기관	8	-	4	3	1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 직업별 구분, 대학생·고교생·회사원·군인 순으로 헌혈 많아

- 직업별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생, 고교생, 회사원, 군인 순으로 헌혈을 많이 하고 있다. '04년 전체의 71.2%를 차지했던 고교생, 대학생, 군인의 비율이 '05년 69.3%, '06년 69.0%, 2007년6월 65.1%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고교생과 대학생의 헌혈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군인의 헌혈 비율(29.6%→18.1%)이 크게 감소하는데 따른 결과이다.

<연도별 직업별 헌혈 실적>

(단위: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헌혈자수	백분율	헌혈자수	백분율	헌혈자수	백분율	헌혈자수	백분율
계	2,276,013	100.0	2,223,636	100.0	2,250,603	100.0	1,049,582	100.0
고교생	418,139	18.4	422,460	19.0	489,137	21.7	203,996	19.4
대학생	527,081	23.2	528,572	23.8	603,276	26.8	289,744	27.6
군인	673,720	29.6	588,799	26.5	460,664	20.5	189,611	18.1
회사원	328,779	14.4	350,600	15.8	360,587	16.0	194,580	18.5
공무원	50,911	2.2	52,930	2.4	52,593	2.3	26,838	2.6
자영업	61,152	2.7	62,924	2.8	58,041	2.6	30,521	2.9
종교직	6,212	0.3	6,367	0.3	6,458	0.3	3,527	0.3
가사	19,150	0.8	19,718	0.9	22,099	1.0	10,928	1.0
기타	190,869	8.4	191,266	8.6	197,748	8.8	99,837	9.5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 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헌혈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실천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의 헌혈동참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공공기관의 헌혈약정 독려와 함께, 사회공헌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헌혈참여운동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헌혈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등록헌혈회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8.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2007년 10월 29일)

20년이상 입원자 1,083명, 30년이상 입원자 150명

-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최초 분석 -

□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526명 분석 결과

- 5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3,315명, 60% 차지
- 20년 이상 입원자 1,083명, 30년 이상 입원자도 150명

□ 정신요양시설에서 매년 72.7명꼴 사망 (2004~2006)

- 사망자 : '04년 73명→ '05년 63명→ '06년 82명
- 사망원인 : 패혈증·패혈성 쇼크 35명, 심기능부전 25명,
호흡부전 21명, 심폐정지 19명 순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

한 결과 밝혀졌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원기간은 최초로 취합된 것이며, 동 자료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5,526명인데, 이중 5년 미만 기간 동안 입원자는 2,211명(40%)이었다.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현황>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인 원	5,526명	2,211명	1,007명	682명	543명
비 율	100%	40%	18.2%	12.3%	9.8%
인 원	20~24년	25~29년	30~34년	35~39	40년 이상
인 원	633명	300명	115명	30명	5명
비 율	11.5%	5.4%	2.1%	0.5%	0.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 경우 유료 입소자는 강제퇴소조치 되지 않고,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요양시설에 계속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약 84%가 의료수급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⁶⁰⁾.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6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2007.10 현재

2007년에 지급된 비용이 총 365억원에 달한다.

- 가족이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시설에 환자를 방치할 경우, 환자가 퇴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심사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73명, 2005년 63명, 2006년 82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72.7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사망자 수	218명	73명	63명	82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07. 9

-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35명, 심기능부전 25명, 호흡부전 21명, 심폐정지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원인>

구 분	계
호흡부전	21
심기능부전	25
심폐정지	19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	35
폐렴	17
심장마비	5
심근경색	5
다발성장기부전증	4
악액질	5
기타(병사포함)	8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 빛 투성이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누적적자 1조223억 (2007년 10월 30일)

-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 운영실적 분석 -

- **부채 1조188억...부채액 매년 증가, 사상 최고 (2006년)**
 - 7,276억('03)→ 8,762억('04)→ 9,384억('05)→ 1조188억('06)
 - 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보라매병원 순
- **누적적자액 1조223억 (2007년 6월 기준)**
 - 국립병원 3,665억원(18개), 공립병원 6,431억원(75개), 독립병원 127억원(1개)
 - 서울대병원, 부산시의료원, 보라매병원, 충북대병원 순
- **국공립병원 매년 1,121억원씩 적자...직원급여도 체불**
 - 운영적자 : 1,606억('04)→ 1,181억('05)→ 1,024억('06)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액 1,002억원('07.6)
 - 직원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체불급여도 58억원('07.6)
-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국고보조금 매년 1,406억원씩 지원**
 - 매년 시설 1,002억원, 장비 404억원꼴 국고로 지원('04~'06)

- 국·공립병원의 부채와 누적적자가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천4백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1백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국·공립병원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단위의 국·공립병원 운영실적이 모두 취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동 조사는 전국 158개 국·공립병원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부 병원을 제외한 123개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을 밝혀둔다⁶¹⁾.

◎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원('06), 누적적자 1조223억원('07.6) 달해

-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02년 7,630억원, '03년 7,277억원, '04년 8,762억원, '05년 9,385억원, '06년 1조1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자액도 2007년6월 기준으로 무려 1조22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병원 연도별 부채현황 (2002~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채액	763,001	727,653	876,267	938,450	1,018,823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주) 부채액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부담, 미지급금의 합계를 기재한 것임.

61) 군병원, 산재의료원, 국립감호정신병원 및 일부 국립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누적적자 현황 (2007.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립병원(18개)	공립병원(75개)	도립병원(1개)
금 액	1,022,312	366,523	643,104	12,685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567억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화순전남대병원(682억), 충북대병원(572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473억) 순으로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 상위 10개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시의료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은 부채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공립병원 부채액 현황 (2003~200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구분	명칭	2003	2004	2005	2006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153,663	176,087	158,570	156,740
2	전남	공립	화순전남대병원	-	55,569	60,611	68,159
3	충북	국립	충북대병원	27,289	36,796	42,670	57,246
4	서울	공립	서울시립보라매병원	31,941	36,290	40,572	47,298
5	대구	국립	경북대병원	33,676	39,233	45,296	46,665
6	부산	국립	부산대병원	44,928	42,323	40,095	40,926
7	광주	국립	전남대병원	56,391	33,828	34,319	38,231
8	부산	공립	부산시의료원	36,889	37,106	36,675	33,607
9	전북	공립	군산의료원	25,289	29,408	30,925	33,566
10	전북	국립	전북대병원	26,571	30,749	30,297	30,303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 7

- 국·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214억원으로 전체 누적적자액의 11.9%를 차지했고, 부산시의료원(628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592억), 충북대병원(445억)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병원 누적적자액 현황 (2007.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설립구분	명 칭	누적적자액(2007.6기준)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121,487
2	부산	공립	부산시의료원	62,758
3	서울	공립	서울시립보라매병원	59,188
4	충북	국립	충북대병원	44,533
5	서울	공립	서울시 서울의료원	36,524
6	전북	공립	군산의료원	34,859
7	서울	공립	서울시립 은평병원	33,947
8	인천	공립	인천시의료원	33,186
9	서울	공립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28,814
10	전북	국립	전북대병원	27,043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 7

◎ 국·공립병원 매년 1,121억원씩 적자...의약품대금, 직원급여까지 체불

- 국·공립병원의 운영손익을 분석한 결과, 매년 1,121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1,606억원, '05년 1,181억원, '06년 1,024억원 등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부채와 누적적자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인 것이다.

<국·공립병원 운영손익 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운영손익	-160,565	-118,108	-102,37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2007년6월 현재 의약품 973억8천만원, 의료장비 28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 · 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2007.6)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체불액	국립병원	공립병원	도립병원
의약품	97,375	32,205(8개소)	63,119(58개소)	2,051(1개소)
의료장비	2,865	1,053(4개소)	1,812(18개소)	.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7

- 7개 지방의료원, 3개 적십자병원, 1개 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정신질환자요양병원에서는 약 58억원의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급여까지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만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직원급여 체불현황(2007.6)>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방의료원 (7개소)	적십자병원 (3개소)	노인전문 요양병원(1개소)	정신질환자 요양병원(1개소)
체불급여	5,829,956	3,430,327	2,303,368	19	96,242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7

※ 주) 급여에는 인건비, 상여금, 수당, 실적평가금, 계약직 퇴직금, 가계보조비 등을 포함시킴.

◎ 시설 · 장비 보강사업에 국비 매년 1,406억원씩 지원....개선효과 미미

- 국 · 공립병원들의 시설 · 장비 보강을 위해 매년 1,406억원의 국고보조금

이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04년 1,252억원, '05년 1,429억원, '06년 1,538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적자보전식 지원으로 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설·장비 보강에 관한 국고보조금 현황 (2004~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시 설	300,661	94,454	98,437	107,770
장 비	121,223	30,697	44,453	46,073
총 계	421,884	125,151	142,890	153,843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 ‘송환’ 노력 지지부진 (2007년 10월 31일)

- **납북자·국군포로(총 8,074명 추정) 생존자 28명 공식 확인, 송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지지부진**
 - 전후 납북자 15명, 국군포로 13명 적십자 통해 생존 확인!
 - : 이들 중 납북자 14명과 국군포로 11명 상봉까지 이루어져
 - 적십자·통일부 납북자·포로 송환을 위한 북측과 협조 전혀 없어!
 -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의지 미약, 북한정권 눈치 보기 때문?
- **매번하는 생사확인 예년과 변동 크지 않아, 이산가족 생사확인 시 10%만 납북자·국군포로 확인가능**
 - 생존추정 국군포로 560명중 25명(4.5%)만 생사확인
 - 전후납북자 480명 중 34명(7.1%)만 생사확인
 -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9명(4.8%)만 생사확인
 -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대화창구 마련해야

대북 지원 단체, 해마다 줄어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 부분만 분배결과 통보 받아**
 - 여전히 대북지원물자 행방은 오리무중
 - 대국민 신뢰성 강화, 대북협상력 강화 노력 절실
- **대북지원 지정단체·지원금 해마다 줄어**
 - (지원단체) 15개('05) → 3개('06) → 2개('07.7)
 - (지원금) 16억7천만원('05) → 15억6천만원('06) → 2억1천만원('07.7)

-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협상력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납북자국군포로 송환노력 지지부진, 북한정권 눈치 보기 때문?**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남북교류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60명이며 이 중 25명만 생사가 확인됐다. 전후납북자 중 억류된 480명과 관련해서는 34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 납북자는 7,034명 중 339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됐다.
- 총 16차 이산가족 상봉 시까지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해 214명이 생사 의뢰를 했고, 이중 28명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측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했으며, 그중 25명⁶²⁾은 상봉까지 주선되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구분	추정 인원	북한 확인통보 ⁶³⁾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확인 의뢰			
			의뢰	생존	사망	행방불명
국군포로	560	-	101	13	12	76
전시납북자	7,034	337	16	-	2	14
전후납북자	480	-	97	15	19	63
합	8,074	337	214	28	33	153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10.

62) 국군포로 11명, 납북자 14명

63) 195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사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북한적십자회는 이중 337명의 북한 내 생존자 명단을 확인 통보한 바 있음.

- 그러나 생존한 납북자·국군포로자에 대한 정부의 송환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매년 생사확인이 논의되지만,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다.
- 따라서 16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시마다 한두 명씩 시혜를 베풀듯이 북한측이 내놓는 생사확인자가 적십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 내 국군포로 친인척 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 과거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던 시절엔 대한적십자측도 오랜만에 열린 국제적십자회의를 활용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간에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지도 못했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한 당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상봉과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며, “현재 일반이산가족상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상봉문제를 해당자들의 송환문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적십자 대북사업, 이렇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북측은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문서로 보내오고⁶⁴⁾있으나, 비료부분 이외의 다른 물자에 대해서는 인도 현장에서 인수증만 교환받고 있어 분배결과에 대해선 전혀 파악되지 않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키워왔다. 이러한 의구심은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 증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에서 보낸 통보대로라면 적재적소에 비료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 그 진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한편, 정부의 대북 지원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대북기증업체 및 단체가 2005년 15개에서 2006년 3개 단체, 2007년 2개 단체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북지원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기 위해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북한에 지원된 것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하에 객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64)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1998, 북경)

<대북지원 기증업체 및 단체>

연도	기 증 단 체	금 액(원)	물 품
2005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5,950,425	냉온풍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11,000,000	못자리비닐, 비료 400
	평화3000	17,000,000	못자리용 비닐 13톤
	동양고속건설	195,000,000	못자리용 비닐 10톤
	인천시, 경인일보	113,472,000	못자리용 비닐 110톤
	싸카스포츠	501,000,000	축구용품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41,116,680	밀가루, 아연도철판
	민족사랑나눔운동본부	321,200,000	두유기계, 빵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000,000	자전거 500대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80,162,000	옷감, 천, 의류 등
	연탄은행전국협의회	20,500,000	연탄 5만, 밀가루
	신일기업	25,000,000	자동차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54,544,500	냉온풍기, 밀가루 등
	동북아한민족협의회	32,412,400	의약품
	경남지사, 남북청소년교류연맹 KG케미칼	103,965,810	의약품, 티셔츠 등
		소 계	1,672,323,815
2006	(주)쌍방울	1,392,486,080	내의, 속옷 등
	한국토지공사	92,307,000	잣나무 묘목, 종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80,690,000	옷감, 신발 등
		소 계	1,565,483,080
2007.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19,100,000	옷감, 신발 등
	한국토지공사	94,889,000	잣나무 묘목, 종자
		소 계	213,989,000

※ 자료 : 대한적십자, 2007.7

41. 적십자 회비환불 6년새 80배 급증! '적십자 믿지 못한다.' 환불요청 (2007년 10월 31일)

□ 적십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행정과오로 인한 회비환불 급증!

/ 회비환불처리 6년새 80배 급증, 9건('02) → 720건('07.7)

: 환불금 6년새 35배 급증, 61만4천원('02) → 2천177만5천원('07.7)

<주요 회비환불 요청 현황>

- 본인요청에 의한 환불요청 118.8배 급증, 5건('02) → 594건('07.7)
: 환불금 308.8배 급증, 2만4천원('02) → 7백41만원('07.7)
- 납부오류에 의한 환불요청 8배 증가, 4건('02) → 32건('07.7)
: 환불금 6.3배 증가, 59만원('02) → 371만원('07.7)
- 계좌이체오류에 의한 환불요청 32.5배 증가, 2건('04) → 65건('07.7)
: 환불금 20.3배 급증, 49만3천원('04) → 1천3만원('07.7)

□ 회비환불 등 세대주회원 참여 매년 줄고, 법인참여 증가!

- 전체 참여회원 매년 감소, 650만명('03) → 540만명('07.7)
- 적십자 회비 오히려 증가, 389억원('03) → 426억원('07.7)
- 세대주 회원 참여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전체세대주 대비)세대주 참여율 감소, 37.4%('06) → 34.8%('07)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환불 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

회비 환불처리가 2002년 9건에서 2007년 7월 현재 720건으로 6년 사이에 80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적십자 회비환불요청이 급증하는 원인은 ①적십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와 ②무분별한 지로용지 발송으로 인한 중복납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사유별 표 정리>

연 도	사 유				건 수	금 액		
2002년	납	부	오	류	4	590,000		
	본	인	요	청	5	24,000		
	소				계	9	614,000	
2003년	납	부	오	류	8	202,480		
	본	인	요	청	111	2,751,790		
	기				타	5	75,000	
	소				계	124	3,029,270	
2004년	계	좌	이	체	오	류	2	492,870
	국	군	회	원		13	65,000	
	납	부	오	류	77	2,421,342		
	본	인	요	청	143	3,587,507		
	기				타	14	125,000	
	소				계	249	6,691,719	
2005년	계	좌	이	체	오	류	2	17,016
	납	부	오	류	22	864,000		
	본	인	요	청	200	3,157,000		
	기				타	4	39,000	
	소				계	228	4,077,016	
2006년	계	좌	이	체	오	류	30	3,114,140
	본	인	요	청	275	4,467,000		
	납	부	오	류	9	284,000		
	기				타	18	419,000	
	소				계	332	8,284,140	
2007년7월	계	좌	이	체	오	류	65	10,030,700
	국	군	회	원		2	10,000	
	납	부	오	류	32	3,709,028		
	본	인	요	청	594	7,410,000		
	기				타	27	614,880	
	소				계	720	21,774,608	
총					계	1,662	45,470,753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10

◎ **회비환불 급증, 회비에 대한 적십자 신뢰도 저하와
무분별한 지로용지 발급으로 인한 중복납부가 원인**

- 2000년도 지로납부제가 전면 실시된 후 회비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확산과 함께, 빈번한 혈액 안전사고, '회비를 대북지원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등, 회비모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⁶⁵⁾된다. 한마디로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가 회비환불 요청의 근본적 사유인 것이다.
- 기술적 문제로서는, 미납과 관련해 지로용지를 재발송하는 동안 당사자는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추가 발행되어 배달된 용지를 보고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세대주 회원 참여 줄고, 고지금액 인상과 법인참여만 늘고 있어!**

- 한편 회비 납부에 있어 세대주 회원들의 참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적십자가 제출한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 회원은 2003년 650만명이었던 것이 2007년 7월 현재 540만명으로 5년새 110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금액은 2003년 389억에서 2007년 7월 현재 426억원으로 5년 새 약 10%가량 증가했다. 모금액이 늘어난 것은 고지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⁶⁶⁾

65) 대한적십자사 회원팀, 2007년 회비 모음 평가결과

66) 2004년도 변경, 광역시 이상 : 6천원(변경 전 5천원), 일반시 : 5천원(변경 전 4천원), 군(群)지역 : 4천원(변경 전 3천원)

- 법인모금액의 경우 2006년 3억4천만원에서 2007년 7월 현재 8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 적십자 회비 모금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주 모금액은 적십자 회비환불요청 등 참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06년 37.4% → '07년 34.8%, 2.6%p 감소) 세대주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실적 현황>

구분	실적	전년대비	목표대비		
			목표	달성률	
2007.7	회원	5,406,767	96.5%	6,325,592	85.4%
	회비	42,591,476	102.9%	42,154,000	101.0%
2006	회원	5,602,351	98.2%	6,372,561	87.9%
	회비	41,404,495	100.9%	41,783,790	99.1%
2005	회원	5,706,099	97.6%	6,183,203	92.3%
	회비	41,004,958	103.0%	41,103,668	99.8%
2004	회원	5,843,847	89.5%	7,082,182	82.5%
	회비	39,799,278	102.4%	40,777,828	97.6%
2003	회원	6,526,967	95.6%	7,409,825	88.1%
	회비	38,866,292	99.4%	39,875,159	97.5%

※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10, 안명옥의원 재정리

**◎ 적십자 회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가 선행돼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부문화 조성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적십자 회비 납부에 대한 세대주 참여율이 떨어지고 회비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적십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드높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42. 적십자, 기증받은 미술품 방치! (2007년 10월 31일)

- 청전 이상범 화백⁶⁷⁾ 작품 등 27점 서고에 방치 -

- 기증 미술품 54점 중 38점은 취득일자, 취득사유 몰라.
 - 1905년 창립 이래 기증 받은 미술품 54점으로 공식 확인
 - 이 중 38점은 취득경위 불분명, 그 중 21점은 작가도 파악 못해
- 취득경위 불분명한 미술품 27점 서고에 방치!
 - 민영환·최익현·전직대통령 친필서간 등 13점만 사료전시실에 보관
 - 청전 이상범 화백작품 등 27점은 서고에 방치
 - 기타, 강당과 복도에 전시된 작품도 14점
- 기증받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의뢰 한번도 안 해
 - 소장 미술품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
- 미술품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뢰, 전시·활용대책 마련해야
 - 모든 적십자 기증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시켜야
 - 역사적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보존관리대책 수립해야

- 정부의 허술한 미술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102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적십자사도 그동안 기증받은 미술품들이 대

67) 李象範(1987~1972), 호는 靑田(청전), 1918년 서화미술회 졸업, 1927년 동양일보 미술책임 기자로 근무, 1938년 손기정 선수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피검된 바 있음. 3.1 문화상 본상(1963년), 서울특별시 문화상(1966년) 수상

부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사)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술품 관리지침 및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기증 미술품 55점 중 38점은 취득일자, 취득사유 몰라.
취득일자사유 불분명한 27점은 서고에 방치!**

- 적십자사 창립 이후 기증 받은 미술품은 총 54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38점은 취득일자와 취득사유도 모르며, 그중 작가도 모르는 미술품이 21점에 이른다. 그동안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방증이다.
- 미술품의 보관현황을 보더라도, 54개의 미술품 중 취득일자와 사유가 분명한 13점만 사료전시실에 보관·전시되어 있고, '청전 이상범 화백' 작품을 포함한 27점의 미술품은 서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기타 강당과 복도에 전시된 미술품도 14점에 이른다.

◎ **기증받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의뢰 한번도 안해**

- 적십자사의 역사와 상징성을 감안할 때, 기증 미술품들의 가치는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한 미술품과는 분명 다르다. 독립운동가와 전직 대통령 친필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보관되고 있다.
- 그러나 적십자사는 그동안 미술품에 대한 감정의뢰를 한 번도 안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작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지적(68)을 받은 후

금년 7월 미술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그에 따른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그 이전까지는 도난, 손상 등의 사전예방과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 없이 방치되었던 것이다.

◎ 기증 미술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역사적 가치 존중해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좋은 뜻으로 적십자에 기증된 미술품은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기증의 의미가 퇴색되도록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적십자사의 기증 미술품도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만큼 가장 온전하게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장교·부사관 등 軍 간부 건강상태 갈수록 악화 (2007년 11월 1일)

-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분석

- **민간병원 찾는 직업군인 매년 급격히 증가**
 - 군병원 무료인데도,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아
 - 진료인원 : 14만4천명('03)→15만5천명('05)→12만9천명('07.6)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 평균 1,603명 진료 ('03~'07.6)**
- **에이즈 진료자 매년 5~8명 발생 ('03~'07.6)**
- **정신질환으로 연 평균 2,564명 진료 ('03~'07.6)**
-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소화기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순으로 진료 받아...**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민간병원 찾는 직업군인 매년 급격히 증가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03년 144,418명, '04년 150,193명, '05년 154,606명, '06년 162,417명, '07년 6월까지 128,899명인 것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군인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144,418	1,140,243	36,012,893	25,208,652	31,584
2004년	150,193	1,220,792	39,531,905	27,826,421	32,382
2005년	154,606	1,429,504	45,283,126	31,976,019	31,678
2006년	162,417	1,540,764	54,411,401	38,813,166	35,315
2007년6월	128,899	784,678	29,217,211	20,934,276	37,23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추세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 평균 1,603명 진료 ('03~'07.6)

-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03년 1,532명, '04년 1,443명, '05년 1,536명, '06년 1,632명, '07년 6월까지 1,07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1,603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희귀·난치성 환자 중에는 에이즈와 관련해 진료 받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03년 8명, '04년 7명, '05년 5명, '06년 6명, '07년6월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장기적인 치료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업군인 가입자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질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1,532	6,810	2,044,235	1,460,769	300,181
2004년	1,443	7,207	2,102,905	1,624,477	291,786
2005년	1,536	7,876	2,512,448	2,015,801	319,000
2006년	1,632	7,580	2,731,046	2,346,478	360,296
2007년6월	1,071	4,048	1,774,774	1,526,621	438,43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정신질환으로 연 평균 2,564명 진료 ('03~'07.6)

-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료 받은 직업군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03년 2,183명, '04년 2,420명, '05년 2,575명, '06년 2,685명, '07년6월 현재까지 1,6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2,564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직업군인들은 국방력의 근간으로서 모두가 병사들을 통솔하고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군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직업군인 가입자 정신질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2,183	7,382	420,346	285,160	56,942
2004년	2,420	8,316	479,880	325,052	57,706
2005년	2,575	9,044	538,563	371,168	59,549
2006년	2,685	8,783	619,135	431,247	70,492
2007년6월	1,675	4,488	323,535	223,348	72,08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순으로 진료

- 한편, 직업군인들의 다빈도 상위 10개 질환을 확인한 결과,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소화기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질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업군인 다빈도 상위 10개 질환 진료실적>

구 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24,620	49,223	1,170,075	796,991	23,771
치아우식증	19,331	28,064	768,942	529,561	27,400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16,971	41,630	1,394,636	971,407	33,501
급성 편도염	16,271	36,164	539,979	385,859	14,685
급성 기관지염	15,500	34,164	484,336	344,936	14,177
백선증	14,876	40,487	1,056,311	724,005	26,090
요통	14,031	28,965	810,763	605,899	27,991
염좌	12,282	21,922	526,877	391,622	24,03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199	22,385	680,058	444,623	30,38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0,251	23,886	397,761	270,263	16,65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군인의 건강은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 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국민건강의 최고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당국도 군인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안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현역군인,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44. 제약회사 R&D투자, 판촉비보다 적어 (2007년 11월 1일)

한해 접대비만 568억원이나 돼!

- **상장 제약회사 34곳 중 29곳, R&D투자가 판촉비보다 적어!**
 - 상장회사, R&D투자비율 5.58% << 판촉비투자비율 8.16%
 -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곳 판촉비가 더 많아
 - 해외 주요 제약회사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16~30%로 높아
- **접대비로 공식 확인된 비용만도 한해 568억원이나 돼!**
 - 접대비가 R&D투자보다 많은 회사도 3곳이나 있어

화장품회사, 매출액 낮은 회사일수록 R&D투자비율 높아

- **10개 상장회사⁶⁹⁾, 판매마케팅비용이 전체 매출액 중 12.3%차지**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로 3,545억원(매출액 대비12.3%) 사용
 - R&D투자(858억, 매출액 대비 3%)는 판촉비의 1/4 수준에 불과
 -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은 판매마케팅비가 R&D투자보다 더 많아
 - 매출액 하위 5개 기업, R&D투자비율 상위 4개 기업에 포함
 - 화장품 견본비 353억원, 포장비 42억원, 접대비 25억원 사용
 - 해외시장개척 투자비용은 24억원으로 접대비 수준도 안돼

- 우리나라 2006년도 34개 상장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451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5조9030억원) 대비 5.85%수준으로, 판매촉진비용인(광고선전비 포함) 8.16%(4,816억원)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D 투자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06년도 34개 상장 제약회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주)LG생명과학'(매출액 대비 R&D 비율 27.56%)으로,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 상장회사 전체를 비교해 할 때, 총 34개 기업 중 29개 기업이 R&D투자보다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포함)에 들인 비용 더 많았다. 또한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R&D보다 판촉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계적인 주요 제약회사들의 R&D투자 비율 현황과 비교해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투자가 부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주요 제약회사의 R&D 투자 현황('04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순위	회사	매출액(B)	연구·개발비(A)	투자비율
1	Sanofi-Aventis	309.2	93.1	30.1%
2	Pfizer	461.3	75.2	16.3%
3	Roche	173.2	54.0	31.1%
4	Johnson&Johnson	221.3	52.0	23.5%
5	GSK	313.4	51.9	16.6%

※ 자료 : 보건복지부(제약산업 통계자료), 2007.4

69) 현재 11개 상장회사 등록, (주)태평양에서 아모레퍼시픽 분사(2006.6.1)

- 한편 2006년 한해 동안 제약회사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약회사는 접대비용이 R&D투자 금액보다도 높았다.

<상장 제약기업 매출대비 R&D·광고선전비·접대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상장제약회사 매출액 기준	매출액	R&D투자액	투자비율(%)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투자비율(%)	접대비	투자비율
1	571,162	28,291	4.95	58,152	10.18	1,514	0.27
2	422,184	40,574	9.61	26,356	6.24	8,362	1.98
3	411,705	23,231	5.64	42,763	10.39	4,440	1.08
4	366,729	20,713	5.65	5,845	1.59	2,820	0.77
5	342,767	13,585	3.96	22,219	6.48	288	0.08
6	338,166	26,553	7.85	31,116	9.20	2,230	0.66
7	267,132	8,774	3.28	18,816	7.04	835	0.31
8	242,810	20,018	8.24	20,554	8.47	889	0.37
9	240,689	10,270	4.27	11,371	4.72	4,651	1.92
10	227,482	18,940	8.33	36,150	15.89	207	0.09
11	221,205	60,971	27.56	6,568	2.97	2,894	1.31
12	208,425	3,622	1.74	19,857	9.53	1,872	0.90
13	180,993	5,783	3.20	14,718	8.13	1,491	0.82
14	154,980	5,269	3.40	8,192	5.29	4,099	2.64
15	152,822	5,607	3.67	18,971	12.41	726	0.48
16	128,524	2,825	2.20	16,309	12.69	3,793	2.95
17	126,360	4,402	3.48	6,892	5.45	1,696	1.34
18	122,424	4,179	3.41	22,103	18.05	757	0.62
19	120,280	5,729	4.76	9,961	8.28	334	0.28
20	118,058	5,242	4.44	6,866	5.82	1,209	1.02
21	103,518	7,246	7.00	11,141	10.76	790	0.76
22	90,878	1,738	1.91	10,134	11.15	525	0.58
23	90,756	1,884	2.08	13,706	15.10	163	0.18
24	84,897	3,332	3.92	4,321	5.09	4,127	4.86
25	78,584	1,068	1.36	4,513	5.74	448	0.57
26	72,197	2,116	2.93	29	0.04	44	0.06
27	69,286	1,745	2.52	4,833	7.05	367	0.53
28	64,002	3,572	5.58	4,778	7.47	1,090	1.70
29	62,934	1,019	1.62	7,767	12.34	217	0.34
30	62,409	2,977	4.77	5,420	8.68	72	0.12
31	60,060	2,378	3.96	6,544	10.90	46	0.08
32	55,000	669	1.22	2,953	5.37	2,904	5.3
33	28,603	644	2.25	362	1.27	724	2.53
34	14,961	139	0.93	1,308	8.74	150	1.00
계	5,902,982	345,105	5.85	481,588	8.16	56,774	0.96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2007.9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야말로 제약기업 발전의 관건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며, “특히 한미 FTA 등 세계시장변화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장품 회사, 매출액 낮은 회사일수록 R&D투자비율 높아**

- 화장품 회사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R&D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상장 화장품회사의 2006년 매출액은 2조8772억원이었으며, 이중 R&D에 사용된 투자비용은 862억(매출액 대비 3%)원이다. 그러나 판매촉진비가 3,545억원(매출액 대비 12.32%)으로 R&D 투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 제약기업 매출대비 R&D·광고선전비·접대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상장제약회사 매출액 기준	매출액	R&D투자액	투자비율(%)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투자비율(%)	접대비	투자비율
1	1,304,203	46,438	3.56	203,492	3.56	1,608	0.12
2	1,032,843	27,242	2.64	114,749	2.64	-	-
3	119,046	1,827	1.53	9,748	1.53	290	0.24
4	118,343	1,133	0.96	1,911	0.96	36	0.03
5	93,704	779	0.83	14,211	0.83	94	0.10
6	70,067	3,452	4.93	589	4.93	57	0.08
7	61,848	1,180	1.91	8,500	1.91	275	0.44
8	53,343	1,133	4.27	378	4.29	83	0.16
9	13,757	2,276	5.31	13	5.31	29	0.21
10	10,041	784	7.81	879	9.81	44	0.44
계	2,877,195	86,244	3.00	354,470	12.32	2,516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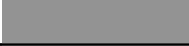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2007.9

- 상장회사 10곳 가운데 3곳만 R&D투자비율이 판매촉진비를 상회했으며, 매출액이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높은 R&D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한편 화장품 견본비 제작에 사용된 비용이 353억원, 포장비 42억원, 접대비 25억원 등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시장개척에 투자한 비용이 24억원으로서, 접대비에 들인 비용보다 적은 것이다. 그만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화장품회사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신기술과 신소재를 적극 활용한 화장품 분야의 R&D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Ⅱ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현황



AMO 통권 제73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2007. 10. 17

2007. 10. 17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I. 북한의 보건의료환경과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1.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2.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및 차이점
3. 북한의 진료환경 및 보건의료 인프라

II. 새터민을 통해 본 북한 보건의료실태의 심각성

1. 새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2. 새터민 건강수준의 심각성

III.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현황과 문제점

1.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사업 현황
2. 보건의료분야 인적 교류협력 사업 현황
3.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IV.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1. 북한보건의료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2. 새터민에 대한 건강관리·증진 방안
3. 남북 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V. 참고문헌

VI. 부 록

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보건의료 협력 사례(보건협정을 중심으로)
2.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3.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4. 사진으로 보는 남북보건의료 협력 사업

AMO 통권 제74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2

2007. 11. 6

2007. 11. 6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국제결혼 피해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정책제언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I.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현 주소

1.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
 - 가. 연도별·성별 현황
 - 나. 국적별 현황
 - 다. 직업별 현황
2.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현황
3.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II.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유형 및 사례

1.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2.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3. 차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피해
4. 경제적 불안과 체류문제로 인한 피해

III.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 및 문제점

1.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추진과정
2.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 가. 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 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지원
 - 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라. 출산 및 자녀양육과 학교생활 적응지원
3.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 가.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체계 미비
 - 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 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IV.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5. 대 만

V. 행복한 다문화 가정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 여성을 활용한 통역인력 양성
2. 동일한 언어권 여성들의 쉼터 마련
3.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4.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5. 다양한 적응교육 지원 및 체류제도 개선

VI. 참고문헌

VII. 부 록

1. 국제결혼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 : 인천·천안 쉼터 방문

AMO 통권 제75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3

2007. 10. 18

2007. 10. 18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I. 지방자치와 지방복지행정

1.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 가. 지방복지재정 수입과 지출
 - 나.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4.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5.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II.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 -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 가.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내용
 - 나. 복지분야 지방이양 내용
2.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
 - 가.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제도적 문제점
 - 나.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재정적 문제점
 - 다. 기타 제기되는 문제점

III. 노무현 정부의 해결방안과 평가

1.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대책
 - 가. 종합대책의 내용
 - 나. 평가 및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 가. 평가사업의 내용
 - 나. 평가 및 문제점

IV. 주요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현황

1. 미 국
 - 가. 미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나.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다. 미국 주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라.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마. 미국의 복지분야 보조금 제도
 - 바. 미국의 자원배분 제도
2. 일 본
 - 가. 일본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나. 일본의 복지분야 보조금 제도
 - 다. 일본의 자원배분 제도
3. 영 국
 - 가.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 나.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 다. 영국의 자원배분 제도

V.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1. 재정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 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활용
 - 나.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 다.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 가. 조세유인책의 활용
 - 나.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VI. 참 고 문 헌

VII. 부 록

1. FY200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복지부문)

AMO 통권 제76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4

2007. 10. 18

2007. 10. 18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해외유입전염병 실태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I. 국내 검역시스템과 검역소 현황

1. 국내 검역시스템의 이해
 - 가. 검역의 정의와 분류
 - 나. 현행 검역관리시스템
2. 국립검역소 현황
 - 가. 국립검역소 일반현황
 - 나. 국립검역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II. 해외전염병 유입 실태

1. 해외유입전염병 현황
 - 가. 해외전염병 질환별 현황
 - 나. 해외전염병 유입국가별 현황
2. 국립검역소 검역 결과
 - 가. 이상징후자 발견 현황
 - 나. 세균검사 실적
 - 다. 사체검역 실적

III. 국내 검역관리의 문제점

1. 검역시스템상의 문제점
 - 가. 다원화된 검역체계로 인한 문제점
 - 나. 검역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 다. 국립검역소 질 관리 미흡

2. 방역시스템상의 문제점
 - 가. 방역·검역 관리조직의 분리
 - 나. 방역업무 전문성 및 관리 미흡

IV. 선진국의 검역관리 정책 사례

1. 선진국 검역시스템 분석
 - 가. 미국의 검역관리시스템
 - 나. 호주의 검역관리시스템
 - 다. 일본의 검역관리시스템
 - 라. 대만의 검역관리시스템
2. 국제 전염병 관리 동향 및 선진 검역시스템의 시사점

V. 선진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1. 검역인력의 적정 배치
2. 검역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3. 검역업무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4. 검역소별 적정 관할구역의 설정
5. 방역시스템의 전문성 향상

VI. 참고문헌

VII. 부 록

1. 사진으로 보는 검역시스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현황)

AMO 통권 제77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5

2007. 10. 22

2007. 10. 22



국가 마약류 예방사업 제고를 위한
치료·재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 마약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목 차

Contents

국가 마약류 예방사업 제고를 위한 치료·재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국내 마약류 범죄와 마약사고 현황

1. 마약류 범죄의 발생현황
2. 마약류 사범 처리 및 재범현황
3. 국내 마약사고 발생현황

II. 국가 마약류 치료·재활정책 현황 및 과제

1. 국가 마약류 치료·재활정책 현황
2. 국가 마약류 치료·재활정책 문제점
3. 국가 마약류 치료·재활정책 과제
4. 국가 기관별 마약류 치료·재활정책

III. 외국의 마약류 예방·치료·재활 정책

1. 유엔의 마약류 예방정책
2. 미국의 마약류 예방정책
3. 영국의 마약류 예방정책
4. 일본의 마약류 예방정책
5. 해외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 정책

IV. 마약 예방사업 제고를 위한 ‘치료·재활정책’ 개선방안

1. 국가 마약류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2.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합리적 모색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포괄적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4. 마약류 중독자에게 체계적인 재활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NGO역할 강화방안

V. 참고문헌

VI. 부 록

1.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요국가의 NGO단체 현황
2. 마약류 중독자 경험사례
3. 밀반입이 쉬운 마약류 사진 모음
4.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현장

AMO 통권 제78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6
2007. 10. 22

2007. 10. 22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FTA 체결(예정)대상 주요 국가별, 부적합 현황 중심으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I. 국내 수입식품 검사 현황

1. 국내 수입식품 현황
2.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및 현황
3. 부적합 식품 국내 수입사례(자료보강)

II. FTA 체결(예정) 주요국가의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1.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2. 미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3. 일본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4. 프랑스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III. 외국의 식품검역제도

1. 유럽연합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2. 미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3. 캐나다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IV.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V. 참고문헌

VI. 부 록

AMO 통권 제79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7

2007. 10. 24

2007. 10. 24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I. 국민연금 현황

1. 국민연금 연혁
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현황
 - 가. 가입자 현황
 - 나. 연금보험료 징수현황
 - 다. 연금급여 현황
3. 국민연금 관리·운용 조직체계
 -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 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라. 기금운용본부
 - 마.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
 - 바. 국회와 행정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II.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기본원칙
2. 기금운용 현황(총괄)
3. 기금운용 현황(부문별)
 - 가. 공공부문
 - 나. 복지부문
 - 다. 금융부문

III.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1.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 가. 기금의 장기계획 부재
- 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부족
- 다. Plan-Do-See의 관리체계가 미흡
- 라. 전문성의 부족
- 마. 관리운영 시스템 미비
- 바. 정부의 규제원칙 미정립
- 사. 기금감독 기구의 실질적 기능 한계
- 아.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및 조직구조의 한계
- 2.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 가. 기금의 안정성 문제
 - 나.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 다. 보험요율의 안정성 문제
 - 라.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문제

IV. 투자 및 제도개선 방안

- 1.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 가. 관리운용체계 개선의 목표
 - 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확보방안
 - 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 확보방안
 - 라. 해외사례
- 2.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가. 상설화의 기본방향
 - 나. 상설화의 기본원칙
 - 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의 세부구축방안

V. 참고문헌

VI. 부 록

AMO 통권 제80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8
2007. 10. 25

2007. 10. 25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u-Health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I. 유비쿼터스시대의 u-Health 개념과 현황

1. u-Health 개념
 - 가. u-Health의 개념
 - 나. u-Health의 범위
2. 정부 u-Health 정책의 현황
 - 가.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u-Health 요구 증대
 - 나. u-Health 정책 현황
 - 다. u-Health 추진의 문제점

II.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본 u-Health 현황

1.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계획(2005~2010)
 - 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활성화
 - 나. 응급환자진료정보망 및 이송정보망 구축
2. u-Health관점에서 본 응급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 가. 응급의료정보센터 현황 및 문제점
 - 나. 응급의료이송정보시스템(NAIS) 현황
 - 다.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현황

III. 해외 u-Health 사례와 시사점

1. 미국 / 캐나다
2. 유 럽

3. 일 본
4. 중 국/싱 가 폴

IV. u-Health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 u-Health 지원 법과 제도 마련
2. u-Health 산업 육성 지원
3. Fusion-Health 미래 융합의료서비스 강화
4. 응급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유비쿼터스기술 활용 방안

V. 부 록

1. 미국 응급의료시스템 현장방문 및 전문가 면담
2. 응급의료 관련 서식
3. 응급의료 관련 참고 사이트

AMO 통권 제81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9
2007. 10. 25

2007. 10. 25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I.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도입현황

1.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평가제도의 추진경과
3. 의료기관 평가기법
4. 의료기관 평가방법
5. 의료기관 평가절차

II. 해외 의료기관 평가제도

1. 해외 의료기관 신임제도 주관기구 현황
2. 해외 국가별 의료기관 평가 사례

III. 의료의 질 평가제도 현황

1. 기존 의료의 질 평가 현황
2. 병원신임평가제도
3.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 제도
4. 종합전문 요양기관평가제도
5.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제도

IV.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평가기준 개발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2. 평가기준 공개시점과 의료기관 준비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3. 평가도구와 항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4. 평가결과 활용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5. 평가운영 주체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V.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1. 평가의 근본목적에 제고해야
2. 평가운영의 효율화 달성해야
3. 평가기준 개발과정 및 평가기준 개선되어야
4. 평가결과 공표방식이 개선되어야

VI. 참고 문헌

VII. 부 록

1.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라본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향

AMO 통권 제82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0

2007. 10. 29

2007. 10. 29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I. 보건복지서비스관련 자격제도

1. 보건복지서비스 자격의 종류
2. 보건복지서비스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II. 자격증 제도의 현황과 실태

1. 의료인자격 현황과 실태
2. 약사자격 현황과 실태
3. 의료기사자격 현황과 실태
4. 영양사자격 현황과 실태
5. 위생사자격 현황과 실태
6. 사회복지사자격 현황과 실태
7. 기타 자격증 현황과 실태

III. 자격증제도의 문제점

1. 면허제도의 처벌실태
2. 보수교육제도 실태
3.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실태

IV. 선진국 자격증 제도

1. 의료인 면허제도 사례연구
2. 약사 면허제도 사례연구
3. 의료기사 면허제도의 사례연구

4. 영양사면허제도 사례연구
5. 위생사 면허제도 사례연구
6. 사회복지사 면허제도의 사례연구
7. 간호조무사 면허제도의 사례연구

V. 정책 제언

1. 보건복지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2. 보건복지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3. 보수교육의 강화
4. 면허갱신제도
5. 면허 재등록제도
6.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VI. 참 고 문 헌

AMO 통권 제83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1

2007. 10. 31

2007. 10. 3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 방안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 방안

I.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의의

1.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2. 사회공헌활동의 대두배경
3.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사회공헌활동의 이유

II.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국내에서 실현 유력한 사회적기업
3. 사회적 기업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연결

III. 사회공헌활동 현황

1.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동기의 변화
2. 사회공헌활동의 방법
3.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제도 도입현황
4. 사회공헌활동 지출현황

IV. 사회공헌활동 관련 문제점

1. 기업 사회공헌활동 저해요인
2. 국내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

V.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관련 해외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프 랑 스
4. 독 일
5. 일 본

VI.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선진화를 위한 과제
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3.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VII. 참고문헌

AMO 통권 제84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2

2007. 11

2007. 11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참여정부 성매매 · 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I. 여성폭력 현황과 실태

1. 성매매 현황과 실태
2. 성폭력 현황과 실태

II. 참여정부 여성폭력 예방정책

1.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 선거공약
2.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정책 추진실적

III.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1. 성매매집결지 단속효과
2.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 처벌실태
3. 고령화시대, 노인 성매매 증가
4. 탈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5. 성병검진대상자의 전염병 지역분포
6. 성매매피해여성 성병실태
7. 성매매여성 지원시설 관리 · 감독 실적
8. 해외 결혼 · 성매매 문제
9. 인터넷을 통한 변종 성매매 실태
10. 청소년 성매매 89.2% 인터넷 사용

IV. 성폭력예방정책 평가

1. 아동 성폭력문제 심각

2. 장애인 성폭력 상담실적
3. 사회적 성차별 분석결과
4.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5. 학교 내 성폭력 문제점

V. 성매매·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2. 성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VI. 참고문헌

VII. 부 록

AMO 통권 제85호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3

2007. 11

2007. 11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국회의원 안명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 ● 목 차

Contents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I. 2007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1. 하루 35.5명씩 자살! 여성·농업종사자 비율 증가
2. 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3.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4. 화장률이 매장률 추월
5.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 위협!
6.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7.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장병 건강·군 전투력 저하 우려
8.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9.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해
10.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11.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12. 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13.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14.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15.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1.2%
16.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17. 급식소·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28%, 세균과 발암물질로 오염!
18. '건강'걱정하다'병'생킨다 AIDS 등 건강염려증 확산
19.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20.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21. '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22.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23.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24.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25.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 미달!
26. 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27. 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28.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쳐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29.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30.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보안전산망 다 뚫렸다
31.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노후보장도 못하는 국민연금
32. 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
33.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34. 인맥쌓기 창구로 쓰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35.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자 45%, 향후 이용의사 없어
36.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5천명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37. 혈액비상! 적정재고량의 27%수준 현혈울 매년 감소, 현혈부적격율은 매년 증가
38.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39. 빛 투성이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누적적자 1조223억
40.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송환'노력 지지부진
41. 적십자 회비환불 6년새 80배 급증!'적십자 믿지 못한다.'환불요청
42. 적십자, 기증받은 미술품 방치!
43. 장교·부서관 등 軍간부 건강상태 갈수록 악화
44. 제약회사 85% R&D투자가 판촉비보다 적어

II.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현황

III. 2007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현황

IV. 부 록

1.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 안명옥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현황
3. 안명옥 의원 발간 정책자료집 현황
4. 안명옥의원 보도자료 현황
5. 저출산·고령화 극복 관련 주요활동 현황



2007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현황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1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고 급증"	연 합 뉴 스	2007.09.12
2	안전사각지대 '산후조리원' 대책 시급하다	약 업 신 문	2007.09.12
3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감염사고 늘어"	m b n 매 일 경 제	2007.09.12
4	안명옥 의원, "산후조리원 안전사각지대"	메 디 게 이 트	2007.09.12
5	산모·아이 건강 위협하는 산후조리원	데 일 리 메 디	2007.09.12
6	'산후조리원, 안전사각지대'	아 시 아 투 데 이	2007.09.12
7	산후조리원 위생관리 여전히 '엉망진창'	e - 헬 스 통 신	2007.09.12
8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급증	한 겨 레	2007.09.12
9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고 급증"	동 아 일 보	2007.09.12
10	"아기가 위험하다"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급증	s b s 뉴 스	2007.09.12
11	안명옥 의원, 산후조리원 최근 감염·안전사례 공개	메 디 컬 투 데 이	2007.09.12
12	신생아 2명 사망, 산후조리원 위생·안전 밀바닥	위 드 뉴 스	2007.09.12
13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고 급증	K B S 뉴 스	2007.09.12
14	산후조리원, 산모·아이 건강 위협지대?	뉴 시 스	2007.09.12
15	산후조리원 안전대책 마련 시급	데 일 리 메 디	2007.09.13
16	산후조리원, 신생아에게 위험!	데 이 터 뉴 스	2007.09.13
17	심각한 '자살문제', 불교적 해법 없나	불 교 신 문	2007.09.15
18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K B S 뉴 스	2007.09.17
19	안명옥 의원 "추석 차례상 수입산이 점령"	노 컷 뉴 스	2007.09.17
20	농·수협이 수입 더 열올려...안명옥의원 자료 공개	서 울 경 제	2007.09.17
21	올해 추석 차례상도 수입산이 점령	이 타 임 스	2007.09.17
22	美쇠고기 등 수입 농수산물 추석 차례상 점령	헤 럴 드 경 제	2007.09.17
23	추석 차례상 수입산이 '점령'	아 시 아 투 데 이	2007.09.17
24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조 선 일 보	2007.09.17
25	안명옥 '추석 차례상 수입산이 점령'	중 앙 일 보	2007.09.17
26	농·수협이 '외제 차례상' 부추긴다	조 선 일 보	2007.09.17
27	추석 차례상도 수입산에 점령 위기	머 니 투 데 이	2007.09.17
28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연 합 뉴 스	2007.09.17
29	안명옥 의원 "추석차례상 수입산 점령 우려"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09.17
30	농·수협이 '외제 차례상' 부추긴다	뉴 시 스	2007.09.17
31	안명옥, "추석차례상 수입 수산물 점령"	Y T N	2007.09.17
32	차례상 수입산 '점령' 명태포99%, 홍어72%, 참조기45%	부 산 일 보	2007.09.17
33	수입산 때문에... "조상님 죄송합니다"	헤 럴 드 경 제	2007.09.17
34	수입산 차례상 부추기는 수협	문 화 일 보	2007.09.17
35	추석차례상도 수입 농·수산물이 점령!?	데 이 터 뉴 스	2007.09.17
36	'국내 농수산물 지키미'는 말뼌?	서 울 경 제	2007.09.17
37	올 추석 차례상 수입산이 점령	매 일 경 제	2007.09.17
38	한나라당 "정상회담서 남북보건의료협정문 체결"	뉴 시 스	2007.09.18
39	추석 차례상 수입 농축산물 '점령'	광 주 매 일 신 문	2007.09.18
40	한나라 "남북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나서야"	데 일 리 팜	2007.09.18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41	"북한 의료지원 위한 제도정비 시급"	K m a t i m e s	2007.09.18
42	한나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 촉구'	디 지 털 보 사	2007.09.18
43	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등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09.18
44	올 추석차례상도 수입산 점령	파 이 낸 설 뉴 스	2007.09.18
45	추석 차례상' 밀려나는 신토불이	서 울 신 문	2007.09.18
46	조상님, 신토불이 아닌 차례상 면목 없습니다	한 국 일 보	2007.09.18
47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료지원	서 울 경 제	2007.09.18
48	추석 차례상 수입산이 점령	전 남 일 보	2007.09.18
49	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결의안 국회 제출	매 일 경 제	2007.09.18
50	'보건의료 협력'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 돼야	건 치 신 문	2007.09.18
51	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결의안 국회 제출	연 합 뉴 스	2007.09.18
52	추석 차례상도 신토불이 실종될 판	대 구 신 문	2007.09.18
53	조상님! 올해 차례상도 중국산입니다	노 컷 뉴 스	2007.09.18
54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한 나 라 당	2007.09.18
55	안명옥 의원 발의건수가결건수 1위	K m a t i m e s	2007.09.20
56	17대 국회, 법안 가결률 10%대	내 일 신 문	2007.09.20
57	안명옥 의원, 급증하는 화장 수요 따른 시설확충 대책 시급	메 디 컬 투 데 이	2007.09.20
58	안명옥의원 124건 최다...이성구·박재완·김석준의원 順	문 화 일 보	2007.09.20
59	인천 화장률 전국 2위	인 천 신 문	2007.09.20
60	화장률은 계속 늘는데, 시설은 태부족	뉴 시 스	2007.09.20
61	식품/공산품 유통기한 표시 허점 투성이...	경 향 신 문	2007.09.21
62	충남·북 화장률 '전국 최하위', 시설부족 매장선호 원인	충 청 투 데 이	2007.09.21
63	노인들 "암보다 치매가 무서워"...예방 중요	S B S 뉴 스	2007.09.21
64	안명옥의원의 성실 성적표	연합뉴스 블로그	2007.09.21
65	안명옥 의원 17대 국회중 입법 최다	디 지 털 보 사	2007.09.22
66	'뛰는' 화장률 '기는' 화장시설	메 디 컬 투 데 이	2007.09.22
67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	m b n 뉴 스	2007.09.23
68	안명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가"	Y T N	2007.09.23
69	먹다가 사망까지...건강기능식품 '사람잡네'	조 선 일 보	2007.09.23
70	안명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가"	조 선 일 보	2007.09.23
71	건기식 부작용 보고 잇따라...올해만 268건	데 일 리 팜	2007.09.23
72	안명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가"	연 합 뉴 스	2007.09.23
7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주의필요" 안명옥 의원	파 이 낸 설 뉴 스	2007.09.23
74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	매 일 경 제	2007.09.23
75	안명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가"	K B S 뉴 스	2007.09.23
76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해마다 증가...주의 요망"	S B S 뉴 스	2007.09.23
77	국민 건강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범람	약 업 신 문	2007.09.25
78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	메 디 게 이 트	2007.09.26
79	독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인 천 신 문	2007.09.26
80	새터민 5명 중 1명, 결핵·간염 등 질환에 시달려	노 컷 뉴 스	2007.09.28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81	새터민 10명중 2명 질환에 시달려	파 이 낸 설 뉴 스	2007.09.28
82	방북자 75명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09.28
83	탈북 주민 건강상태 '열악'	연 합 뉴 스	2007.09.28
84	2004년 이후 방북자 75명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문 화 일 보	2007.09.28
85	북한 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세 계 일 보	2007.09.28
86	북한 탈주민, 부인과질환·결핵·성병 감염 '심각'	중 앙 일 보	2007.09.28
87	국회의원 안명옥,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뉴 스 와 이 어	2007.09.28
88	탈북주민 5명중 1명꼴 질병	국 민 일 보	2007.09.28
89	탈북 주민들 20%가 건강상태 열악	쿠 키 뉴 스	2007.09.28
90	2004년 이후 북한 방문자 75명 전염병 감염	경 향 신 문	2007.09.28
91	탈북자 건강은 빨간불인데 의료 혜택은 축소	데 일 리 N K	2007.09.28
92	탈북 주민 건강상태 '열악'	한 국 일 보	2007.09.28
93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건 치 신 문	2007.09.28
94	탈북자 건강상태 심각한 수준	서 울 경 제	2007.09.28
95	북한이탈 주민 건강 '적신타'	K m a t i m e s	2007.09.28
96	"2004년 이후 방북자 75명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세 계 일 보	2007.09.28
97	2004년 이후 방북자 75명 전염병 감염	m b n 뉴 스	2007.09.28
98	군납급식 식자재업체 위생 불량	디 지 털 보 사	2007.09.29
99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장병건강 위협	메 디 컬 투 데 이	2007.09.29
100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장병건강 위협	뉴 시 스	2007.09.29
101	국회의원 안명옥,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뉴 스 와 이 어	2007.09.30
102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대 구 신 문	2007.09.30
103	육군·해군 군납업체 28% 위생불량 적발	한 겨 레	2007.09.30
104	군납 식품업체 20%, 위생관리 '엉망'	데 이 터 뉴 스	2007.10.01
105	북한주민 면역력 대체로 낮아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02
106	〈정상회담〉 북한주민 면역력 대체로 낮아	연 합 뉴 스	2007.10.02
107	북한주민 면역력 대체로 낮아	중 앙 일 보	2007.10.02
108	건강기능식품 조심하세요!	레 저 산 업 신 문	2007.10.05
109	변종 성매매, 청소년·노인이 흔들린다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08
110	불법 성매매 적발 늘고 구속은 줄고	서 울 경 제	2007.10.08
111	안명옥 발의 1위, 김석준 가결 1위	이 코 노 미 스톱	2007.10.08
112	대구지역 성매매집결지 종업원 다시 증가	대 구 신 문	2007.10.08
113	인천 변종성매매업소 급증	인 천 일 보	2007.10.08
114	性 매매특별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헤 러 드 경 제	2007.10.08
115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 성매매 '성행'	아 시 아 투 데 이	2007.10.08
116	안마업소·사이버 성매매 여전	K B S 뉴 스	2007.10.08
117	성매매사범 3년새 3배 늘어	문 화 일 보	2007.10.08
118	변종 성매매 성행...성매매사범 3년새 3배 늘어	경 향 신 문	2007.10.08
119	정부 단속 불구 성매매 '진행중'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08
120	불법 성매매 적발 늘고 구속은 줄고	서 울 경 제	2007.10.08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121	"경제구역 내 사업 효율성 제고를"	인 천 일 보	2007.10.09
122	너도 나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는 바람에...	중 앙 일 보	2007.10.09
123	동네마다 '바이오 클러스터' ... 중복투자 심각	한 국 경 제	2007.10.09
124	"정부 부처 바이오클러스터 중복투자 우려"	문 화 일 보	2007.10.09
125	'바이오클러스터' 중복투자 심각	K M A t i m e s	2007.10.09
126	안마업소 등 변종성매매 기승	쿠 키 뉴 스	2007.10.09
127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각'	뉴 시 스	2007.10.09
128	국회의원 299명 입법 성적표: 안명옥 발의 1위	중 앙 일 보	2007.10.09
129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하다'	아 시 아 투 데 이	2007.10.09
130	'비급여' 쌍꺼풀 수술비 강남·북 최대 7.5배 차이	중 앙 일 보	2007.10.09
131	무분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양해야	건 치 신 문	2007.10.09
132	"바이오 클러스터 우후죽순 난립"	머 니 투 데 이	2007.10.09
133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까지 차이'	중 앙 일 보	2007.10.10
134	진단서 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병원별 지역별 비급여 수가 격차 심해	뉴 스 와 이 어	2007.10.10
135	진단서 수수료 천차만별...최대 66배 차	데 일 리 팜	2007.10.10
136	안명옥 "의료기관 비급여 시술비 공개해야"	메 디 게 이 트	2007.10.10
137	병원별 최대67배 천차만별 의료수가 논란	브 레 이 크 뉴 스	2007.10.10
138	쌍꺼풀 수술·임플란트 병원마다 천차만별, 어쩐지 했더니	헤 럴 드 경 제	2007.10.10
139	진단서 발급비 '천차만별'... 같은 동네도 67배 차이	노 컷 뉴 스	2007.10.10
140	병·의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데 일 리 메 디	2007.10.10
141	진단서 수수료 최고 66배 차이	한 국 경 제	2007.10.10
142	의료기관 진단서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약 업 신 문	2007.10.10
143	병원 진단서 발급비 최고 66배차	문 화 일 보	2007.10.10
144	'40세 이상 고령 산모 출산 증가세'	중 앙 일 보	2007.10.10
145	천차만별 임플란트·진단서, 병원따라 280만~17만원 차이	경 기 매 일	2007.10.10
146	서울시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쿠 키 뉴 스	2007.10.10
147	진단서 발급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K M A t i m e s	2007.10.10
148	병원 진단서 수수료 최대 66배 차이	서 울 경 제	2007.10.10
149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까지 차이"	S B S 뉴 스	2007.10.10
150	병원 진단서 발급비 '천차만별'	한 겨 레	2007.10.10
151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까지 차이"	K B S 뉴 스	2007.10.10
152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 차이"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0
153	강남·북 쌍꺼풀 수술비 차이는 얼마?	머 니 투 데 이	2007.10.10
154	"진단서 발급비용 최대 67배 차이"	M B C 뉴 스	2007.10.10
155	천차만별 임플란트·진단서, 병원따라 280만~17만원 차이	뉴 시 스	2007.10.10
156	병원마다 비보험, 의료비 제멋대로	헤 럴 드 경 제	2007.10.10
157	안명옥 "병원따라 비급여 수가 천차만별"	뉴 시 스	2007.10.10
158	진단서 발급비 최고 67배 차이	Y T N	2007.10.10
159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 최고67배 차이	경 향 신 문	2007.10.10
160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부족-중복투자' 심각	쿠 키 뉴 스	2007.10.11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161	[노인의 性 빛과 그림자]上. 꿈틀거리는 욕망...‘억눌린 性’ 야동으로 푼다	스 포 츠 칸	2007.10.11
162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e - 헬 스 통 신	2007.10.11
163	진단서 발급비 최고 67배차... 병원따라 천차만별	세 계 일 보	2007.10.11
164	청소년 성범죄 ‘초등생’까지 전이	중 앙 일 보	2007.10.13
165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하루 5명꼴’	중 앙 일 보	2007.10.14
166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매 일 경 제	2007.10.14
167	청소년 성범죄 ‘초등생’까지 전이	머 니 투 데 이	2007.10.14
168	초등생 가해자 갈수록 증가...미성년 성폭력자 하루 5명꼴	스 포 츠 칸	2007.10.14
169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뉴 스 와 이 어	2007.10.14
170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하루 5명꼴”	연 합 뉴 스	2007.10.14
171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m b n	2007.10.14
172	초·중·고 성범죄 위험수위..가해자 하루 5명꼴	뉴 시 스	2007.10.14
173	성폭행 가해자 연령대 점점 낮아져	조 선 일 보	2007.10.15
174	‘위장 결혼’ 적발 건수 2년 새 2.4배나 급증	헤럴드생생뉴스	2007.10.15
175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하루 5명꼴”	전국매일 인터넷 신문	2007.10.15
176	‘한국남성 중국여성’ 위장결혼 급증, 브로커는 ‘한국인’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5
177	미성년자 성폭력 ‘도 넘었다’	전 남 매 일	2007.10.15
178	위장결혼 2년간 2.4배 늘었다	헤럴드경제	2007.10.15
179	안명옥 의원 “최근 4년새 위장결혼 적발건수 5501건”	아시아경제신문	2007.10.15
180	위장결혼 매년 증가	스 포 츠 칸	2007.10.15
181	위장 결혼 급증세...“합법적 입국 방안 확대해야”	헤럴드 생생뉴스	2007.10.15
182	안명옥, “위장결혼 매년 증가”	Y T N	2007.10.15
183	안명옥 의원“위장결혼 매년 증가”	m b n	2007.10.15
184	위장결혼 매년 증가	중 앙 일 보	2007.10.15
185	“보건복지부.산하기관들 ‘몸집 불리기’ 안간힘”	매 일 경 제	2007.10.16
186	도내 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최다	전 북 도 민 일 보	2007.10.16
187	미성년자 성범죄 ‘위험수위’	전 라 일 보	2007.10.16
188	성범죄 징계 학생 경남이 전국 최다	경 남 일 보	2007.10.16
189	집단급식소 지하수 30%는 ‘세균오염’	중 앙 일 보	2007.10.16
190	여성장애인 성폭력 위험에 노출	내 일 신 문	2007.10.16
19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관리 사각지대	E - 헬 스 통 신	2007.10.17
192	[국감]안명옥의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	약 업 신 문	2007.10.17
193	“의료광고 심의건수 폭주, 사후관리도 엉망”	메 디 게 이 트	2007.10.17
194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데 일 리 메 디	2007.10.17
195	“복지부와 산하기관들 몸집 비대해져”	데 일 리 메 디	2007.10.17
196	이럴 수가... 못 먹을 지하수	문 화 일 보	2007.10.17
197	최근 4년간 의료광고위반 적발 1785건	데 일 리 팜	2007.10.17
198	“학교 등 급식소 지하수 30% 세균”	매 일 경 제	2007.10.17
199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관리대책 시급	에 이 블 뉴 스	2007.10.17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200	북한 약사, 1만3497명...1000명당 0.6명꼴	데 일 리 팜	2007.10.17
201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거침없이 몸집불린다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7
202	금강산 무룡교 사고, 국감서 응급의료체계 질타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7
203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지하수 28% 부적합 판정	K B S 뉴 스	2007.10.17
204	"포털 배너 등에 허위·과장 의료광고 방치"	노 컷 뉴 스	2007.10.17
205	흡피·포털배너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안명옥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K m a t i m e s	2007.10.17
206	복지부 산하기관들 몸집불리기 혈안...서비스 개선 뒷전	쿠 키 뉴 스	2007.10.17
207	국제결혼 여성 8% '불법체류자 전략'	건 치 신 문	2007.10.17
208	'들쭉 날쭉' 의료광고 사전심의	머 니 투 데 이	2007.10.17
209	[국감]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시급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7
210	[국감]급식용 지하수 식중독발생 주범	디 지 털 보 사	2007.10.17
211	"학교 등 급식소 지하수 30%서 세균·발암물질"	조 선 일 보	2007.10.17
212	왜 치협만 '의료광고 승인비율' 높다	건 치 신 문	2007.10.17
213	북한 방문자 응급이송체계 구축 시급	K m a t i m e s	2007.10.17
214	[국감]허위·과장광고 심의위원회 부실운영	디 지 털 보 사	2007.10.17
215	"병원 흡피, 포털 배너에 허위과장 의료광고 넘쳐"	조 선 일 보	2007.10.17
216	"복지부·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	데 일 리 팜	2007.10.17
217	[국감]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석·박사 465명	약 업 신 문	2007.10.17
218	[국감]식약청 '몸집불리기' 도 넘어	E B N 산 업 뉴 스	2007.10.17
219	"학교 등 급식소 지하수 30%서 세균·발암물질"	S B S 뉴 스	2007.10.17
220	('07국감)부랑인 입소자 10명중 9명은 환자	이 데 일 리	2007.10.17
221	"보건복지부·산하기관들 '몸집 불리기' 안간힘"	연 합 뉴 스	2007.10.17
222	"학교 등 급식소 지하수 30%서 세균·발암물질"	연 합 뉴 스	2007.10.17
223	"복지부 산하기관들 '몸집 불리기' 지나치다"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7
224	"학교 등 집단급식소 지하수 28%서 세균·발암물질"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7
225	부랑인시설 입소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뉴 시 스	2007.10.17
226	"국제결혼 이주여성, 8%가 불법체류자로 전략"	오 마 이 뉴 스	2007.10.17
227	"병원 흡피, 포털 배너에 허위과장 의료광고 넘쳐"	연 합 뉴 스	2007.10.17
228	[국감]급식·식자재업소 지하수 오염 심각	E B N 산 업 뉴 스	2007.10.17
229	학교 등 집단급식소 지하수 30% 세균오염	머 니 투 데 이	2007.10.17
230	[국감]급식소·식자재 업소 지하수 28% 오염	뉴 시 스	2007.10.17
231	[국감]허위·과장 의료광고 사각지대 규제조치 시급	뉴 시 스	2007.10.17
232	외국인 아내 8%는 불법체류자로 전략	머 니 투 데 이	2007.10.17
233	몸집 불리는 복지부...서비스는 '글썩'	파 이 낸 셸 뉴 스	2007.10.17
234	집단급식 지하수 28% 세균·발암물질 검출	서 울 경 제	2007.10.17
235	"급식소 지하수 30% 세균·발암물질 검출"	내 일 신 문	2007.10.17
236	학교 급식 음식만들때 쓰는 지하수 30%에 '세균·발암물질' [AM7]	문 화 일 보	2007.10.18
237	[국감]안명옥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8
238	병원감염 의료분쟁, OS 최다...NS, PS 順	쿠 키 뉴 스	2007.10.18
239	해외전염병 유입늘어	서 울 경 제	2007.10.18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240	병원 감염 의료분쟁 해마다 증가	Y T N	2007.10.18
241	지난해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전년대비 90% 증가	뉴 시 스	2007.10.18
242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사건 증가	K m a t i m e s	2007.10.18
243	'건강' 걱정하다 '병' 생긴다 안명옥의원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자료 분석	조 선 일 보	2007.10.18
244	안명옥 의원, 병원감염 의료분쟁 실태 조사... "年 40건 이상 발생"	데 일 리 메 디	2007.10.18
245	국회의원 안명옥,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뉴 스 와 이 어	2007.10.18
246	국회의원 안명옥,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뉴 스 와 이 어	2007.10.18
247	매년 사라지는 노인·장애인·치매환자 1만5천명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8
248	의료광고심의촉 운영부실 심각	대 전 일 보	2007.10.18
249	경인지역 지하수 '마실수가 없다'	경 기 신 문	2007.10.18
250	국회의원 안명옥,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뉴 스 와 이 어	2007.10.18
251	감염피해, 성형수술 중 가장 빈번	K m a t i m e s	2007.10.18
252	해외유입 전염병 증가세...검역시스템 손봐...	K m a t i m e s	2007.10.18
253	"알아도 병"	서 울 경 제	2007.10.18
254	국내 에이즈 환자 5000명 넘어... 공포 확산	한 국 일 보	2007.10.18
255	국감]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빈번	약 업 신 문	2007.10.18
256	병원감염 분쟁, 의료기관 책임 인정을 95%	메 디 게 이 트	2007.10.18
257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빈번	데 일 리 메 디	2007.10.18
258	[국감]병원감염 의료분쟁 매년 40건	디 지 털 보 사	2007.10.18
259	정보홍수시대 '건강염려증' 확산	머 니 투 데 이	2007.10.18
260	병원 감염 의료 분쟁 해마다 증가	K B S 뉴 스	2007.10.18
261	"주사 맞고 사망, 백내장수술후 실명... 병원감염 심각"	동 아 일 보	2007.10.18
262	병원감염 인한 의료분쟁, 연간 40건씩 발생	데 일 리 팜	2007.10.18
263	'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뉴 스 와 이 어	2007.10.18
264	급식소 지하수 28%, '발암물질 득실'	건 치 신 문	2007.10.18
265	안명옥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결과-CT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매 일 경 제	2007.10.19
266	안명옥 의원,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매 일 경 제	2007.10.19
267	먹을거리 위해사범, 적발 후 배짱영업 심각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9
268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한 수준"	노 컷 뉴 스	2007.10.19
269	'건강' 걱정하다 오히려 '병' 생긴다	중 앙 일 보	2007.10.19
270	병원·약국 마약관리 '허술', 대구 중구 한 병원선 1년반 사이 3차례 도난	쿠 키 뉴 스	2007.10.19
271	CT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불량'	쿠 키 뉴 스	2007.10.19
272	식품위생법 19차례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	쿠 키 뉴 스	2007.10.19
273	안명옥 "의료장비적정성 평가 필요"	K m a t i m e s	2007.10.19
274	안명옥의원, 부적합장비 전년대비 4.9% 늘어	데 일 리 메 디	2007.10.19
275	"식품위생법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	K B S 뉴 스	2007.10.19
276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는 '엉터리'	S B S 뉴 스	2007.10.19
277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는 부적합 판정	디 지 털 보 사	2007.10.19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278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노 컷 뉴 스	2007.10.19
279	국회의원 안명옥,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뉴 스 와 이 어	2007.10.19
280	국회의원 안명옥,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뉴 스 와 이 어	2007.10.19
281	병원 CT, 유방촬영장치 10대 중 1대 '불량'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19
282	"식품위생법 19차례나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	연 합 뉴 스	2007.10.19
283	'건강' 걱정하다 오히려 '병' 생긴다	뉴 시 스	2007.10.19
284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 발생	뉴 시 스	2007.10.19
285	[국감]"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9
286	[국감]안명옥 "CT 등 병원 특수장비 10대 중 1대 '불량'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19
287	먹을거리 위해사범, 적발 후 배짱영업 심각	뉴 시 스	2007.10.19
288	식품위생법 위반하고도 계속 영업"	m b n 경 제	2007.10.19
289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불량'	m b n 경 제	2007.10.19
290	[국감들여다보기] 행정처분 후 배짱영업	부 산 일 보	2007.10.19
291	병원감염 피해구제 매년 40건 발생!!	데 이 터 뉴 스	2007.10.19
292	안명옥 의원, "식품 위해사범에 '3진 아웃제' 적용해야"	뉴 스 원	2007.10.20
293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품질 엄격 관리'	디 지 털 보 사	2007.10.20
294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부실 논란 일축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0
295	불안한 식탁... 식품위생검사기관 전문성 부족	데 일 리 중 앙	2007.10.21
296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실해서야..43%기준 미달	매 일 경 제	2007.10.21
297	식품위생검사기관 43.8% 기준 미달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1
298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미달	뉴 스 와 이 어	2007.10.21
299	취업 노린 외국인 위장 결혼 급증	전 북 도 민 일 보	2007.10.21
300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철저"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1
301	안명옥 의원 "식품검사기관 44% 기준 미달"	데 일 리 팜	2007.10.21
302	식품위생검사기관 43.8% 기준 미달	뉴 시 스	2007.10.21
303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실해서야..43%기준 미달	연 합 뉴 스	2007.10.21
304	안명옥 의원 "식약청 언론대응 매뉴얼 운영"	연 합 뉴 스	2007.10.22
305	"수출식품 해외서 부적합, 폐기..국내에선 유통"	연 합 뉴 스	2007.10.22
306	[국감]'발암과자' 해외서 부적합 폐기..국내에선 유통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22
307	해외서 '못먹겠다' 거부한 식품 국내선 판매	뉴 시 스	2007.10.22
308	해외서 폐기된 수출식품 국내선 유통	m b n 경 제	2007.10.22
309	도라지·무 등 북한산 식품 불량·위장반입 심각	뉴 시 스	2007.10.22
310	[국감현장]"식약청, 언론보도 문제 삼지 말고 취재 보장해라'	뉴 시 스	2007.10.22
311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뉴 시 스	2007.10.22
312	"식약청, 언론대응 지침서 제작 운영"	문 화 일 보	2007.10.22
313	"북한산 수입식품 늘면서 부적합 비율도 증가"	연 합 뉴 스	2007.10.22
314	[국감]식약청 언론대응 지침서, 국감서 논란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22
315	해외수출 과자 망신	서 울 경 제	2007.10.22
316	식약청 국감 "먹거리 대책 부실 투성"	m b n 매 일 경 제 T V	2007.10.22
317	해외서 폐기된 발암물질 과자 국내서 유통	한 국 경 제 T V	2007.10.22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318	[전화연결]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 추진	한 국 경 제 T V	2007.10.22
319	해외수출 '튀짜 식품' 국내선 무방비 유통	경 향 신 문	2007.10.22
320	"식약청, 사후약방식 대처 근절돼야"	뉴 시 스	2007.10.22
321	거꾸로 가는 보건행정	한 국 일 보	2007.10.22
322	"해외 폐기 유명과자 제품 국내 유통"	Y T N	2007.10.22
323	해외서 부적합 국산과자, 국내선 유통	머 니 투 데 이	2007.10.22
324	해외수출 발암물질 과자 국내서도 유통 논란	노 컷 뉴 스	2007.10.22
325	안명옥 의원 "식약청 언론대응 매뉴얼 운영"	동 아 일 보	2007.10.22
326	해외서 '못먹겠다' 거부한 식품 국내선 판매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2
327	식품위생검사기관 43.8%는 기준미달	뉴 스 원	2007.10.22
328	안명옥 의원 "식약청 언론대응 매뉴얼 운영"	매 일 경 제	2007.10.22
329	해외서 '못먹겠다' 거부한 식품 국내선 판매	경 기 매 일	2007.10.22
330	'술의 전쟁' 식약청-국세청, 주류 관리 놓고 대립각	노 컷 뉴 스	2007.10.22
331	"북한산 수입 식품 늘면서 부적합 비율도 증가"	K B S 뉴 스	2007.10.22
332	식품위생검사기관 43.8% 기준 미달	노 컷 뉴 스	2007.10.22
333	부적합 북한산 수산물 급증	문 화 일 보	2007.10.22
334	"북한산 수입식품 늘면서 부적합 비율도 증가"	매 일 경 제	2007.10.22
335	[국감]해외서 부적합 폐기 식품..국내선 버젓이 유통	E B N 산 업 뉴 스	2007.10.22
336	"북한산 수입식품 늘면서 부적합 비율도 증가"	S B S 뉴 스	2007.10.22
337	[월요칼럼]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한다	K m a t i m e s	2007.10.22
338	"발암 과자·기생충 김치" 국내에선 활개	S B S 뉴 스	2007.10.22
339	식약청 "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VS 국세청 "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2
340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해야	K m a t i m e s	2007.10.22
341	"수출식품 해외서 부적합, 폐기... 국내에선 유통"	한 국 일 보	2007.10.22
342	"식약청, 사후약방식 대처 근절돼야"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2
343	식품위생검사기관 44% 기준 미달	머 니 투 데 이	2007.10.22
344	내국인 역차별... 수출막힌 불량식품 국내 유통...	한 국 일 보	2007.10.22
345	수출식품 해외서 부적합, 국내선 유통	대 한 일 보	2007.10.23
346	CT·초음파 등 검진장비 불량률 높고, 검진인력 양성 미흡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3
347	[AM7]해외서 쫓겨난 발암물질 과자	문 화 일 보	2007.10.23
348	급식소 30%서 발암물질 나와	대 전 일 보	2007.10.23
349	특 하면 병원 오진...이유 있었네	뉴 시 스	2007.10.23
350	국민연금·건보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구멍'	연 합 뉴 스	2007.10.23
351	10명 중 1명만 "노후준비 충분"	연 합 뉴 스	2007.10.24
352	[국감]국민 90% "노후준비 불충분"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24
353	건보공단 등 전산망 보안 '허술'	m b n 매 일 경 제	2007.10.24
354	국민연금·건강보험·심평원 '모의 해킹'에 다 뚫렸다	뉴 시 스	2007.10.24
355	10명 중 1명만 "노후대책 충분"	m b n 매 일 경 제	2007.10.24
356	[국감]건보공단·국민연금 등 보안전산망 '허술'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24
357	국민 90% 노후대책 불충분	파 이 낸 설 뉴 스	2007.10.24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358	"국민연금 · 건보공단 · 심평원 보안전산망 '구멍'"	노 컷 뉴 스	2007.10.24
359	"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에 허점"	m b n 매 일 경 제	2007.10.24
360	국민 90% "노후준비 불충분"	한 국 경 제 T V	2007.10.24
361	('07국감)국민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못 믿겠다"	이 데 일 리	2007.10.24
362	"국민연금·건보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무방비"	노 컷 뉴 스	2007.10.24
363	"국민연금 못믿겠다" 신뢰도 '바닥'	머 니 투 데 이	2007.10.24
364	연금공단 등 해커 공격에 무방비 노출	파 이 낸 설 뉴 스	2007.10.24
365	"노령연금 수령액 대구 7위, 경북 13위"	매 일 신 문	2007.10.24
366	국민연금공단 등 보안전산망 무방비	한 국 경 제 T V	2007.10.24
367	"건보공단·연금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구멍'"	경 향 신 문	
368	국민연금을 어찌할꼬...덩치 커지니 말썽도 많아..	파 이 낸 설 뉴 스	
369	건보·연금공단 해킹에 무방비	매 일 경 제	
370	국민연금 믿을 수 없어...신뢰도 12.8%에 불과	데 이 터 뉴 스	
371	中식품 북한산 둔갑 잦아...안명옥 의원 밝혀	농 민 신 문	2007.10.24
372	국민연금·건보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구멍'	중 앙 일 보	2007.10.24
373	도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배짱으로 산다"	경 기 신 문	2007.10.24
374	10명 중 1명만 '노후준비 충분'	중 앙 일 보	2007.10.24
375	연금·건보·심평원 보안전산망 '허술'	디 지 털 보 사	2007.10.24
376	'건강' 걱정하다 오히려 '병' 생긴다	건 치 신 문	2007.10.24
377	('07국감)국민연금·건보공단 보안망 다 뚫렸다	이 데 일 리	2007.10.24
378	10명중 1명만 "노후든든"	헤 럴 드 경 제	2007.10.24
379	공단·심평원 전산망 해커에 뚫려	K m a t i m e s	2007.10.24
380	국민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못 믿겠다"	조 선 일 보	2007.10.24
381	국민연금·건보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허술	K B S 뉴 스	2007.10.24
382	국민연금 못 믿겠다..국민신뢰도 12%로 추락	중 앙 일 보	2007.10.24
383	뺑 뚫린' 국민 질병 재산 정보	머 니 투 데 이	2007.10.24
384	국민연금·건보공단 보안망 '구멍'	내 일 신 문	2007.10.24
385	국정감사 주요이슈	매 일 경 제	2007.10.25
386	제2의 인생이 기회가 되려면	한 겨 레	2007.10.25
387	('07국감)건보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조취	이 데 일 리	2007.10.25
388	건보 직원, 盧대통령 정보도 엿봤다	머 니 투 데 이	2007.10.25
389	건보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내 일 신 문	2007.10.25
390	건보공단 기강해이 '중병'	세 계 일 보	2007.10.25
391	"재미로"...건보공단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열람	S B S 뉴 스	2007.10.25
392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심평원, 보안망 '구멍 송송'	총 청 투 데 이	2007.10.25
393	건보 부당이득 환수금 3년새 2배 늘어	K M A t i m e s	2007.10.25
394	무너진 기강·도덕성 마비... 병든 건보공단	이 타 임 즈	2007.10.25
395	'요양보험' 외면어쩌나	코 메 디 닷 컴	2007.10.25
396	[국감]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디 지 털 보 사	2007.10.25
397	식당김치=중국산 과연 안전할까	중 앙 일 보	2007.10.25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398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공단 직원 도덕적 해이 극치"	메 디 게 이 트	2007.10.25
399	노인 45%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않겠다"	K M A t i m e s	2007.10.25
400	중국산 불량식품 '북한산으로 둔갑'	건 치 신 문	2007.10.25
401	불법 개인정보 열람 심각한 '수준'	아 시 아 투 데 이	2007.10.25
402	중증 장애인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 드 뉴 스	2007.10.25
403	[국감]健保,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디 지 털 보 사	2007.10.25
404	건보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중 앙 일 보	2007.10.25
405	건보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S B S 뉴 스	2007.10.25
406	고위자과정, 수업보다는 인맥쌓기?	K M A t i m e s	2007.10.25
407	건보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노 컷 뉴 스	2007.10.25
408	[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약 업 신 문	2007.10.25
409	시범사업 참여자도 외면하는 장기요양보험	메 디 게 이 트	2007.10.25
410	국민연금 운용 부실 ... 4조 떼었다	총 청 투 데 이	2007.10.25
411	국민연금공단 '부실관리·방만경영' 이지경까지	한 국 경 제	2007.10.25
412	시설 부족에 고객 외면까지" 요양보험 어쩌나	데 일 리 메 디	2007.10.25
413	'건강보험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중 앙 일 보	2007.10.25
414	공단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조회	데 일 리 판	2007.10.25
415	건보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연 합 뉴 스	2007.10.25
416	[국감]건보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아 시 아 경 제	2007.10.25
417	건보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m b n 경 제	2007.10.25
418	"노무현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Y T N	2007.10.25
419	"건보공단, 전·현직 대통령과 연예인 정보 무단열람"	조 세 일 보	2007.10.25
420	"건보 직원, 盧대통령·배용준 등 개인정보 무단 열람"	경 향 신 문	2007.10.25
421	식당김치=중국산? 과연 안전할까	뉴 시 스	2007.10.25
422	[국감 들여다 보기] 건보직원, 대통령 정보도 열람	부 산 일 보	2007.10.25
423	"건강보험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연 합 뉴 스	2007.10.25
424	무너진 기강·도덕성 마비... 병든 건보공단	문 화 일 보	2007.10.25
425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대통령 정보도 무단조회	세 계 일 보	2007.10.25
426	건보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내 일 신 문	2007.10.25
427	[국감 2007] 건보공단, 노대통령 정보도 조회	파 이 낸 설 뉴 스	2007.10.25
428	국정감사 주요이슈 -건보공단, 盧대통령 개인정보 무단 조회	매 일 경 제	2007.10.25
429	[200자 뉴스]건보, 대통령 정보도 열람	경 향 신 문	2007.10.25
430	[아침햇살] 제2의 인생이 기회가 되려면	한 겨 레	2007.10.25
431	[국감]건보공단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 조회	뉴 시 스	2007.10.25
432	건보공단 기강해이 '중병'	세 계 일 보	2007.10.25
433	건보직원들 대통령 개인정보도 엿봐	동 아 일 보	2007.10.25
434	'매 맞는 남편', 학대받는 노인·아동 앞질렀다	연 합 뉴 스	2007.10.26
435	'매 맞는 남편' 늘어...가정폭력 심각	m b n 경 제	2007.10.26
4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벌써부터 먹구름	뉴 시 스	2007.10.26
437	"매 맞는 남편, 노인·아동 학대 앞질러"	K B S 뉴 스	2007.10.26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4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벌써부터 '먹구름'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26
439	더 강해진 '아내 파워'	한 국 일 보	2007.10.26
440	학대받는 노인·아동보다 '매맞는 남편'이 더 많아	서 울 경 제	2007.10.26
441	건보직원들 대통령 개인정보도 엿봐	동 아 일 보	2007.10.26
442	'매 맞는 남편', 학대받는 노인·아동 앞질러	노 컷 뉴 스	2007.10.26
443	'매 맞는 남편', 학대받는 노인·아동 앞질렀다	중 앙 일 보	2007.10.26
444	매맞는 남편 늘었다	한 겨 레	2007.10.26
445	'매 맞는 남편' 늘어...가정폭력 심각	매 일 경 제	2007.10.26
446	남편학대 > 노인·아동 학대	문 화 일 보	2007.10.26
4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벌써부터 먹구름	뉴 시 스	2007.10.26
448	"아내 학대 여전히 압도적...매맞는 남편 증가"	아 시 아 경 제	2007.10.26
449	매 맞는 남편 노인학대 앞질렀다	뉴 시 스	2007.10.26
450	'매 맞는 남편' 크게 늘었다...노인·아동보다 많아	매 일 신 문	2007.10.26
451	"매 맞는 남편, 노인·아동학대보다 많아"	Y T N	2007.10.26
452	'매맞는 남편' 신고 노인·아동학대 추월	부 산 일 보	2007.10.26
453	'매 맞는 남편' 는다...가정폭력 신고건수 노인보다 많아	스 포 츠 칸	2007.10.26
454	가정폭력 '줄고', 매 맞는 남편 '늘고'	데 이 터 뉴 스	2007.10.26
455	국내 병원 내성균 득실...혈액 감염자의 30% 사망	중 앙 일 보	2007.10.27
456	혈액 공급, 대학생·고교생·군인이 감당	Y T N	2007.10.28
457	"피가 모자라..." 혈액 적정재고량 1/3	뉴 시 스	2007.10.28
458	정신요양시설 들어가면 5년 입원은 예사	동 아 일 보	2007.10.28
459	단체헌혈 급감, 혈액부족 비상	세 계 일 보	2007.10.28
460	혈액 공급, 대학생·고교생·군인이 감당	K B S 뉴 스	2007.10.28
461	대학생·고교생·군인 '혈액공급원'	전 남 일 보	2007.10.28
462	혈액관리 '경계' 주의보...재고부족 원인	데 일 리 팜	2007.10.28
463	"피가 모자라..." 혈액제고량 '경계'수준	메 디 게 이 트	2007.10.28
464	[긴급속보] 혈액 적정재고량 1/3, 긴급 수혈 환자 하루하루 넘기고 있어	마이 뉴스 코리아	2007.10.28
465	단체헌혈 급감... 혈액부족 '비상'	세 계 일 보	2007.10.28
466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노 컷 뉴 스	2007.10.29
467	정신시설 입원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메 디 게 이 트	2007.10.29
468	정신요양시설 들어가면 5년 입원은 예사	조 선 일 보	2007.10.29
469	정신 요양시설 입원자 60% 5년 이상 장기 입원	K B S 뉴 스	2007.10.29
470	"의료기관평가, 평가기준 개선 필요"	데 일 리 메 디	2007.10.29
471	'피가 마른다'...적정재고량 27% 불과	K M A t i m e s	2007.10.29
472	혈액재고량 적정수준의 27% 불과	디 지 털 보 사	2007.10.29
473	정신요양시설은 환자 장기 수용소?	데 일 리 중 앙	2007.10.29
474	정신병원 환자 60% 입원기간 5년 이상	디 지 털 보 사	2007.10.29
475	정신요양시설 환자 60%가 5년 이상 장기입원자	쿠 키 뉴 스	2007.10.29
476	정신병원 5년이 기본	서 울 경 제	2007.10.29
477	"보수교육 내실 위해 자율징계권 필요"	K M A t i m e s	2007.10.29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478	"정신과 정액수가제 인권침해"	K M A t i m e s	2007.10.29
479	정신질환자 60%, 5년이상 장기입원	내 일 신 문	2007.10.29
480	주소이전·연락두절,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 심각	뉴 시 스	2007.10.29
481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경 향 신 문	2007.10.29
482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노 컷 뉴 스	2007.10.29
483	정신요양시설 5년 이상 입원 60%	m b n 사 회	2007.10.29
484	가족과 연락두절...정신요양원환자, 장기입원문제 심각	데일리서프라이즈	2007.10.29
485	정신요양시설 들어가면 5년 입원은 예사	연 합 뉴 스	2007.10.29
486	남편 학대가 노인 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 5천 명	고 뉴 스	2007.10.29
487	윗물부터 썩어빠진 복지행정..."국민 분노"	이 지 폴 뉴 스	2007.10.29
488	정신요양시설 환자들, 대다수 가족에 버림받고 장기 입원	스 포 츠 조 선	2007.10.29
489	정신질환자 22% 20년 이상 입원	총 청 투 데 이	2007.10.30
490	국공립병원 재정 빨간불...1조188억 적자	매 일 경 제	2007.10.30
491	안명옥 의원 "면허갱신·재등록제 도입해야"	메 디 게 이 트 뉴 스	2007.10.30
492	혈액 비상! 적정재고량의 '27%수준'	건 치 신 문	2007.10.30
493	가정폭력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건 치 신 문	2007.10.30
494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5%가 "이용의사 없어"	건 치 신 문	2007.10.30
495	국공립병원 빛에 '허덕'..부채 1조188억 원	조 선 일 보	2007.10.30
496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검토해야"	쿠 키 뉴 스	2007.10.30
497	빛투성이 국·공립병원...부채·적자 2조원	메 디 게 이 트 뉴 스	2007.10.30
498	국공립병원 빛더미...서울대병원 부채 1567억	데 일 리 팜	2007.10.30
499	123개 국공립병원 적자·부채 1조원대	데 일 리 메 디	2007.10.30
500	국·공립병원은 '빛' 투성이 병원	약 업 신 문	2007.10.30
501	국공립병원 '부채' 눈덩이...1조188억원에 달해	큐 키 뉴 스	2007.10.30
502	부채에 허덕이는 국공립병원...누적적자 1조188억원	노 컷 뉴 스	2007.10.30
503	탈북자 1만명 시대...실직등 사회적 냉대 여전	서 울 경 제	2007.10.30
504	국공립병원 빛에 허덕인다...서울대병원 적자 가장 커	매 일 경 제	2007.10.30
505	국공립병원 적자 심각	서 울 경 제	2007.10.30
506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파 이 낸 셸 뉴 스	2007.10.30
507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재정 빨간불'	경 향 신 문	2007.10.30
508	국·공립병원은 1조클럽? 부채·누적적자 1조	뉴 시 스	2007.10.30
509	국공립병원 재정 빨간불...부채 1조188억원	아 시 아 경 제 신 문	2007.10.30
510	국공립병원 재정 빨간불...1조188억 적자	m b n 경 제	2007.10.30
511	국·공립병원 돈먹는 하마...부채만 1조 이상	이 지 폴 뉴 스	2007.10.30
512	北,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율 29%	연 합 뉴 스	2007.10.30
513	적십자사에 기증한 미술품, 서고에서 '쿨쿨'	조 선 일 보	2007.10.31
514	적십자 회비 환불요구 급증	매 일 경 제	2007.10.31
515	'적십자 회비 돌려달라' 6년새 80배 급증	메 디 컬 투 데 이	2007.10.31
516	"적십자 회비 돌려주세요" 급증하는 환불요청	머 니 투 데 이	2007.10.31
517	회원 감소 속 적십자 회비 환불요구도 급증	노 컷 뉴 스	2007.10.31

번호	제 목	언 론 사	작 성 일
518	적십자 회비 돌려주오"..적십자 신뢰 저하	조 선 일 보	2007.10.31
519	공단, 개인정보 유출 위험 '심각'	건 치 신 문	2007.10.31
520	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건 치 신 문	2007.10.31
521	연금공단·건보공단 등 '보완전산망 위태'	건 치 신 문	2007.10.31
522	건보 '범죄행위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건 치 신 문	2007.10.31
523	복지부 고위자과정 '인맥쌓기용 전략'	건 치 신 문	2007.10.31
524	국공립병원 국고보조 "밀빠진 독에 물 붓기"	건 치 신 문	2007.10.31
525	[국감]적십자 회비환불 6년새 80배 급증	디 지 털 보 사	2007.10.31
526	외제차 한대 값?임플란트의 위력	조 선 일 보	2007.10.31
527	회원 감소 속 적십자 회비 환불요구도 급증	노 컷 뉴 스	2007.10.31
528	적십자회 환불요청 급증	파 이 낸 셜 뉴 스	2007.10.31
529	적십자 회비 환불액 6년새 35배 늘어	머 니 투 데 이	2007.10.31
530	적십자 회비 환불요구 급증	m b n 사 회	2007.10.31
531	[국감]"적십자회비 도로내놔" 환불요청 급증	아 시 아 경 제	2007.10.31
532	"적십자회비 돌려주오" 적십자 신뢰 저하?	연 합 뉴 스	2007.10.31

IV

부 록



1.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007년 11월 1일 현재 127건)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 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0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국회운영	
	05/31/2004	07/05/2004					5/4/2005	5/4/2005
1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10/2004	07/05/2004	09/17/2004	12/24/2004	⇒대안폐기		12/29/2004	대안폐기
2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회개혁특별위원회	
	06/28/2004	07/05/2004	8/31/2005	⇒행자위 소관(1/19/06 현재 계류중)			7/29/05개정	내용반영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6/28/2004	09/10/2004		⇒행자위 소관(1/19/06 현재 계류중)			8/4/05개정	
4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7/20/2004	07/22/2004	09/17/2004	12/24/2004	12/28/2004	12/28/2004	12/29/2004	수정가결
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산업자원위원회	
	07/20/2004	07/22/2004	09/13/2004	09/15/2004	09/21/2004	09/21/2004	09/23/2004	수정가결
6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안전마개)						보건복지위원회	
	07/20/2004	07/22/2004	09/17/2004		6/22/2005	6/22/2005	6/23/2005	수정가결
7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대안)*05.5.18공포,9.1시행						보건복지위원회	
	09/04/2004	09/07/2004	11/26/2004	4/18/2005	4/25/2005	4/25/2005	4/26/2005	대안폐기
8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0/21/2004	10/22/2004	11/17/2004	12/01/2004	-	-	12/09/2004	대안폐기
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위원회	
	2/2/2005	2/3/2005	4/20/2005				11/16/2005	내용반영
1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4/2005	2/7/2005	4/20/2005	2/20/2006	-	-	4/15/2006	대안폐기
11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4/8/2005	4/12/2005	6/14/2005				11/09/2006	대안폐기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4/8/2005	4/12/2005	6/14/2005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4/15/2005	4/16/2005	6/13/2005	6/17/2005	6/22/2005	6/22/2005	6/23/2005	대안폐기
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4/21/2005	4/22/2005	6/18/2005	6/22/2005	6/28/2005	6/28/2005	6/29/2005	수정가결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16/2005	5/17/2005	6/13/2005	9/18/2006				대안폐기
16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7/2005	6/9/2005	10/21/2005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16/2005	6/17/2005	11/17/2005	4/14/2006	-	-	8/29/2006	대안폐기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1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6/16/2005	6/17/2005	9/7/2005					
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6/16/2005	6/17/2005	9/7/2005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6/16/2005	6/17/2005	11/23/2005					
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6/16/2005	6/17/2005	9/7/2005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7/18/2005	7/19/2005	11/17/2005					
23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7/21/2005	7/25/2005	10/21/2005					
24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7/21/2005	7/25/2005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7/27/2005	7/28/2005	11/22/2005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8/5/2005	8/8/2005	11/30/2005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8/5/2005	8/8/2005	11/30/2005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8/12/2005	8/16/2005	11/1/2005	2/14/2006	-	-	4/10/2006	폐기
2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8/18/2005	8/19/2005	10/21/2005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0/21/2005	10/25/2005	11/24/2005	09/18/2006			12/7/2006	대안폐기
31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10/31/2005	11/2/2005	4/17/2006					
3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11/4/2005	11/7/2005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1/2005	11/22/2005	4/17/2006					
3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11/23/2005	11/24/2005	4/18/2006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11/23/2005	11/24/2006	9/14/2006					
36	수역사범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23/2005	11/24/2005	11/27/2006	11/29/2006	12/06/2006	12/06/2006	12/06/2006	수정가결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23/2005	11/24/2005	11/27/2006	11/29/2006	12/06/2006	12/06/2006	12/06/2006	대안폐기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 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38	기르느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23/2005	11/24/2005	11/27/2006	11/29/2006	12/06/2006	12/06/2006	12/06/2006	대안폐기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23/2005	11/24/2005	4/18/2006	4/20/2006	-	-	9/8/2006	대안폐기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23/2005	11/24/2005	4/18/2006	4/20/2006	-	-	8/29/2006	대안폐기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18/2006				9/20/2007	수정가결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18/2006				9/20/2007	수정가결
4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20/2007	수정가결
4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20/2007	수정가결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18/2006				9/20/2007	대안폐기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18/2006					
4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18/2006					
4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20/2007	수정가결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20/2007	수정가결
5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24/2005	11/25/2005					9/20/2007	대안폐기
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1/24/2005	11/25/2005	4/6/2006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1/24/2005	11/25/2005	9/6/2006					폐기
5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1/24/2005	11/25/2005	4/17/2006					
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11/24/2005	11/25/2005						
5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12/14/2005	12/15/2005						
56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12/14/2005	12/15/2005	4/18/2006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2/29/2005	12/30/2005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2/29/2005	12/30/2005	4/6/2006					
5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1/10/2006	1/11/2006	2/14/2006	4/25/2006	-	-	8/29/2006	대안폐기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1/20/2006	1/23/2006	4/18/2006					
61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1/20/2006	1/23/2006	4/18/2006					
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2/10/2006	2/13/2006					9/20/2007	폐기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10/2006	2/13/2006	4/17/2006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4/2006	2/28/2006	4/18/2006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3/6/2006	3/7/2007	4/18/2006	9/15/2006	-	-	11/09/2006	폐기
6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4/7/2006	4/11/2006	9/20/2006				9/28/2006	폐기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4/7/2006	4/11/2006					12/07/2006	대안폐기
6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4/11/2006	4/12/2006	9/21/2006	9/21/2006	대안폐기	-		
69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						교육위원회	
	4/19/2006	4/20/2006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4/2006	5/8/2006	06/28/2006	-	-	-	11/30/2006	대안폐기
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18/2006	5/19/2006	9/7/2006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18/2006	5/19/2006	9/7/2006					
73	국민요양보장법						보건복지위원회	
	5/18/2006	5/19/2006	9/22/2006	2/22/2007	-	-	04/02/2007	대안폐기
74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23/2006	5/24/2006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5/26/2006	5/26/200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5/26/2006	5/26/2006	6/23/2006	02/07/2007				폐기
7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5/26/2006	5/26/2006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7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시법위원회	
	5/26/2006	5/26/2006	11/28/2006	07/02/2007				대안폐기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5/26/2006	5/26/2006	6/23/2006	02/07/2007	-	-		폐기
8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5/26/2006	5/26/2006	9/14/2006					
8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26/2006	5/26/2006	9/18/2006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5/26/2006	6/21/2006						폐기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5/26/2006	5/26/2006						폐기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5/26/2006	5/26/2006	02/22/2007	02/22/2007	대안폐기	-		
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5/26/2006	5/26/2006	9/21/2006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5/26/2006	5/26/2006						폐기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5/26/2006	5/26/2006	9/21/2006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12/2006	6/21/2006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6/12/2006	6/21/200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7/24/2006	7/26/2006	09/14/2006	-	-	-	12/22/2006	폐기
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7/24/2006	7/26/2006	02/21/2007	02/21/2007	-	-		폐기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7/24/2006	7/26/2006	9/14/2006	02/22/2007				폐기
9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8/22/2006	8/24/2006	9/20/2006					
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8/22/2006	8/24/2006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9/19/2006	9/20/2006	02/06/2007	02/06/2007	대안폐기	-	-	
9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9/19/2006	9/20/2006						
97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9/19/2006	9/20/2006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 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98	자살예방법안						보건복지위원회	
	9/19/2006	9/20/2006	02/06/2007					
99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0/10/2006	10/12/2006	12/12/2006				4/16/2007	폐기
1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0/10/2006	10/12/2006	11/28/2006					
10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2/04/2006	12/05/2006						
10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2/05/2006	12/06/2007						
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사업위원회	
	12/05/2006	12/06/2007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사업위원회	
	12/05/2006	12/06/2007						
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사업위원회	
	12/05/2006	12/06/2007						
106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2/11/2006	12/13/2006	2/22/2007					
107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2/11/2006	12/13/2006	2/22/2007					
1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2/29/2006	01/02/2007						
109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8/2007	3/5/2007						
1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위원회	
	2/28/2007	3/2/2007						
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8/2007	3/8/2007						
11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03/15/2007	03/16/2007	4/17/2007	6/15/2007				대안폐기
1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3/15/2007	03/16/2007						
1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03/15/2007	03/16/2007						
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03/30/2007	04/03/2007						
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03/30/2007	04/03/2007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03/30/2007	04/03/2007						

번호	법 안 명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위원회 회부일	상임위 제안설명 (상정일)	상임위통과 (의결일)	법사위 제안설명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1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3/30/2007	04/03/2007						
1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03/30/2007	04/03/2007						
1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04/05/2007	04/16/2007						
1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4/05/2007	04/16/2007						
122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5/09/2007	05/10/2007						
1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5/28/2007	05/21/2007						
124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 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위원회	
	05/18/2007	05/21/2007						
1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12/2007	06/14/2007						
1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07/14/2007	07/16/2007						
1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09/05/2007	09/06/2007						

2. 안명옥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현황

(2007년 11월 1일 현재 57건)

번호	행사일 (일/월/년)	시간	행 사 명	장 소	주최/주관
1	07/02/04	10:30	한나라당정책위원회“저출산대책대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저출산문제,어떻게대응할것인가?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저출산·고령화 TF)
2	08/25/04	14시	연명치료중단의정책적대토론회 -보라매병원사건을중심으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의사협회
3	09/01/04	10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헌 정 기 념 관 강 당	*주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저출산·고령화 T/F)
4	09/15/04	14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개최	헌 정 기 념 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5	11/06/04	14시	한국다발성경화증 환우회 정기세미나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 한국다발성경화증 환우회(KMSS)
6	11/26/04	10시	“저출산과 아동·여성·인구” 토론회 개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7	02/14/05	18시	"올바른청소년생명교육을위한 <제니,주노>국회특별사사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쇼이스트(주),컬처캡미디어(주)
8	02/28/05	15시	“저출산·고령화사회와노인의학”대토론회개 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노인의학회
9	05/03/05	10시	저출산사회에서 신생아 치료의 문제점과 대책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신생아학회
10	05/04/05	11시 ~13시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 선정식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국회의원 간담회	본 귀 빈 식 당	*주최:열린우리당,한나라당저출산·고 령사회대책T/F *주관: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1	05/25/05	11시	제2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날 기념식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또공익재단
12	06/17/05	15시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 시사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한국교육방송공사,(주)캐릭터플 랜,(유)미라클상사
13	06/24/05	10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한민족평화네트워크 *주관:국회의원안명옥
14	07/15/05	9시~ 12시30분	총기 난사사건을 통해 본 軍 정신보건 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원 박진
15	08/10/05	10시 ~12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원 진영
16	08/22/05	7시30 분~9시	정신질환 및 자살을 경감을 위한 간담회	의 원 회 관 간 담 회 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번호	행사일 (일/월/년)	시간	행 사 명	장 소	주최/주관
				(1 0 4 호)	
17	09/01/05	10시	저출산·고령화 문제 연구에세이 발표회 및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원 임태희
18	09/09/05	14시 ~19시	귀의날 행사 -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	09/21/05	10시 ~12시	치매의날 기념 심포지엄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대한신경과학회, 대한치매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 한국치매협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20	10/10/05	14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 별위원회 *주관:대한의사협회
21	10/25/05	14시	유방암 예방을 위한 국민 홍보대회(유방암환우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기념식)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한국유방 암학회
22	10/28/05	15시	보행자 작동 신호기 도입 확대 방안 공청회	국 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한국교통연구원
23	11/09/05	10시	WIN-Korea 총회 및 2005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홍창선국회의원, 안명옥국회의원
24	11/10/05	10시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	여 의 도 연 구 소 회 의 실	*주최:여의도연구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25	11/28/05	14시	임상영양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의 원 회 관 1 0 4 호	*영양사협회
26	11/30/05	14시	저출산·고령화시대의국민영양관리대책대 토론회- II.노년기의영양관리	국 회 도 서 관 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27	12/05/05	15시	자궁경부암예방정책포럼	본 청 귀 빈 식 당	*부인종양학회, 콜포스코피학회
28	12/13/05	12시	여성보좌진 대상 강의	의 원 회 관 1 0 4 호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29	12/20/05	10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여의도연구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30	03/14/06	10시	"튼튼아이 건강미래"를 위한 꿈의 출발, 전문가 드림팀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한나라당드림스타트국회의원안 명옥 *주최:대한소아과학회
31	03/17/06	14시 30분	폐경여성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대한폐경학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32	04/10/06	10시	아동아토피제대로알고대처하자 -과자,가공식품,패스트푸드의위해논란:현 황과대책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33	05/02/06	10시	아동아토피제대로알고대처하자 -과자,가공식품,패스트푸드의위해논란:현 황과대책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피부과학회아토피피부염학 회
34	06/8/06	7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 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대한

번호	행사일 (일/월/년)	시간	행 사 명	장 소	주최/주관
					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35	06/16/06	10시	초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가정학회,가정을건강하게 하는시민의모임
36	06/29/06	7시30분 ~9시	의료경쟁력연구센터포럼 *주제:의료산업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 토론회	본 귀 빈 식 당	*주최: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관:대일리메디,메디칼업저버,의협 신문,국회의원안명옥
37	7/6/06	9시30분	E-Health 산업 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메디칼업저버 *주관:국회의원안명옥
38	7/26/06	15시	여성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부인종양학회,대한산부인 과학회,한국걸스카우트연맹
39	7/27/06	13시30분	2006년여성과함께하는원자력심포지엄 -방사선조사식품안전한가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win-korea(한국여성원자력전문 인협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40	8/16/06	14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장항숙, 현애자
41	8/17/06	14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II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국회의원안명옥 *주최: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 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 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42	8/22/06	10시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시회	의 원 회 관 1 로 층 비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43	9/8/06	14시	귀의날 행사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성 난청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이비인후과학회
44	9/15/06	12시	'여성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렉 싱 턴 호 텔 15 층 미팅 룸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45	9/27/06	12시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Dream Society Forum) 출범식	본 귀 빈 식 당	*주최 : 저출산고령사회포럼
46	11/08/06	14시	특수의료용도식품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 방안전문가토론회	의원회관 104 호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사)대한영양사협회,한국정맥경 장영양학회
47	11/23/06	7시30분	DreamSocietyForum -저출산대책의국제적추세와한국에주는시 사점	본 귀 빈 식 당	*주최 : 저출산고령사회포럼
48	11/29/06	9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간병서비스 구축방안 대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고흥길, 안명옥
49	12/8/06	10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 회 도 서 관 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심폐소생협회
50	2/5/07	10시	지속가능한 건강사회를 위한 환경성질환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포럼
51	2/15/07	7시30분	Dream Society Forum	의 원 회 관 1 2 5 호	*주최 : 저출산고령사회포럼

번호	행사일 (일/월/년)	시간	행 사 명	장소	주최/주관
52	2/20/07	14시	보건의료계상생과발전을위한대토론회3 "참여정부보건의료정책종합평가및차기정 부에바라는과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국회의원안명옥 *주최: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 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 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53	3/14/07	10시	여성의 정치참여와 유권자의식 변화를 위한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여성유권자연맹 *주관:국회의원안명옥
54	3/26/07	14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55	3/30/07	10시	유비쿼터스시대의노인정보격차해소를위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1 2 5 호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사)대한노인회
56	6/19/07	15시	한국군전사자유해발굴과실종자확인지원을 위한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57	10/11/07	13시30분	2007여성과함께하는원자력심포지엄개최 예정 *주제: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의량데부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 협회, 국회의원 안명옥

3. 안명옥 의원 발간 정책자료집 현황

(2007년 11월 1일 현재 85건)

번호	행사일 (월/일/년)	시간	자료집	장소	주최/주관
1	07/02/04	10시30분	한나라당정책위원회“저출산대책대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저출산문제,어떻게대응할것인가?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저출산·고령화 TF)
2	08/25/04	14시	연명치료중단의정책적대토론회 -보라매병원사건을중심으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의사협회
3	09/01/04	10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현정기념관 강 당	*주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저출산·고령화 T/F)
4	09/15/04	14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개최	현정기념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5	10/04/04	국정감사 자료집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6	11/26/04	10시	“저출산과 아동·여성·인구” 토론회 개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 연맹(CPE)
7	02/28/05	15시	“저출산·고령화사회와노인의학”대토론회 개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노인의학회
8	04/16/05		우리나라저출산·고령화실태와향후미래의 모습 -국회의원과대학생이함께만든정책자료집		
9	04/21/05	10시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과 복지 심포지엄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대한재활의학회
10	05/03/05	10시	저출산사회에서 신생아 치료의 문제점과 대책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신생아학회
11	06/10/05	대정부질 문자료집	2050년대한국공동화(空洞化)? -2004년합계출산율1.15,사상최저될듯		
12	06/24/05	10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한민족평화네트워크 *주관:국회의원안명옥
13	06/28/05		유아성폭력 - 실태와 정책제안 -		
14	07/15/05	9~12:30	총기 난사사건을 통해 본 軍 정신보건 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 원 박진
15	08/10/05	10~12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 원 진영
16	09/01/05	10시	저출산·고령화 문제 연구에세이 발표회 및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 :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 원 임태희
17	09/09/05	14~19시	귀의날 행사 -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이비인후과학회
18	09/21/05	10~12시	치매의날 기념 심포지엄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대한신경과학회,대한치매학 회, 한국치매가족협회,한국치매협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19	09/22/05	국정감사 자료집1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 고서 -사회복지분야-		정책자료집 시리즈 #1
20	09/22/05	국정감사 자료집2	노무현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 고서II -보건의료정책평가및정책제언-		정책자료집 시리즈 #2

번호	행사일 (월/일/년)	시간	자료집	장소	주최/주관
21	09/23/05	국정감사 자료집3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3
22	09/26/05	국정감사 자료집4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다		정책자료집 시리즈 #4
23	09/27/05	국정감사 자료집5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5
24	09/29/05	국정감사 자료집6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6
25	10/04/05	국정감사 자료집7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7
26	10/05/05	국정감사 자료집8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8
27	10/06/05	국정감사 자료집9	환자와전문가들이제시하는희귀·난치성질 환정책과제 -희귀·난치성질환에대하여논문조사결과-		정책자료집 시리즈 #9
28	10/08/05	국정감사 자료집10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10
29	10/08/05	국정감사 자료집11	청소년의생명교육과건강증진을위한정책 과제 -여대생생지식및산부인과상담에관한의견 조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1
30	10/25/05	14시	유방암 예방을 위한 국민 홍보대회(유방암환우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기념식)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한국유 방암학회
31	10/28/05	15시	보행자 작동 신호기 도입 확대 방안 공청회	국 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한국교통연구원
32	11/09/05	10시	WIN-Korea 총회 및 2005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 회, 홍창선국회의원, 안명옥국회의 원
33	11/28/05	14시	임상영양서비스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의 원 회 관 1 0 4 호	*영양사협회
34	11/30/05	14시	저출산·고령화시대의국민영양관리대책대 토론회 -II.노년기의영양관리	국회도서관 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35	12/05/05	15시	자공경부암예방정책포럼	본 청 귀 빈 식 당	*부인종양학회, 콜포스코피학회
36	12/20/05	10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여의도연구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37	03/14/06	10시	"튼튼아이 건강미래"를 위한 꿈의 출발, 전문가 드림팀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한나라당드림스타트국회의원 안명옥 *주최:대한소아과학회
38	03/17/06	14시 30 분	폐경여성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대한폐경학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39	04/10/06	10시	아동 먹거리와 건강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영양사협회
40	05/02/06	10시	아동아토피제대로알고대처하자 -과자,가공식품,패스트푸드의위해논란:현 황과대책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피부과학회아토피피부염 학회

번호	행사일 (월/일/년)	시간	자료집	장소	주최/주관
41	06/08/06	15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42	06/16/06	10시	초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기정학회,가정을건강하 게하는시민의모임
43	06/29/06	7:00	의료경쟁력연구센터포럼 *주제:의료산업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 토론회	본 청 귀 빈 식 당	*주최: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관:대일리메디,메디칼업저버,의 협신문,국회의원안명옥
44	7/6/06	9:00	E-Health 산업 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메디칼업저버 *주관:국회의원안명옥
45	7/26/06	15:00	여성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부인종양학회,대한산부 인과학회,한국걸스카우트연맹
46	7/27/06	13:30	2006년여성과함께하는원자력심포지엄 -방사선조사식품은안전한가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win-korea(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 *주관:국회의원안명옥
47	8/16/06	14:00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 옥, 장항숙, 현애자
48	8/17/06	14:00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II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국회의원안명옥 *주최: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49	9/8/06	14:00	귀의날 행사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성 난청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대한이비인후과학회
50	10/13/06	국정감사 자료집1	AIDS정책이대로좋은가 -현장탐방,AIDS환자와의인터뷰를통한정 책제언-		정책자료집 시리즈 #1
51	10/16/06	국정감사 자료집2	효과적자살예방을위한정책과제 -生死의갈림길에서번민하는이들에게꿈과 희망의빛을!		정책자료집 시리즈 #2
52	10/17/06	국정감사 자료집3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방향		정책자료집 시리즈 #3
53	10/20/06	국정감사 자료집4	함께하는복지실현을위한방안 -자원봉사및기간부문복지지원활성화대 책-		정책자료집 시리즈 #4
54	10/23/06	국정감사 자료집5	의약품안전관리선진화방안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분야의실태,문 제점,개선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5
55	10/24/06	국정감사 자료집6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애주기별 국민영양 관리 대책		정책자료집 시리즈 #6
56	10/25/06	국정감사 자료집7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심사평가제도 개선방향		정책자료집 시리즈 #7
57	10/26/06	국정감사 자료집8	이 땅의 장애인들이여밖으로 나아오라.		정책자료집 시리즈 #8
58	10/27/06	국정감사 자료집9	식품안전관리선진화방안 -식품안전관리시각지대해소를위한분야 별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9

번호	행사일 (월/일/년)	시간	자료집	장소	주최/주관
59	10/30/06	국정감사 자료집10	보건의료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10
60	10/31/06	국정감사 자료집11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시리즈 #11
61	11/01/06	국정감사 자료집12	선진 응급의료체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12
62	11/02/06	국정감사 자료집13	2006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정책자료집 시리즈 #13
63	11/08/06	14시	특수의료용도식품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 선방안전문가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사)대한영양사협회, 한국정 맥경장영양학회
64	11/29/06	9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간병서비스 구축방안 대 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고흥길, 안명옥
65	12/8/06	10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회도서관 대 강 당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심폐소생협회,서울시
66	2/05/07	10시	지속가능한건강사회를위한환경성질환경 책토론회 -환경성질환의적극적예방과관리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포럼
67	2/20/07	14시	보건의료계상생과발전을위한대토론회3 "참여정부보건의료정책종합평가및차기정 부에바라는과제"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관:국회의원안명옥 *주최: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68	3/14/07	10시	여성의 정치참여와 유권자의식 변화를 위한 대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여성유권자연맹 *주관:국회의원안명옥
69	3/26/07	14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70	3/30/07	10시	유비쿼터스시대의노인정보격차해소를위 한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1 2 5 호	*주최:국회의원안명옥 *주관:(사)대한노인회
71	6/19/07	15시	한국군전사자유해발굴과실종자확인지원 을위한정책토론회	의 원 회 관 소 회 의 실	*주최 : 국회의원 안명옥
72	10/11/07	13시 30분	2007여성과함께하는원자력심포지엄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의랑데부	의 원 회 관 대 회 의 실	*주최:(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 회, 국회의원 안명옥
73	10/17/07	국정감사 자료집1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자료집 시리즈 #1
74	10/17/07	국정감사 자료집2	행복한다문화가정구현을위한정책과제 -국제결혼피해자인터뷰및현장조사를통한 정책제언		정책자료집 시리즈 #2
75	10/18/07	국정감사 자료집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3
76	10/18/07	국정감사 자료집4	검역시스템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해외유입전염병실태와해결방안을중심으 로		정책자료집 시리즈 #4
77	10/22/07	국정감사 자료집5	국가미약류예방사업제고를위한치료·재활 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안 -국가미약류사업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제 언		정책자료집 시리즈 #5
78	10/22/07	국정감사 자료집6	수입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검사체계개선 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6

번호	행사일 (월/일/년)	시간	자료집	장소	주최/주관
			-FTA체결(예정)대상주요국가별, 부적합현 황중심으로		
79	10/24/07	국정감사 자료집7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향		정책자료집 시리즈 #7
80	10/25/07	국정감사 자료집8	u-health를활용한보건의료체계선진화방안 -u-health를통한응급의료체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자료집 시리즈 #8
81	10/25/07	국정감사 자료집9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9
82	10/29/07	국정감사 자료집10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10
83	10/31/07	국정감사 자료집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 방안		정책자료집 시리즈 #11
84	11/07	국정감사 자료집12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정책자료집 시리즈 #12
85	11/1/07	국정감사 자료집13	2007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정책자료집 시리즈 #13

4. 안명옥의원 보도자료 현황

(2007년 11월 1일 현재 277건)

번호	날짜	제 목
1	2004-05-31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출 -17대국회제1회의안-
2	2006-06-03	복지부에고함- 공개서한(존경하는정동영전의원장님,김근태전대표님께)
3	2004-06-10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출 - 식품위해사범 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으로 강화
4	2004-06-28	선거법,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 제출 - 고위공직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공개 명문화
5	2004-07-02	한나라당 저출산 대책 大토론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성토 - 출산율 감소, 국가가 방치했다
6	2004-07-04	하월곡동한날나기 1일체험 - 하루 동안 국민보건환경 체험
7	2004-07-05	식약청질의 -국민다소식품군예만두를포함한냉동식품이빠져있었다,실효성없는자진회수제도,의무리콜과병행해야한다
8	2004-07-06	식약청,연구개발비투자지역편중심하다 -인천지역식약청연구개발비고작6천만원에불과
9	2004-07-06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가입자의66.5%,국민연금사각지대-1천만지역가입자중656만여명,사각지대위험-
10	2004-07-07	복지위질의 -국민연금불신과관련된논란,약대6년제밀실합의파문,퇴원결정의사에대한살인방조죄적용관련,식품안전관리대책,저출산문제와대책,빈곤아동대책,
	2004-07-08	식약청 -식품관리체계구축하라,식·의약품중독사고에아이들이위험받고있다.
11	2004-07-08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일원화추진필요,심평원,‘진료비깎는기관’에서‘진료서비스의질을확보하는기관’으로거듭태어나야,국민연금땀질처방,근본한게극복어렵다
12	2004-07-08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보험급여확대 품목은 ‘MRI 검사’
13	2004-07-08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식용 얼음, 국민다소비 식품군에서 빠져 있다
14	2004-07-09	복지부에고함 -국민의눈으로김근태장관의직무수행을상시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하겠습니다.
15	2004-07-18	165만5천세대·345만여명,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
16	2004-08-04	PPA 감기약 외 심각한 부작용 우려 의약품 더 있다, 비야그라
17	2004-08-05	PPA 의약품 총 9,040만여건 건강보험 청구
18	2004-08-06	PPA감기약,판매중단조치 7.28중약사심의위에서이미결정...3일간장관은뭘했나?
19	2004-08-20	힘있는기관일수록장애안내팽개쳐 -공공기관,물품구매·매점·자판기운영등,장애인우선권무시-
20	2004-08-24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추진 -2003년합계출산율1.19기록,저출산추세심화·고착화-
21	2004-08-25	연명치료중단 문제, 대책 시급하다
22	2004-08-31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정기국회발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한나라당당론으로제정추진” -9월1일,기본법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
23	2004-09-05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국회제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의기본방향제시-
24	2004-09-06	보건복지부결산

번호	날짜	제 목
		-보건복지예산늘리기만하면뭐하나?빈곤층320만명방치,의료사각1년새23만명늘어나빈부격차·소득불평등도전혀개선안돼
25	2004-09-08	식약청결산 -식약청,연구개발사업비'눈먼돈' 제식구에만'평평'...수도권편중지나쳐
26	2004-09-12	의약분업기본원칙훼손행위만연!! -약국임의·대체조제등불법행위115%이상증가,복지부, 의약분업 단속 사실상 포기 -
27	2004-09-15	출산비반아가셨습니까?3년간7만8천명출산비못받아 -건보공단,가입자권익은뒤틀전,보험료징수에만혈안-
28	2004-09-17	국민연금의결권행사총871건, 자유시장경제왜곡,新官治우려2004년의결권행사비율98.9%
29	2004-09-19	기초생활보장기금집행율연평균3.5% 2004년6월현재985억기금조성,겨우16억원집행 자활사업'소리만요란'.....정부·지자체무관심
30	2004-10-04	우리나라보건복지정책은실패한'국가사회주의' -빈곤층방치,소득역진적사회보장제도고착화-
31	2004-10-05	"노무현정부식품안전관리포기" -정책은복지부,단속은지방경찰,식약청은?-
32	2004-10-06	2004식품의약품안전청국정감사질의서 -의약품유통관리체계'구멍',현행바코드제도'있으나마나'- -식약청,환경호르몬위험성무시,규제기준없어일상생활용품등에무방비노출-
33	2004-10-06	건보공단개인정보유출 -건보공단,개인정보·질병정보12만8천건유출- -2003-2004.8까지20개월동안,227개지사중225개지사에서-
34	2004-10-07	건보공단2년7개월간598만여건' -압류예정통보서마구잡이남발!-
35	2004-10-07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36	2004-10-08	200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66.3%,주사약효과기대!!- -병원선택에는상관없다는50.8%-
37	2004-10-08	2004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보도자료 -비용억제중심개별서비스에서'질과비용중심통합관리정책'으로패러다임전환해야- -전문심사제도활성화하여심평원과잉처방-의료계진료권논란해소하자- -우리나라수가체계,약물오·남용부추겨건강증진·질병예방·상당수가신실필요- -보험급여품목수신진국10배,청구전문의약품4,385개,6월간5,000만원미만도1만984개나- -약동일처방전중복청구반년간2만5,276건-
38	2004-10-08	[대한적십자] 국정감사보도자료 -HIV부적합혈액연간2천7백여건'...연간부적합판정혈액'9만4천여건'-
39	2004-10-10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건수(2002-2004.6)9,835건 고소·고발급증(2002년272→2003년833명) 장애인성폭력예방프로그램,치료대책시급
40	2004-10-11	2004대한적십자사국정감사보도자료 -'99년~2002년정부지원'전무'- -2025년혈액부족률50%전망- -서울병원,정원외인력55명...병상가동률고작55.1%- -청소년적십자,3년새2만6천여명줄어- -9천9백여가족상봉중국군포로·남북자19가족에불과적십자,국군포로·남북자생사확인·상봉시설상방치-
41	2004-10-12	2004질병관리본부국정감사보도자료 -2010년'하루12명'에이즈(HIV)감염...추정누계1만7천300여명-
42	2004-10-13	국립의료원국정감사보도자료

번호	날짜	제 목
		-초등학교교과서응급전화는어전히'119'시행5년이지만'1339'홍보는뒀전-
43	2004-10-14	경기도청국정감사보도자료 -도지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비전 제시해야 - -서울인천은보육료지원...경기도는예산타령?- -전국최하위권의응급의료- -2004,31개시군중16곳,미신고시설교육실적전무,8개시는지도단속한건도없어- -말라리아발생비율경기도가40%-
44	2004-10-15	국립재활원국정감사보도자료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배려규정잘안지켜- -비장애인및일반환자비율도높아- -배보다배꼽이큰환자비용, 국립재활원비장애인비율46%- -'장애인복지법'장애인배려규정무시-
45	2004-10-18	2004국정감사국민연금관리공단보도자료 -젊은층연금제도'거부'조짐,제도신뢰성붕괴- -'돈먹는하마'노인인력센터,법적근거없이기금투입- -채권잔존만기단기화,채권운용불안전성증가- -'말로만해위투자'실제는한국물투자- -국민연금가입자·수급자복지타운이용0.4%-
46	2004-10-18	국민연금신뢰도조사 -8대비밀이후국민연금, 국민신뢰다잃었다-
47	2004-1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정감사보도자료 -'보건산업', '진흥'을위한전문기관이되어야- -진흥원, 해외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벤처기업지원말로만하나?- -기초연구에대한무관심은미래의재앙- -저질수입한약제, 진흥원도책임있다-
48	2004-10-20	2004국정감사인천공항검역소보도자료 -인천공항검역소직원1인당21만6,500여명검역-
49	2004-10-21	중앙인사위국정감사보도자료 -삼고초려제74.3%가自薦-
50	2004-10-22	2004국회운영위대통령비서실국정감사 -"헌법재판소위헌결정"-
51	2004-10-22	2004보건복지부국정감사보도자료 -장애인생업지원정책- -힘있는정부기관일수록장애인복지내팽겨쳐- -장애인담배소매우선지정실시, 고작0.3%- -실질적장애인우선정책펼쳐야-
52	2004-11-16	의료급여연간입원일수...건강보험보다13배 많아 -정부, 관리감독부실인가?도덕적해인가?-
53	2004-11-17	의료급여연간입원일수...건강보험보다13배 많아 -정부, 관리감독부실인가?도덕적해인가?- -기금이관2,330억원, 일반회계로재편성해야- -건강보험기금설치건보재정투명성확보필요-
54	2004-11-17	사회복지예산증액불구...식약안전오히려16.6%감소 -식약청, 내년예산8.2%증가거쳐...증가율둔화- -정부, 인식·지원부족으로BT산업발전발목잡아-
55	2004-11-18	노무현정권지지율22.4%, 여론무시한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화작년대비190.3%증가- -청와대기념품제작비4억2천만원필요한가?-
56	2004-11-19	공무원교육, 해외의존도 높아

번호	날짜	제 목
		-권력입맛에맞는인사안된다- -'일잘하는정부' 헛구 호였나?- -인사관련행자부예산757억여원이체- -보수현실화5개년계획호지부지-
57	2004-11-19	공개서한 - 국민연금 강제동원 기도에 대한 김근태장관의 반대입장을 환영합니다.
58	2004-12-05	국민연금민간보육·노인복지시설투자손실 -7,166억투자중손실기회비용1,550억발생- -연기금,이래도사회기반시설에투자할건가?-
59	2004-12-06	민간투자법개정통한무분별한투자대상확대는'노무현정권식카드돌러막기' -국민연금,보육및복지시설투자손실기회비용1,550억원-
60	2005-01-21	성명서-정부여당은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깊이인식하고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제정에적극협조하 라!
61	2005-02-03	모자보건법개정안국회제출 -국가주도의인구억제정책의유산을청산하고저출산·고령화의시대상황에따른변화방향을명시-
62	2005-02-06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개정안제출 -유족의뜻과별개로장기기증희망자의노사및사망전본인의사최우선존중- -뇌사판정위원회절차단축,원활한이식길터-
63	2005-02-14	올바른청소년생명교육을위한<제니,주노>국회특별위원회 -안명옥의원사전특강:10대청소년성문화실태에대한고발및올바른청소년생명교육필요성강조-
64	2005-02-18	現정부가족정책변화, '가족해체가속화' 우려 -'가족정책사무' 여성가족부이관신중해야-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근거우선개정해야- -이건없는기타제도개선사항은이번임시국회에서처리해야- -통합관리기능필요한지방이양사무신중필요- -지방분권의취지는동의,국민의건강과안전을최우선해야-
65	2005-02-24	노인인구기준70세로상향조정해야 -노인기준70세로높이는'新고령사회대책'제한함- -'사회적약자에대한서비스형평성'분야평점"D"- -의료사각지대한달에4만3,300세대씩늘어나-
66	2005-02-27	저출산·고령화사회와노인의학대토론회개최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정책연구과제토론시리즈일환,노인의학회와공동개최"-
67	2005-03-16	외국제약사, 국산개량신약축이기전방위통상압력 -식약청, 외국제약사누치보기급급-
68	2005-03-28	국민연금개혁더이상미룰수없다 -2012년50대이상유권자40%돌파연금개혁불가능.....- -연금개혁의지없다면다음집권자격없어-
69	2005-04-03	병역자원20년뒤10만감소2050년절반수준둑 -징병대상자,20년뒤10만명감소- -2050년,지금절반인16만명으로뚝떨어져- -병역자원감소대비책서둘러야-
70	2005-04-10	임금피크제도입법안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제출- -고령자고용연장에따른임금협약과정에서근로자의연령·정년·소득수준고려, 일정수준이상임금을보장하도 록하는임금감액률적용개-
71	2005-04-17	대학생·국회의원이함께만든저출산·고령화자료집발간 -인구(인명옥)·경제(임태희)전문가 대학생6명의공동자료집- -2050년인간복제합법화될듯...콩트로미리가본한국의미래-
72	2005-04-18	보건복지부업무보고고도자료 -우울증인구1백만명,74%는치료못받아- -취약계층의료보장낙제점, 집중관리필요-

번호	날짜	제 목
		-2004년취업·창업으로수급탈피자,1,666명에불과-
73	2005-04-19	국내유명기업유부서GMO검출 -2004년식약청수거검사서...브랜드민은소비자충격- -식약청,8개월지나도록'쉬쉬'..."제조업체처분"-
74	2005-04-19	북미서금지된약물3억정처방제2의PPA사태우러 -북미등서금지된'레보설피리드'3억정처방- -유사약품2000년시장에서자진철수...부정맥341명중80명사망- -비급여의약품,안전성관리사각지대에방치-
75	2005-04-20	간이식'진료비4,900만원중본인부담3,077만원 -거꾸로가는건강보험,중증일수록본인부담높아-
76	2005-04-24	국외거주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근거마련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관한법률개정안」제출-
77	2005-04-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통과
78	2005-05-04	후손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국회의원이되겠습니다'개최 -한나라당,열린우리당저출산·고령사회대책TF공동주최-
79	2005-05-04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 -17대국회제1호의안(안명옥의원2004년5월제출)만장일치통과-
80	2005-05-08	"저출산·고령사회대책,우리가세운다" -대학(원)생대상2,000만원현상공모- -2004년<출생아수48만1천명>, <합계출산율1.15>로출생아수1년새1만2,000명감소,출산율OECD바닥 권.....사상최저될듯-
81	2005-05-17	노인복지법개정안발의 -치매를장애로인정,복지혜택받게...-
82	2005-05-25	제2회회귀·난치성질환자의날개최 -회귀·난치성질환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 -회귀·난치성질환자에대한국가적지원필요성강조-
83	2005-06-08	제대혈은행안전관리틀마련 -'제대혈안전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안'발의- -정부에기증장려의무화...공공은행에지원할수있도록- -출기세포연구에사용근거명사-
84	2005-06-10	저출산·고령화극복못하면,남세가능자大脱出! 대한민국 空洞化 ? 'BUY' Korea 아닌 'BYE' Korea 물아칠 수도.... -2004년합계출산율1.15,사상최저예상-
85	2005-06-12	2004년6월바이러스유전자검사도입前매년15명에AIDS혈액수혈가능성제기 -검사도입후100만명중보균자2명확인..기존검사론헌혈'적격'- -정부'ZeroDefect'목표로혈액안전관리만전기할것'당부'-
86	2005-06-13	2004년,치매상담센터치매환자등록비율고작7.5%,치매치료를받은환자는19%에불과 -환자60%이상적절한치료,복지서비스받지못하고방치- -<치매관리특별시스템>도입제안-
87	2005-06-16	"성폭력예방교육,유아때부터" -안명옥의원성교육애니메이션국회회사사회개최- -"유아도성폭력피해자...교육으로예방해야"-
88	2005-06-23	어린이보호를위해화장품에안전용기·보호포장사용의무화 -'화장품법개정안'국회통과- -1년6월유예기간후시행-
89	2005-06-24	「남북보건의료의교류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 -분권화시대,보건의료의특수성과전문성을살려야- -'남북한보건의료협정'제의를위한준비필요- -남북한보건의료통합에대비한비용추계필요-

번호	날짜	제 목
		-통일시대저출산 고령사회대비한북한인구대책필요-
90	2005-06-28	아동성폭력피해자30%가유아 -놀이터·학원서빈번...유아보호는오히려허술- -학원·유치원종사자,신고의무없어- -"유아기부터성폭력예방교육필요"-
91	2006-07-15	GP총기난사사건을통해본軍정신보건의원황과개선방향」 정책토론회개최 -7.15(금)10:00,의원회관,박진·안명옥의원공동개최- -군정신보건향상을통한건강하고강한군대육성- -체계적인기준,정확한평가,관리시스템마련해야- -군보건의료확충위헌예산,전문인력확보시급-
92	2006-07-19	「교육부의불공정한약대학제개편추진에대한시정요청과관련한청원」 제출 -대통령선거공약이라는미명하에이루어진정부와특정단체의밀실합의는정당성없음- -약대학제개편은'국가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차원서심도있게논의해야- -'고등교육법'개정사항인만큼학제개편은'국회교육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해야-
93	2006-07-20	노인의료복지시설도급차운용할수있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출-
94	2005-07-21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95	2005-07-27	교육부제멋대로바꾸던학제,이젠안돼!
96	2005-07-29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건강지킴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97	2005-08-07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 일정규모 이상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 의무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98	2005-08-10	공익성격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4대 보험료 지원 추진 - 안명옥, 진 영의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공청회 개최
99	2005-08-14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00	2005-08-2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수유시설 등 육아편의시설 설치의무화 대중교통/고궁·박물관·공원 이용료 할인 가능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01	2005-08-25	안명옥의원, 2004년 합계출산율 1.16명 (사상최저) 예측 적중
102	2005-08-31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우리가 세운다! 제1회 전국 대학(원)생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연구에세이 아이디어 발표대회
103	2005-09-01	'수태에서무덤까지'건강하고행복하게!저출산시대,이땅에태어난아이들,一當百의자질을갖춘사람으로키워 나가야...-'영유아발달선별검사의무화'위한'모자보건법개정청원'소개
104	2005-09-08	소리를듣고싶어요!9월9일귀의날행사개최'수태에서무덤까지'건강하고행복하게! 저출산시대,이땅에태어난아이들,一當百의자질을갖춘사람으로키워나가야...
105	2005-09-11	월소득2~3백만원대서민층,담배값인상후오히려흡연율증가!-흡연을감소효과최고소득층(500만원이상)에 집중, 가격인상에따른금연효과안듯, -서민들주머니터는가격인상정책당장포기하고,금연홍보정책으로조속히방향전환해야
106	2005-09-12	39분마다1명씩 자살 - 2004년 자살자 13,293명 - 연령별인구 대비 60대 노인자살비율 1위 (4,220명) - 20대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 1위 - 자살동기 : 염세비관 43%, 병고 26%, 치정·실연·부정 9% 순
107	2005-09-14	남성노인 72.4%가 '성 상담'원해 - 여성 노인의 48.6% 상담 전문가의 도움 원해 - 지금은 '생존권' 차원 넘어서 '삶의 질' 논하는 시대, - 복지서비스, 양적인 확일성보다 '질적인 다양성' 추구해야 - 고령화사회 '노인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대책 시급
108	2005-09-22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적십자회비 납부를 56% - 참여정부 권력층의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태 - 지도층부터 자발적 봉사 실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 진정한 '참여'는 국가권력 핵심부의 솔선수범으로부터
109	2005-09-23	레모나, 아락실, 복합마데카솔, 아로나민골드 등 일상 의약품 판매가격, 2배 이상 차이 서울시, 조사 대상 53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서 판매가격 조사결과 공개하여 의약품 가격 안정화시켜야

번호	날짜	제 목
110	2005-09-23	사회보험 등 1차적 사회안전망,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부담, 양극화 심화 - 최저소득층 사회부담금 비율 24.36% - 최저소득층 사회부담금 비율 24.36% - 최고소득층 부담비율 13.48% - 전체 소득계층 평균 부담비율 12.11% - 최저소득층 전년 대비 증가율도 26.3%로 최고
111	2005-09-23	혈액수혈연구원의 2년간 정보공유 요청을 묵살한 복지부의 대안은 무엇이었나? -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유통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 -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112	2005-09-25	제약사비용부담으로식약청직원해외동반출장건수급증,공정성훼손 -2002년3건,2005년8월현재49건으로급증 -수입업자부담액2005년8월까지3억7천만원이상(2002년도부담액은확인불가) -해외출장실사보고서대동소이 -의약품안전관리부서와무관한직원들도의유
113	2005-09-26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급증 -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보고처리 건수 : 2003년 3건, 2004년 18건, 2005년 상반기 53건 -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수 : 2003년 1건, 2004년 11건, 2005년 상반기 21건 -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 : 2년간 총 9건 보고 중 8건 인과관계 유추 가능
114	2005-09-26	의약품 관련 오류 공공의료기관에 집중 지역보건소, 약국 관리감독 자격있나? - 등잔 밑이 역시 어두워! 국회 내 약국도 해당 - PPA처방 :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134건 - 병용금가특정연령금기 : 공공의료기관, 대형 종합병원
115	2005-09-26	일회용생리대의약(부)외품지정후수거검사실적"0"-일회용생리대정말안전한가?-여성59.9%생리대로인한피부질환등고통경험-여성평생1만1,400회유해물질과접촉하는셈 -'탐폰생리대'독성쇼크증후군위험성알려야
116	2005-09-27	병용금기(並用禁忌),한쪽에만표기하면뭐하나?-1년전제외항목아직도금기항목에등재,의약정보체계허술,선진IT강국무색케-복지부,식약청,건보공단,심평원중,누가가장책임이크나?
117	2005-09-27	연령대별 의료사각지대 분포 분석자료 - 2005년 8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82만9천여세대, 147만여명 급여제한,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로 방치 - 0-4세 12,490명, 5-9세 73,598명, 65세 이상도 51,595명 40-44세가 192,916명으로 가장 높고 서서히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 - 어린이, 노약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성 원리 찾아야
118	2005-09-27	2005년 9월 23일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 도덕적 해이 심각
119	2005-09-27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여성임신·출산신체적경제적이중고시달려
120	2005-09-29	노인학대로 매월 2명 사망! 학대주체 : 아들(58%) 며느리(20%) 딸 (12.5%) 손자녀(1.6%) 학대유형 : 언어·정서학대 39.6% 방임 24% 신체학대 19.7% 학대주체 소득 : 중산고소득층 64%, 저소득층 36% 학대장소 : 대부분 가정 내(95.3%)에서 10월 '경로의 달' 맞아 '경로효친 사상' 회복에 적극 나서야
121	2005-09-29	노인들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치매(35.4%)"
122	2005-10-02	미혼모 하루에 6명 발생 20세 이하 미혼모 하루 2.6명꼴
123	2005-10-03	국민연금허리(21-25등급)가무너지고있다!-고지원대비완납인원54.8%평균보다7.6%p낮아
124	2005-10-04	국민연금 개인정보 관리 허술
125	2005-10-04	국민연금, 강제가입 사회보험 맞나? -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고액미납자 상위 50위 분석 -
126	2005-10-04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8,469명
127	2005-10-04	전문가의견 무시한 정부 무사안일이 상주참사 피해키워
128	2005-10-04	<긴 급> 복지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급의료체계 정비의 계기로 삼아라!!
129	2005-10-05	집결지 여성 성병검진 건수 급감 2003년 264,904건 → 2005년 6월 34,962건 감염자도 7,238건 → 974건(2005년 6월 현재)
130	2005-10-06	희귀·난치성 질환자(1천여명)실문조사 - 51.6%가 의료비 과잉지출로 가정해체 위기 경험 - 2.4%만이 복지부/공공기관 통해 질환정보 습득 - 「환자와 전문가가 제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책과제」 발간
131	2005-10-06	남성 동성애 의한 AIDS 급증

번호	날짜	제 목
132	2005-10-07	국군포로546명중16명만생사확인전후남북자485명중20명만생사확인전시남북자7,034명중337명생사확인
133	2005-10-07	적십자혈액수혈연구원, 외부인증 평가결과 “미비함”
134	2005-10-07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주최 - 10월 10일 국회서 ‘제1회 임산부의 날’ 공식 선포기로
135	2005-10-09	여대생의48.4%기성경험,성경험자24%임신중절경험,지식수준은F학점!
136	2005-10-09	조류독감 발생 최악 시나리오 조류독감 대책 전면수정 불가피
137	2005-10-10	대학병원 내과중환자실 100명중 11명이 병원감염 걸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고도내성균 특실
138	2005-10-23	노인에 대한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 받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139	2005-10-27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효과분석 및 도입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140	2005-10-30	고령화사회에대비한노인의약품안전관리체계조속히마련해야
141	2005-10-31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발의
142	2005-11-06	‘공공보건의료’개념 바뀌야 소유 공공성→사업목적·운영 공공성 기준으로
143	2005-11-16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144	2005-11-3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개최
145	2005-12-19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토론회 - 당 보건의료 공약정책수립의 기초될 것
146	2006-01-22	일본식 지명 우리말로 바꾼다 - 「지방자치법」 「측량법」 개정안 발의 - 일본식 지명을 변경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
147	2006-02-12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해야 ‘건강’개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으로 구체화
148	2006-02-16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부담
149	2006-02-26	역지 연명치료 더 이상 없다! -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라매사건 해결책 제시 - 의사의 의료행위의 안정성 제고
150	2006-03-07	신혼여행 눈치 안보고 간다 - 직장인, 결혼준비 위해 결혼 전후 10일간 유급휴가
151	2006-03-13	‘튼튼아이 건강미래’ 전문가 대토론회
152	2006-03-16	폐경(完經)여성 건강, 국가적 관리 필요 - ‘폐경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53	2006-04-11	아동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 -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과자가공식품 등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4	2006-04-12	매월둘째넷째수요일은‘가정의날’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발의
155	2006-04-20	학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 「학교보건법」 폐지,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 제정 - 건강검사, 유치원생 및 초·중고 쉰 학년 대상으로 확대
156	2006-04-27	아동학대 하루에 ‘12.6건’ 발생 2005년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21명
157	2006-05-01	어린이 아토피’대책 시급하다! - ‘어린이 아토피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토론회 개최
158	2006-05-24	보건의료분쟁 신속·공정하게 조정·구제 -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 - ‘보건의료분쟁 조정위원회’ 및 전문과목별 ‘전문조정부’ 설치
159	2005-06-06	보건의료 6개 단체,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160	2006-06-15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초저출산 극복 해법 찾는다! - ‘초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61	2006-07-05	e-Health 산업! ‘윤리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제대로 추진해나가야 - ‘e-health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62	2006-07-25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 선언문’ 발표 - ‘여성건강’ 국가보건의료정책 우선적 가치 강조
163	2006-07-28	공약·복지 위한 기부금 1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64	2006-08-08	1일38.39명씩자살-2005년자살자14,011명,전년대비718명증가
165	2006-08-13	건강보험환자 여전히 큰 병원으로 몰려
166	2006-08-16	저출산·고령화 극복위해 보건의료 6개단체가 뜻을 모은다

번호	날짜	제 목
167	2006-08-17	어린이 식품, 미생물 오염 심각
168	2006-08-20	힘센 기관일수록 장애인 외면
169	2006-08-21	급식안전, 양질의 식재료와 우수한 급식장비 인프라 구축 선행되어야...
170	2006-08-22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늪' 심각
171	2006-08-27	시판 체온계 절반이 엉터리! 국민건강 오히려 위협
172	2006-08-30	새터민 결핵환자 급증! 관리시급!
173	2006-09-04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근절 안돼! 도덕적 해이 심각, 사회보험 근간 흔들어
174	2006-09-07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노인성난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75	2006-09-12	노인 의약품 안전관리 빨간불 '노인약물 적절성 평가지침'마련 촉구
176	2006-09-19	학교내(미성년) 성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177	2006-09-21	자살예방법 발의
178	2006-09-22	식약청 유해물질 선행조사 결과 올리브유 발암물질 검출
179	2006-09-22	우울증 환자 늘고있다
180	2006-09-27	버려지는 아이들 늘고있다
181	2006-09-27	추석 차례상, 수입산 수산물 점령
182	2006-10-04	먹거리위해사범-배짱영업심각(3회이상 위반업소)
183	2006-10-04	수입식품-이산화황 검출 갈수록 증가
184	2006-10-09	현역 軍간부 건강상태 심각
185	2006-10-13	금연실태 여론조사 왜곡 심각!
186	2006-10-13	폐광지역, 암경성질환 유병율, 자연유산을 일반지역 보다 훨씬 높아!
187	2006-10-13	해외 유입 외국인 전염병 비상!
188	2006-10-16	유전자검사의 총체적 문제점 고발!
189	2006-10-17	서민층, 어린이·노인 등 취약연령층 의료급여제한자 늘고 있다!
190	2006-10-17	의료급여 부당청구하면, 건강보험도 부당청구 도덕적 해이 심각
191	2006-10-17	지역가입자는소득탈루해도추가징수NO!
192	2006-10-19	혈액 위기상황 피가 없어 죽을 수도
193	2006-10-20	일본적십자사가 자국민 납북자 확인위해 애쓴 흔적
194	2006-10-20	빛더미 적십자병원
195	2006-10-23	시판 여성생리대에서 인체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검출
196	2006-10-23	식품 중 동물항생제 잔류실태 심각
197	2006-10-23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피폭 관리감독체계 허술
198	2006-10-23	의약품 부작용으로 매년 40명 사망
199	2006-10-24	병원내 난치성감염 위험수위
200	2006-10-24	불안장애 확산, 불안한 대한민국?
201	2006-10-24	'03-'05년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 20명 중 16명 폐광지역서 발생
202	2006-10-25	어린이 성인병(생활습관병) 계속 증가
203	2006-10-26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실태 심각
204	2006-10-27	국민연금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해!
205	2006-10-30	제약회사 R&D투자 비율 저조
206	2006-10-30	해외원정 장기이식 합병증 (40%이상) 심각
207	2006-10-31	고소득 전문직종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27.3% 높게 소득신고
208	2006-10-31	국민연금, (급여)업무 허점투성이, 직원들 근무기강 문란
209	2006-10-31	국민연금, 실질적 소득보장 안돼

번호	날짜	제 목
210	2006-11-01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댓글!
211	2006-11-02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성병검진대상자 분포 변했다
212	2006-11-1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성 고발, 여성인권적 관점에서 개선책 필요
213	2006-11-28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간병서비스 구축방안 대토론회 개최(11월 28 고흥길 안명옥 의원)
214	2006-12-07	국민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15	2006-12-18	음주운전적발건수줄었지만면허취소3진아웃은매년증가
216	2007-01-23	대한민국은 악플 공화국?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 해마다 증가
217	2007-02-02	지속가능한 건강사회를 위한 환경성질환 토론회 개최
218	2007-02-13	2006년공공기관성희롱실태조사결과,공공기관직원10명중2명성희롱경험!
219	2007-02-15	노무현정부보건의료정책평가의장열린대(보건의료계상생과발전을위한대토론회III)
220	2007-02-22	취학 전 아동의 20%만 시력검진 받아, 아동 시력 조기검진체계 마련해야...
221	2007-02-13	여성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 열린대!
222	2007-03-23	의약품 유통산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열린대 :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23	2007-03-29	유비쿼터스시대 '정보복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224	2007-04-02	「아동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도로교통법」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5	2007-04-18	밀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국민식탁 위협
226	2007-04-20	안명옥의원, 「2007 세계여성원자력상 세계여성원자력상(WIN Award)」 수상
227	2007-05-10	안명옥의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8	2007-05-21	안명옥의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실종자확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29	2007-06-13	안명옥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30	2007-06-18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자확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31	2007-06-25	마약류사범10명중4.5명재범,치료보호사업실효성확보절실
232	2007-07-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33	2007-09-09	하루35.5명씩자살! 여성·농업종사자 비율 증가
234	2007-09-11	산후조리원은안전사각지대
235	2007-09-17	추석차례상수입산점령·농협·수협등공영도매시장수입산매년증가
236	2007-09-18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237	2007-09-20	화장품이 매장률 추월
238	2007-09-23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 위협!
239	2007-09-28	북한이탈주민건강상태심각
240	2007-09-30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장병 건강·군 전투력 저하 우려!
241	2007-10-08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242	2007-10-09	바이오클러스터중복투자심해
243	2007-10-10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심해
244	2007-10-14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저연령화, 집단화, 사이버폭력으로도 이어져
245	2007-10-15	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246	2007-10-17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247	2007-10-17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248	2007-10-17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1.2%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많아
249	2007-10-17	급식소·식자재공급업소 지하수 28%, 세균과 발암물질로 오염
250	2007-10-17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251	2007-10-18	'건강'걱정하다'병'생긴다 : AIDS 등 건강염려증 확산
252	2007-10-18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번호	날짜	제 목
253	2007-10-18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254	2007-10-18	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255	2007-10-18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256	2007-10-19	먹거리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257	2007-10-19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258	2007-10-21	식품위생검사기관43.8%는기준미달!
259	2007-10-22	북한산식품, 부적합건수매년증가!
260	2007-10-22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261	2007-10-22	식탁안전도 취재선진화 통제대상인가? 식약청, 언론대응 위한 연구용역 발주
262	2007-10-22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처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263	2007-10-24	국민연금, 건보공단, 심평원 보안전산망 다 뚫렸다
264	2007-10-24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노후보장도 못하는 국민연금
265	2007-10-25	인맥쌓기 창구로 쓰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266	2007-10-25	장기요양보험시험사업참여율45%, 향후이용의사없어
267	2007-10-25	건강보험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268	2007-10-25	건강보험 부담이득 매년 347억원!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담이득금 매년 180억
269	2007-10-26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5천명,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270	2007-10-28	혈액비상! 적정재고량의 27%수준! 헌혈을 매년 감소, 헌혈부적격율은 매년 증가
271	2007-10-29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272	2007-10-30	국공립병원 부채, 누적적자 1조원 넘어
273	2007-10-31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 '송환' 노력 지지부진
274	2007-10-31	적십자, 기증받은 미술품 방치!
275	2007-10-31	적십자 회비환불 6년새 80배 급증!
276	2007-11-01	군간부 건강상태 갈수록 악화
277	2007-11-01	재약회사 85% R&D투자가 판촉비보다 적어...

5. 저출산·고령화 극복 관련 주요활동 현황

1. 5/31/2004 :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출
2. 6/22/2004 : 저출산·고령화대책TF 1차회의
3. 7/2/2004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저출산 대책 대토론회” 개최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4. 8/18/2004 : 저출산·고령화대책TF 2차 회의
5. 9/1/2004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6. 9/4/2004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발의
(안명옥 의원 등 3인외 118인)
7. 9/15/2004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개최
- 1. 태아·영유아의 영양관리
8. 10/4/2004 :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2004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9. 11/26/2004 : “저출산과 아동·여성·인구” 토론회 개최
10. 11/2004 :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자료집 수정 발간
11. 12/9/2004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제25조제2항 삽입 -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을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발의 (10/21/2004)
12. 12/10/2004 : 저출산고령화대책TF 3차 회의
13. 2/2/200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4. 2/28/2005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노인의학” 대토론회 개최
15. 4/17/2005 : 국회의원·대학생이 함께 만든 저출산·고령화 자료집 발간
16. 4/21/2005 :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정책심포지엄 개최
17. 4/26/200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18. 5/3/2005 : “저출산사회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
19. 5/4/2005 :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
- 저출산 극복 국회의원 간담회
20. 5/4/2005 :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21. 5/8/2005 : 저출산 기자간담회 (한나라당 기자실)
-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저출산·고령화’ 에세이 공모

22. 5/18/200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2. 6/10/2005 : 제254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2050년 대한민국 공동화(空洞化)?” 자료집 발간
23. 6/24/2005 :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4. 9/1/2005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우리가 세운다.
제1회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에세이·아이디어 공모작 발
표대회” 개최
25. 10/10/2005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선포식 개최
26. 11/10/2005 : 저출산 대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7. 11/16/200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
28. 11/30/2005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개최
- II. 노년기의 영양관리
29. 3/14/2006 : ”튼튼아이 건강미래“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 영아의 건강과 보육
30. 4/11/2006 :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
- 과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위해 논란 : 현황과 대책
31. 6/16/2006 : 초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32. 8/17/2006 :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II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33. 9/27/2006 : 저출산·고령사회 출범식(Dream Society Forum) 출범식
34. 11/23/2006 : Dream Society Forum
- 저출산대책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5. 2/15/2007 : Dream Society Forum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가 조세정책 방향

〈안명옥의원 참여 저출산·고령화관련 심포지엄〉

1. 10/30/2004 대한가정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
 -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 기조강연 :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제정의 필요성”
2. 11/4/2004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6차 추계학술대회
 -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자건강 및 어린이 양육 문제”가 대주제
 - 특강제목 :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
3. 11/10/2004 대한조산협회 제10회 조산사학술세미나
 - “저출산 문제와 방안”
 - 강의제목 :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
4. 1/26/2005 부산시 조산사회 2005년 제60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 특강제목 : “저출산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5. 3/26/2005 이화여대 ‘모자보건영양 심포지엄’
 - 특강제목 : “저출산 시대의 모자보건과 영양”
6. 4/8/2005 한국모자보건학회 2005년도 춘계 제17회 학술대회
 - 특강제목 :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7. 4/18/2005 저출산고령화 극복 홍보매체 관계자 간담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8. 4/27/200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의
 - 특강 주제 :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9. 4/28/2005 조산사회 대구지회 62회 정기총회 특강
 - 특강 주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조산사
10. 5/27/2005 여성건강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특강
 - 특강 주제 : 저출산대응정책의 방향
11. 6/22/2005 국회조세·재정연구회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 토론 주제 :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12. 5/13/2006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포럼’ 발표
 - 발표주제 :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여성 건강
13. 9/21/2006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혁신토론회’
 - 발표 주제 : 저출산 고령화 정책 방향

〈전문학회 심포지엄〉

1. 5/28/2004 한국개발연구원(KDI)
- “저출산 시대의 신인구정책”
2. 9/15/2004 한국영양학회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 ; 태아, 영유아의 영양관리
3. 10/24/2004 대한산부인과학회, 제90차 학술대회
- “저출산과 의료환경”
4. 10/20/2004 대한가정학회
-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5. 11/4/2004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6차 추계학술대회
-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자건강문제”가 대주제
6. 12/3/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령화사회의 한국과일본 사회정책 비교; 한일 공동심포지움”
7. 12/4/200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 “저출산시대의 청소년”
8. 3/2/2005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대책” 심포지엄
9. 6/24/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경제인 세미나
10. 6/27/200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2005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 토론회
11. 7/15/2005 천주교 서울대교구
- “고령화사회와 가톨릭교회 노인사목의 방향” 포럼
12. 8/31/2005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 토론회
13. 11/29/200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아이 안 낳아도 돼? 그럼 우리 미래는? - 미래사회복리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 심포지엄
14. 12/1/200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의료정책포럼
15. 12/15~16/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16. 12/14/2005 국회 양성평등포럼

- “저출산시대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17. 3/23/2006 인구보건복지협회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방송매체관계자간담회“

17. 6/20/2006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문 체결식”

18. 9/13/20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화대응 국제정책포럼